

#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분단: 이론과 실제

일시 2012년 5월 17일(목) 9:30~17:30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주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 | 목 차 |

### 세션 1 » 한반도형 평화이론의 모색

- 01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작동양식 서보혁 (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 24 분단국체제와 분단효과: 남북관계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향 분석 김병로 (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 50 디터 쟁하스의 평화이론: '복합구성' 으로서의 평화 이동기 (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 토론
- 69 홍석률 (성신여자대학교)
- 72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 75 정태욱 (인하대학교)

### 세션 2 » 분단의 집합 심성

- 77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 일상화된 내전과 냉전, 식민주의 지속으로서 분단의 폭력성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 91 국가폭력과 분단, 그리고 민중의 집합적 한 한국문학에 나타난 전쟁 기억의 양상 유임하 (한국체육대학교)
- 105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의 사회자본의 변형 정은미 (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 토론
- 124 정태헌 (고려대학교)
- 127 고인환 (경희대학교)
- 128 김귀옥 (한성대학교)

### 세션 3 » 한국사회의 비평화적 소통구조

- 129 한국사회 갈등의 특징과 해결 방향 정주진 (단국대학교)
- 143 다문화시대 통일교육의 복합적 지형과 과제 조정아 (통일연구원)
- 157 대치동, 타워팰리스 그리고 흰색 자전거:  
드라마 「아내의 자격」과 (한국에서)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 엿보기 황영주 (부산외국어대학교)
- 토론
- 176 박재근 (사회통합위원회)
- 181 박영자 (이화여자대학교)
- 186 김엘리 (성공회대학교)

### 참고자료 »

- 189 21세기 새로운 평화학의 정립: 한반도적 맥락과 이론적 과제 박명규 (IPUS 원장, 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장)
- 198 HK평화인문학연구단 아젠다

## | 일정 및 내용 |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 박명규 (IPUS 원장, 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장)

### 세션 1 » 한반도형 평화이론의 모색

• 사회 박명림 (연세대학교)

10:10~10:30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작동양식 서보혁 (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10:30~10:50 분단국체제와 분단효과 김병로 (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10:50~11:10 디터 쟁하스의 평화이론 이동기 (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11:10~12:00 • 토론 홍석률 (성신여자대학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정태욱 (인하대학교)

12:00~13:30 오찬

### 세션 2 » 분단의 집합 심성

• 사회 정근식 (서울대학교)

13:30~13:50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13:50~14:10 국가폭력과 분단, 그리고 민중의 집합적 한 유임하 (한국체육대학교)

14:10~14:30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의 사회자본의 변형 정은미 (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14:30~15:20 • 토론 정태헌 (고려대학교), 고인환 (경희대학교), 김귀옥 (한성대학교)

### 세션 3 » 한국사회의 비평화적 소통구조

• 사회 임홍배 (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15:40~16:00 한국사회 갈등의 특징과 해결 방향 정주진 (단국대학교)

16:00~16:20 다문화시대 통일교육의 복합적 지형과 과제 조정아 (통일연구원)

16:20~16:40 대치동, 타워팰리스 그리고 흰색 자전거 황영주 (부산외국어대학교)

16:40~17:30 • 토론 박재근 (사회통합위원회), 박영자 (이화여자대학교), 김엘리 (성공회대학교)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5월입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인문한국(HK) 평화인문학연구단은 한반도형 평화학 정립이라는 목표를 갖고 평화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은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와 그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평화 형성에 이바지할 사상과 이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분단: 이론과 실제’라는 제하의 학술회의를 통하여 한반도에 알맞은 평화이론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단이 한반도에 준 문화심리적 영향과 우리사회에서의 비평화적인 소통구조도 살펴보려 합니다. 본 연구단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학술회의도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12년 5월 17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인문한국(HK) 평화인문학연구단 단장

박 명 규



## 세션 1 » 한반도형 평화이론의 모색

• 사회 박명림(연세대학교)

###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작동양식

서보혁(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 분단국체제와 분단효과: 남북관계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향 분석

김병로(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 디터 쟁하스의 평화이론: '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

이동기(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 • 토론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정태욱(인하대학교)



#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작동양식

서보혁(IPUS HK평화인문학연구원)

## I. 문제제기

냉전이 해체되고 세계 수준에서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 지 오래지만,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군비경쟁을 벌이며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분단 및 휴전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마지막 고도(孤島)인 것처럼 보인다. 소위 냉전 해체의 비동시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냉전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남북 분단과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는 원인을 남북간 불신과 대립으로 환원해 파악해도 좋은가? 따라서 남북 통일은 민족대단결로 실현할 장래의 목표로 보아도 좋은가?

이 글은 한반도에서 분단이 지속되고 군사적,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묘사,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냉전 해체 시기 유럽통합의 가속화와 독일 통일과 같은 현상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일어나지 못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 분단과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남북관계 혹은 한반도에 국한하여 논의하기보다는 세계질서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북아 국제관계의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둘째, 부침을 거듭하는 남북관계가 2000년대 들어 개선의 길로 들어서는가 하더니, 다시 적대관계로 되돌아간 것은 남북간 상호작용의 결과인가, 아니면 남북 대립과 한반도의 긴장을 재생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한 것인가? 남북관계의 부침, 곧 지속성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를 남북간 상호작용으로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구조적 요인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간 적대적 상호작용 이면에 이미 외부의 어떤 요인들이 내면화 되어 그것이 남북간 상호작용으로 현상화 된 것일 수도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구조적 이해는 행위자 혹은 사건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이유이다.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폭력적 방식으로 확립된 결과가 남북 분단이기 때문에 분단 극복 논의는 평화정착 논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남북관계론과 평화체제론은 통일과 평화를 각각 분리하여 강조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 분단과 군사적 대치가 한반도 거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통일과 평화 논의는 아래로부터의 시각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논의에서는 한반도에서 분단이 지속되며 군사적 긴장, 이념적 대립이 재생산되는 역사

적 과정과 그 현실을 “한반도 비평화 구조”라 이름짓고 그 양상과 요인을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논의가 남북관계 혹은 분단문제에 초점을 두며 노정한 문제에 착안해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비판 국제관계이론에서 제안하는 “역사 구조(historical structure)” 개념을 활용해 한반도의 현실을 새롭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구조에 역사성을 부여하여 한반도 비평화 구조를 세 범주로 분석하고, 그 작동양식을 동태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한반도 비평화 구조에 대한 역사적, 동태적 접근은 그 구조가 변덕스럽게 발현되는 양상에 주목하면서도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첫째, 왜 논의 범위가 남북관계가 아니고 “한반도”인가, 둘째, 왜 하두가 분단이나 휴전이 아니라 “비평화”인가, 셋째, 주요 개념이 왜 질서나 체제가 아니라 “구조”인지를 답할 것이다. 3장에서는 “역사 구조” 개념을 활용해 한반도 비평화 구조를 그 작동양식에 유의하여 정의하고, 그 구성 범주를 얘기할 것이다. 이어 4장에서는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작동양식을 사회세력, 국가, 세계질서 등 삼차원 운동으로 설명하고 그 지속성과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요약하고 역사 구조주의에 입각하여 비평화 구조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해 볼 것이다.

## II. 이론적 논의

### 1. 왜 한반도인가?

분단(국)체제론과 남북관계론이 천착해온 남북관계에서는 민족관계, 적대관계, 준국가관계가 각기 제도적 동력을 갖고 작용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환원하여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sup>1)</sup> 분단 질서는 국제체제의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두 분단정권의 적대적 공생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적대와 의존의 대상관계 동학”이 작동하고 있다.<sup>2)</sup> 분단체제의 핵심 행동영역이자 주체인 남북관계는 “적대적 의존관계”로 널리 알려져 왔다.<sup>3)</sup> 그러나 분단체제(질서)론과 남북관계론은 행위영역과 그 주체를 남북으로 제한하고 주 관심사도 분단 극복, 곧 통일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질서와 주변국들의 입장과 행위는 외부변수 혹은 환경변수로 처리되어 그것이 한반도에 침투, 내면화 된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sup>4)</sup> 그런 기존 논의에서는 평화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데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가분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은 평화와 결부하여 파악할 성질의 문제이다. 또 남북관계론은 논의 주체를 남북한의 국가권력으로 상정하고 있어 국가-사회관계, 특히 사회세력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에 관심을 거의 두지 않고 있다. 이는

1) 박명규,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과주: 창비, 2012), pp. 37-72.

2) 박명림, “분단질서의 구조와 변화: 적대와 의존의 대상관계동학, 1945-1995,” 『국가전략』, 제3권 1호 (1997 봄·여름), p. 44.

3)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 31-32.

4) 이에 대한 선도적 연구로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과주: 창비, 2012); 백운선, “남북한 군축과 분단구조: 체제내적 저해구조의 고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평화체제 관련 논의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본 논의에서 공간을 남북(관계)이 아니라 세계와 지역에 열린 한반도로 설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 비평화 구조를 논함에 있어서 남북관계 혹은 분단체제는 주요 변수이자 구성 요소로 파악하지만 그것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용례)가 서로 다른 차원의 변수들이 침투, 융합하여 만들어내는 구조의 동태성을 반영하기 힘들고, 사회세력의 다양한 상호작용 또한 담아내기에 협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비평화 구조는 남북관계로 환원하기 어려운 다차원의 논의 주제이다.

한반도는 하나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공간은 정태적이지 않다는 점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즉 한반도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場)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반도에 어떤 기억, 전통, 역사, 심지어는 운명 따위가 내재화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한반도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행위자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묵직하게 제약하는 거대한 역사적 구성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왜 비평화인가?

“비평화(peacelessness)”의 사전적 의미는 “부조화, 폭발 직전의 갈등, 혹은 전쟁의 징조를 보이는 상태” 등이다. 이는 비평화가 전쟁을 포함한 물리적 폭력을 수반할 정도의 갈등이나 여러 원인들이 겹쳐진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렇지만 평화학에서 비평화를 주요 개념으로 제시한 것은 인도의 평화학자 수가타 다스굽타(Sugata Dasgupta)가 1967년 국제평화학회에서 발표한 “비평화와 나쁜 개발(Peacelessness and Maldevelopment)”이라는 논문이다.<sup>5)</sup> 그 논문에서 다스굽타는 비평화라는 신조어를 이용해 제3세계 대중의 삶을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평화의 반대를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전쟁이 없는데도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그것을 평화 없음, 곧 비평화라 보았다. 또 나쁜 개발도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 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는 용어이다.

보편적으로 간주되는 평화도 시각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 왔다. 1세계(서구) 학자들이 전쟁과 평화를 현상적으로 파악했던 평화 개념이 3세계 학자들에 의해 기존 평화학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평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대두됐다. 국제사회의 현상유지가 아니라 세계 정치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혁이 평화의 중심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제3세계 저개발국에서 비평화 인식과 대안 모색에서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나이지리아 삼각주 지역의 분쟁은 저성장, 거버넌스 부재, 지역주민의 관심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족 등 대내적 요인과 관련짓고, 현지에 석유회사를 보유한 서방국들은 사태 파악과 지원에 나서야 하는 선한 중재자 역할로 제시된다. 이는 비평화 요인을 안과 밖으로 경계지어 책임을 한정하고 문제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제한한다.<sup>6)</sup> 아프리카의 저발전과 비평화를 물질적 가난과 비민주적 통치와 같은 대내적 원인으로 돌리는 주류의

5) Sugata Dasgupta, “Peacelessness and Maldevelopment: A New Theme for Peace Research in Developing Nations,”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1967.

6) Hassan Tai Ejibunu, “Nigeria’s Niger Delta Crisis: Root Causes of Peacelessness,” Issue 07/07, European University Center for Peace Studies (EPU), Stadtschlaining/Austria, 2007.

주장은 아프리카를 해외자본에 개방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그런 주장은 아프리카 분쟁의 국제적, 세계적 차원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시장경제”의 해외자본이 아프리카를 빈곤하게 만든 사실을 은폐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사실 아프리카의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내적 원인이 아니라 체계적, 세계적 힘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아프리카가 세계경제에 통합되는 방식이 아프리카의 저발전과 비평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sup>7)</sup> 나아가 세계의 많은 폭력, 가난, 그리고 비극은 자결을 부인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비평화를 극복하는 접근법의 하나로 “발전”이 자결을 점점 더 강조하면 비평화를 초래하는 국가 개혁에 대한 관심은 더 증대할 수밖에 없다.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통찰은 비평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풀뿌리의 잠재력을 드러내줄 수 있다.<sup>8)</sup>

왜 평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다. 즉, 사회 구조 속에 도사리고 있는 빈곤, 억압, 차별, 소외 또는 이념적, 종교적, 인종적, 성적 억압과 분쟁이 모두 평화를 깨뜨리는 요소들이다. “구조적 폭력”이라는 말은 그런 사회적 구조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다스굽타는 전쟁의 반대, 강대국이 일으킨 전쟁에 반대하는 것도 평화이지만, 전쟁이 없어도 세상은 평화롭지 않다고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전쟁 못지않게 “비평화적인 폭력”이 도사리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평화를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평화의 구성 요소로서 빈곤, 기아, 영양실조, 질병, 오염 등을 들면서 이들은 반드시 전쟁이나 국제적 긴장의 산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런 비평화의 구성 요소들을 제거하고 충분한 의식주, 의료, 위생적 생활환경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평화 실현의 길이자 제3세계와 발전도상국에서의 평화연구의 과제라고 주장했다.<sup>9)</sup>

인터넷에서 비평화에 관한 용례를 살펴보면, 비평화는 (평화와 마찬가지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평화의 조건들이 공격, 폭력, 생명 파괴, 그리고 전쟁을 초래한다” 혹은 전쟁은 “극심한 비평화의 단순 징후”라 할 때, 비평화는 배경 혹은 원인으로 이해된다. 이와 달리 “비평화는 단지 총구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경제와 세계경제 간의 연계가 증대함에 따라 갈등과 가난, 결국 비평화를 낳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때, 비평화는 결과 혹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방향이나 맥락에서 비평화의 의미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본 논의에서 비평화는 현상 혹은 결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평화는 ‘전쟁 부재= 평화’라는 단선적 인식을 비판하며 전쟁 부재 상태에서도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그 원인, 그리고 대안에도 관심을 두는 비판적, 대안적 접근이다. 그런 점에서 다스굽타의 비평화는 갈통(J. Galtung)의 구조적, 문화적 폭력과 유사하다. 갈통은 그의 구조적 평화론을 제시하는 가운데 직접적 폭력 외에도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거론하며 비평화의 다차원, 다영역을 제시한 바 있다.<sup>10)</sup>

7) Yash Tandon, “Root Causes of Peacelessness and Approaches to Peace in Africa,” 1999, pp. 3, 8.

<http://unpan1.un.org/intradoc/groups/public/documents/CAFRAD/UNPAN010409.pdf>

(검색일: 2012. 4. 30)

8) Chadwick F. Alger, “A Grassroots Approach to Life in Peace Self-Determination in Overcoming Peacelessness,” *Bulletin of Peace Proposals*, Vol. 18, No. 3 (1987), pp. 375-392.

9) 배정원, “요한 갈통의 평화 개념,” 『평화만들기』, 2005. 8. 27. [www.peacemaking.co.kr](http://www.peacemaking.co.kr) (검색일: 2012. 5. 2)

### 3. 왜 구조인가? 어떤 구조인가?

한반도 비평화 구조를 구성하는 3차원의 하부구조는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전체 구조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가령, 냉전체제의 형성, 한국전쟁과 분단, 적대적 남북관계, 안보국가의 형성 및 억압의 정당화, 제도화에 관한 하나의 논리는 국제, 남북, 대내 차원의 순환으로 가능하다.<sup>11)</sup> 그러나 구체적으로 특정 국면에서 한반도 비평화 구조가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그런 양상들 사이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차원을 보다 실제적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각 차원의 비중을 상대적 견지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각 차원 사이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면 보다 정확한 규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로버트 콕스(Robert Cox)의 “역사 구조” 개념을 빌려올 것이다.

구조와 뜻이 유사한 질서, 체계, 체제와 같은 말들이 한반도, 분단, 냉전, 정전, 평화 등과 결합하여 통용되어 왔다. 구조를 포함하여 이들 용어들은 고정적, 정태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행위자의 자율성 혹은 구조와 행위의 구성적 관계를 무시할 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대내 정책과 대외정책,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침투가 증대하는 현실을 반영한 개념 선택 및 정의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또 그런 현상을 반영하여 세계적 차원의 행동원리와 그것을 규정하는 힘을 재인식할 개념이 요청되는 바이다.

콕스에 따르면,<sup>12)</sup> 국제관계에서도 국가와 시민사회가 상호 깊숙이 침투되어 있고 국가 형태들 간의 차이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제관계이론에서 국가-사회복합체를 국제관계의 기본단위로 간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콕스는 국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되, 사회세력과 사회과정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이 국가들과 세계질서의 발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콕스는 문제해결식의 주류 국제관계이론을 벗어나 비판적 국제관계이론의 정립을 목표로 하되,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을 비판하고 그람시의 경제관계-상부구조론을 이용하여 국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틀로 “역사 구조”를 제시하였다.

콕스는 역사 구조를 특정 역학관계의 상으로 정의하고 사고유형, 물질적 조건 그리고 제도의 특정 조합의 형태를 띤다고 말한다. 물론 그 요소들은 어떤 응집성을 갖는다고 본다. 역사 구조는 사람들의 행위를 결코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압력과 제약을 부과한다. 역사 구조 안에서는 물질적 능력, 이념, 제도 등 세 범주가 상호작용한다. 물질적 능력은 생산과 파괴의 잠재력으로, 이념은 간주관적 의미와 집단적 이미지, 제도는 특정 질서의 안정화와 영속화의 수단으로 이해된다. 제도는 그것이 만들어질 시점의 지배적인 권력관계를 반영하며,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갖는다. 제도는 이념과 물질적 힘의 특정 합성물로서 다시 이념과 물질적 능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10)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Oslo: PRIO, 1996).

11)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2007), p. 45.

12) 로버트 콕스, “사회세력, 국가, 세계질서: 국제관계이론을 넘어서,” 김우상 외 옮김, 『국제관계론 강의2』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pp. 448-469.

콕스는 또 역사 구조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수준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산과정, 생산조직과 연관되는 사회세력, 둘째, 국가-사회 복합체로서의 국가 형태, 셋째,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연속적으로 규정하는 특정 역학관계로서의 세계질서이다. 이들 세 수준은 콕스가 문제제기한 국제관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동태적 이해를 위한 장치이다. 물론 이들 세 수준 사이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 가령, 중심부 국가에서 군산복합체는 세계질서의 갈등을 이유로 오늘날 자신들의 영향력을 정당화시킨다. 주변부 국가에서 횡행한 군사독재는 국내 요소들의 특정한 결합뿐 아니라 제국주의라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유지 강화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형태는 다양한 지배수단을 통해 한 계급의 이익을 증진하고 다른 세력의 이익을 억압함으로써 사회세력들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콕스의 역사 구조론의 동태성은 개념 정의만이 아니라 연구방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문제해결식 이론이 말하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ceteris paribus)”는 구조에 행위 영역을 병치 혹은 연계해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 첫째, 특정 구조를 정의할 때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역사적 상황에서 도출하고, 둘째, 대안적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쟁 구조의 출현을 열어놓는다. 이로써 구조는 생명과 변화를 내포하는 역사적 구성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III. 한반도 비평화 구조

#### 1. 정의

한반도 비평화 구조는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틀이자 그 실체를 말한다. 이때 구조의 구성 요소들은 유무형을 모두 포함하고 그것들이 반드시 한반도에 소재할 필요는 없다. 비평화 구조의 일부 요소는 한반도 역외에 있으면서 이해관계를 갖고 그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때 비평화는 당연히 평화와 경쟁관계에 있지만, 그 관계는 대등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한반도 비평화는 구조 수준으로 발달해있는 반면, 한반도 평화는 그 이하의 수준에서 관계맺음을 할 수 있다.

이때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콘텐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뒤따른다.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실체는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총칭한다. 그 구조의 생성, 발전, 전환, 쇠퇴, 소멸 등 각 국면 혹은 단계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식에서 말하는 폭력이 직접적 폭력임을 감안한다면,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실체는 방대하고 그래서 산만해보일 수 있다. 그래서 구조의 구성 혹은 변이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범주와 수준을 아래에서 논의할 것이다.

우선, 한반도 비평화 구조가 수립되고 유지되는 원동력, 혹은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원리로 적어도 다음 두 가지는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행위자 연합으로서, 한반도 비평화 구조를 수립, 유지에 이해관계를 갖는 지배 카르텔이 그것이다. 이에 관해 기존 논의는 남북(정권

혹은 지배세력)간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론으로 답해왔다. 이 논의는 두 측면에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적대적 상호의존의 양상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유형화 해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안정성 혹은 변화를 논하는 작업이다. 다른 한 작업은 한반도 비평화 지배 카르텔의 구성원을 남북한 정권으로 한정하는 데서 벗어나 다른 구성원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두 눈을 나누어 왼쪽 눈은 남북한의 범위를 벗어나 한반도 밖으로, 오른쪽 눈은 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적정 수준에서의 갈등 관리, 자발적 복종, 집단이익의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실체를 가시적으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구조적, 문화적 폭력론을 이용한 연역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행동 원리로서 전형적인 정체성 정치를 꼽을 수 있다. 이분법적인 아타 구분, 적을 지목하고 그 위협을 과장해 재생산하는 일, 동시에 내부 통합을 강조하며 지배질서를 정당화 하는 일이 한반도 비평화 구조를 재생산하는 정체성 정치의 주행태이다. 이때 위협은 대부분 아의 밖, 곧 외부에서 지목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위협은 외부와 내부를 연계시킬 때 그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다.

구조는 힘과 이익이 필수조건이고 그것을 물질화 할 행동원리가 작동할 때 성립한다. 한반도 비평화 구조는 한반도에서 대립과 긴장, 갈등과 충돌로 이익을 획득하는 지배연합이 형성되어 자신의 지위를 지속시켜 오고, 그것을 위해 정체성 정치를 작동시킨다. 분쟁이론의 견지에서 볼 때 한반도 비평화 구조는 그 장기성과 함께 갈등 해결 추구보다는 자신의 일방적 목적 주장하기, 정체성 정치, 그리고 갈등을 이용한 이익 추구 등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완고한 (intractable) 분쟁 유형과 흡사하다.<sup>13)</sup> 그렇다면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범주와 구체적인 양태는 무엇인가?

---

13) Chester A. Crocker, Fen Osler Hampson, and Pamela Aall, "Introduction: Mapping the Nettle Field," in Chester A. Crocker, Fen Osler Hampson, and Pamela Aall eds., *Grasping the Nettle: Analyzing Cases of Intractable Conflic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5), p. 5; William Zartman, "Analyzing Intractability," in *Ibid.*, pp. 50-51.

## 2. 범주

### 1) 물질적 능력: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비증강

역사 구조로서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범주 중 하나로 먼저, 물질적 능력을 살펴보자. 물질적 능력은 크게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대별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력과 관련하여, 한중일 3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22.3%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세계의 19.6%에 달하고 수출은 18.5%에 달하고, 수입은 16.3%를 차지하고, 외환보유량은 47.5%를 차지하고 있다.<sup>14)</sup> 한중일 3국의 GDP는 지난 20년 동안(1990-2010) 각각 약 2.7배, 10.9배, 1.5배로 성장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GNI)도 각각 약 3.3배, 12.9배, 1.6배 증가하였다. 이들 3국이 세계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의 대외무역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확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무역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11.7%에서 2010년 17.7%(한: 3.0, 중: 9.8, 일: 4.9)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대외수출 규모면에서 '92년 한국, '03년 일본, '07년 미국, '09년 독일을 추월하고 현재 세계 제1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한중일 3국은 ASEAN+3와 마찬가지로, 주로 역내에서 중간재를 교역하고, 최종재는 미국 및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역내 교역비중은 확대 추세인 반면, 중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sup>15)</sup>(표1 참조) 이들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 한중일 FTA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 (비)평화 구조가 동북아의 그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거기에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1> 한중일 3국의 역내외 교역 추세

(단위: %)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수출	역내	16.0	16.9	15.8	13.6	15.3	17.0	18.1	18.9	20.2	20.6	20.2	19.3	18.7	19.1	19.3	19.3
	US	23.8	23.3	23.3	25.7	26.6	26.0	25.4	24.7	22.1	21.0	20.8	20.3	18.4	17.0	20.0	18.9
	EU	14.6	14.0	14.2	16.8	16.5	15.6	16.1	15.5	16.3	16.6	16.7	16.7	17.5	17.1	19.4	18.0
수입	역내	21.9	21.6	22.1	22.5	24.0	24.2	24.7	26.3	27.5	28.1	27.7	26.9	26.5	24.8	25.6	25.2
	US	20.3	20.2	19.5	20.4	18.8	16.3	15.3	13.9	12.2	11.1	10.1	9.7	9.3	8.3	8.0	7.6
	EU	14.6	14.2	13.3	13.8	13.6	12.3	13.2	13.0	12.7	12.3	11.1	10.7	11.0	10.1	10.1	9.6

\* 자료 : IMF, 한국무역협회; 기획재정부(2011).

14) 『내일신문』, 2012년 4월 24일.

15) 기획재정부, “한중일 성장과 교역 동향 및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2011. 12. 13

한편, 북한 경제는 규모, 성장률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북한 발표 및 UN 추정치 기준으로 GDP 규모가 약 120억 달러 내외, 1인당 소득은 약 500달러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의 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하락 추세를 시현, 현재 경기는 전반적으로 하강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북한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sup>16)</sup> 2011년도 북한의 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6억 6,960만 달러이며,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84.4%이다.<sup>17)</sup> 북중간 정치적 관계의 회복과 함께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의 심화가 한반도 평화에 주는 의미는 복잡해 보인다.

한편, 미국, EU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증가를 통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지역무역협정(RTA)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또한 한반도 평화에 주는 의미는 양의적일 것이다. 통상무역 마찰 가능성과 경제협력 증진으로 군사적 갈등을 제어할 가능성이 그것이다. 특히, 경제 후퇴와 경제 성장을 뚜렷이 보여주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가 한반도 평화에 주는 의미는 특별해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가채무가 금융위기 이전 GDP 대비 10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이 중국 등 대아시아 수출 확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sup>18)</sup>

둘째, 군사력의 측면에서 동북아시아는 중동과 함께 냉전 이후에도 지역 긴장이 가장 높고 군비경쟁이 심각한 지역이다. 4강의 이해가 맞서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과 한반도의 긴장이 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2.8%를 차지해 2001-9년 사이 평균 7.4%에 비해 크게 하락해 6980억 달러를 기록했다. 꾸준한 군사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아태지역 가운데 동북아시아는 2110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했고, 2009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동북아시아는 2001-10년 사이 70%의 군사비 증강을 보였고, 이를 선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sup>19)</sup>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높은 이유는 ① 구소련 붕괴 후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의 지속에 따른 신흥 패권세력(중국)의 도전, ② 국제질서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 가령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동맹 강화와 미국 견제를 위한 중러간 안보협력의 대립, ③ 역내 안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역내 국가들의 국방정책의 변화 등이다.<sup>20)</sup> 이런 요인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역내 국가간 안보딜레마를 촉진해 군비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 후 단극체제의 불안정성은 남북한 간에도 새로운 방식, 즉 비대칭적 군비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남북간 군비경쟁은 상호 불신과 같은 일반적 요인 외에도 통일의 주도권을 중심으로 한 체제경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구 소련,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남북에 무기이전, 역내 안보 개입 등으로 남북간 군비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한반도를 중심으

16) 이석, “개관: 김정일 사후 북한 및 한국경제에 대한 소고,”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2월 호, p. 4.

17) 정형곤·김지연, “2011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실적분석과 2012년도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Vol. 6, No. 5 (2012. 3).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1, No. 37 (2011. 12).

19) SIPRI, “Background paper on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 2010,” Press Background Material, 11 April 2011.

20) 김용규,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과 한국의 대응,”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p. 41-45.

로 한 국제체제가 안정이 되어 있을 때는 남북한 간의 군비경쟁이 억제되었고 불안정할 때는 촉진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sup>21)</sup>

일각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미중간 세력전이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패권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제성장에 힘입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들 내의 중국위협론이 그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군사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는 6980억 달러: 1190억 달러(추정)이고, GDP 대비 각각 4.8%: 2.1%(추정)이다. 그리고 중국의 가파른 군사비 증가세 못지않게 미국도 2001-10년 사이 매년 평균 81%의 증가세를 보였다.<sup>22)</sup> 그렇지만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력 하락 요인을 동맹·우방국들에 군비 분담 요구로 보충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중간 군사충돌 가능성을 낮게 해준다. 대신 무역 불균형을 둘러싸고 양국간 통상 마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위협론은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동아태전략의 수정과 그를 집행할 대내적 자원 동원을 정당화 하는 데 유용한 담론일 수 있다.

요컨대 역내 물질적 능력의 분포 상태를 보면, 미국은 ‘지체’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선도’하는 형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원에서 미중 양국은 동아시아 안정을 통한 경제발전에 공동이익을 가진 “이익상관자(stake holder)” 관계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반드시 협력을 가져오지 않고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sup>23)</sup> 동북아에서 그것은 군비경쟁과 상호 불신을 완충하는 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간 군사 긴장의 수위는 미중 협력체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그 범위의 극단까지 간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 2) 이념: 평화·안정 규범과 적대 이미지

록스가 제시한 이념을 구성하는 간주관적 이념과 집단 이미지는 대립하는 관계이다. 간주관적 이념은 집단 이미지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집단 이미지는 간주관적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간주관적 이념은 역내 평화·안정 규범이다. 국제사회의 공통적 지향이기도 한 평화·안정 규범은 동북아에서도 6자회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의장 성명, 그리고 관련국간 공동성명에서 널리 거론되고, 가장 중요한 국제관계 원칙으로 재확인되고 있다. 평화·안정 규범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영토적 통합성, 불가침 등의 원칙으로 뒷받침 되어 왔다. 그런 규범 뒤에 세력균형을 지향하는 역내 역학관계가 평화·안정 규범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물론 대만 위기, 북핵문제, 남북간 군사충돌, 중일 러일 간의 영토분쟁 등이 역내 평화·안정 규범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런 위협 요인들이 역내 평화·안정 규범을 정면으로 해치면서 폭력적 해결을 추구하기는 어렵고, 한국전

21) 선종률, “남북한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22) SIPRI, 앞의 자료.

23) Paul R. Viotti and Mark V. Kauppi,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alism, Pluralism, Globalism, and Beyond*, Third Edition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1999), p. 76.

평과 금문도 사태 이후 지금까지 그런 사태는 세력균형 체제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평화·안정 규범은 역내 공유하는 이념으로 인정, 통용되어 왔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역내 평화·안정 규범이라는 간주관적 이념이 국가 및 국가간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 유지되어 온 한계가 있다. 이념 형성 및 유지를 특정 주체가 독점할 때 그 내용과 효과가 편향적일 수 있다. 평화·안정 규범이 대중의 복리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당한 평화’를 보장하는 기회의 창이 아니라, 국가가 독점하는 폐쇄적 이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국가가 주조, 동원하는 민족주의를 활용한 평화·안정 규범은 피상적으로 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차이, 그것을 정당화 하는 해석의 차이로 인해 폭력과 불안정 요인을 내장하고 있다. 다만, 그런 문제에 유의하면서도 평화·안정 규범이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그리고 종교, 민족, 문화를 막론하고 역내 모든 거주자들의 평화적 생존을 보장해온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평화·안정 규범이 역내,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 이념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를 종합해볼 때 평화·안정 규범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연결 짓는 성격을 띤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평화·안정 규범 이념이 주로 ‘소극적 평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적극적 평화’로서의 의미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콕스의 역사 구조의 한 범주로서 이념은 다른 한 측면, 즉 집단적 이미지를 포함한다. 한반도 안팎에서 집단적 이미지는 대표적으로 적대 이미지(enemy image)를 꼽을 수 있다. 이미지는 상상이지만 그 기원은 경험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상호의존으로 규정할 때 남과 북은 상호 적으로 그려져 왔는데, 그것은 전쟁과 냉전체제 하의 대립이라는 뚜렷한 경험을 원천으로 한다. 전쟁과 대립이 결합해 상승작용을 반복하면서 위협인식이 재생산되고, 그로 인해 상대를 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대응하게 된다. 유럽과 달리, 냉전 해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립이 지속하는 것은 한국전쟁이 역사적 경험으로 전승되고 그 일부 물리적 실체가 온존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 이미지가 역내 집단적 이미지로 지속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 호명되기 때문이다. 대립과 불신이 존재해 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는데, 이제 적 이미지를 통해 대립과 불신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비평화 구조의 역사성과 정치성의 원천을 말해준다. 적 이미지가 계속해서 호명되는 정치적 회로의 중심에는 대립과 갈등으로 이익을 유지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이익이 훼손되는 강력한 기득권 집단, 혹은 지배연합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기존 질서가 동요할 때 피아(彼我)를 구분지어 적을 지목하고 ‘총화단결’, ‘떨사봉공’을 선동하는 것이 적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이유이다.<sup>24)</sup> 이때 대내적 다양성과 대외적 협력은 이적 행위로 간주돼 그런 행동을 보이거나 그런 의심을 받는 자는 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된다.

집단적 이미지로서 적대 이미지는 일국 내 지배집단의 기득권 유지 강화, 국가 간에는 국가권력간 이익 다툼의 주도권 장악에 애용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적대 이미지는 이해 당사자 간에 대립하는 듯 하지만 기존 지배질서를 온존시키는 데 쓰인다. 냉전 시기 동북아 역내 적 이미지는 진영간 대립 질서의 형성 및 유지와 각국의 비민주적 통치에 이용되었다. 지난 천안함·연평

24) 박노자,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서울: 한겨레출판, 2012).

도 사건도 마찬가지였다.<sup>25)</sup> 말하자면 집단 이미지로서 적 이미지는 역내 대중의 복리와는 거리가 먼 과도적인 정치적 상상인 것이다.

그렇지만 적 이미지는 형제(친구) 이미지와 공존할 수 있다. 또 형제 이미지와 공존하면서 적 이미지가 약화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상대와의 원초적 관계와 친밀도 증가에 의해 현실화 될 수 있고, 그 둘이 결합할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비록 현상적 차원이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대한 적 이미지는 형제 이미지와 공존하거나 적 이미지가 약화되었다. 동북아 차원에서도 역내 인적, 물적 교류협력의 증가에 따른 상호 이해가 증대하면서 적 이미지는 약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적 이미지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재생산이 없으면 허약한 것임을 말해준다. 한반도 안팎의 집단적 이미지로서 적 이미지는 그 재생산의 물적 기반의 재생산 여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 적 이미지는 부상하는 집단 이미지로서 형제 이미지와 경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독점적 지위는 무너질 수 있다.

간주관적 이념과 집단적 이미지는 선형적으로 일방의 우위를 말할 수는 없지만, 공유 범위 및 성격의 차이로 인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 한반도에서 간주관적 이념으로서 평화·안정 규범은 집단적 이미지로서 적 이미지와 원칙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병존할 수 없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그 둘을 목도할 수 있다. 두 이질적인 이념이 공존하는 것은 평화·안정 규범 이념이 적 이미지와 친밀하기 때문일 것이다. 평화와 안전 이념의 제한적 의미와 그에 대한 국가권력의 독점적 해석권은 적 이미지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측면이다.

### 3) 제도: 폭력의 트라이앵글

한반도 비평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은 정전체제, 남북의 폭력 재생산 메커니즘, 주변국들의 현상유지 정책 등 삼자간 트라이앵글이다. 정전체제는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물적 토대이자, 관련 행위자들의 팽팽한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응축되어 있는 국제적 실체이다. 정전체제는 정전협정과 그 이행 기구인 유엔군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명시적 요소와,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균형과 분단질서의 현상유지 그리고 남북, 북미간 군사적 대치와 적대 관계 등 묵시적 요소를 포함한다. 물론 정전체제는 1990년대 북한의 군사정전 위 무력화 조치와 북미 제네바합의 이행 프로세스, 그리고 2000년대 남북간 화해협력으로 약화되는 듯 하였다.<sup>26)</sup> 그러나 정전체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물질적 능력과 이념의 지지를 받아 확립된 정전체제가 자가발전 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역내 다자안보협력이 간주관적 행위규범의 공유와 함께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하고 미국, 중국, 아세안 등으로 각개약진하는 것도 역내 불안정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다자적 접근은 강대국들의 상호 견제, 혹은 동맹정책의 보조 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sup>27)</sup>

25) 서보혁, “분쟁 후 인간안보와 남북관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세계정치 16』 (서울: 논형, 2012), pp. 203-236.

26) 서보혁, “정전체제의 유명무실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길,” 강정구 외,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 판 짜기』 (서울: 한울, 2005), pp. 296-311.

27) 예를 들어 Barack Obama,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te House, May 2010.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최대 피해자는 남북의 대중이라는 점에서 남북의 대내적 폭력 재생산 메커니즘은 정전체제와 강대국의 한반도 분단유지 정책을 지속시키는 데 이바지 하고 있다. 그 메커니즘은 남북간 적대관계, 상대방에 대한 적 이미지의 재생산, 그것을 이용한 대내적 억압을 말한다. 남북에는 상대와의 대화 협력을 제약하는 법·제도·관행이 엄존하고 있고, 안보딜레마를 계속해서 연출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강력한 이익연합이 공생하고 있다. 그를 위해, 또는 그를 통해 민주주의는 억압되어 왔다.

강대국의 현상유지 정책은 외부 변수라기보다는 각 강대국의 분단 관리 정책과 남북 정권과의 정치군사적 관계 등을 통해 한반도에 침투해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군사 동맹과 정치적 관여를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갈등을 조장, 묵인하고 그 수위를 조절하며 강대국들이 분단을 유지 관리하는 행태는 제국주의의 분할지배(divide and rule) 통치방식을 연상시킨다. 강대국은 남북에 종속관계 형성, 분단유지 비용 요구 등의 방식으로 비평화 구조의 주체이자 그 연장의 이해당사자이다.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제도화는 역내 국제적 역학관계와 갈등적인 집합 이미지가 반영되어 이루어졌다. 동아태지역에서 냉전을 확립해나가는 불안정한 역학관계에서 전쟁이 초래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한 진영간 적대의식이 비평화 구조의 제도화를 촉진하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비평화 구조는 분단체제를 매개하여 한반도 차원의 대결을 일상화 시켰고, 거기서 기득권을 누리는 집단의 이익을 유지시켜 주었다. 그런데 비평화 제도의 트라이앵글이 상호 강화하여 자가발전하는 내성을 갖게 되었다. 제도화된 구조는 지속성을 띠고 자기 재생산 메커니즘을 내장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 비평화 구조는 냉전, 분단, 억압으로 이어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위에서 말한 세 범주들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확립된 역사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비평화 구조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 역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비평화 구조는 평화 구조를 전망하는 출발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도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비평화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논의가 비평화 구조에 대한 다층적 이해와 그 작동방식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IV. 비평화 구조의 작동양식

##### 1. 세계경제체제, 국가, 사회세력의 3자운동

콕스는 세 범주의 결합으로서의 역사 구조를 지배 구조로 파악하면서 그 역사 구조가 그람시의 헤게모니에 상응한다고 말한다. 그는 특정 시공간에서 세 범주가 결합하거나 분리된다고 보고, 그 이유와 방식을 설명해주는 영역으로 국가권력의 역학관계와 함께 사회세력을 지목한다. 이때 사회세력은 국가 내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 수 있고, 권력 역시 물질적 능력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의 결과로 파악한다. 이때 국가는 세계적 차원의 사

회세력 구조와 특정 국가 내의 사회세력들의 역학관계를 중재할 수도 있다.<sup>28)</sup>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경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 금융자본을 거친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세계경제체제의 출현을 의미한다. 생산 및 자본의 (국제화가 아니라) 세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관계를 세계적 차원에서 위계화 시키고 부의 독점적 분배 메커니즘을 세련화 한다. 그에 따라 사회세력 및 국가형태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제국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결집된 산업노동자의 사회적 압력에 맞서 복지국가 모델과 사회조합주의적 통치로 대응한다. 상대적으로 사회의 우위를 반영한 생산의 유연화 전략이다. 물론 그것은 (반)주변부 지역에서의 잉여 수탈과 냉전을 활용한 일부 생산의 통제로 가능한 것이었다. 발전도상국의 경우 민족자본이 초국적 자본과 일부 연대하면서도 국가의 지원으로 자율적 발전을 모색하였다.

탈냉전, 세계화 이후 전면화 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초국가적, 비국가적인 경제행위가 확대되었다. 초국적 자본 주도의 지식, 기술 상품이 경제행위를 선도한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경제정책을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사회적 압력에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지위를 잃어버렸다. 대신 국가는 국내의 사회적 압력과 세계경제의 요구를 중재하는 위치로 자신의 위상을 재설정하려 하지만 자율성은 이미 크게 침식된 상태이다. 초국적 자본이 이미 국가 정책결정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기구의 정책 개입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제 관료의 권한 증대가 그 예이다. 그렇게 국가 경제는 세계경제의 일부로 재편된다. 국가는 국가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자율적 행위자에서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관리하는 수동적 행위자로 전략한 것이다.

세계경제체제의 등장에 따른 국가 형태의 변화는 사회세력의 재편을 반영하거나 그것을 동반한다. 초국적 자본의 국가경제 정책 결정, 국가경제의 초국적 자본에의 종속적 편입으로 복지국가, 조합주의 담장이 무너지고 민족자본이 해체 지경에 이른다. 사회세력은 세계적 차원에서 더욱 위계적으로 재편된다. 초국적 자본가를 정점으로, 중간에 그 이해를 대변하는 일부 관리 집단 아래 광범위한 산업노동자들이 위치한다. 복지국가-조합주의 모델이 해체된 상태에서 산업노동자들은 이중의 분열을 겪는다. 초국적 자본으로부터의 착취, 소수 기득권 노동계층과 다수 비기득권 노동계층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물론 생산의 팽창 도모를 위해 초국적 자본의 조합주의적 노사 개입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노동자의 이중 분열은 국가에 의해 강제로 은폐된다. 이때 노동계급이 구체적으로 직면하는 모순과 그들의 분열은 각국이 세계경제체제에 놓여있는 위상, 즉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 중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날에는 경제의 세계화가 세계적 차원의 경기 침체를 수반하면서 초국적 자본은 노동자 계층의 주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이윤 창출 기제를 창출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들었다. 그 과정에서 초국적 자본의 국내 침투 즉,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 정도를 달리하는 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타협이 빈번해질 수 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현상적으로 미국 주도의 한국, 일본, 대만을 한편으로 하고, 중국과 북한을 한편으로 하는 대결 구도가 전개되는 것처럼 보인다. 혹자는 이를 동북아 신냉전 구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비유이다. 이념적 대립이 사라졌고 대결과 협력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정치군사적 갈등을 억제하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sup>29)</sup> 현상적인 구도 이면

28) 콕스, 앞의 글, pp. 473-474.

을 보면 동북아는 중국을 대상으로 세계경제체제의 완전한 재편이 진행되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 한국이 세계경제체제에 위계적 협력관계의 형식으로 완전히 편입된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 정책을 전개하면서 세계경제체제에의 편입을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일 3국간 정치군사적 협력은 “가치와 신뢰의 동맹”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태의 동질성과 세계경제체제에의 개방성에 그 물질 토대를 두고 있다. 미국 등 이들 국가는 초국적 자본의 잉여창출의 대변자 혹은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을 전개하는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은 기본적으로 그로부터 연유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위협론에 바탕을 두고 동아태지역에서 추진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 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상과 같은 중국 봉쇄전략과 중일 간의 라이벌 의식이 역내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 요인은 현재 “미중 경제·전략대화”, 그리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상호 견제가 억제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현 미국 행정부는 “아태지역으로의 전략적 귀환”을 공식화 하며 중국과의 협력과 경쟁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30)</sup>

물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자 세계 제일의 무역대국으로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중국이 세계경제체제로 완전 편입하는 것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는 점이다. 미국, 국제경제기구 등 초국적 자본의 대항자들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역할 다짐을 활용하여 중국이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압력과 초국적 자본의 요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대중매체 등 시민사회의 발전은 국가-사회관계의 균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자율적 위치와 중재 역할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sup>31)</sup>

둘째는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사회계급이 초국적 자본가가 등장하고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 노동자계급으로 급속히 분화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노동자 계급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경제체제에의 편입을 추진하며 성장 위주 정책을 전개해온 중국에서 초국적 자본에 연계되지 않은 많은 비정규 노동자계급은 비인간적 삶으로 내몰리고 있다. 예를 들어, 1억5천만 명을 넘긴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은 성장 이면의 사회적 압력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sup>32)</sup> 중국이 세계경제체제에 편입하는 속도와 방식은 중국의 안정은 물론 역내 평화에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출몰과 중국 노동자의 한국 유입은 그런 현상과 관련 있고, 이는 한반도 비평화 구조가 역내 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9)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14.5%, 수입은 16.6%이고, 미국의 대중 수출은 13.1%, 수입은 9.4%에 그쳤다. 그런 가운데 같은 해 미국은 대중 교역에서 2,35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이 ‘공정무역’을 명분으로 중국에 시장개방 압력을 높일 것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킬 것이다. 여기에 한중일 교역 규모와 FTA 추진도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다.

30)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31) Gunjan Singh, “Media in China: An Irreversible Transition?,” IPCS Special Report 123 (New Delhi: Institute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2012).

32) Namrata Hasija, “Migrant Unrest in China: An Analysis,” IPCS Special Report 119 (April, 2012).

한편,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전통적 우호관계와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대한 위협인식과 국가 중심의 발전전략에 관한 공감대를 무시할 수 없다. 북한과 중국의 우호협력관계는 그와 같은 요인들이 견고하고 국제규범에 대한 상대주의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남북한은 각기 다른 위상과 방식으로 세계경제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

남한은 수출주도 경제정책으로 처음부터 세계자본주의 경제에 깊이 편입해왔다. 그 결과 세계경제체제에서 한국은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상향 이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일관된 개방경제노선의 결과라 할 수도 있다. 남한은 위에서 언급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부응하며 변화를 거쳐 왔다. 현재까지 남한은 세계, 양자, 지역 차원의 순서를 거치며 개방경제를 완성해나가고 있다. 87년 민주화는 경제발전이 통치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노동자 대투쟁을 동반한 민주화는 이어진 경제호황과 함께 직접적 폭력을 완화시켜 나가는 듯 보였다. 87년 체제는 이후 복지국가-조합주의 모델을 요구받으며 성장 후 분배를 모색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냉전 해체를 수반한 1980년대 말 자본주의가 세계경제체제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세계경제체제로의 급속한 편입을 강제 받았다. 그 후 87년 체제는 계속 도전받아 갔고 국가의 위상과 역할은 초국적 자본에 점점 더 포획되어 갔다. 산업노동자는 이중분열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남북관계를 통한 국가경제의 출로 모색은 본격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였다. 남한은 민주화와 개방화가 동시 진행되면서 사회적 압력과 초국적 압력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곳이 되었다. 그 사이에서 국가가 중재자로서의 자율성을 행사하기보다는 초국적 압력으로 기울면서 양극화가 촉진되었다. 남한은 세계경제체제의 특징과 모순을 극명하게 보이고 있다. 민주화 이후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던 물리적 폭력이 재연되고 거기에 문화적, 구조적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남한이다. 민주화와 정보화로 적으로서 북한의 이미지가 약화되는 듯하지만 남북간 대립과 충돌은 적으로서의 북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외국인노동자, 조선족, 탈북자 등 소수자집단에 대한 차별이 덧씌워지고 있다.

남한과 달리 북한은 민족경제 발전전략으로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인민대중의 국가는 사회주의적 생산 및 소비 양식으로 대중 동원과 지지 획득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저발전 지역의 추격발전전략의 한계 및 비민주적 정책 추진방식과 결합하여 북한은 양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유일영도체제 하의 북한에서 노동자, 농민은 대중독재형 통치에 식민화 된 수동적 대중으로 전락하였다. “생산성의 정치”가 생산성을 하락시키자 정치사상적 자극과 통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지만, 저생산 구조를 회복할 수 없었다. 데탕트에 편승하며 북한이 전개하기 시작한 인민외교, 서방외교는 정치적 실체로서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과 “부족경제”를 벌충하려는 교육정책이었다. 진영외교가 경제적 모순을 저지하는데 일조하였지만, 냉전 해체와 경제의 세계화로 북한의 모순은 세계에 노출되었다. 핵개발과 탈북 행렬, 그리고 권력승계 작업의 동시 발생은 정치공동체로서의 북한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었다. 북한이 주창해온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주외교”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기형적인 방식으로 편입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 출발은 적어도 내포적 성장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적어도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 되었고, 오늘에 이르러 남한, 중국을 매

개하여 세계경제체제의 최하위에 편입되었다. 부족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패 문화가 만연하고 권위주의적 통치가 지배하는 북한에서 비평화 구조는 열악할 것으로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거기에 분단체제는 비평화 구조를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주었다.

“인간안보”의 견지에서 남북 대중의 삶의 안전 실태에 차이가 있다.<sup>33)</sup> 정치체제, 경제노선, 국가-사회관계 등에서 차이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대중은 절대적인 차원에서 폭력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거기서 상대적 판단 기준이 도입되면서 탈북, 유랑, 태업 등 소극적 방식으로 폭력에 저항하곤 한다.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차이는 주권권력과 생명관리권력, 규율권력과 조절권력의 배합의 문제일 것이다.<sup>34)</sup> 이는 남북의 비평화 구조가 분단체제로 환원할 수 없는 자체의 모순과 문제를 안고 있음을 말해준다. 분단체제는 이점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폭력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분단체제를 통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남북의 지배세력이 분단을 이용해 국가폭력을 정당화 하는 관행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남북이 분단체제로 연계되지 않고 각각 독립적 정치공동체라면 생산과정과 사회세력은 더 정상적인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세계적 지배 아래 놓이겠지만, 분단체제의 약화는 한반도에서 대안적 구조의 창출 가능성을 보다 넓혀놓을 수 있을 것이다.

## 2. 비평화 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국면은 크게 냉전기 안정 국면과 탈냉전기 불안정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극동의 냉전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해 군사적 긴장과 대내적 억압이 높았다.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전쟁은 억제되었지만 두 안보국가는 성장을 주도하며 억압을 제도화 하였다. 국제적 차원, 남북관계, 그리고 대내적 차원에서 똑같이 대결과 억압이 아무런 저항 없이 관철되었다.

그런 가운데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조정국면과 베트남 전쟁의 여파를 배경으로 데탕트가 조성되어 냉전체제가 이완되었다. 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남북한 정권은 일시적으로 대화에 나섰다. 그러나 데탕트는 냉전체제의 약화가 아니라 일시적 숨고르기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가 한반도에 의미가 큰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의 갈등이 이완되지만 그 갈등이 두 분단국가의 체제경쟁으로 이전되고, 훨씬 더 내면화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는 점 때문이다. 그 결과 남북대화는 각자의 정치체제를 더욱 억압적인 방향으로 개악하는 데 활용되었다. 무너가 다른 두 안보국가를 확립한 이후 남북 정권은 외교무대로까지 확장하여 전면적인 체제경쟁에 나섰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중심축이 남북관계로 이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강대국간 대립이 한반도로 전이되어 남북간 갈등이 높아진 것에 대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강대국들은 분단과 긴장상

33) 서보혁, “한반도 인간안보 과제와 남북협력 방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6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12년 4월 25일).

34) 미셸 푸코 지음, 오토르망 율김,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2011).

태에 대한 책임을 남북에 전가하는 식으로 남북간 대결을 방치하였다. 짧은 데탕트가 지나자 두 안보국가는 더욱 굳어져 가면서 분단도 내면화, 제도화 되어 갔다.<sup>35)</sup>

한편, 탈냉전기 불안정 국면은 냉전체제 해체와 남북관계 변화, 그리고 북핵문제의 부상 등으로 대화와 대결이 혼재된 유동적인 상황을 말한다. 유럽과 달리 한반도에서 냉전 해체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고 한반도 비평화 구조에서 남북관계 차원의 상대적 자율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남북간 대화와 대결이 오가면서, 특히 민주정부 10년간의 남북관계가 이후 퇴행하는 것을 보고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재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렇지만 그런 논의 가운데 여전히 국제적 차원의 범주를 비평화 구조에서 제외시키거나 고작 환경 변수 정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한 통찰이라 보기 힘들다. 탈냉전기 불안정 국면은 다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남북대화 및 북미접촉이 있는 탐색기,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까지 갈등 상황(1차 북핵위기), ▷북미 기본합의 이후부터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과 북미 공동교묘니케 발표까지 협력 상황, ▷9.11테러부터 현재까지 갈등 상황(2차 북핵위기)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여기서 민주정부 10년 간의 남북관계 개선을 하나의 소시기로 구분하지 못한 것은 그 시기가 항상 북미관계 개선과 연동된 양호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북미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는 점에서 남북미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는 긍정적 방향에서 인지 조화 상태를 요구한다.<sup>36)</sup> 그렇지만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대내적 차원에서 볼 때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가-사회관계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억압기제는 크게 완화되고 대신 동의기제가 활성화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 공고화와 안보문제의 전략적 이용의 소멸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 시기 북한의 경우 계획과 생존을 보충하는 장치로 시장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권위주의 통치, 동원의 작동기제로서의 국가-사회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한반도 비평화 구조는 국면 전환과 그것을 촉진한 주요 사건들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질적 변화, 즉 새로운 “구조적 시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비평화 구조가 변화보다는 지속성이 크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비평화 구조가 3차원에서 상호작용 하면서 남북대립, 군사적 대치와 긴장, 안보국가의 건재가 계속 목격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에서 변화, 특히 하나의 주기적 시간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로 10년간 관계개선이 있었지만, 그 시기 북핵문제는 악화되어갔고 관계개선이 제도화 되지 못하고 이후 역진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본질적 변화는 발견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분단, 대치, 억압 상황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지배연합에 변함이 없고, 적을 (재)생산하고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갈등을 조장하는 정체성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변화는 현상적 수준이어서 구조 변화를 강제하거나 촉진하지 못하였다. 먼저, 지배연합 구성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은 분단체제의 현상유지, 곧 남북간 대립의 적정 관리를 통한 정전체제 유지에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데탕트 이후, 더 소급하면 1953년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물론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모두 일치하지 않고 장래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안정 규범이 중

35) 홍석률, 앞의 책.

36) 서보혁,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4권 2호 (2008), pp. 63-85.

국의 중상주의적 경제성장, 미국 등 서방 초국적 자본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공통된 이해관계임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남북한 정권의 분단의 전략적 이용이 지속되는 한 분단 해체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물론 한반도 긴장 상태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득권 집단(특히 남북한 정권)이 있지만, 그것은 세계질서 주도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불안정성은 이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만, 남한정권의 주도세력이 군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고 초국적 압력과 대내적 제약이 높아져 국가권력의 자율성이 완화된 것이 변화이다. 그러나 그런 변화는 국가권력 자체의 폭력성, 남북한 정권의 적대적 의존, 그리고 남북 민중 간의 이질감 재생산 등에 의해 압도당한다. 나아가 남북한 정권이 비평화 구조의 핵심 기반인 분단체제의 극복에 나설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분단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이해를 같이 하는 주변 4강의 구조적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 일부 현상적 변화를 무력화 시킨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 1987년을 분수령으로 국가-사회관계에서 수직적, 일방적 성격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나 안보문제에 있어 거버넌스가 적용되는 수준은 아니다. 더욱이 남북간 격차의 증대로 북한의 흡수통일 두려움, 남한의 북한 혐오증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국제네트워크를 가진 사회세력의 평화 만들기 작업도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비평화 구조와 경쟁할 수준은 아니다.

둘째, 정체성 정치에서 일부 변화가 보인다. 북핵문제의 경우 남북관계 차원과 국제적 차원이 어우러져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는 일방적인 구도, 일종의 핵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물론 중국이 전략적 필요에 따라 북한을 두둔하지만 미중 협조체제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코너로 몰린 북한의 반작용 역시 한반도 비평화 구조를 경화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점이다. 핵개발이 과시용을 넘어 핵무장으로 추진되는 과정과 안보국가로서의 전형을 보여주는 '선군정치'가 그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악마 만들기 구도 하에서 남북관계가 비평화 구조에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자율성을 갖고 추진되려면 많은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주목을 요하는 정체성 정치에서 새로운 양상은 대내정치적 요소의 증대, 특히 사회세력 내에서, 혹은 사회세력 간에 정체성 정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으로 표현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여기에 공공이익과 집단이익, 그리고 집단이익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갈등도 대내적 차원의 비평화 구조의 일단이다. 정체성 정치의 격화 원인은 특수이익의 일반이익으로의 주장, 일방주의적 대화 방식, 집단 이미지에 따른 관계 짓기 등이다. 그러나 사회세력의 정체성 정치는 자율적이라기보다는 권력집단과의 연계 하에서 전개된다. 평화·통일문제의 경우 정치사회의 후견이 시민사회에서의 정체성 정치에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혹은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에서 사회세력은 생산과정에서 연원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념적, 정치적 요소가 크게 개입한 개념이다.

셋째, 냉전 해체를 계기로 사회세력, 국가형태, 세계경제체제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 해체 이전 한반도에서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제한되었고 특히 사회세력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를 배경으로 한반도 비평화 구조는 국제정치에서 국내정치로, 국가에서 사회로, 즉 하향식 일변도의 작동에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세계화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영향력을 전면화 시켜 한반도에서도 다양한 반

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만성적 경제난에 빠진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남한에서 국가-사회관계, 그리고 그 위에서 혹은 남북에 침투해있는 초국적 자본 간의 삼자운동은 한반도를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다. 그런 운동은 한반도 비평화 구조에서 특정 차원의 일방적 규정력을 완화시키지만 그와 비례하여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지속성이란 구조의 유지 메커니즘에 일정한 경로의존성이 작동함을 의미한다. 경로의존성이 작동하려면 특정 방향으로 경로가 선택되는 “결정적 국면”을 통과하여 제도화 단계로 진입할 공통이익, 규칙 제정, 내적 자율성이 갖추어져야 한다.<sup>37)</sup> 한반도 비평화 구조는 한국전쟁이라는 “결정적 국면”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산인 휴전체제가 지배연합 사이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 유지에 이바지 하는 물리적, 이념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3차원에서 상호작용 대립과 갈등이 재생산되고 있다.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그보다 짧았던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는 이런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지속성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반도 비평화 구조에서 변화는 역진될 정도로 유약하고 짧았던 것이다. 이는 한 차원에서의 변화로는 비평화 구조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그 작동양식을 콕스의 “역사 구조” 개념을 차용해 살펴보았다. 비평화 구조는 다양한 요소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재생산되는 메커니즘 보인다. 여기서는 그것을 역사 구조 개념의 세 범주와 세 차원을 적용해 분석적으로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한반도 비평화 구조를 역사적이고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그 틀 속에서 남북관계 혹은 분단체제의 위상을 재검토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가설의 형식으로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 비평화 구조는 물질적 능력, 이념, 제도로 형성, 발전해온 역사적 구성물이자 관련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의 장이다. 비평화 구조는 고정적으로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방향과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 제도가 능력과 이념의 합으로서, 다시 그 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요한다.

둘째, 한반도 비평화 구조는 사회세력, 국가, 세계질서 등 삼차원에서 나타난다. 이들 3자운동은 국면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한다. 냉전기에는 국가 차원 중심의 삼자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무정형의 3자운동을 보이며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구조의 형성은 비평화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변수는 대안적 제도의 등장과 삼차원 중 약간 고리의 부상이다. 물론 그런 상황이 현실화 되려면 진보적 사회세력이 일국, 초국적 차원에서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37) 홍기준, “유럽통합의 경로의존성과 창발성,” 『국제정치논총』, 제48집 4호 (2008), pp. 219-220.

여기서는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취졌을 수도 있으나, 위 가정을 적용할 경우 변화가능성도 균등한 비중으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 전망 역시 물질적 능력, 이념, 제도의 세 범주를 이용하여 사회세력, 국가 형태, 세계질서 등 3 차원을 교직하여 논할 수 있다. 비평화 구조를 평화 구조로 전환할 조건도 이 틀에서 논의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소망적 사고로 전락되지 않고 현실화 가능성을 논하려면 구조 개념과 그 연구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 작업에는 구조 개념에 역사성을 부여하고,<sup>38)</sup> 구조 개념을 유연화 하고,<sup>39)</sup> 세계화가 대내문제에 내면화 되는 과정에 주목하고,<sup>40)</sup> 구조의 범주와 차원에서 관계를 유형하는 작업<sup>41)</sup>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반도 (비)평화 구조 논의가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도 현실 변화를 담지하려면 구조에 생명을 불어넣어 거기서 역사성과 동태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의의 의의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2007).
- 김용규,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과 한국의 대응,”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기획재정부, “한중일 성장과 교역 동향 및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2011. 12. 1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1, No. 37 (2011. 12).
- 로버트 콕스, “사회세력, 국가, 세계질서: 국제관계이론을 넘어서,” 김우상 외 옮김, 『국제관계론 강의2』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 미셸 푸코 지음, 오토르망 옮김,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2011).
- 박노자,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서울: 한겨레출판, 2012).
- 박명규,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파주: 창비, 2012).
- 박명림, “분단질서의 구조와 변화: 적대와 의존의 대쌍관계동학, 1945-1995,” 『국가전략』, 제3권 1호 (1997 봄·여름).
- 배정원, “요한 갈통의 평화 개념,” 『평화만들기』, 2005. 8. 27.  
[www.peacemaking.co.kr](http://www.peacemaking.co.kr) (검색일: 2012. 5. 2)
- 서보혁, “분쟁 후 인간안보와 남북관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이론: 세계정치 16』 (서울: 논형, 2012).

38) Fernando H. Cardoso and Enzo Faletto,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39) Douglas Porpora, “Four Concepts of Social Structure,”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Vol. 19, No. 2 (1989), p. 195; Colin Wight, *Agents, Structur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as On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127, 175-176.

40) E. Fuat Keyman, *Globalization, State, Identity/Difference: Toward A Critical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1997), p. 34.

41) 박명규, 앞의 책, pp. 91-93; 구갑우, 앞의 책, p. 168.

- 서보혁, “정전체제의 유명무실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길,” 강정구 외,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서울: 한울, 2005).
- 서보혁, “한반도 인간안보 과제와 남북협력 방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6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12년 4월 25일).
- 서보혁,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4권 2호 (2008).
- 선종률, “남북한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 이 석, “개관: 김정일 사후 북한 및 한국경제에 대한 소고,”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2월호.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정형곤·김지연, “2011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실적분석과 2012년도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Vol. 6, No. 5 (2012. 3).
- 홍기준, “유럽통합의 경로의존성과 창발성,” 『국제정치논총』, 제48집 4호 (2008).
- Chadwick F. Alger, “A Grassroots Approach to Life in Peace Self-Determination in Overcoming Peacelessness,” *Bulletin of Peace Proposals*, Vol. 18, No. 3 (1987).
- Chester A. Crocker, Fen Osler Hampson, and Pamela Aall, “Introduction: Mapping the Nettle Field,” in Chester A. Crocker, Fen Osler Hampson, and Pamela Aall eds., *Grasping the Nettle: Analyzing Cases of Intractable Conflic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5), p. 5; William Zartman, “Analyzing Intractability,” in *Ibid.*,
- Douglas Porpora, “Four Concepts of Social Structure,”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Vol. 19, No. 2 (1989), p. 195; Colin Wight, *Agents, Structur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as On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E. Fuat Keyman, *Globalization, State, Identity/Difference: Toward A Critical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1997).
- Fernando H. Cardoso and Enzo Faletto,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 Gunjan Singh, “Media in China: An Irreversible Transition?,” *IPCS Special Report 123* (New Delhi: Institute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2012).
- Namrata Hasija, “Migrant Unrest in China: An Analysis,” *IPCS Special Report 119* (April, 2012).
- Hassan Tai Ejibunu, “Nigeria’s Niger Delta Crisis: Root Causes of

- Peacelessness,” Issue 07/07, European University Center for Peace Studies (EPU), Stadtschlaining/Austria, 2007.
-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Oslo: PRIO, 1996).
- Paul R. Viotti and Mark V. Kauppi,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alism, Pluralism, Globalism, and Beyond*, Third Edition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1999).
- SIPRI, “Background paper on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 2010,” Press Background Material, 11 April 2011.
- Sugata Dasgupta, “Peacelessness and Maldevelopment: A New Theme for Peace Research in Developing Nations,”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1967.
- Yash Tandon, “Root Causes of Peacelessness and Approaches to Peace in Africa,” 1999, pp. 3, 8.
- <http://unpan1.un.org/intradoc/groups/public/documents/CAFRAD/UNPAN010409.pdf>  
(검색일: 2012. 4. 30).

# 분단국체제와 분단효과: 남북관계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향 분석

김병로(IPUS HK 평화인문학연구원)

## I. 남북관계의 역동적 재조명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폭격이나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북한의 행동은 남한의 북한의식과 대북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남한의 정치지형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평화의 댐을 건설한 것이나, 소위 '북풍'사건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이용하여 특정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던 시도는 북한의 정책과 행위가 남한의 정치사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과거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빨갱이' 울가미를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아직도 이러한 관행 때문에 남한의 정치권은 종종 북한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북한의 의도와 행위가 남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쪽에서도 마찬가지다. 남한의 88서울올림픽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KAL 폭파사건을 감행하는가 하면 이에 대응하는 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여 대대적 행사로 치르기도 하였다. 팀스피리트나 키리졸브 등 남한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한의 주민단결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남한의 압도적인 경제성장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정당화 담론 조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또 북한의 집권층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정치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명분으로 줄곧 '남조선과 내통'한 간첩 혐의라는 낙인을 편리하게 전용하고 있다. 북한에게는 남한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명분을 위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사회적 자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남한의 존재와 행동이 북한체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해 준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반응을 한다. 어떤 의도를 갖고 성명을 발표하고 선언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며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남북한은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고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북한이 각기 추진하는 심리전이 그러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남북한에 발생하는 우발적인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겉으로 드러난 선언이나 행위는 없지만, 상대방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그에 대비하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사건과 문제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남북한에 중요한 정치적 해석을 수반하며 이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효과를 산출하게 된다. 상호 긴밀하게 반응하는 대응체제인 남북한 관계에서 남북한이 상호 주고받는 영향과 그 결과를 분

단효과(division effect)라 불러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목표로 하는 분단효과 연구는 남북한 간의 관계와 영향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며, 마찬가지로 북한의 존재가 남한의 변화에 미친 효과도 매우 클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연구는 남북간 제기되는 사건이나 이슈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런 이유로 남북관계 연구는 주로 정치회담이나 경제교류, 이산가족, 대남정책과 대북정책 등 남북간 사안에 국한되어 다루어졌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에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사회 연구나 북한연구가 남북관계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채 내부의 구조적 특성과 국제관계의 맥락에서만 진행된 경향이 강했다.

분단효과를 분석하는 일은 남한과 북한 각 체제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남북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재조명해보는 작업이다. 이는 남북관계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남북한 각 체제의 형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인 것이다. 남북관계의 상호작용이 각 체제의 변화와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효과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남한을 연구하는 분단의 상호 영향과 효과에 관한 역동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의 분단이 만들어 낸 효과를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해야만 이를 토대로 통합과 통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분단이후 남북 분단체제의 발전과정에서 발견되는 분단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분단효과에 나타난 일정한 패턴과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분단효과 작동환경으로서의 분단국체제와 상호작용

### 1. 분단체제론과 분단효과

남북한 발전과정에서의 분단효과는 남북한 비교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의 학술적 관심대상이 되었다. 남북한 정치발전을 분단효과에 의해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J.A. Kim(1975)의 남북한 비교연구와 Kwak, Patterson, Olsen의 공저(1983), Y.W. Kihl(1984), Bruce Cummings(1984), Ralph Clough(1987)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서는 비교정치론의 입장에서 남북한 정치발전을 비교시각에서 관찰한 것들로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한의 상호 경쟁과 적대의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특히 국제사회에서 체제의 정통성을 선전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표출된 현상을 분석하였다. B.P. Kim(1992)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북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발전과정에 나타난 분단효과(division effect)를 적시하며 설명하였는데, 남북한이 상호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행동에 대응하고 상대의 장점을 자기 체제에 보완하려는 일종의 비교효과와 같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남북한 분단체제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적대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분단효과 분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냉전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국내에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분단효과를 분석하였다. 냉전시기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남북한을 비교해 보거나 경쟁의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학술적 공간이 극히 제약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 분단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진행되었고 분단체제론은 남북한의 분단문제를 하나의 거대한 체제로 설명함으로써 분단효과가 작동하는 환경과 배경을 잘 설명해주었다. 손호철과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이라는 개념으로 남북한의 상호의존성과 분단효과를 검토하였는데, 자료와 정보의 제약 때문에 주로 분단 상황에 영향을 받은 남한의 정치사회적 결과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분단 상황에서 북한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텐데 분단체제론에서는 북한쪽이 받은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분단구조를 일종의 시스템으로 놓고 상호작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분단효과를 분석하는 데서 효용성이 매우 높다.

분단체제론은 분단을 유기적 자기완결성을 갖는 체제라고 보고 한반도 분단으로 형성된 남북한간 상호작용과 그 형태를 분단체제로 규정하였다. 분단체제론의 대표적 제창자인 백낙청은 “한반도 남북전체를 망라하는 이 현실이 ‘체제’로서의 어떤 성격을 띠지 않았는지”를 성찰하면서 분단체제론을 내놓았다.<sup>1)</sup> 분단체제를 “세계체제의 하위체제이면서 일정한 독자성을 갖는 남북한체제의 독특한 결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sup>2)</sup> 분단체제는 분단체제를 지속시키는 더 큰 세계체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남북한 간에는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분단체제는 일정한 지속성, 즉 자기 재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종석은 ‘거울영상효과’ (mirror image effect)로 분단효과를 설명한다.<sup>3)</sup> 거울영상효과란 적대적인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대칭적인 반작용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효과를 말한다. 예컨대 한쪽의 군비증강이 그 반작용으로 상대방의 군비증강을 자극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당사자가 서로를 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미지나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가 거울에 비친 모습과 실제 모습의 관계처럼 위치만 정반대일 뿐 생긴 것은 똑같은 상태가 거울영상이다. 분단 이후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이를 증명한다. 박명림은 이것을 ‘대쌍관계동학’(interface dynamics)라고 부른다. 그는 “대쌍관계동학이 일반적인 상호관계와 다른 것은 두 행위자가 특정의 체제나 질서를 구성하고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구성된 전체질서가 다시 하나의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두 행위자에게 특정의 조건을 부과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4)</sup> 미워하면서도 닮아간다는 말대로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나의 것에 대한 과신 속에서 하나의 대칭적인 쌍이 되었는지 모른다.

송두울은 남북한의 경계가 정치 경제 문화 심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분명한 대칭축으로 작용하는 분리선임을 설파했다. 특히 군사부문에서 가장 대칭적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관계는 적대적이면서도 고도의 상호의존적인 삶을 연결시켜주는 끈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의 체제경계는 남과 북이라는 체제와 체제를 분리시키고 또 이를 연결

1)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p. 15.

2) 손호철, [해방50년의 한국정치]. (서울: 새길, 1995), p. 294.

3)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22.

4) 박명림, “분단질서의 구조와 변화: 적대의 의존의 대쌍관계동학, 1945-1995” [국가권력] 1997년 봄·여름호, 제3권 1호, 세종연구소, p. 44.

시키는 이중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바로 이 분리와 연결의 이중적 기능은 “한쪽의 긴장이 곧바로 다른 쪽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휴전선이라는 경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말한다.<sup>5)</sup>

## 2. 분단국의 상호작용과 분단국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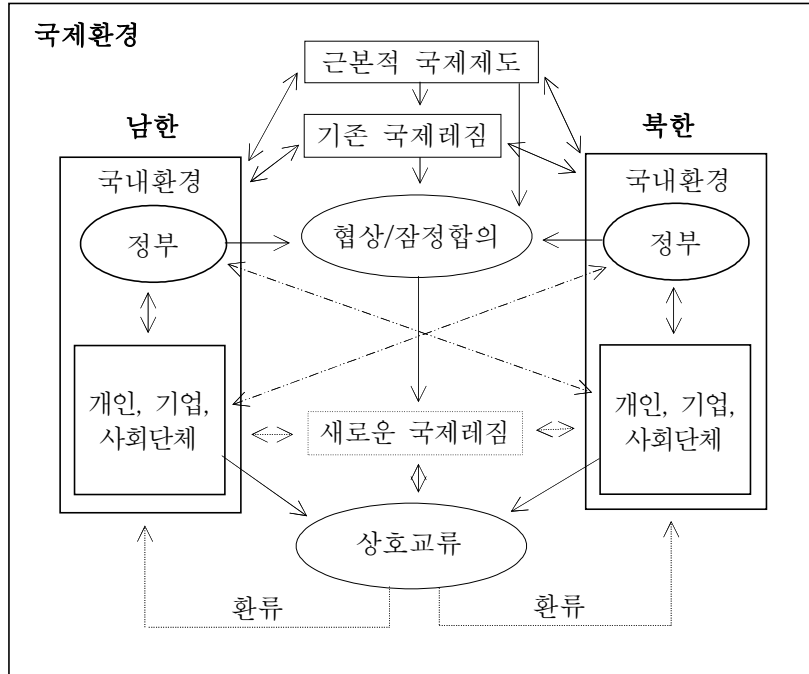
분단의 상호작용과 효과를 파악하려는 다른 시도로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와 국가적 성격의 강화를 반영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분단체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관계를 제도주의 시각에서 보면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행위유형이 보다 협력적이며 공존하는 방향으로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을 특정방식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치 시장에서 익명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적절한 교환과 균형이 형성되듯이 남북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학습을 통해 공동이익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정된 제도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 간에 협상을 통해 기존의 형식적 제도를 변경시키거나 새로운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상호적응, 비협조게임, 부정적 조정 등 여러 방식의 상호작용이 패턴화된다.<sup>6)</sup> 이런 점에서 상호작용 과정에서 당초의 목표나 이익 변경을 포함하여 전략적 선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아래의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 관계는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회와 국내환경, 남북한 관계의 주요 행위자인 남북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개인이 다층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화되고 제도화된다. 김학성(2002)은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아래의 <그림1>과 같이 남북관계의 제도화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제레짐과 제도 및 시민사회는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행위자들 간에 간접적, 우회적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제도를 구성하는 주체는 남북한 정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며 남북한 정부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 관계개선에 필요한 포괄적인 제도 기반을 개선 내지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관계의 이러한 제도적 발전을 고려하면 한반도 분단구조와 상호작용 방식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송두율,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1995), p. 142.

6) 김학성,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16~24.

<그림1>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에 관한 분석틀



자료: 김학성,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70.

위의 <그림1>에서는 여러 행위자가 관여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남북한 정부로 연구대상을 좁혀보고자 한다. 위의 <그림1>에서는 관계의 성격이 제도화된 측면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남북한 정부의 상호작용을 협상과 잠정합의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정부의 상호작용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상과 합의만이 아니라 여전히 적대와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며 지원과 포용이라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위의 설명에서는 관계의 성격이 초기에는 적대, 갈등이 지배하지만 점차적으로 협상과 협력의 관계로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여러 영역에서 제도화의 형태가 동일하게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며 영역 간에 상호작용의 형태와 방식이 다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남북관계의 성격은 정치대화와 군사적 충돌 같은 직접적 교류의 방식을 띠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상대의 의도와 우발적인 행동을 통해 영향을 받는 우회적이며 간접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상호작용 방식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분단국체제론은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의 상호작용 분석에서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앞에서 설명한 분단체제론에서는 남북한의 국가적 성격을 다소 소홀히 다루었는데 분단국체제론은 남북한이 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을 중시하여 상호작용의 성격을 분석한다. 분단체제론에서는 국제환경적 요인과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한 체제 내적인 요소가 상호작용하지만 남북관계의 성격변화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시기에도 남북관계는 한국(남한)과 조선(북한)이라는 국가성이 존재하였고 특히 탈냉전 이후에는 그러한 특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박명규(2009)는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의 이러한 변화된 특성을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라는 개념으로

이론화 작업을 시도했다.<sup>7)</sup> 남북관계가 적대성을 지속하면서도 탈냉전 이후 남북한의 국가성이 강화되고 관계의 비대칭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를 개념적으로 정리하였다. 남북한 간 국가성의 강화, 이질성과 비대칭성의 확대, 적대성의 잠재 등이 분단국체제에서 질적으로 달라진 상호작용의 특징들이다.

### 3. 분단국체제의 성격과 분단효과

남북한은 분단 초기부터 ‘조선’과 ‘한국’ 국호를 사용하며 국가의 틀을 갖추었다. 비록 국민국가로서의 특질은 갖지 못했으나 정부(government), 국가(state)로서의 성격은 갖추었다. 분단국(divided state)이란 원래 하나의 국가가 역사적 계기로 둘 이상의 국가로 나뉘어진 나라를 의미하며 미래에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적 열망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sup>8)</sup>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독립된 국가로 규정되는 것을 우려하여 국가성의 강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남북한은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가적 실체를 갖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가성은 점점 완결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1989년 이후에는 분단국체제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1991년 9월에는 유엔에 독립국으로 각각 가입하였으며 사회 내적으로도 국민의식이 형성되어 1980년대 후반에는 국민국가의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면 국가의식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분단국체제에서는 남북한의 국가적 성격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남북한 관계는 분단국으로서의 특성을 지남과 동시에 사회 전반에서 대립과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남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 분단되어 경쟁체제, 대결체제로 발전하면서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등 사회전반에서 상대방의 체제에 대응하거나 더 나은 체제를 만들기 위해 모방하기도 하고 장점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남북한은 상호간에 일종의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창출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경쟁을 추구하였다. 남한과 북한이 독립된 하나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면서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의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분단국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분단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남북한의 두 체제를 하나의 체계(system) 안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여러 면에서 유용하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두 국가가 되었으나 남북을 독립적인 두 체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체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기능주의 이론의 설명에 의하면 체계(system)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상호의존성이며,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각 부분이 전체의 목적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9)</sup> 이런 점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이 독립적 혹은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체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의존적 형태로 존재하는 하나의 체제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이 독립국가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분단국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을 분단국체제라는 포괄적 틀 속에서 이해하고 통합적 시각으로 분석해야만 통일·통

7)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평화』

8)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pp. 15~18.

9) T. Parsons,

합의 당위성과 가능성의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 균형 또는 평형(equilibrium)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한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그 체계가 대칭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상호간에 변화를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각 체제는 그 정권의 형태나 정책산출에 있어서 자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동인 못지않게 체제 밖으로부터 오는 남북한의 상호 영향력이 꽤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후 분단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세워졌던 상호 대항적인 남북한 정권도 내부의 구조적인 요인 못지않게 상대방 체제와의 대결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두 체제간의 갈등과 경쟁 내지는 외적 불안은 전쟁이라는 전면대결로 치달았고 휴전이후에는 상대방의 군사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제를 형성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분단국체제의 상황 속에서 남북한이 상호간에 경제심과 경쟁심, 또는 적대감을 유발함으로써 상대방의 체제에 반응을 일으키고 변화를 야기하는 현상”을 분단효과(division effect)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분단구조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분단효과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하나의 체제로 보는 분석은 많은 학술적, 정책적 유용성을 갖고 있다. 분단의 남북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관계가 느슨하든 강력하든 간에 하나의 체제로서 기능하고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를 하나의 체제로 보는 작업은 통일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깊다. 통일은 분단된 남북의 체제를 하나로 결합하는 작업으로 남한과 북한이 독립적인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한 하나의 체제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분단국체제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Ⅲ. 분단효과의 개념과 작용방식

#### 1. 분단효과의 개념

##### 1) 개념설명

분단효과는 분단과 효과의 합성어로 분단의 효과, 분단이 생성한 효과, 분단이 만들어낸 효과 등으로 풀어볼 수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이 분석하고자 하는 분단효과는 분단이 자아낸 결과를 문자 그대로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의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이 가져온 역사적이고 사회정치적인 결과를 거시적 측면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단의 구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분단효과는 분단 자체가 자아낸 결과라는 단순한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분단구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효과에서 분단의 의미는 하나의 나라가 대한민국(한국, 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 북한)으로 나뉜 상태를 말하며, 분단의 효과란 한국과 조선으로 나뉜 두 분단국이 상호작용을 통해 각 체제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을 지칭한다. 한국과 조선의 두 분단국은 분단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어떤 결과, 그리고 동시에 분단되지 않았으면 생성되지 않았을 어떤 결과를 상호간에 갖고 있다. 분단의 환경은 남북한 상호간에 경쟁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경계나 적대의 태도 및 행동을 촉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방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어 대응과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상대방의 행동을 자극하는 순환으로 이어진다.

분단효과는 ‘분단’을 ‘효과’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효과라는 말의 의미에서 발생하는 오해의 소지가 존재한다. 그것은 효과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긍정적 의미로 통용되기 때문에 분단이라는 다소 부정적 현상과 연결시킬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어사전에는 효과의 의미가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 “소리나 영상 따위로 그 장면에 알맞은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실감을 자아내는 일,” “화학적, 물리적 반응에 연이어 나타나는 작용과 결과”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sup>10)</sup> 이 개념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효과라는 말은 일상생활과 사회현상에서 ‘좋은 결과’라는 긍정적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화학작용이나 물리학 등 자연현상에서는 “어떤 반응에 연이어 나타나는 작용과 결과”라는 객관적, 중립적 뜻으로 쓰인다. 이런 점에서 분단효과를 “분단이 자아낸 좋은 결과”가 아니라 “분단 일방의 반응에 연이어 나타나는 작용과 결과”라는 중립적 의미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단효과는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분단국체제의 상황 속에서 남북한이 상호간에 경계심과 경쟁심, 또는 적대감을 유발함으로써 상대방의 체제에 반응을 일으키고 변화를 야기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경쟁관계 내지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의 의도와 행위는 남한에 항시적인 위협이며 위협요소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책과 행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북한발 위협요인을 제거하고자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조선’의 태도와 행위가 북한에도 마찬가지로의 반응과 대응을 초래한다. 따라서 분단효과는 분단국체제로 묶여 있는 남북한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해 왔는가, 상호간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어떠한가 그 상호작용의 유형과 특성 및 결과는 무엇인가를 함의한다. 이런 점에서 분단효과의 개념은 분단이 자아낸 긍정적 결과만이 아니라 분단 상황이 만들어낸 부정적 결과를 포함한다.

## 2) 분단비용과 분단편익, 그리고 분단효과

분단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분단비용과 편익과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단비용은 분단이 자아낸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금까지 분단연구는 그 폐해와 비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남북한의 분단은 하나의 체제요 국가였던 조선을 3.8선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절단하였으니, 그 지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폐해와 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다. 분단이 초래한 삼중적 구조, 즉 공간적, 제도적, 심리적 단절은 공간적 폐쇄성과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문화심리적 적대성을 생산해 내었다. 이러한 삼중적 분단은 지속적인 적대와 경쟁을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치르면서 일종의 체제와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분단체제론에서와 같이 분단체제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적대적 성격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분단체제 하의 남북한은 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 효과를 통해 상호간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면서 분단비용을 양산하고 있다.<sup>11)</sup> 따라서 분단문제는 주로 분단비용과 분단폐해의 현상에 집중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분단비용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분단편익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의 폐해를 분단비용이라고 한다면 분단으로 얻는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분단편익이라 불러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단편익은 분단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이익, 분단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었던 이익을 의미한다.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며 내부 집단간 갈등이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오히려 갈등집단이 독립체제로 분할함으로써 편익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분단편익이 남북한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분단편익은 분단구조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분단의 명분을 이용하여 얻는 추가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국가나 정부, 시민사회가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행위와 그 결과를 분단편익으로 볼 수 있다. 남한에서 정부나 시민사회가 ‘북풍’과 같이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나 북한에서 정권에 반대하거나 불필요한 사람들 ‘남조선 간첩’으로 처형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편익이 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단비용은 분단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반해 분단편익은 분단 때문에 얻은 추가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개념과 비교하면 분단효과는 이러한 분단비용과 분단편익을 발생시키는 분단의 구조에서 그 안에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는 남북한이 상호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어떤 대응과 반응을 일으키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분단효과는 분단국체제가 생성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결과를 모두 포괄하는 중립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분단비용에 대칭되는 개념을 분단편익이라고 한다면 분단효과는 이러한 개념과는 달리 중립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단효과는 분단의 좋은 성과나 혹은 나쁜 결과 자체가 아니라, 분단국체제의 주요 행위자인 남북한 상호작용의 유형과 특성, 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분단효과 연구는 분단의 문제를 비용과 폐해, 편익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구체적으로 분단국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남북한 분단국 체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대와 경쟁하기도 하고 경계나 회피의 반응을 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영향을 주었던 측면도 있을 것이다. 분단효과 연구의 의미는 지금까지 분단의 폐해만을 부각시켜 왔고 분단체제를 종결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면, 분단체제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어떤 체제를 형성했는가를 보다 구체적이며 경험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한이 서로의 장점을 모방하기도 하고 어떤 정책이나 조직 형태를 구상할 때 상대방의 것을 모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의 분위기는 상호 영향력이 실제적으로 미치고 있음을 알면서도 체제경쟁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았다거나 차용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일종의 터부(taboo)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북한의 천리마운동이 남한 새

11) 이종석. 분단체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적 분열과 상이한 삶의 양식, 그리도 적대성이라는 구조를 갖는다.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과 적당한 긴장과 대결국면 조성을 통해서 대내적 단결과 통합, 혹은 정권안정화에 이용하는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해 왔다.

마을운동의 전개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70년대 초 북한의 외자도입정책이 남한의 경제정책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들은 남북 분단체제 하에서 말해서는 안되는 금기사항인 것이다. 그러한 배경과 경위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 분위기였다. 이런 구조에서는 그러한 정책결정을 어떤 동기와 배경에 의해 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보다 주체적으로 발의했다거나 다른 원인을 들이대며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분단효과는 부정과 긍정, 이익과 손해라는 단순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영향과 결과들이 분단국체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과정과 배경, 동기에 대해 드러내어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에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사회주의 형법이 작동하고 있어서 표현의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숨은 배경들에 대해 학술적 연구의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술적 작업을 제대로 해야만 분단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일 미래를 향해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2. 분단효과의 작용방식

### 1) 상호작용의 다섯 유형: 적대/경계/경쟁/협력/포용(지원)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한 어느 한쪽의 행동은 다른 쪽에 일종의 전시효과 내지 시위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일으키고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발생하게 된다. 상대방의 행동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얻게 된 일방은 상대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상대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고 그에 반응하는 대응행동을 한다. 그 결과 일방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경계와 적대의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고 경쟁이나 협력 또는 포용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분단체제 속에서 남북한은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갖고 있고 상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남북한 간의 상호작용은 적대, 경계, 경쟁, 협력, 포용(지원)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다섯 유형은 적대와 포용의 사이의 연속적 스펙트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장 대립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적대'라고 한다면 가장 포용적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경계'와 '경쟁', '협력'은 '적대'로부터 '지원'으로 발전하는 사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회피적 반응과 차별화와 같은 행동은 주로 경쟁적 상호작용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동방식의 개념들을 활용하면 분단으로 파생된 결과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분단체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상호간에 학습효과를 창출하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과 협력, 적대와 포용 등 복합적 분단효과를 파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북한은 1945년 분단 이후 상호 적대와 파괴, 견제와 경쟁, 협력과 포용의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냉전시기에는 적대와 경쟁의 관계를 유지했다면 탈냉전 시기에는 경쟁과 견제, 나아가 협력의 관계를 맺으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적대와 경쟁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 2) 직접/간접 효과

분단효과를 유발하는 남북한사이의 경쟁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를 구분해야한다. 직접 분단 효과는 군사적 대결과 같은 물리적인 접촉으로 인한 변화, 혹은 남북대화과 같은 공식적 접촉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간접 분단효과란 어느 한쪽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정치, 사회적 변화가 상대측에 우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 분단효과가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면 간접 분단효과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우회적으로 미치는 심리적 결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직접분단효과와 간접분단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분단의 물리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의도/우발 효과

분단효과를 의도적으로 유발시켰는가 아니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가를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응하는 경우를 의도적 효과라고 부를 수 있다. 상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상대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면 비의도적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도적 분단효과는 직접효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겠지만 비의도적인 분단효과는 간접적이며 심리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발적 행동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해석 여하에 따라 진지한 반응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4) 주관/객관 효과

객관적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정도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쪽의 정치적 변화의 조치를 확대 또는 과장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다른 한쪽에 그에 대처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수반하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변화가 상대방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남북한의 경우 상대방의 물리적 위협에 대한 인식과 우려가 확대 해석되어 각 정권의 정치적 태도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것은 국민들을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함에 있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좋은 구실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치적 행동이 실제로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비밀로 취급되어 주관적인 인식여부의 파악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 IV. 분단국체제의 발전과정과 분단효과 사례

### 1. 정부수립과 초기정책

해방이후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독자적인 정권이 세워졌고 대립적인 두 정치체제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며 확산, 발전되어왔다. 두 체제간의 갈등과 경쟁은 전쟁이라는 전면대결로 치달았고 휴전이후에는 상대방의 군사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공간적 분단, 체제의 분단, 심리적 분단의 3중적 분단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1945년 8월, 마소군정의 분할통치 시작으로 남북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후, 1948년 8월과 9월, 남북한 정권이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체제와 제도의 분단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1950~53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심정적 분단이 형성되었다. 마소 군정이 통치를 시작한 분단초기 3년간은 공간의 분단이 시작된 시기이다. 공간의 분단은 사람의 자유로운 남북이동을 차단하였고 북쪽에 편중된 중공업 시설과 남쪽에 발달한 농업을 분리시킴으로써 산업시설과 경제를 일시에 마비시켰다. 체제의 분단은 남북한에 '조선'과 '한국'의 정치체제가 통치를 시작함으로써 형성된 제도의 분리를 의미한다. 정치와 경제, 법,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이질적인 형태의 제도가 이식됨으로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었다.

남북한의 정치체제의 발전 과정을 개괄해 보면 남한과 북한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사건과 제도가 생겨났음을 발견하게 된다. 남북한의 정권수립과 전쟁의 사건에서 정치적 분단효과를 결정적으로 볼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남한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포한 이후 1달 3주 만에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남북한의 토지개혁의 시행과정을 보아도 분단효과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46년 3월부터 북한이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남한도 1947~49년 토지개혁을 시행하였다. 남한이 토지개혁법과 같은 진보적 법언과 사회개혁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토지개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 중에 시행했던 남한의 토지개혁도 북한이 남한 점령 시간 중에 실시하였던 인민위원회의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구역 단위인 도의 숫자를 맞춘 것도 그렇다. 남한이 9개의 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도의 숫자를 9개로 확대하였다.

### 2. 군사정권의 등장

1960년대 남북한에서 같은 시기에 군사정권이 등장한 것도 분단효과의 대표적이 예라 할 수 있다. 남한에서는 1960년에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61년에는 군부쿠데타로 군사정부가 등장한 한편, 북한에서는 1961년에 김일성의 빨치산파가 대거 정계에 진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54년 남한에서의 한미상호안보조약 체결이 북한으로 하여금 1961년 소련, 중공과 비슷한 형태의 방위조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1961년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북한은 이를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7월에 소련, 중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9월 4차당대회를 개최하여 빨치산세력이 대거 정치무대에 등장, 남한의 군사정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군부정권을 형성해 갔다.

1954년 남한이 미국과 한미상호안보조약 체결을 주시하던 북한은 남한의 군사정권 등장을 북한에 대한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북한은 5.16직후인 1961년 7월 소련, 중공과 비슷한 형태의 방위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북한정권은 1960년대에 전개된 남조선 무력혁명은 빨치산 군부세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전개되었다. 남북한에 공히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sup>12)</sup>

### 3. 아시아적 발전모델로의 전환

1960년대에 들어서 중공과 일본이 미소 양극체제에 변화를 줌으로써 남북한은 각각 ‘아시아적’ 발전모델로 변모하였다. 중공과 소련간에 일어난 분쟁과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서구체제에 새로운 긴장이 발생했고 남북한도 그영향을 받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시기였다. 남한은 일본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의 경제전략을, 북한은 중공의 중농정책과 대중동원 전략을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sup>13)</sup> 북한은 6.25전쟁의 참전을 계기로 중공과 접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은 중공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공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시아적 발전 모델로 전환되는 이 시기는 북한이 제1차 7개년 계획을 추진하던 기간으로 북한정부는 군 단위를 중심으로한 지방분권적인 행정개편을 단행하였고 사상, 문화, 기술의 3대혁명을 강조하면서 각 기업소에서는 독립채산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소련식의 일인지도체제를 탈피해 집단지도체제를 실시하기도 했다.<sup>14)</sup>

남한은 일본의 발전패턴을 따라서 내수중심의 경제가 아닌 수출중심의 발전을 추구하고 제조업이 27-90%를 차지하는 공업화위주의 수출주도형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수출이 1958-78년의 경제성장에 가장 유력한 변수로 지적되며 수출지향형의 발전정책으로 60년대에 1.8%, 70년대에 4.2%의 추가 경제성장을 가져왔다.<sup>15)</sup> 공업화의 과정보다 경공업, 중공업, 전자, 자동차, 컴퓨터산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남한이 일본의 경험을 차용한 배경은 남한 정치경제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일제시대의 잔존세력이었고 이들은 일본의 발전정책, 즉 메이지 유신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부흥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익숙한 일본어로 일본에 대한 모방이 용이하여 민간부문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메이지유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은 일본의 발전경험을 추종하는 동기가 되었다.<sup>16)</sup>

12) 남한의 공화당 창당과정에서 북한의 공산당 조직형태를 기초로 했다는 분석도 있다. Joungwon A. Kim, *Divided Korea: The Politics of Development, 1945-1972* (1975), pp. 236-237. 이런 맥락에서 공화당도 계급과 과벌을 초월하여 국가적 이해를 대변하는 당임을 강조하였다.

13) 정상훈, 「경제계획과 성과」, 김준엽과 스칼라피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법문사, 1987), p.167-168.

14) 김일평, 『북한 정치경제 입문』 (서울:한울, 1987), p.116-118. F.M. Bunge (ed), *North Korea: A Country Study* (Washington, DC: American University Press, 1981), p.113.

15) Tony Michell, *From a Developing to a Newly Industrialized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1961-1982* (Geneva: ILO, 1988), p.30, 32.

16) 일련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세우고 1965년에는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 하였으며 다음해에는 외자도입법을 설치하여 남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더욱 일본의 발전방식을 모방하였다. 수출의 패턴,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패턴, 기술유입과 제품의 집중화 등 경제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하였다. Peter A. Petri, "Korea's Export Niche: Origins and Prospects," *World Development*, Vol.16, No.1 (1988), pp.54-58.

#### 4. 헌법 개정과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

1970년대의 독재체제로의 전환은 남북한 군사정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972년에 남 북한에 모두 권위주의적인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두 체제간의 상호불신과 위협의식에서 연유된 분단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된다. 남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같은날 헌법을 개정하였다. 남한의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 선포되어 11월 22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후 12월 27일에 공포하였으며, 북한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 남북한에 군사정권이 등장한 이후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 독재체제를 구상한 결과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정권은 1967년부터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남한내 사회주의 혁명을 적극화하며 실제적인 무력도발을 수차례 감행하는 위협을 가하였다. 이러한 군사정권간의 경쟁은 각 정권의 공고화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통령과 주석에 절대권력을 부여하는 헌법개정을 단행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상호간 상대의 행동을 지켜본 뒤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집행했다고 짐작되며 이러한 면에서 남북간에 분단효과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 5. 경제발전 전략의 차용

남북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1970년대에 남북한이 최초로 남북접촉을 통해 상대의 전략을 모방하는 분단효과가 발생하였다.<sup>18)</sup> 1970년대는 남북한이 처음으로 왕래와 교류를 함으로써 상호간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겪었다. 북한이 1970년대 초에 추진했던 서방국가들과의 교역확대와 기술도입은 1960년대 후반 이후 급성장한 남한의 발전경험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남한이 1966년 외자도입법 제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배상금을 받아 짧은 기간 안에 공업국가로 발돋움한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다. 북한은 남북회담 이후 1973년에 서방세계로부터 외자를 도입하여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남한에서 1971년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도 북한에서 50년대와 60년대에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던 경제개발계획과 농업개발계획, 대중동원 정책이 자극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구술을 통해 검증해야 할 문제이지만 70년대 남한의 대중동원 정책은 북한의 초기 발전경험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남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상호방문을 통해 발전 상황을 목격할

17) 이러한 예는 남북 상호간에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난 분단효과들이나, 그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1980년 남한에서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하던 시기에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정치변화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세대의 군사정권이 등장했다고 판단하고 김정일은 '새로운 세대'에서 후계자가 나와야 한다는 북한식 세대교체론을 명분으로 사용하였다. 1980년 10월 10일 6차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자로 주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이 시기의 남북간 상호작용 과정을 명확히 검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구조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이 광주사건과 남한의 정세변화를 지켜본 후 이에 대응하는 정치일정을 전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8) 김병로, “南北韓 社會經濟 發展모델의 比較 (I),” 「北韓研究」 제3권 제1호 (1992년 봄호) 195~207쪽; 김병로, “南北韓 社會經濟 發展모델의 比較 (II),” 「北韓研究」 제3권 제2호 (1992년 여름호) 194~207쪽; 김병로, “남북한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비교,” (장울병 총장 회갑 기념 논문집, 1994)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서울: 한울, 1994).526~559.

수 있었으며 이에 큰 충격을 받고 상대를 추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 6. 사회조직과 동원, 언어사용

정치적 질서와 안정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실제 혹은 가상적인 외부침략을 가정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남한의 경우 국가안보와 정치안정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엄격한 정치적 통제와 조직화가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점 또한 정치사회적 분단효과라 할 수 있다. 즉, 남북한 체제가 유지하고 있는 대중동원을 위한 여러 조직을 상호 비교해 보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김일성주의청년동맹(구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1946.1.17) 산하의 붉은청년근위대(고등중 4년 이상), 대학생교도대와 학도호국단(1949.9 1960.5폐지, 부활), 직맹과 직장예비군, 인민반 학습체제와 반사회 조직 운영 등 정치사회화의 조직이 상호영향을 주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각종 정치사회 행사들의 동원도 남북한은 경쟁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정치사회화를 위한 조직들은 매우 대칭적이며 대응체제로 되어 있다.

언어사용에 있어서도 상호 경계하는 현상들이 발견된다. 남북간에 달라진 절반의 언어 가운데는 남북한이 처한 국제환경과 근대화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남북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를 회피함으로써 초래된 경우가 있다.<sup>19)</sup> 동무, 노동, 구역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러한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말이었지만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념의 특성을 담은 언어로 간주하여 남한에서 사용하기를 회피하였다. 대신 친구, 근로, 구 등의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북한이 남한의 외래어 사용을 비판하며 우리말 사용을 고집한 것도 그러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나 민족, 자주 같은 언어도 남북한 간에 경쟁적 혹은 대립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남북한은 '7.4남북공동선언'에 자주, 평화, 민족단결의 원칙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이후 자주, 평화, 민족이라는 언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북한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평화라는 용어를 선점하자 남한은 이를 북한의 '평화공세'라며 '평화'라는 용어를 냉전기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주와 민족이라는 언어도 북한이 적극적인데 비해 남한은 회피하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 통일의 구호에서는 북한은 국가의 통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조국통일'을, 남한은 국가의 통일보다 실질적인 민족의 통일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민족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 7. 정치적 대응과 외교전

탈냉전 이후 북한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북한이 남한의 정세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분단효과가 매우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의 정권 출범 시기를 보면, 남한이 12월 대선을 치른 후 그 이듬해 4월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의 개최를 통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9월에 정

19) 「겨레말큰사전」을 집필한 남북한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남북한 언어는 약 23%가 뜻이 완전히 달라졌고 22%는 용어가 달라졌지만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 55%는 동일하다고 한다.

권을 출범하는 남북의 정치적 대응체제가 그런 것이다.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를 통해 정권기관의 임기를 5년으로 조정하는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는 북한이 남한의 정권기관 임기가 5년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남한의 정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이렇게 보면 정치영역에서는 철저하게 남한이 먼저 액션을 취하고 선제적 행동을 지켜본 북한이 그에 대응하는 정책과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분단효과가 전개되었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남한에서 치러진 1992년과 1997년, 2002년,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주시하고 그 이듬해에 새로운 정권을 출범하는 방식으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1997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보고 북한이 남북교류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하여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의 출범을 개시한 예를 들 수 있다. 북한은 1998년 3월 사회안전부에 이산가족 주소안내소를 설치하고 김대중 정부의 이산가족 교류 제안에 대비하였으며 1998년 8월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며 정권을 출범시켰다. 2007년 12월 대선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듬해 8월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이 발생하여 남북간 정치적 대응체제가 흔들려졌으며 2012년의 경우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식 출범으로 기존의 대응구조가 어긋나 있다. 향후 북한이 어떻게 남북간 정치적 대응체제를 조율해 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경쟁심을 가장 가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국제사회에서의 외교활동이 아닐까 싶다. 남북한은 각자 외교를 맺은 수교국의 숫자로 서로 경쟁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외교 각축전을 벌이며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91.9)한 것과 2000년 이후 북한이 유럽연합(EU) 등 18개국과 수교를 추진한 것도 대외관계에서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들이다.<sup>21)</sup> 또 북한인권문제나 북핵문제 등을 둘러싼 유엔(UN)에서의 표 대결 경쟁이나 식량지원 외교전에서 남북한은 사활을 걸고 각축전을 벌인다.<sup>22)</sup> 국제식량지원 문제도 외교 경쟁으로 나타나 북한이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에 대북 식량지원을 호소하는데 대해 한국정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이를 저지하는 외교활동을 벌이기도 했다.<sup>23)</sup> 남북한은 수교국의 숫자로 보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영향으로 보나 더 이상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쟁과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 북한은 1948년 9월 북한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기 9년, 2~5기 약 5년 주기를 유지했다.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에서 임기를 4년으로 개정함으로써 남한의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북한이 최초 헌법에서 남한의 헌법에 규정된 국회와 정부 임기 4년을 고려하지 않고 3년으로 정한 데는 아마도 당시 북한정권이 체제 우월감을 갖고 있던 터라 남한의 정치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1980년 남한에서 대통령 임기가 7년으로 수정되었다가 1987년 10월 29일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조정하였다.

21) 남북한의 수교국은 남한이 188개국, 북한이 161개국이며 이 중 157개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서방세계와 외교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2000년 1월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호주, 필리핀, 영국, 독일 등 18개 국가들과 새롭게 수교하였다.

22) 2011년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로 찬성이 압도적이었고, 2009년 6월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3) 2011년 2월 유엔의 북한식량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북한은 북한의 최대북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2011년 3월 28일-31일까지 영국을 방문하여 최근 북한을 강타한 최악의 한파와 2010년의 수확량 부족으로 앞으로 2달이 심각한 위기라며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한국정부는 2011년 4월 3일 재외공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이 식량을 군량미로 전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8. 군사안보 전략과 대응

남북한의 분단효과는 군사안보 전략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으며 양국의 군대는 철저한 대응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예컨대, 어느 한쪽에서 일정 단위 부대가 이동한다거나 전투기가 출격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맞서는 상대방의 부대나 화력이 대응하여 반응하도록 군사체제가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군사전략과 정보는 공개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남북간에 발생하는 무력도발 사건도 그 배경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남북 상호간에 일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사건인 1.21사태 이후 남한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전개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북한의 침투부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3사관학교를 설립하였다. 북한이 자행한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도 남한정부의 이한영 ‘납치’에 대한 보복행동으로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24)</sup>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포함한 여러 군사적 사건들이 남북한의 군사안보적 대응과 반응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군비경쟁에서는 남북간 분단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북한은 상호 군사력 비교를 통해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우위를 점유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행동과 정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전력비교를 통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병력과 화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병력과 화력이 양적으로 남한을 앞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북한도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25)</sup> 남북한은 군사조직과 예비전력을 상대의 움직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편성하고 있고, 일방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최근의 예로는 2012년에 남한의 한 부대에서 김정일/김정은을 사격표지판으로 삼아 훈련을 실시<sup>26)</sup>하자, 이에 격분한 북한이 10만 군중을 동원하여 궤기대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일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사격표지판으로 사용한 행위를 꼽을 수 있다.

## 9. 법제적 대응

일방의 국민들을 상대방 구성원들과의 자유로운 접촉과 왕래를 통제하는 조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남한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남북주민간 접촉과 왕래를 규제하고 있고, 북한은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남한방문과 남한주민접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국내의 시·군(구역)간 이동 및 해외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주민 접촉과 교류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남한주민들도 북한방문과 북한주민접

24) 성혜량, 『등나무집』

25) 북한의 정규군 병력은 남한의 1.8배이며 예비군과 민방위, 교도대 등에서도 북한이 우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차 보유대수는 1.7배이고 해군함정이나 공군전투기에서 북한이 양적으로 앞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이해』(서울: 통일교육원, 2012), pp. 99~112.

26) 『조선일보』, 2011.6.6.

측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보면 남북한은 강한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성격은 다르지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만남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칭과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접촉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한사회 내에서 북한자료와 방송에 대한 일방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은 분위기이다. 법적으로 대응체제를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남한에 미칠 정치사회적 혼란의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자국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차단하는 반면 제3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남한주민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남한정부는 수년전까지 이러한 사이버상의 접촉을 허용하였으나 이후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법적 측면에서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북 빼라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남사이버 공세와 유사하게 북쪽에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어서 남한으로서는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다.

## 10.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

경제 분야에서는 남북한이 1970년대까지 발전전략을 차용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남북한 간 체제의 이질성과 비대칭성이 워낙 커짐으로써 분단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남한 쪽에서 북한의 경제정책과 전략을 차용할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고 북한도 남한의 경제규모나 운영방식이 너무 달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북한 쪽에서는 남한의 ‘개발독재’ 모델이 매력적이기는 하나 아직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은 만큼 분단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향후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시작할 즈음에는 남한의 발전모델이 북한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시기에 이르면 경제 분야의 분단효과는 매우 크게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 이후 경제 분야에서의 분단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상호작용의 유형은 기존의 경계와 경쟁으로부터 협력과 포용(지원)으로 달라졌다.<sup>27)</sup> 경제 부문에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사업장에서 미시적으로 발생하는 분단효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간에 경제협력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작업방식이나 노무관리, 후생복지 등 여러 문제들을 학습하며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공동의 작업공간에서 장단점을 학습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미시적 영역에서는 분단효과가 일방적이거나 비대칭적으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인적 왕래나 문화교류에서도 남북한 간 이질성과 비대칭성이 크고 상호 경계심이 강하여 분단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특히 북한은 외부세계와의 접촉과 교류가 자본주의 사조와 가치를 유입함으로써 체제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남한의 문화에 대해 방어적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을 방문하는

27) 냉전기인 1984년 북한이 남한에 수해구호물자를 제공하며 포용의 태도를 보인 적이 있으나 이는 체제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대규모 아사 사건을 접한 남한의 반응 역시 인도주의 지원과 경제협력으로 이어졌지만 초기에는 매우 경계하며 주저하는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수해 발생 초기에는 남한의 대북지원 여론이 바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유엔(UN)의 대북지원이 시작되자 지원과 협력의 방향으로 남한 정부와 민간의 태도가 달라졌다.

교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28)</sup> 남북한간 인적 왕래와 문화교류는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기껏해야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술작품 정도로 비대칭성은 심각하다. 그러나 비정부 영역에서는 북한에 ‘한류’가 유입됨으로써 남한문화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북한 내 한류를 접해본 경험이 64.7%(08년), 57.9%(09년), 77.7%(11년)로 약 60~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9)</sup> 정부의 문화정책이나 지원정책에서는 분단효과가 미미하나 민간영역에서는 북한이 남한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방식으로 분단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V. 분단효과의 분석과 활용

### 1. 분단효과의 크기와 작용방식의 변화

남북한 간 분단효과의 크기와 작용 방식을 보면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0년 단위의 묶음으로 보면 분단직후인 1940년대(1945~1953년)에는 남북한이 이념적으로 서로 상반된 미국과 소련의 모델을 차용하면서 대립과 경쟁을 시작하였고, 1950~53년의 한국전쟁은 그야말로 양국이 전면전을 치르면서 맞부딪힌 사건으로 가장 치열하게 상대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일본이 개입함으로써 남북한 사회 내부의 계급구조가 바뀌고 상호 적대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는 분단체제가 형성되었다. 전쟁을 통해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살육하고 파괴함으로써 분단의 직접적/물리적 효과가 발휘된 시기이다. 물리적 접촉과 체험을 통해 상대체제에 대한 적대의식과 자기체제에 대한 반사적 집착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제환경이 남북한을 압도하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제환경이 남북한 각 체제를 지배하는 분단체제가 고착화되었다.

집중적인 분단효과가 나타난 것은 1960년대와 70년대이다. 남북한은 각 정권의 공고화와 경제발전을 상호간 모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응을 하였다. 1961년 5월 남한에 군사정권이 들어선 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빨치산 군부정권을 구축하였다. 북한은 남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5.16군사혁명을 미국 남한군부를 앞세워 북한을 점령하려는 획책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응한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 남북한 군사정권 등장은 우발적 분단효과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이 남북한에 개입하여 1960년대 남북한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분단의 국제환경이 남북

28) 남한도 인도주의 정신과 민족상호 이익 및 복리 증진 차원에서 남북의 정치상황과는 별도로 인적 왕래와 사회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북한문화가 남한에 매력적이지 못하여 분단효과로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 교류가 거의 없던 냉전시기에는 40년 동안 총 1,151명 밖에 남북을 왕래한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비대칭성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으나, 탈냉전 이후 특히 1998년부터 연간 3천명 이상이 방북함으로써 남북간 비대칭성은 매우 심화되었다. 거기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도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일방적 교류로 진행되고 있어서 비대칭성 문제는 심각하다.

29)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2008~2011,”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2012)

한에 영향을 미친 분단효과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남북한간에 가장 획기적인 분단효과가 나타났다. 1972년 첫 남북대화가 시작되었고 남북한은 상대의 경제 전략을 차용하여 상대방을 따라 잡으려는 체제경쟁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체제경쟁의 명분으로 남북한은 유신체제와 수령체제를 출범시키고 무한체제 경쟁에 돌입했다. 1970년대에는 남북한 상호간에 정치,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분단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발휘되는 시기였다. 이처럼 이 시기에 분단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데에는 대결적인 국제환경이 화해 분위기로 전환됨으로써 분단체제를 압도하고 있던 대립적 국제환경이 누그러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로 남북한은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체제를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남북한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분단효과는 이전에 비해 크지 않았으나 여전히 강력히 작동했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사망은 남한 내부 요인에 의해 남한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였으며 남한의 신군부 등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김정일 신군부의 출범을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남북한 신군부는 개혁과 개방을 앞세우며 정통성 경쟁을 추구했으며 88서울올림픽과 89년세계청년학생축전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시도했다.

분단체제에서 분단국체제로 전환되는 1990년대에는 분단체제의 초기와 마찬가지로 국제환경이 남북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다.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반면 남한은 세계화 담론을 적극 받아들여 편승전략을 취함으로써 북한만큼 국제환경의 영향에 타격을 받지 않았으나 1997년말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는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압도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타결하는 직접적인 대화와 교류체제를 형성한다. 이는 1950년대 남북한이 전쟁을 통한 직접적·물리적 접촉으로 적대적인 분단체제를 형성했던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인 회담과 대화, 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접촉과 대화는 남북한이 유엔에 독립국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짧았고 분단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다.

2000년대에는 남북한간 접촉과 교류가 확대되어 새로운 형태의 분단효과가 발생하였다. 분단국으로 존재하면서도 대화와 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여러 영역에서 협력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정치와 군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경계와 적대의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협력과 포용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냉전기의 분단체제가 적대적 대립과 갈등을 기본골간으로 하며 치열한 경쟁적 상호작용을 했다면, 탈냉전기 분단국체제는 협력과 포용(지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적대와 경계, 경쟁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탈냉전 전환기에 남북한간 분단효과가 질적으로 달라지게 된 배경은 근본적으로 국제환경의 변화 때문이나 남한정부의 선제적 정책변화도 그에 못지않은 역할을 하였다. 국제환경의 변화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이 외교적·군사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남한의 대화제약에 협력적으로 반응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남한의 선제적 접근이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국제환경에 편승하여 남한의 우위를 차유하려는 적대적 혹은 경쟁적 행동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남한정부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공산권에 일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변화가 시작되었다.<sup>30)</sup>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남한경제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할 만큼 성장했다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탈냉전의 국제환경이 조성되기 이전에 남한이 선제적으로 북한과 사회주의권에 협력과 포용의 행동을 개시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상호작용 방식은 매우 독특했다.

분단효과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별로 크기가 다르며 양상도 다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정치체제에서의 변화는 북한이 남한의 변화를 주시한 후에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정치조직화의 측면에서는 남한이 북한에서 시도되었던 방법을 도입하는 형태로 반응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래 남한 정치발전은 체제 내부적 요소가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북한과 같이 폐쇄적이고 안정된 사회에서의 정치변화는 여전히 외부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안보 영역에서는 2012년 4월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발사나 군비경쟁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하게 대칭적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치와 법, 사회 영역에서도 경계와 경쟁의 상호작용이 지배적이다. 경제와 문화 부문에서는 협력과 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계와 경쟁이 대칭적으로 진행되는데 비해 협력과 포용은 일방적이며 비대칭적으로 진행된다.

분단효과의 특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다. 분단체제의 형성 초기에는 분단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북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분단효과가 감소하고 각 체제의 내적 동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물론 영역별로 분단효과와 내적 동인의 역학관계는 다를 것이다. 사회, 경제부분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체제의 내적 동인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정치, 군사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분단효과의 영향권 아래 놓일 가능성이 높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사 분야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분단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있다.

## 2. 평형(equilibrium)의 지속과 변화: 대칭성과 비대칭성

분단효과의 가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비대칭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기에는 남북한이 모든 영역에서 철저한 대응체제를 유지하였고 강한 대칭성을 유지하였으나 남북간 접촉과 교류가 시작된 탈냉전기에는 부분적으로 협력과 포용의 일방적 상호작용이 선제적으로 시도됨으로써 커지고 있다. 비대칭성은 우선 남북한이 양적 측면에서 평형을 잃고 있다는 데서부터 발생한다. 인적 왕래와 경제교류에서 남북한이 쌍방교류가 아닌 일방적 교류를 하고 있고 인도주의 지원에서도 ‘대북지원’으로 통칭되는 일방적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89년 남북 교류협력법의 시행으로 남북의 직접적, 공식적 교류가 시작됨으로써 협력적 상호작용이 제도화

---

30)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관계가 전혀 없던 남한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에 대한 문호 개방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시작했다.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세계적 탈냉전의 추세와 맞물리면서 남한사회의 대내외 환경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8년 7월 7일, 이른바 ‘7.7 선언’을 통해 ‘북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한사회의 대내외 환경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7.7선언 이후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동유럽 국가와 관계정상화 및 구소련(90), 중국(92)과 수교, 남한과 북한의 유엔가입(91.9), 남북기본합의서 체결(91.12), 남북 교류협력법 제정(89.6) 등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남북교류가 단절되고 체제경쟁을 벌이던 분단체제의 성격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되고 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엄청난 양의 대북지원이 제공되고 경제협력이 실시되면서 대칭성이 깨어졌다. 문화적으로도 ‘한류’의 영향이 북한에 심각하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단체제의 대칭성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대칭적 분단체제의 깨어짐을 백낙청은 『흔들리는 분단체제』로 파악하였고 김지하는 ‘기우뚱한 균형’으로 묘사하였다. 남북간 교류와 왕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방적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러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분단체제로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정치와 군사, 법적 영역에서 적대성과 강력한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류와 협력의 현상을 두고 남북관계 전체를 교류협력체제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으나 탈냉전기에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협력적 공존의 특성은 예의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주의 체제가 급속히 변환(transformation)하는 속도만큼 분단체제가 교류협력체제로 변환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분단체제 효과도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비대칭성이 커진다고 하여 분단체제가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분단체제의 비대칭성이 단지 규모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작용과 교류의 질적인 특성이 비대칭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과거보다 훨씬 국가성이 강화되어 분단국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가성에 있어서는 조선(북한)과 한국(남한)의 국가의식과 민족국가의 면모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된 상태에 이르렀다. 국가성이 확고히 유지되는 분단국의 상황에서 접촉과 교류를 통해 상대방의 긍정적 측면을 받아들여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과 편견을 강화하여 자기 체제를 유지, 고수하는데 더 집착하게 될 것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 방문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기존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냉전시기에는 직접적인 교류와 접촉이 없었으므로 상대의 장점이 커보이고 그것을 받아들여 자기 체제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심도 있게 기울였던 반면, 실제적인 접촉과 교류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교류가 진행될수록 갈등과 편견이 확대되기도 한다. 때문에 분단체제의 비대칭성의 크기만큼 분단체제가 나타나지 않을 경향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실제적인 검증은 신포경수로 근로자와 개성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처럼 북한 근로자들에게 매력이 있고 북한이 방어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비대칭적 분단체제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한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북한 상호간에 미치는 분단체제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분단국체제로 존재하는 한 비대칭성이 크다고 하여 분단체제가 일방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대칭성을 견지하면서도 비대칭적 측면을 갖고 있고, 비대칭적인 것 같으나 대칭성을 견지하는 노력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분단국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3. 정보발달과 심리전 효과

분단체제는 상대의 행동과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발생한다. 즉 남북한은 상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반응하고 대응함으로써 분단체제를 창출한다. 이런 점에서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해석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냉전시기 분단체제는 특정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발휘되었다. 정치와 군사, 경제전략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지도층과 특수집단이 그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정보 수집을 독점하는 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대응정책과 전략을 전개하였다.

탈냉전 이후 정부의 정보독점이 사라지고 정보개방과 공유가 보편화되면서 분단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인터넷과 모바일폰 등 정보개방이 확대된 시대에는 상대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상호간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비국가 행위자도 상대의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보개방이 이루어진 시대에 국가의 대응은 과거와 달리 일방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보를 갖고 있는 비정부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남한정부가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에 부딪친 것도 관련 정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개방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분단국체제에서는 분단효과가 다양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냉전시기에는 중요한 정책과 특정 영역에서 분단효과가 나타났다면, 탈냉전기에는 모든 영역에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분단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상대방의 구체적으로 실행된 행동과 정책이 영향을 주었다면 탈냉전 시기에는 말과 감추어진 의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가 제한된 시기에 분단효과로 분석한 내용은 남북한이 경쟁이나 견제 등의 행위를 통해 상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 내용들 가운데 가시적 결과로 나타난 것들만 살펴보았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예컨대 의식의 변화와 심리의 변화와 같은 것들은 정보개방이 이루어져야만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남북간에 작용하고 있는 팽팽한 심리전은 그것이 대칭적이든 비대칭적이든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분단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다. 북한의 대남위협 발언이 남한의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부터 북한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사건까지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남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정보발달이 분단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매체의 발달과 함께 분단효과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려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대북 삐라살포와 휴전선 확성기 방송과 같은 심리적인 대표적이다. 삐라살포와 휴전선의 확성기 방송은 정보유입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는 전략으로 의도적인 분단효과라 할 수 있다. 남북간의 많은 사건들이 우발적 분단효과를 창출하는데 비해 정보매체를 활용한 심리전은 분단효과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행동들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분단효과가 감소되고 체제 내적인 동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처럼 정보화가 진전되어 정보에 기반한 상호교류가 증대되면 분단효과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분단국체제가 통일과 통합의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면 교류와 접촉을 통한 직접적인 분단효과는 체제 내적인 동력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냉전시기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비의도적인 분단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이며, 인적·물적 교류와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탈냉전 시기에는 직접적이며 의도적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 4. 시민사회의 성장과 분단효과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주로 정부 행위자이며 민간은 포함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분단체제에서 직접적인 행위의 주체는 국가였고, 분단효과의 직접적인 행위주체도 정부 또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state)로 간주하였다. 국가의 행위가 경제, 교육, 문화, 시민사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였다. 시민사회와 개별 구성원이 행위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나, 북한에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비정부 행위자가 없고 남북간 교류경험도 없어 시민사회 상호간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형편은 아직 아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남북의 시민사회간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하고 정보교류가 확대됨으로써 분단효과가 민간차원까지 미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이러한 상호작용이 분단효과로 나타났다면 이 효과를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인식일 것이다. 냉전시기에는 남북한이 적대와 경계, 경쟁의 상호작용을 위주로 하여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부정적 의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탈냉전기에는 협력과 포용(지원) 의식이 생겨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의식조사와 탈북자통일의식조사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인식을 연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남북한 주민간에 상당한 의식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 정부의 상호작용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냉전시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남한주민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44% 정도로 강한 반면,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5% 정도였다.<sup>31)</sup> 이러한 상호인식이 2011년 시점에 이르면 '협력' 대상 인식이 50%로 상승하고 '경계' 인식은 17%로 낮아진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냉전시기에는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북간 교류와 접촉이 확대되면서 2011년 현재 지원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에서 각각 17% 정도로 남북한 모두 비슷하여 남북한의 상대 존재인식이 비슷한 양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1~2%정도에 지나지 않아 현재는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인식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분단국체제의 객관적 구조에서는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으나, 구성원들의 주관적 의식은 여전히 대칭적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한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만큼 북한은 남한을 그렇게 보고 있고, '적대' 대상이나 '경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호인식의 수렴현상은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더 촉진될 것

31) 1994년에 30.7%였던 '경계'인식은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에는 43.7%로 상승하였고 1998년에는 40.6%를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9년부터 이러한 '경계'인식은 28.6%로 감소하였고 2008년에는 11.3%까지 낮아졌다가 2009년부터 다시 20.6%, 20.7%(10년), 17.2%(11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39.2%(94년), 25.2%(95년), 24.8%(98년)에서 1999년에 32.5%로 상승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8년에는 57.6%로 최고에 달했다. 50.7%(09년)→44.7%(10년)→47.0%(11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시점에서 비교하면 남북한 모두 상대를 '협력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많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은 47%이며, 북한주민도 50.5%가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바라보았다.

로 예상된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상대의 의도와 행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분단효과는 정부 대 정부, 정부 대 시민사회,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 등 다면적 방식으로 나타난다. 경제와 사회문화, 인도주의 활동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남북간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치와 외교, 군사, 법 등 국가영역에서는 여전히 대칭적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인식은 남북한 주민들 모두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정부차원에서는 경쟁과 경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다. 이런 점에서 분단효과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VI. 결론

남북한 발전과정에서 분단효과는 냉전기에 강력하게 작용하였으며 탈냉전기에는 분산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체제경쟁과 적대성을 지닌 남북한이 상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상대체제를 압도하기 위해 국가적 힘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남북간 정치경제 영역에서 분단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치열한 대립과 적대적 위기의 상황에서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며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구한 결과 분단효과가 집약적으로 발휘되었다. 반면, 탈냉전기에는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의 증대로 양적 규모와 범위에서는 상호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나 영역별로 미치는 영향력이 분산되어 분단효과는 반감되었다. 국가성과 이질성이 강화된 분단국체제의 등장과 사회 내적 동력의 규정력이 증대됨으로써 상호 영향력인 분단효과는 그만큼 분산되었다.

접촉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분단국체제는 정치외교, 군사, 법적 영역에서 대칭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와 사회, 문화, 인도주의 영역에서 비대칭성이 형성되었고 부문별로 차별적인 분단효과가 발휘되었다. 군사부문에서의 적대적 대응과 정치, 법 부문에서 경계의 반응, 그리고 외교 부문에서 경쟁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분단효과가 강력히 작동하고 있다. 반면, 경제교류와 사회문화교류, 인도주의 영역에서는 협력과 포용적 반응이 나타나고 비대칭성이 현저하게 증대하였으나 북한이 경계의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한류문화의 유입을 제외하고는 분단효과가 기대만큼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탈냉전기에는 분단효과가 적대와 포용, 경계와 협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분단국체제에서 분단효과가 분산적이며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보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집약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상대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근거로 작동하는 분단효과가 정보의 독점과 지배가 사라지고 정보공개와 공유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상시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정부차원에 국한되었던 분단효과가 시민사회 영역까지 확장되어 나타남으로써 분단국체제에서도 약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교류와 인적 왕래가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면 분단효과는 훨씬 직접적이며 개별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나타날 것이다. 또한 비대칭성이 모든 분야로 확장된다면 북한이 남한체제의 종속적 부분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더 확대한다면 분단효과는 남북한 양쪽에 정치적,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형태로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분단국체제의 성격 자체가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분단효과가 어떻게 작용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단순하게 작동하던 분단체제나 비제도적으로 작동하는 분단국체제와는 달리 남북연합과 같은 체제가 형성된다면 분단효과는 남북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분단효과가 작동하는 환경도 정보화, 세계화의 추세와 함께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남북한도 개별국가의 독립적인 존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 등 주변4국과 더 긴밀한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분단국체제에서 남북한 정부가 중요한 행위자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북아 국제환경이 남북한 정부와 시민사회를 압도하는 강력한 행위자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한한 분단효과의 개념도 한반도에서 국제환경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명영. 1991. 「남북한의 정치역량 비교」 『사회과학』 제30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pp.127-143.
- 백낙청. "분단시대의 최근 정세와 분단체제론," 「창작과 비평」 제22권 제3호(1994년 가을, 85호), pp.238-258.
- 손호철. 「창작과 비평」 제22권 제2호(1994년 여름, 84호)
-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Joungwon Alexander Kim. *Divided Korea: The Politics of development, 1945-1972*. Cambridge, Mass.: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75.
- Young Hwan Khil.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 Boulder, CO: Westview Presss, 1984.
- Bruce Cummings. *The Two Koreas*. Foreign Policy Association, No. 269. New York: Headline Series, 1984
- Ralph Clough. *Embattled Korea: The Rivalry for International Support*.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7.
- Tae-Hwan Kwak, Wayne Patterson, and Edward A. Olsen. *The Two Koreas in World Politics*. Seoul: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1983.

# 디터 쟁하스의 평화이론: ‘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

이동기(IPUS HK 평화인문학연구단)

## I. 머리말

평화학은 20세기 파괴적 전쟁과 파괴적 갈등 상황이 낳은 지적 숙고와 문화적 고투의 산물이다. 세계사적 맥락에서 본다면 히로시마와 아우슈비츠로 요약되는 20세기 전반 인류의 파괴적 경험은 과학기술의 인간 파괴적 성격과 근대 사회의 “문명 단절(Zivilisationsbruch)”(Dan Diner)적 폭력 발산의 원인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발원적으로 질문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20세기 후반 지구적 냉전은 한편으로 “상상의 전쟁(Imaginary War)”(Mary Kaldor)으로서 정치문화와 일상세계에 공포와 적대성을 내면화하도록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곳곳에서 다양한 군사적 충돌과 폭력적 대결(“냉전 속의 열전들”<sup>1)</sup>)을 확산시켰다. 아울러 1989/90년의 역사적 전환 이후에도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과 테러리즘의 등장, 기후변화와 환경재앙 등의 요인으로 오히려 “산사태(landslide)”(Eric Hobsbawm) 같은 갈등의 소용돌이와 세계 문명의 심각한 위기를 증폭시켰다. 지구적 차원의 분쟁과 무력충돌, 전사회적 폭력과 갈등, 다차원적 파괴와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 정립이 요청되었다. 20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자기정립한 평화학은 급박한 실천적 요구와 문명사적 위기를 배경으로 탄생했기에 애초부터 현실 개입과 조정해결의 실천성을 전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 학문 체계로서 발전하기 위한 학제적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들의 평화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의미 있는 학문적 축적의 경험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을 비롯한 일부 평화연구자들의 문제들과 개념들이 알려져 있지만<sup>2)</sup> 제한적인 소개나 파편적인 수용에 그쳐 더 체계적이고 풍부하면서도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논의가 어렵다. 기실 평화학이 학계와 지식 담론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윽고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독립분과 학문으로 제대로 정립되려면 연구 대상과 주제 영역의 구독자화와 구체화 및 그것에 대한 학문 내적 방법론과 이론적 논의의 심화가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평화학은, 한편으로는 현실적 평화 파괴와 교란 및 폭력적 갈등의 구체적 발현에 대한 실천적 관점과 사회적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학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적 개념적 논의의 확대와 심화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평화학은 그저 현실의 평화요구적 쟁점과 평화운동의 화급한 논의들에 갇혀 있을 수만도 없고, 인습적인 분과 학문들에서 진행된 평화 논의들의 단순한 접합에 그쳐서도 안 될 일이다.

1) 이에 대해서는 Bernd Greiner(2006)를 참조하라.

2) 대표적인 번역서는 요한 갈통(2000). 국제정치론 내지 안보 문제에 입각한 평화연구의 개요는 구갑우(2007)와 하영선(2002)을 참조하라.

유럽 평화학은 미국의 사회과학 분과에서 수행된 앞 선 평화 연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유럽, 특히 독일은 이차대전의 폐허와 과시즘 독재 및 홀로코스트의 파국을 경험한 지역으로서 그리고 냉전의 첨예한 격전지로서 핵무기 위협 및 군비 경쟁 등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 대중적인 평화 지향 및 평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았다. 그리하여 1970년대부터는 다양한 평화연구소들과 평화학자들에 의해 주요한 연구 성과들을 생산하며 국제 평화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 내 학제 과정으로서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제도로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태이다.<sup>3)</sup> 그리고 1990년 독일분단과 유럽분열의 동시적 극복 후 맞이한 유럽의 ‘평화의 시간’은 곧 유럽이 ‘평화의 공간’이 되고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벌써부터 날아다니는 것은 가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지난 40년 동안 독일 평화학의 학문적 이론적 발전에서 가장 주목할 인물은 단연 디터 쟁하스(Dieter Senghaas) 교수다.<sup>4)</sup> 그는 요한 갈통과 더불어 유럽 내 ‘비판적 평화연구(Kritische Friedensforschung)’ 조류의 가장 독창적이고 열정적인 학자의 한명으로 간주된다. 1960년 대 후반부터 등장한 이 ‘비판적 평화연구’의 조류는 기왕의 안보 문제나 전쟁방지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평화연구 경향과 꾸준히 비판적 대결을 벌이면서 폭력과 전쟁의 구조적 원인과 사회적 근원을 문제 삼았다.<sup>5)</sup> ‘비판적’ 평화연구는, 지배적 권력관계의 안정화에 복무하는 ‘평정연구(Befriedungsforschung)’에 불과한 ‘인습적’ 평화연구와는 달리, 현존 사회 체제의 자기파괴에 대항하는 근본적 체제 ‘비판’의 성격을 지녔다.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쟁하스는 무엇보다 미국의 선구적 평화학자 칼 도이취(Karl Deutsch)의 영향<sup>6)</sup>과 갈통의 지적 자극을 받아들여, 수많은 저작과 논문들로 다양한 방법론적 논의와 현실 비판적 연구를 선보이며 독일 내지 독일어권 유럽의 ‘비판적 평화연구’를 선도했다.(D. Senghaas, 1972) 특히 그가 1990년 초반부터 적극 초들고 있는 ‘문명화프로젝트로서의 평화’론은 최근 유럽 평화학의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지적 성과로 간주된다.

그런데 비판적 평화연구의 조류 내에서 갈통의 구조적 폭력론이나 에른스트-오토 쟁펠(Ernst-Otto Czempiel)의 민주평화론, 또는 전쟁원인 연구 조류나 페미니즘이나 젠더적 관점의 평화연구<sup>7)</sup>가 아니라 특별히 쟁하스의 평화론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비)평

3)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하겐, 튀빙엔, 막테부르크, 마부르크 등 10여개 대학에서 학부 부전공 과정이나 석사 과정으로 평화학이 분과학문 체계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대해서는 P. Imbusch (2010), pp. 179~218을 참조하라.

4) 1940년생, 프랑크푸르트 대학과 브레멘 대학에서 교수 역임. 각종 평화상과 학술상을 수여 받음. 그의 생애사에 대해서는 쟁하스 자신의 에고역사(Ego-histoire)인 D. Senghaas(2002)와 A. Siegel(2003), pp. 15~19를 참조하라.

5) ‘전통주의적’(또는 다른 명칭으로: ‘인습적’, ‘보수적’, 현실주의적) 평화연구와 ‘비판적 평화연구’의 기본 성격과 관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U. C. Wasmuht(1998), pp. 165~191을 참조하라. 아울러 D. Senghaas(1972), pp. 7~17; Karlheinz Koppe(2010), pp. 42~47을 참조하라.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연구 과정과 결과에서는 양 조류의 차이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사후적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P. Schlotter & S. Wisotzki(2010), pp. 19~21을 참조하라.

6) 칼 도이취(1912~1992)는 체코 출신의 미국이민자로서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교수로 재임했다. 칼 도이취에 대해서는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2003)을 참조하라. 쟁하스는 1967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1970년까지 하버드 대학의 칼 도이취 교수 아래에서 연구하며 그로부터 권력정치와 심리적 요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의 연관관계에 대한 학문적 자극을 받았다. 쟁하스의 ‘복합구성(Configuration)’ 개념은 바로 칼 도이취가 시도한 복합적 연관관계의 사유에서 발현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D. Senghaas(2003), p. 13을 보라.

화를 ‘복합구성’의 문제로 보았다는 점이다. ‘한반도형 평화이론’의 숙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비평화(peacelessness; Friedlosigkeit, 평화부재)’의 구조와 문화의 다층적 연관관계를 해명하고 건설적 평화형성의 ‘다양한 복합적 강령(mehrfaches Komplexprogramm)’(쟁하스)을 찾는 것일 테다. 이 글은 여러 (비)평화 요인과 조건들의 역사적-구체적인 요소들의 ‘복합구성(Konfiguration; configuration)’의 문제로 평화를 보는 한 방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을 통해 이 글은 ‘한반도형 평화 복합구성론’의 창출을 보조할 논의의 토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sup>8)</sup>

## II. 독일의 ‘비관적 평화연구’와 쟁하스

### 1. ‘비관적 평화연구’의 등장과 쟁하스: ‘조직화된 평화부재’ 개념

1950년대 초 일부 학자들의 선구적 연구를 제쳐둔다면, 독일(및 유럽)의 평화학의 역사는 세 시기로 나뉜다. 먼저 1957년에서 1972년까지 평화학의 창립기, 1970년대와 1980년대 ‘비관적 평화연구’의 발전기,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관점과 주제의 확대시기로 구분된다.<sup>9)</sup> 유럽의 최초 평화연구 전문연구소는 1959년의 요한 갈통이 주도한 오슬로 평화연구소(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PRIO). 1966년 스웨덴 정부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을 창립했다. 독일에서는 1957년 괴팅엔 대학 소속의 18명의 자연과학자들이 독일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괴팅엔선언’을 발표하면서 평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화급성이 확인되었다. 1958년 뮌헨에서 평화학연구협회(Forschungsgesellschaft für Friedenswissenschaft)가 설립되었고, 1959년에는 화학자이자 평화연구자인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체커(Carl Friedrich von Weizsäcker)의 주도로 결성된 독일학자연맹(Vereinigung Deutscher Wissenschaftler)이 평화연구를 이끌었다. 아울러 1958년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개신교 연구공동체 연구처(Forschungsstätte der Evangelischen Studiengemeinschaft)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독일 재무장에 반대했던 개신교의 평화 운동에 의거한 것이었다. 1950년대 후반의 재무장과 핵무기 반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일 평화운동의 흐름은 1969년 서독 연방대통령 구스타프 하이네만(Gustav Heinemann)으로 이어졌는데, 그는 곧장, 즉 1970년에 국제 갈등과 개발국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독일 평화와 갈등연구 협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설립을 발의하고 지원했다. 이 기구의 재정적 조직적 지원을 통해 평화연구는 평화운동의 보조적 주변적 역할 수행을 넘어 본격적으로 학문적 성숙을 맞이할 수 있었다.<sup>10)</sup>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1970년대 이후 ‘비관적 평화연구’의 국면이 평화학의 이론적 발전

7) P. Schlotter & S. Wisotzki (2011)을 참조하라.

8)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의 앞선 논의의 식민 의식적 열광이나 자존적 배제가 아니라 정보의 풍성함과 관점의 확대가 주는 지적 전진의 기회와 자극일 것이다.

9) 이 시기 구분은 K. Koppe(2010)을 따른 것이다. 울리케 바스무트는 냉전적 대결이 다시 조정되고 평화운동의 일정한 성과가 확인된 1983년을 주요한 분기점으로 잡는다. U. C. Wasmuht(1998), 410~413.

10) 독일과 유럽의 평화학의 역사에 대해서는 U. C. Wasmuht(1998)와 K. Koppe(2010), P. Schlotter & S. Wisotzki (2011)을 참조하라.

과 개념적 정립과 관련해서는 더욱 흥미롭다. 전쟁과 폭력의 사회적 근간을 문제 삼는 이 관점은 1970년대 초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화연구의 출발로 정립되기 시작해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럽 평화학의 기본 관점으로 인정받고 있다.<sup>11)</sup> 이와 같은 관점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적 방안으로는 요한 갈통의 ‘구조적 폭력’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쟁하스는 이미 ‘조직화된 평화부재(Organisierte Friedlosigkeit)’의 개념으로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의 ‘복합구성’을 주제로 다룬 적이 있다. 쟁하스는 이 개념으로 “국가 간 구조 및 관계 그리고 사회적 전략과 동기들의 전체복합체(Gesamtkomplex)”를 지시하면서, 다양한 평화부재의 국제정치 및 국내 정치적 사건들을 초래하는 국제 관계 및 국내 ‘사회 구조와 의식 등의 전체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쟁하스는 바로 전체복합체(Gesamtkomplex)에서 비평화(Unfrieden) 조직을 특징으로 보여주는 특정한 구조와 행위양식들이 축진된다고 보았다. 덧붙여 쟁하스보기에, 이 ‘평화부재’는 그 나름의 고유한 역동성을 갖고 있다. 심지어 “그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있어 비록 자연적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그렇기에 파악 가능한 것이다.”<sup>12)</sup>

바로 이 ‘조직화된 평화부재’의 개념을 통해 쟁하스는 국제관계와 일 국내 정치사회적 상황의 ‘안정화’를 통한 갈등의 조정에 초점을 두던 당시의 지배적인 평화학과 자신들의 ‘비판적’ 평화연구를 의식적으로 구분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갈등 상황의 사후적 ‘안정화’가 아니라 갈등의 구조적 조건과 사회적 원인들의 ‘역동성’을 ‘비판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통해 국제관계 및 국내 정치사회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D. Senghaas, 1973, 7~22) 그렇기에 쟁하스가 주도한 독일의 ‘비판적 평화연구’의 관점에 따르면 평화의 반대 개념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다층적인 국제적 갈등 구조 및 사회내부의 ‘비평화’ 구조와 문화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전쟁 부재’의 상태를 평화로 규정하던 인습적인 평화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이와 같은 관점과 개념들은 한결 같이 평화를 불가능케 하는 다층적 조건과 원인들을 밝힘으로써 평화론의 새로운 준거로 발전했다. 이제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 ‘비평화의 원인’이 되는 사회내적 요인들과 구조적 차원들을 복합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관점을 통해 ‘평화’의 복합구성의 관점으로 이어질 매개를 찾은 것이다. 다시 말해, 전쟁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쟁 발발을 방지하겠다는 관점에서 (비)평화의 원인을 밝혀 평화를 열겠다는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 학문인식들의 전환은 매우 획기적이었다. 사실 오랫동안 평화협정, 분쟁조정, 갈등전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쟁원인 연구와 비교한다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11) 물론 평화학 내 ‘비판적 평화연구’에 대한 비판, 특히 평화 개념의 모호함과 무차별성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최근의 ‘구성주의적 전환’은 ‘비판적 평화연구’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학 관점의 등장과 평화학연구자의 세대교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P. Schlotter & S. Wisotzki (2011), pp. 21~23; T. Bonacker(2011), pp. 59~60.

12) ‘조직화된 평화부재’ 개념에 대해서는 D. Senghaas(1972), pp. 17~20; D. Senghaas(1970), pp. 28~30을 참조하라. 쟁하스는 ‘평화부재’ 개념을 주로 사용하지만 ‘비평화’의 개념도 간헐적으로 대체해 사용하기도 했다. 쟁하스에게 있어 양 개념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비평화’는 주로 구조나 조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구갑우는 ‘비평화’라는 개념이 1968년 인도의 다스굽타(S. Dasgupta)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지적했는데, 쟁하스가 박사논문을 작성하던 해도 또한 1967/68년이었기에 같은 시기에 동시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구갑우 (2007), 89쪽.

## 2. 1970년대 전반 쟁하스의 평화연구: 군사주의와 자폐증

쟁하스의 학문적 이력은 크게 네시기로 나뉜다.(A. Siegel, 2003, 163) 먼저 1969년의 박사학위 논문 <위협과 평화. 조직화된 평화부재 비판에 대한 연구 *Abschreckung und Frieden. Studien zur Kritik organisierter Friedlosigkeit*>을 출간한 뒤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쟁하스는 주로 ‘위협정치(Abschreckungspolitik)’와 군비(軍備)의 역동성에 대해 분석했다. 이어 1970년 중반부터 1986년경까지 쟁하스의 주요 관심사는 남북갈등과 개발정책의 문제였다. 그 다음으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89/90년 까지 그는 다시 평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되, 특히 유럽평화의 정착에 집중했다. 그러나 1990년 국제 냉전의 종말 후에 쟁하스는 ‘문명화(Zivilisierung)’의 관점에서 이전보다 더 포괄적인 평화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2012년 현재까지 그는 단독 저서 16권을 저술했으며, 그가 편집자나 공동 저자로 참여한 책만 40권에 달하고 그 외에 수십 편의 학술 논문들을<sup>13)</sup> 발표했다.(A. Siegel, 2003, 459~464)

1990년대의 본격적인 ‘문명화 평화론’의 발전과 관련해서 본다면 무엇보다 1970년대 전반기 쟁하스의 평화연구가 중요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미 1960년대 후반 쟁하스는 ‘조직화된 평화부재’ 개념으로 ‘위협정치’의 국제정치 관계와 사회문화적 차원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1972년 출간한 저서 <군비와 군사주의 *Rüstung und Militarismus*>에서 쟁하스는 ‘위협정치’의 문제를 군사주의와 국제정치와 연관해서 다루었다. 쟁하스는 ‘군비복합체’를 현존 사회구조의 핵심적 부분으로 다루었다.<sup>14)</sup> 이 때 그는 민간사회와 군대의 비조응에 의거하는 인습적인 군사주의 논의와 단순 인과론을 넘어서고자 했다. 전통적인 군사주의 개념은 주로 “정치 우선성의 상실”이나 “민간사회에 군사적 요구를 삼투시키는 것”을 부각시켰다면, 쟁하스가 제시한 군사주의 개념은 더 확대된 것으로서, 무엇보다 군비관련 기구들의 성장으로, ‘민간’과 ‘군사’의 구분을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민간 사회로의 역작용이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심지어 쟁하스는 당시 많은 비판적 사회과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군산복합체’라는 용어도 다소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이른바 군사주의가 물든 ‘민간사회’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학문적, 과학기술적, 그리고 산업적 차원까지 지니고 있는 일종의 전체적 ‘복합구성’을 구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쟁하스가 보기에는 무기의 혁신과 생산 그리고 그것을 통한 외교나 내치상의 규율화 기능과 관련해 미국은 서구에서 대표적 역할을 떠맡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체제에서 소련 같은 다른 열강들이 흉내 낼 수 없을 정도의 “주도적 안내자”로 행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쟁하스는 미국비판에만 빠지지 않았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 등의 사회주의국가들

13) 쟁하스의 저서 중 국내에 번역 소개된 것은 둘이다. 디터 쟁하스, 한상진/유필무 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 서울: 나남, 1990(독일어 원전: Von Europa lernen. Entwicklungsgeschichtliche Betrachtung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2); 디터 쟁하스, 이은정 옮김, 『문명 내의 충돌』,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독일어 원전: Zivilisierung wider Willen. Der Konflikt der Kulturen mit sich selbs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8). 그의 ‘프리드리히 리스트와 근대적 개발문제’, 『경제논문집』, no. 6(1992), 중앙대학교 경제연구소, 25~40쪽.

14) 이하 내용은 D. Senghaas(1972)에서 정리 요약함.

이 기본적으로 둘 다 ‘협박정치(Drohpolitik)’ 일반의 위협에 빠져 있는 것을 늘 강조했다. 그는 산업 국가들의 지배적인 전략 계획을 지시하면서 일종의 새로운 “민간-군사주의자 전문 집단”이 형성중이며 군사주의가 세계의 모든 영역으로 가차 없이 침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요컨대, 쟁하스는 냉전기 동서갈등에서 생겨난 ‘위협정치’의 전면화에 직면해 ‘조직화된 평화 부재’ 개념을 통해 전쟁과 평화의 인습적 경계 짓기를 넘어섰다면, ‘군사주의’의 분석틀로 국제 정치와 내정, 그리고 민간과 군의 엄격한 질적 구분을 무너뜨리고 상호연루와 침투의 메커니즘을 전면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쟁하스는 협박정치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국제관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열쇠말로 자폐증(Autismus)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여러 심리학자들이 발전시킨 그 개념을 빌려다 ‘위협정치’의 구조와 자체동력을 해명하는데 사용했는데, 이를테면 경험에 의거하지 못하고, 논리적 비판 및 현실의 결과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며, 현실주의적 논리로부터 벗어난 법칙을 따르며, 진실이 아니라 원망의 충족을 추구하며, 적대적인 충동과 동기를 지속적인 완강한 태도로 고착시키며, 다른 근원들에서 발아한 적대성을 특정 적에게로 발현하는 식의 일종의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태도를 지시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쟁하스는 1950년대와 60년대 냉전 양대 열강인 미국과 소련 두 ‘위협사회’에 나타난 ‘자폐적 적대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무역이나 관광 같이 양국 간의 자기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최소한의 교환관계는 아주 형편없는 의미만을 갖게 된다. 둘째, 한 위협사회의 엘리트들에 의해 공포된 제한적인 협박의 일부가 상대 엘리트들에 의해 인지된 뒤 그 사회의 대중들에게 전달된다. 셋째, 외부보다는 오히려 내부를 향한 위협과정이 더 심해지며 자폐적 환경이 발전해 협박정치가 재생산된다. 쟁하스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 위협사회 내지 갈등 맞수들은 사실 외부 세력보다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현실성의 상실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쟁하스가 보기에 ‘군비역동성’이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양 진영이나 국민간의 경쟁이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 촉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쟁하스는 이와 같은 위협을 협력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위협 사회에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자폐적 적대성을 강화하는 구조가 제거되어야 하며 정치적 사회적 중심 가치들에 대한 지향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보았다.(D, Senghaas, 1972, 55)

### Ⅲ. 쟁하스의 '문명육모 평화'론

#### 1. 1990년대 이후 쟁하스 평화론의 개요

쟁하스는 1989/90년의 역사적 전환을 기점으로 기왕의 학문적 연구와 변화하는 세계의 관찰을 통해 점차 비평화의 원인 해명을 넘어 새로운 평화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제 그는 비평화의 제거를 넘어 적극적인 평화 건설의 주제로 이전했다. 쟁하스는 'Si vis pacem, para bellum'(원평비전 願平備戰)에 대비되는 'Si vis pacem, para pacem'(원평비평 願平備平) 원칙을 내세우며 '적극적 평화'의 사회내적 전제조건들을 전면적으로 주제화했다.(D. Senghaas, 1997, 9~12)

##### 1) 쟁하스의 평화론의 네 가지 인식전제

첫째, 법치국가는 평화지속의 기본 조건이다. (개별 국가 내의 자유의 보호)

쟁하스는 법치국가 내지 한 국가의 다원주의적 정치 질서와 평화적 대외행위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 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그가 보기에 법치국가는 평화지속의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둘째, 예측가능성은 평화를 촉진하는 상호작용의 매개다. (개별국가들간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국가 간 관계에서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행위동기와 이익의 예측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 예측가능성에 의거해서 행동의 조정이 가능해지고 협력의 네트워크가 제도화된다. 조정과 협력 네트워크의 역동성으로 대결적 악순환 대신 상호협력의 선순환이 생겨난다. 국제조직들은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면서 결국 국제정치의 문명화 과정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조직하게 된다.

셋째, 경제적 균형은 평화구조의 물질적 기제다. (긴급함, 빈곤, 기아로부터의 보호)

소유의 균형은 평화의 조건. 고전 경제학 이론의 기본 전제, 즉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복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 그것은 단지 모든 영역에서 진보한 높은 생산성의 산업사회들에서만 가능. 그와 같은 상황은 발전의 사후 결과, 그렇기에 선진적인 우월한 경제가 열등하고 허약한 경제들을 몰아내는 경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선택적인 보호의 결합을 개발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선진국 경제는 개발국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감은 평화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국수주의와 민족주의로부터의 보호)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세계상과 이해관계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감과 책임 능력. 그 능력이 그것에서 귀결되는 행위들과 결합하게 되면 이는 개별국가들을 넘어서는 정치공동체의 형성을 이끌 수 있다.

## 2) 영속적 평화형성을 위한 세 개의 평화 복합강령

이제 쟁하스의 복합구성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과적 평화주의(파라파셈 para pacem) 원칙이다. “어떤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그 원인을 제거해야한다. 특정 한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원망한 인과적 원인들을 불러 낼 그 다른 원인들을 정초지어야 한다.” 이 인과적 평화주의 원칙에 의거해 쟁하스는 평화복합강령의 세 모델을 제시했다.

모델 1과 2와 모델 3은 하나의 종합적 평화론의 일부를 구성한다. 단지 각 모델은 일국 경제안이나 그 너머냐에 따라 구분된다. 모델1과 2는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탈경계적 공동체화 과정과 관련된 것이고, 모델 3은 일국적 경계 내에서 중층 내지 저층 차원에서의 그 전제조건들을 다룬다.

### 모델 I: 평화구조의 5가지 요소들

- 적극적 상호의존(집단적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 사실상의 균형(특히 경제영역에서)
- 동종성(비교 가능한 정치, 경제 사회 구조로 인해 각각의 상대측에서 대항파트너를 가질 수 있는 것)
- 엔트로피(하부 정치단위의 자율성과 독자성 인정)
- 공동의 제도들(혼란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장)

### 모델 2: 공동체형성의 집단적 학습과정으로서의 평화를 위한 10개의 구성요소

- 핵심 가치들의 조화가능성
- 경계를 넘는 의사소통 및 계약절차들의 확대
- 약자에 대한 강자의 공감과 책임의식 및 약자의 긴급한 상황에 개입할 의지
- 경제 성장 및 공동의 이점에 대한 기대
- 문제해결능력의 증대
- 주도적 기능을 행사할 중핵지역의 형성
- 역할 교체의 가능성
-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엘리트 확대
- 새롭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가능케 하기
- 안보딜레마를 줄이기 위한 동기와 행동의 예측성 증대와 기대안정성의 정착

## 2. 모델 3: 문명육모 평화론

1990년대 초반부터 쟁하스가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갈등해결과 평화 정착의 모델은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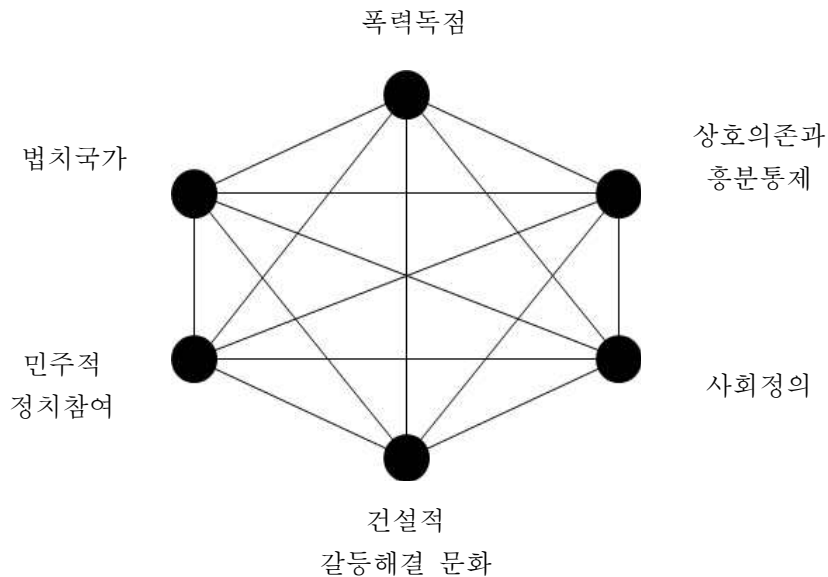
명 육모꼴(Das zivilisatorische Hexagon)’이다.<sup>15)</sup>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쟁하스가 이 모델을 “추상적인 이론”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험과학적 발견의 정리”라고 강조한다는 사실이다.(D. Senghaas, 2010, 93) 쟁하스는 한 사회의 평화 보장의 문제를 ‘문명화 프로젝트’로 간주했으며(D. Senghaas, 1995, 196)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 경험에 근거해 “문명화되고 지속적인 비폭력적 갈등 해결”을 위한 여섯 가지 초석(꼭짓점)을 깔았다. 이 때 쟁하스는 자신의 문명육모(꼴)론이 “좋은 사회” 내지 “좋은 국제사회”론이 아니라 애초부터 평화론으로 구상되었다고 밝혔다.(D. Senghaas, 2004, 136) 다시 말해 쟁하스의 문명육모론은 흔히 사회철학이나 정치사상의 영역에서 추상적으로 구상되는 이상사회론 유의 논의가 아니라 역사-경험적 관찰에 근거해 어떻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쟁하스는 비록 ‘문명(Zivilisation)’이라는 개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좋은 문명’ 그 자체에 대한 구상을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D. Senghass, 2004, 136) 쟁하스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좋은’ 근대문명은 어쨌든 근대적 사회 갈등들의 ‘문명화’를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쟁하스가 평화를 문명화프로젝트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시공간 초월적인 “추상적이고-보편적인” 의미가 아니다(D. Senghaas, 1995, 196). 그것은 철저히 “근대화가 진행 중인 또는 근대화한 사회 내부와 그 근대 사회들 간의 평화 문제”를 지시한다. 쟁하스는 ‘근대’ 사회의 특징을 강조하며 전근대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구분한다. 그가 보기에 전통사회는 신분에 따라 사람의 지위가 이미 정해지는 전통적이고 정적인 사회인데 비해 근대사회는 지속적인 세속적 해방 과정의 결과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망과 도시화, 문맹극복과 정치적 공동결정의 확대 등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그 결과로 근대사회는 그 자체로 보면 과거보다 더욱 더 갈등과 폭력의 잠재력을 지닌 사회가 되었다.(Senghass, 1995, 196) 왜냐하면 근대사회는 전통사회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변화로 인해 다원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다원주의는 무엇보다 자아상과 세계상의 차이나 서로 다른 정의관을 전제로 한 정체성의 다원주의고 이익의 다원성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쟁하스가 보기에 갈등 잠재력이 높은 그러한 근대 사회가 장기적인 폭력 갈등 또는 유사 내전 상태 내지 실제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존을 위한 협정 내지 합의가 필요하다.(Senghaas, 1995, 197) 그것은 그 자체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견해와 이익의 차이들 때문에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다. 결국 근대 대중사회에서 이 공존의 형식과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문명적 과제라는 것이 쟁하스가 내세우는 평화론의 출발점이다. 쟁하스는 이 공존의 성패에 평화가 달린 것으로 보았고 그렇기에 근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비폭력적이고 건설적인 갈등해결의 지속적인 형식을 발견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협약을 통해서 공동체 내부 및 공동체들 간에서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문명화’하는 것이 평화였다. 그렇기에 쟁하스의 사유에서는 문명화의 성공과 평화가 사실상 동일한 현상을 지칭하

15) 쟁하스는 1992/93년 문명육모 평화론을 구상하기 시작해 1994년 ‘세계는 어디로 표류하는가?(Wohin driftet die Welt)’에서 처음 선보였다. 그 후 그는 수많은 논문들과 저작에서 조금씩 논의를 보충하며 체계화했다. 이 글은 주로 1994년의 그 저작과 1995년의 ‘문명화프로젝트로서의 평화’(Frieden als Zivilisierungsprojekt), 그리고 2004년에 출간된 책 ‘지상의 평화를 위해’(Zum irdischen Frieden)에 기초해 그의 평화론을 재구성한다. 기본 내용은 별 차이가 없다. 2004년 저작은 그동안의 여러 비판적 논평을 염두에 두고 보충적인 답변과 설명을 포함해 더 체계적인 논의를 갖췄다.

는 것이다.

그런데 쟁하스의 문명화프로젝트로서의 평화론은 먼저 근대 사회 내부에서 내적 평화가 달성 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쟁하스에 따르면 ‘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는 아래 여섯 요소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첫째, 시민의 무장해제와 폭력의 탈사유화를 의미하는 국가의 폭력 독점. 폭력독점을 통해서만 공적 갈등들의 문명화 내지 신뢰할만한 비폭력적 해결이 가능해진다. 이 때 물론 공권력의 정당한 독점 내지 법공동체의 확보가 관건이다.

둘째, 폭력의 공적 독점이 전제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을 법치국가. 폭력독점의 법치국가적 통제가 전제되어야 폭력독점이 용납 가능해진다. 법의 지배를 말한다. 법치국가적 헌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 질서들은 폭력독점의 틀을 잡으며 정당성을 제공한다. 기본권 보호, 법률을 통한 인권보장, 법 앞에서의 평등, 권력분립, 자유선거, 정치참여의 권리 보장, 검찰과 재판관의 독립성, 법정에서 공정한 심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 등등.

결국, 평화사회의 형성에서 폭력독점과 법치국가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폭력독점이 이루어지 않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정착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치국가는 일단 형성되고 나면 폭력독점을 통제하는 구현체가 된다. 역사발전 과정을 보면 먼저 폭력의 거친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 장기간에 걸쳐 폭력독점의 통제 기관과 방식들이 획득되고 인정되었다.

셋째, 갈등상황에서의 흥분 통제 및 사회구성원 사이의 상호의존과 그것의 영향을 통한 갈등

통제.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는 다양한 기능 분화를 초래했다. 그것은 예측가능성과 안전에 대한 기대를 요구하고 경제적 연루를 낳으며 기능적 역할 세분화의 긴 연쇄를 통해 작동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연루와 연쇄는 다시 흥분 통제를 강제한다. 자기통제와 자기지배는 공격성 제어와 폭력 단념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용과 타협 능력을 위해서 중요하다. 폭력독점과 법치국가는 이 흥분통제가 없으면 아주 허약한 골조에 불과할 것이다.

넷째, 선거 및 정치결정 과정에의 민주적 참여. 사회변혁과 광범한 사회이동의 결과로 새로운 사회 계층은 항상 민주적 참여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다원적 이익발현과 상승과 하강으로의 사회이동은 정치체제의 지속적인 민주화를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한 문명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은 다양한 이익들의 광범한 발현 능력과 유연하고 개방적인 민주 체제로의 통합이다.

다섯째, 모든 시민의 기본권, 특히 사회적 인권까지도 보장해줄 사회 정의. 분배정의와 기회 균등을 포함한다. 사회이동이 심하고 정치화된 근대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둘러싼 대결은 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근대 사회가 사회적 불평등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문명화된 사회생활의 광범한 수용의 구성적 조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물질적 토대와 그것을 통한 충분한 적법성이 없이 존재하는 셈이다.

여섯째, 갈등을 타협과 관용에 기초해 해결할 수 만드는 건설적 갈등문화. 앞의 모든 요소가 갖추어진다면 건설적 갈등해결의 정치문화가 생겨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민주적 논쟁문화의 기초 하에서만 법치국가와 폭력독점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다.

쟁하스는 이 여섯 가지 문명 구성의 기본 요소가 서로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평화 보장 또는 폭력 확산이 달려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쟁하스의 핵심 주장은 평화란 위에서 언급한 그 문명화 요소들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치적 사회적 정착의 결과라는 것이다. 쟁하스는 “한편으로의 정치와 사회의 문명화, 다른 한편의 평화란 동일한 상황이다”(D. Senghaas 1994, 47) 라고 전제하면서, “일국 내부 및 국가 간 차원 둘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명화 내지 평화는 폭력사용의 방지를 지향하는 비폭력적인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는 사회집단 내지 국가나 민족 간 그들의 존재를 위기에 빠트리지 않고 그들 개개인 내지 일부의 삶의 이해관계나 정의감이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만들 조건들이 합의와 타협을 통해 형성된다”(D. Senghaas, 1994, 47) 위의 문명육모론은 각각 파라파셈의 규준으로서 헌법정치, 제도, 물질 복리 및 정서적 전제조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복합구성’의 관점은 다시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비판적-반성적 문명화론적 관점의 이 문명육모론은 특정한 이상적 근대의 ‘구성’(figuration)이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 발생한 기형화된 문명발전의 경험에서 출발해 문명의 오도된 발전경로들에 대한 사회비판을 가능케 하고 그것을 통해 평화를 위한 이론적 분석을 가능케 한다. 쟁하스가 보기에 결국 “평화를 복합구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 관점이야말로 기능적으로 다분화된 근대 사회의 복합체를 모두 포괄하면서 상호의존적 기제의 작동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명육모의 여섯 가지 초석들은 자가 발전한 피드백 기제를 통해 일종의 재생산의 틀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구성 요소로서의 초석들은 긍정적 피드백 기제나 부정적 피드백 기제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문명육모꼴은 매우 그 자체로 완결된 이상

상태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의 상호의존 속에서 자칫 부서지기 쉬운 ‘허약한 구조’라는 말이다.

게다가 인식 내적 논리로 본다면 문명욕모꼴은 이미 역사적-발생적 패러다임이다. 그렇기에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점점 더 명료하게 자리잡아갈수록 그것은 단순히 각각의 개별 구성요소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복합구성’을 특징으로 갖게 된다. ‘복합구성’이란 엄밀하게 말한다면 무엇보다 “구조적 인과성”을 지시한다. 전체로서의 문명욕모꼴은 점점 더 다양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인과적 연관과 상호작용과 연루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명욕모꼴은 일종의 발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쟁하스는 이 문명화 기준들의 형성을 유럽 역사 발전의 산물이라고 전제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유럽 경험에서 나온 그 기준들이 여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지닌다고 내세웠다. 쟁하스가 보기에 애초 서유럽 그리고 현재 OECD국가들에서는 이 여섯 개의 초석이 하나씩 이어지고 쌓여서 놓여졌다.

한편, 쟁하스는 일국 내의 문명화 갈등 해결 모델을 국제 관계에도 옮겨 적용하고자 한다. 이 때 그는 하나의 세계국가를 통한 평화구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것은 현실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동종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론은 세계의 구조적 이종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문명욕모론에 근거한 세계평화질서는 지역평화지대와 “지역의 유사-국가연합적 질서”로서의 국제체제가 서로 보충하며 상호 안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쟁하스는 바로 유럽연합이 그 모델이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발전 과정이 재현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 IV. 문명욕모 평화론에 대한 비판과 응답

쟁하스의 문명욕모 평화론은 독일과 유럽의 평화학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과 지지와 함께 적지 않은 비판과 불만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평화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관련 다양한 전문 잡지들과 주요 일간지에서는 쟁하스의 평화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sup>16)</sup> 심지어 1996년 12월 13일에서 15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 독일 내 여러 분야의 전공 학자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그의 평화론을 토론하고 그것을 편집해 발간하기도 했다.(Jörg Calließ, 1997) 쟁하스의 평화론이 평화의 원인 분석을 위해 중요한 지적 자극을 주고 논의를 풍부하게 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은 없으나 세부 평가에서는 매우 갈렸다.<sup>17)</sup> 페터 임부쉬(Peter Imbusch)와 알폰스 지겔(Alfons Siegel)은 쟁하스의 평화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을 각각 일곱과 여덟 가지로 요약했다.<sup>18)</sup>

16)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A. Siegel(2003), pp. 378~392를 참조하라. 그 외에도 이미 1996년에 오스트리아 평화와 갈등해결연구센터(ÖSFK)는 ‘유럽에서의 평화와 문명화과정의 정치적 형성관계’를 주제로 다년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쟁하스의 문명 평화론을 다룬 논문모음집을 발간했다. ÖSFK, Gerald Mader & Wolf-Dieter & Eberwein Wolfgang R. Vogt(1996). 쟁하스의 평화론을 주제로 다룬 많은 학술 저작과 논평 글의 목록과 정보는 D. Senghaas(2004), pp. 137~140을 참조하라.

17) 쟁하스의 문명욕모 평화론을 적극 수용하고 확대 발전시킨 학자들과 그들의 평화론에 대해서는 P. Imbusch(2008), pp. 181~182를 참조하라.

18) 쟁하스의 문명욕모 평화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P. Imbusch(2008), pp. 182~184;

첫 번째 비판은 방법론과 이론적 차원에 대한 것이다. 사회학 출신의 평화학자인 볼프강 포크트(W. R. Vogt)는, 쟁하스가 손꼽은 여섯 가지 평화의 근간 요소들은 “서로 다른 의미구성물, 이론적 고안과 행위 차원들로부터 나온 요소들을 “잡다하게 뒤섞어 놓은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충분한 이론적 추론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W. R. Vogt, 1996: 103~104) 일종의 절충적인 모방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섯 가지 평화 요인들이 서로 다른 추상 차원과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쟁하스는 그 연관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의제기다. 이를테면 포크트가 보기에, 쟁하스의 문명육도 평화론에서 폭력독점과 법치국가는 정치체도의 차원에 속하는 것인 반면, 갈등문화는 일상문화 내지 생활세계의 심급이고, 흥분조정과 참여는 개별 행위자들의 행동과 태도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이 체제와 생활세계 그리고 행위의 차원들이 쟁하스에게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명료하게 구분되지도, 귀속되지도 연결되지도 않았던 것이다.(W. R. Vogt: 1996, 104; P. Imbusch, 2008, 182) 이에 대한 쟁하스의 반론은 간단하다. 그는 포괄적인 사회구조나 행위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평화 복합구성의 요소를 제시한 것뿐이다.

두 번째, 기본전제들의 신빙성 문제다. 먼저, 근대 문명의 병리학적 모순 내지 계몽과 파괴의 양면성을 둘러싼 숭한 논의들이 널리 받아들여진 지적 지형에서 쟁하스의 엘리아스 수용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sup>19)</sup> 정치학자 헬무트 쾨니히(Helmut König)는 ‘문명화 과정의 자기부정’ 테제에 의거해 문명에 대한 쟁하스의 비성찰적인 긍정적 수용을 문제로 삼았다.(H. König, 1996) 엘리아스와 쟁하스가 긍정적으로 파악했던 문명 구성의 여러 상호의존적 연쇄는 사실 얼마든지 그대로 도덕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20세기 전반 독일 나치즘 시기의 전쟁과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들을 단순히 문명화 과정의 후퇴나 퇴행적 일탈로 보는 쟁하스의 관점은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비판가들은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문명화과정의 내재적 연속적 일부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쾨니히는 문명화는 폭력과 테러로 짝찬 과정일 뿐 아니라 이 과정의 결과는 새로운 폭력 형식을 만들어 내고 자기 파괴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폭력, 전쟁과 파괴는 문명의 과거에나 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일부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H. König, 1996, 149; P. Imbusch, 2008, 183)<sup>20)</sup>

게다가 역사학자인 알프 뢰트케(Alf Lüdtke)와 볼프람 지만(Wolfram Siemann)은 쟁하스 문명화 평화론의 역사적 전제가 잘 못되었음을 덧붙여 지적했다. 일상사가 뢰트케는 쟁하스의 논의처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이익과 갈등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감정과 감각과 판타지의 차원이 오히려 결정적인데 이를 단순히 ‘나쁜 감정들’이라고 내팽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J. Calließ, 1997: 100) 지만은 쟁하스가 18세기까지를 전근대, 그 뒤시기를 근대라고 규정한 인습적 양극 구분법을 낡은 것이고 쟁하스의 보편사적 논의 자체도 시대착오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J. Calließ, 1997: 91) 그와 같은 보편사적 설명은 국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일 국내 사회적 행위자들이나 초국가적 행위자들이 제대로 주목되지 못했다는 비판

A. Siegel(2003), pp. 378~392; D. Senghaas(2004), pp. 124~137을 참조하라. 쟁하스는 자신의 평화론에 대한 비판을 6가지 주제로 묶고 이에 대해 답변했다.

19) 지그문트 프로이트, 알프레트 베버, 노베르트 엘리아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를 거쳐 바우만에 이르는 다양한 문명(비판)론, 특히 근대(성)와 폭력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적 논의는 P. Imbusch(2005)를 참조하라.

20) 문명의 폭력 내재성에 대한 근본적 비판으로는 볼프강 조프스키(2010)을 참조하라.

도 드셨다.(J. Calließ, 1997: 115)

이 비판들과 관련해, 쟁하스는 원칙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문명화 과정의 후퇴를 부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문명화의 성과는 항상 허약한 작품에 불과하다고 인정했으며 문명의 극단적 안정성 같은 것은 자신의 문명화 평화론과는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퇴행적 위기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명욕모 사회의 내구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D. Senghaas, 2004, 129) 아울러 쟁하스는 다시금 여기서도, 자신의 문명욕모론이 문명론 내지 문명화론에 대한 이론적 공헌이 아니라 철저히 평화론으로 구상되었음을 재차 강조했다.(D. Senghaas, 2004, 136) 그렇기에 쟁하스는 어떻게 하면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평화가 형성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응수했다.

셋째, 쟁하스가 제시한 여섯 개의 개별 문명화 초석에 대한 세부적인 비판들인데, 주로 국가의 폭력 독점 그리고 상호의존과 연관된 흥분통제에 집중되었다. 비판가들이 보기에, 문명의 욕모꼴 형성과정은 그 자체가 폭력적 형식을 띠었는데, 이 폭력적 형식은 실제 현실의 구성 계기이고 그런 한 문명욕모꼴의 근원적 토대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가들은 특히 근대 국가의 폭력독점을 일방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없고 양면적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학자 아렌트 벨만은 ‘독점화된 폭력의 부정 변증법’이란 표현을 통해 이를 주목하며 결국 “국가의 폭력독점의 이중적 성격을 감추어야 만이 국가를 평화론의 중심으로 내세우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A. Wellmann, 1996, 62)

이에 대해 쟁하스는 먼저 폭력독점의 역사적 과정이 철저히 폭력적 방식을 통해서였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폭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폭력적 지배를 중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양보와 타협에 기초해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의지에 반하는 권력통제”로서, 사회의 해방정도가 강화될수록 권력통제는 점차 사회적 힘으로 정착된다.(D. Senghaas, 2004, 124~125) 쟁하스가 보기에 폭력 독점을 둘러싼 대결이 역사적 타협으로 전환되는 곳에서 법치국가가 탄생한다. 그리고 바로 그 법치국가 내지 민주적 헌법국가의 여러 원칙과 기제가 등장하고 작동하는 것과 연관해서만 폭력독점의 문명욕모적 평화 초석의 의미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쟁하스는 폭력독점과 법치국가의 역사적 상승교호과정 및 연관성을 통해 이 비판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D. Senghaas, 1997b, 325)

흥미로운 것은 쟁하스가 자신의 문명욕모 평화론 비판에 대해 자주 6개 초석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연관성을 근거로 논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벨만은, 흥분통제는 단순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흥분의 통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다양한 충동의 억제를 의미하며 아울러 그로 인해 공격적 잠재력이 증대하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며 흥분통제의 이면을 지적했다.(A. Wellmann, 1996, 64) 이에 대해 쟁하스는 흥분통제가 단순히 감정과 욕구에 적대적인 인간학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흥분통제는 문명욕모꼴에서 정치참여와 교호작용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쟁하스의 논의에 따르면, 흥분통제가 자기조절과 자기통제의 심급이라면, 민주적 참여는 행동을 촉진하는 심급으로서 앞의 것에 대한 일종의 대극(對極) 역할을 수행한다.(D. Senghaas, 1997b, 331; D. Senghaas, 2004, 130~131)

네 번째 비판점은 문명욕모 평화론이 평화의 근간이 되는 몇몇 요소를 빠트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명욕모가 아니라 문명 철모나 팔모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볼프

람 지만은 쟁하스의 평화론에서 ‘기억의 관리’나 ‘종교성의 차원’이 정당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J. Calließ, 1997, 93) 역사의식이나 기억문화가 공동체의 현재적 정체성 갈등을 넘어 폭력적 대결의 요인으로 발화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21세기 전반 일부 종교들의 근본주의화와 테러주의적 동원 양상에 주목한다면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비판이다.

그런데 지만 뿐 아니라 그 외 많은 비판가들이 쟁하스의 평화론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결함은 생태문제였다. 인구증대와 환경파괴가 곧 핵심적인 갈등 요인이 됨을 지시하며 비판가들은 환경/생태문제 해결을 보충해 문명육모론이 칠모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쟁하스는 그 비판의 함의를 이해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여석가지 초석들처럼 –“문명화된 갈등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정치적-제도적 틀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못 가지는 것으로 보아 그 제안의 수용을 유보했다. 물론 쟁하스는 곧 문명화 프로젝트로서 지속가능성의 생태적 전망이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되어 평화 형성의 새로운 추진력으로 발전하면 그렇게 확장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 두었다.(D. Senghaas, 1997b, 334; D. Senghaas, 2004, 132~134) 그러나 문제는 특정 정치적 사회적 과제의 순전한 중요성이 아니다. 그것이 여타 다른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문명화된 갈등 해결의 구성적 조건들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명육모 평화론의 확대는 모든 구체적 정치영역에서 문명화된 갈등해결을 보장해주는 체계와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쟁하스의 대답이다.

마지막으로 쟁하스의 평화론이 ‘유럽 중심적’이라 보편적 설명력을 갖지 못하고 다른 문화권으로 확장해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W. Vogt, 1996, 102; P. Imbusch, 2008, 182~183) 쟁하스는 자신의 평화론이 서유럽의 역사적 발전과 정치적 전통에 조응하는 전형적인 유럽적 구상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문명육모론의 발생적 맥락과 관련해 그것이 ‘유럽 중심적’이라는 규정은 받아들이지만 서구의 ‘오만한 자기숭상’이니 ‘유럽중심주의’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자신을 방어했다. 자신의 평화론은 비유럽 지역의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의 여지를 열어 놓는 개방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강조했다.(D. Senghaas, 2004, 131~132) 쟁하스는 자신의 평화론이 비록 유럽의 경험에 기초했지만 ‘추상적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기에 비유럽 지역의 갈등과 폭력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쟁하스가 보기에 문명육모론의 범주로 사유하면 문명화된 갈등해결의 전제조건들을 논의하는데 일련의 분석적 장점들을 갖게 된다. 그것은 경험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다양한 차원의 구조와 영역들을 해명하고 역사 비교적 분석에 의거해 서로 다른 여러 발전 경로들과 현상들을 밝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맥락에서 쟁하스는 문명육모론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에 전적으로 개방적이다. 발견적 가설, 경험과학적 이론, 다시 말해 –역사적-발생적-구조적-비교적 방법론으로 활용되는 것이든, 실천론 또는 규범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A. Siegel, 2003, 390~391) 오히려 그는 문명육모론의 장점이 그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본다. 특히 쟁하스는 자신의 문명육모론이 실제 역사 과정을 해명하는데 결정적인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른 평화의 조건과 갈등(해결) 양상의 전개 과정을 자신의 문명육모론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왜냐하면 쟁하스가 보기에 비유럽지역의 갈등 해결과 평화형성도 결국

에는 유럽이 역사적으로 어렵게 달성한 그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D. Senghaas, 2004, 47~50)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쟁하스가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를 철저히 서유럽과 같이 이미 욕모꼴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

## V. 평가와 함의

먼저, 쟁하스의 (비)평화 복합구성론은 애초 냉전적 대결의 국제정치와 사회문화적 적대 현실의 연관성을 다루는 것에서 출발했기에 한반도에서의 ‘조직화된 평화부재’를 밝히는 데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전반 쟁하스가 끄집어 올린 여러 맥락과 그 개념들, 즉 ‘위협정치’, ‘협박정치’, ‘군사주의’, ‘자폐성’ 등은 국제정치적 차원과 일국 내 사회 구조와 문화의 상호작용을 해명하는데 의미 있는 지적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쟁하스의 이 ‘복합구성적’ 관점과 사유 모델은 평화 구성의 다양한 원인과 조건들을 연관시키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평화론의 매우 중요한 이론적 방법론적 전진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문명욕모 평화론’은 -여전히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인과적 평화론에 의거한 적극적 평화 구성의 사유 실험이라는 점에서 평화에 대한 지적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쟁하스는 1970년대 내내 국제 냉전의 ‘위협정치’만을 주제로 삼았지 독일 ‘분단’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1980년대 전반 동서 진영 간 재무장 문제로 인해 유럽평화의 문제와 씨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쟁하스를 비롯한 서독의 대다수 평화 연구자들은 ‘탈민족’ 지향의 지식인들로서 평화(유럽적 맥락)와 통일(‘독일문제’ 해결)을 구분해 후자를 금기시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쟁하스의 평화론을 비롯한 독일의 평화학을 살펴 볼 때 우리는 결국 한국과는 다른 맥락상의 차이에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다. 다만 평화연구와 분단 극복 내지 통일 논의가 어떻게 구분되고 또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체제로서의 분단(극복) 내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관심과 논의가 평화학 내지 평화담론을 과도하게 지배하여 평화와 관련한 독자적 연구 주제 및 논의의 맥락과 관점을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평화의 복합구성’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분단문제를 중심에 세우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그것이 한반도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보조로 환원되기 보다는 오히려 평화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논의의 정립과 확산으로 상승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단 자체가 이미 고유하고 총체적인 적대적 갈등의 요인이라면 그것의 극복 자체가 이미 평화 구성(figuration)의 결과로 현시하겠지만, 분단이 한반도 ‘비평화’의 단일한 규정 요소가 아닌 바에야 정치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저발달과 사회문화적 불관용과 ‘자폐적 적대성’ 및 국제 관계의 악영향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 더 세밀하고 ‘복합구성적(configurative)’ 관점의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쟁하스처럼 비평화 사회를 하나의 전체적 연관의 틀로 보는 관점, 즉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구체적인 갈등 상황들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논란이 적지 않다. 쟁하스의 문명욕모 평화론은 다양한 평화의 근원들과 토대를 포착해 그것의 복합적 연관을 문제 삼

있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평화론보다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쟁하스의 평화론은 어떤 영속적인 평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의 ‘조건’과 ‘과정’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결국 ‘한반도형 평화이론’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달려 있다기 보다는 분단 ‘갈등’의 해결을 비롯한 여타 여러 요소들의 ‘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의 ‘과정’과 조건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고 상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끝)

## 참고문헌

- 구갑우, 2007: 『비관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 요한 갈통, 강종일 외 옮김, 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 볼프강 조프스키, 이한우 옮김, 2010: 『폭력사회. 폭력은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서울: 푸른숲.
- 하영선, 2002: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 Jörg Calließ, 1997: *Wodurch und wie konstruiert sich Frieden? Das zivilisatorische Hexagon auf dem Prüfstand*, Rehbürg-Loccum: Kirchliche Verwaltungsstelle Loccum.
- Dan Diner (Hg.) 1988, *Zivilisationsbruch: Denken nach Auschwitz*, Frankfurt am Main: Fischer-Taschenbuch Verlag.
- ÖSFK, Gerald Mader Wolf-Dieter Eberwein Wolfgang R. Vogt (Hg.), 1996: *Frieden durch Zivilisierung? Probleme - Ansätze - Perspektiven*, Münster: agenda Verlag.
- Bernd Greiner (Hg.), 2006: *Heiße Kriege im Kalten Krieg*, Hamburg: Hamburger Ed.
- Peter Imbusch, 2005: *Moderne und Gewalt: Zivilisationstheoretische Perspektiven auf das 20. Jahrhunder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Peter Imbusch, 2008: Die Konflikttheorie der Zivilisierungstheorie, in Thorsten Bonacker(Hg.), *Sozialwissenschaftliche Konflikttheorien. Eine Einführung 4. Auflage*,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pp. 165 ~185.
- Peter Imbusch & Ralf Zoll (Hg.) 2010: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Eine Einführung, 5. Auflage*,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Mary Kaldor, 1990: *The Imaginary War: Understanding the East-West Conflict*, Oxford.
- Karlheinz Koppe, 2010: Zur Geschichte der Friedensforschung im 20. Jahrhundert, in Peter Imbusch Ralf Zoll (Hg.) 2010: *Friedens- und*

- Konfliktforschung. Eine Einführung, 5. Auflage*,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pp. 17~66.
- Peter Schlotter & Simone Wisotzki, 2011: Stand de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 Zur Einführung, in ders. (Hg.),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Baden-Baden: Nomos, pp. 9~45.
- Dieter Senghaas(Hg.), 1970: *Zur Pathologie des Rüstungswettlaufs. Beiträge zu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Freiburg im Breisgau: Verlag Rombach.
- Dieter Senghaas, 1972a: *Abschreckung und Frieden. Studien zur Kritik organisierter Friedlosigkeit*, Frankfurt am Main: Fischer Verlag.
- Dieter Senghaas(Hg.), 1972b: *Kritische Friedensforsch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 Dieter Senghaas(Hg.), 1973: *Friedensforschung und Gesellschaftskritik*, München: Carl Hanser Verlag.
- Dieter Senghaas, 1992: *Friedensprojekt Europa*, Frankfurt am Main: Suhrkamp.
- Dieter Senghaas, 1994: *Wohin driftet die Welt? Über die Zukunft der friedlichen Koexistenz*, Frankfurt am Main: Suhrkamp.
- Dieter Senghaas, 1995: Frieden als Zivilisationsprojekt, in ders.(Hg.), *Den Frieden denk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pp. 196~223.
- Dieter Senghaas, 1997a: Biobibliographische Notizen zum “zivilisatorischen Hexagon”, in Jörg Calließ(Hg.), *Wodurch und wie konstruiert sich Frieden? Das zivilisatorische Hexagon auf dem Prüfstand*, Rehburg-Loccum: Kirchliche Verwaltungsstelle Loccum, pp. 21~32.
- Dieter Senghaas, 1997b: Hexagon-Sünden, in Jörg Calließ(Hg.), *Wodurch und wie konstruiert sich Frieden? Das zivilisatorische Hexagon auf dem Prüfstand*, Rehburg-Loccum: Kirchliche Verwaltungsstelle Loccum, pp. 325~327.
- Dieter Senghaas (Hg.), 1997c: *Frieden mach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 Dieter Senghaas, 1998: *Zivilisierung wider Will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 Dieter Senghaas, 2000: Wissenschaftsbiographische Notizen, in Ulrich Menzel (Hg.): *Vom ewigen Frieden und vom Wohlstand der Nationen, Dieter Senghaas zum 60. Geburtstag*, Frankfurt am Main: Suhrkamp, pp. 607~622.
- Dieter Senghaas, 2001: Civilizing Conflict: Constructive Pacifism as a Guiding Notion for Conflict Transformation, in *Berghof Handbook for Conflict*

- Transformation*, Berghof Research Center for Constructive Conflict Management, Berlin, pp. 1~18.
- Dieter Senghaas, 2004: *Zum irdischen Fried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 Alfons Siegel, 2003: *Ideen zur Friedensgestaltung am Ende des Ersten Weltkrieges und des Ost-West-Konfliktes. Entwicklungen und Konzepte von Matthias Erzberger und Dieter Senghaas*, Münster: agenda Verlag.
- Ulrike C. Wasmuht, 1998: *Geschichte der deutschen Friedensforschung. Entwicklung – Selbstverständnis – Politischer Kontext*, Münster: agenda Verlag.
- Arend Wellmann, 1996: Das Zivilisatorische Hexagon: (k)ein universelles Friedensmodell, in *Antimilitarismus Information*, 26. Jg., H.11, pp. 58~66.
-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2003: *„Politik mit wachen Sinnen betreiben“ Zur Erinnerung an Karl W. Deutsch*, Berlin: WZB.
- Wolfgang Vogt, 1996, Zivilisierung und Frieden – Entwurf einer kritisch-reflexiven Friedenstheorie, in ÖSFK, Gerald Mader Wolf-Dieter Eberwein Wolfgang R. Vogt (Hg.), *Frieden durch Zivilisierung? Probleme – Ansätze – Perspektiven*, Münster: agenda Verlag, pp. 91~135.

<토론문>

##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작동양식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서보혁 선생님의 글을 읽고 일단 드는 소감은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총체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토론자는 솔직히 ‘비평화’라는 말을 이 글을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국내 학계에 비평화라는 개념이 이미 소개되고 검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평화’는 한반도의 상황, 나아가 이른바 ‘제3세계’의 분쟁지역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그야말로 “부조화, 폭발 직전의 갈등, 혹은 전쟁의 징조를 보이는 상태(비평화)”가 장기지속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버트 콕스의 ‘역사 구조’ 개념을 활용하여 한반도 비평화 구조를 분석한 것도 공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콕스가 제시한 구조를 설명하는 세 범주, 즉 물질적 능력, 이념, 제도의 조합은 한반도 분단문제를 설명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질적 능력과 제도는 일반적으로 구조를 설명할 때 많이 활용된 개념이지만 이것을 이념의 문제, 사고방식의 문제, 이미지와 정체성의 문제와 결합시킨 측면은 정말로 한반도 분단문제를 설명하는데 적실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조를 설명할 때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역사적 상황에서 도출하고”, 또한 “생명과 변화를 내포하는 역사적 구성물”로 설명해야 한다는 부분에 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제시한 ‘비평화 구조’라는 개념이 충분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구체적 현실 분석과 결합되면서 한반도 분단상황을 체계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으로 완성되는 작업은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과제를 학계에 제기하고 던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갖는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 틀이 역사와 현실의 실상을 분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이론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몇 개의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 I. 분단체제론과 ‘비평화 구조’

발표자는 2장 이론적 논의에서 분단체제론과 남북관계론은 남북관계에 천착하고, 주된 관심사도 분단극복 곧 통일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단체제론은 백낙청 교수가 주로 주장하고 있지만, ‘분단체제’라는 단어 자체는 1970년대초부터 장준하 등 민주화 운동세력이 빈번하게 사용하던 용어였고, 그 의미도 이때부터 단순히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에 국한되어 사용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반도 내외를 관통하며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국제질서의 규정력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장준하는 분단체제를 “안에서,

밖에서 강요한 양분체제”, 또는 “내외가 상응한 분단체제”라 했고, 나아가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을 주장하며 이를 “현존 자본주의의 세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체적인 양상”이라 했습니다. 분단체제론은 단순히 남북관계에 천착한 이론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콕스가 말했던 세가지 차원의 고민 즉 세계질서, 국가(국가-사회의 복합체로서), 사회세력 모두를 담아내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론자는 사실상 분단체제론과 ‘비평화 구조’라는 개념이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즉 분단체제로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비평화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며, ‘비평화 구조’라는 개념은 분단체제론과 비교할 때 어떤 유용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 분단체제론과 ‘비평화 구조’라는 개념이 서로 차원의 것인지, 아니면 분단체제론의 문제의식을 좀 더 이론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II. 물질적 능력, 이념, 제도에 대한 질문들

저자는 한반도 ‘비평화’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콕스가 제시한 세가지 범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물질적 능력에서 경제문제를 분석한 부분은 대체로 한중일과 북한의 경제력 및 교역관계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경제구조, 특히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조성된 국제 경제구조에 대한 설명은 너무 소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체제론자들은 핵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라는 틀 속에서 나름대로 세계경제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역사 구조’라는 차원에서 ‘물질적 능력’을 설명하려면 단순한 국력이나 교역관계가 아닌 이러한 국제경제에 대한 어떤 구조적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는 향후 세계 자본주의체제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계속해서 비약적으로 증대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그러할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현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패권 국가 미국이 동아시아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이며, 한반도의 분단은 여기에 어떠한 작용을 할지가 의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또한 한반도의 비평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전체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반도의 비평화 상태가 정전체제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실상 제도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전협정과 정전체제는 이미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전협정 조항 중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은 군사분계선 정도입니다.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기능을 발휘하던 때에도 푸에블로 사건(1968), 판문점도끼살해사건(1976) 등에서 나타나듯 정전체제의 기구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는 어떤 제도적 기반, 즉 정전협정과 그 기구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양측의 전쟁 억지력에 의존해왔다고 평가합니다. 한반도에서 ‘비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제도는 정전체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남북 양측의 군사력과 이를 밑받침하는 남북한과 강대국 사이의 비대칭적 동맹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 Ⅲ. 한반도 ‘비평화’ 구조를 “자기 재생산 매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한반도 분단이 장기지속되는 원인을 어떤 체제로 설명하든(분단체제론), 또는 비평화 구조로 설명하던지 간에 일단 과연 한반도 분단상황이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재생산 매커니즘” 같은 차원의 체제와 구조로 설명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 분단상태가 장기지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상황을 유지시키는 “지속성을 띠고 자기 재생산 매커니즘을 내장한”(12쪽) 어떤 체제 또는 구조가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한반도 분단상황을 유지하는 역관계가 어떤 일정한 상황을 항상적으로 재생산하는 매커니즘(체제, 구조)으로부터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매커니즘 자체가 없거나 이것이 제대로 형성되고 기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자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논문에서 말하는 ‘비평화’ 상태도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한 상태가 항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부조화’하고, 끊임없이 다양한 분쟁과 위기를 만들어내며 변덕스럽게 요동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한반도의 분단상황이 전쟁의 문턱을 연상시키는 위기국면과 다소 평온한 적대적 대치국면을 끊임없이 불규칙하게 순환하는 변덕스럽고 유동적인 혼돈 상태를 보이고 있듯이 말입니다. 물론 혼돈(chaos) 상태도 여기에 적합한 틀을 갖고 설명하면 일정한 패턴과 구조를 추출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구조와 체제는 “재생산 매커니즘”과는 최소한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비평화 구조는 어떤 일정한 상황을 항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재생산 매커니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매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것을 훼방하는, 끊임없이 변덕스럽고 유동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스포일러(spoiler) 장치로 설명하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깝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재생산 매커니즘”은 일단 한번 확립되면 다른 “재생산 매커니즘”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스포일러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매커니즘은 그 안에 재생산과 스포일러 기능이 함께 내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화’ 상태가 “부조화, 폭발 직전의 갈등, 혹은 전쟁의 징조를 보이는 상태”이지만 또한 전쟁은 아닌, 그러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극히 유동적인 상태라면 그것을 창출하는 매커니즘은 재생산 기능보다는 스포일러 기능이 압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비평화’ 상태는 재생산 매커니즘과는 다른 차원의 독특한 구조와 체제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문>

## 분단국체제와 분단효과: 남북관계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향 분석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 I. 분단국체제론에 대한 논의

김병로 교수의 글은 분단국체제론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분단체제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던 남북관계를 분단효과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존 분단체제론이 남한의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경향을 극복
- 분단체제론이나 분단효과 등을 이론적 차원으로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단체제론과 분단국체제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증성이 부족함.

- 분단국체제론이 분단체제론과의 차이점을 국가적 성격의 천착여부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 여부라고 하고 있는 바, 이것의 차이가 이론적인 차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보충될 필요
-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이 분단체제의 비대칭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분단체제론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 필요

분단체제론이 남북한의 체제내 변화에 분단이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분단체제를 독립된 체제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가능한 바, 분단국체제론도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대립과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일정한 관계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체제로 인정하는데 충분한 근거인가에 대해서는 비판 가능
-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속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 상호의존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범위가 전체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가능(경우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캐나다 혹은 멕시코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고 지속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체제로 보는 것은 무리)
- 김병로 교수가 통일·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목적론적인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는 느낌
- 하나의 체제안에서 분석하는 것과 연관된 체제로 인식하는 것의 차이 고려할 필요

분단국체제론이 분단체제론과 달리 남북관계의 성격 변화를 중시한다고 하였는 바, 관계를 바탕으로 출발한 논의가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 동어반복이라고 할 수 있음.

- 분단 혹은 분단국 문제 자체가 관계의 문제를 내포

## II. 개별 토론

### 1. 분단효과의 문제

남북한체제의 변화과정에서 분단효과가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분단효과가 핵심적인 요인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당한 논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분단효과가 독립변수인가 혹은 매개변수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 남한의 민주화 혹은 북한의 유일지배체제의 성립도 민주화로 볼 수 있는가?
- 북한의 외자도입정책이 북한의 처한 대내외적인 조건의 결과인지 남한 정책의 차용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분단효과가 미치는 영향력이 체제내의 하위부분과 국가간에서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가도 논의의 여지가 있음.

- 예를 들어 정치 특히 이념적 분야에서는 분단효과가 더욱 클 수 있지만 경제적 성장이나 발전전략의 결정에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을 가능성

분단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의 사회체제(이념체제 포함)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인용하고 있는 김학성의 그림의 경우도 시민사회나 기업이 존재하는 남한과 그렇지 못한 북한의 차별성이 무시되는 경향

분단효과를 분단비용 및 편익과 견주어 개념적 유용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비용이나 편익과 분단효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

분단효과의 작용방식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바, 현재 언급하고 있는 다섯가지는 상호작용의 유형화로는 적절하지만 분단효과의 작용방식으로 보기는 쉽지 않음.

- 작용효과와 다음에 나오는 각각의 효과들과의 관계도 불투명

분단국체제의 변화, 분단효과의 변화, 분단효과의 반감, 분단효과의 집약과 분산 등 핵심적인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결론 부분에서 분단효과가 반감되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확장될 여지를 강조

### 2. 탈냉전과 시기구분

분단효과의 질적 전환의 계기로 탈냉전으로 두고 있으나 이 경우 분단국체제의 국제적 조건의 규정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필자는 탈냉전시기에 남북한의 국가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갖는가가 불명확함.

- 비대칭성의 증대와 국가성의 강화가 같은 뜻인가?

남북관계의 변화가 탈냉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더라도 이에 못지않게 남북한 국력격차의 확대 특히 남한의 민주화의 성취와 경제성장의 달성으로 대북정책의 변화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논문의 일부분에서는 접촉과 교류의 증대가 분단국체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탈냉전을 전환의 변수로 삼을 경우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및 분단효과의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려움.

-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분단효과의 차별성 여부

분단국체제의 발전에 대한 논의를 생각한다면 분단국체제가 질적 전환을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분단이후 역사적 발전단계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것이 냉전/탈냉전의 질적 전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불명확함.

- 대칭성과 비대칭성의 경우 분단국체제의 변화인지 아니면 분단효과의 차이인지를 규명할 필요

### 3. 기타

분단국체제론에서 이야기하는 전제는 남북한이 각각 발전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남북한의 국가(행위자로서)가 발전국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이 지향하는 것이 발전국가인지에 대한 비판 가능

4장의 제목은 분단국체제의 발전과정과 분단효과 사례라고 하고 있는 바, 발전과정과 효과부분을 분리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음.

- 발전과정은 일정시기에서 멈춘 경향
- 분단효과의 경우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단순 나열된 경향

필자는 다양한 행위주체 가운데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특히 남한의 경우 국가 - 시민사회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분단효과의 경우도 국가이외 부분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필자도 시민사회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경우 행위자로서 국가에 집중하겠다는 논지와 상충
- 분단의 사회적 효과를 언급하는 것과 행위주체로서 국가 중심 분석과의 관계 해명 필요

<토론문> 별도 인쇄물로 제공

## 디터 쟁하스의 평화이론: '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

정태욱(인하대학교)



## 세션 2 » 분단의 집합 심성

• 사회 정근식(서울대학교)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 일상화된 내전과 냉전, 식민주의 지속으로서 분단의 폭력성

김동춘(성공회대학교)

국가폭력과 분단, 그리고 민중의 집단적 한

한국문학에 나타난 전쟁 기억의 양상

유임하(한국체육대학교)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의 사회자본의 변형

정은미(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 • 토론

정태헌(고려대학교)

고인환(경희대학교)

김귀옥(한성대학교)



#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 일상화된 내전과 냉전, 식민주의 지속으로서 분단의 폭력성 -

김동춘(성공회대학교)

“하나님의 은총이 이 불행한 민족역사에 쏟아져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는 셋별같은 청년들이 이 더러운 분단의 비극 때문에 법정에 서서 청춘을 시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없이 기원하겠습니다”( 김지하 최후진술, 1976.12.23)

## I. 머리말

모든 국가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언제나 의식하여 군대, 경찰 등 국가기구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합법적 폭력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폭력기구는 국가가 내외부의 위기에 처했을 때 행사되는 것이 보통이며, 통상적으로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에 발생했을 때 국가는 폭력체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국가 조직이 군대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힌체(Hintz)의 지적도 있지만, 국가성(stateness)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도 바로 국가가 폭력기구를 대규모로 전면적으로 동원하는 상황 즉 전쟁상황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바로 휴전, 즉 전면적은 중단되었으나 언제나 전쟁으로 돌입할 수 있는 만성적인 군사대결 상황이었다.

남북한의 분단은 과거의 베트남, 독일, 예멘 등의 분단과 마찬가지로 지구적 냉전이 내재화된 것이지만, 한반도의 경우 1945년부터 53년까지 사실상의 내전, 준내전을 겪은 후 휴전상태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일상화 제도화된 내전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계엄이 전쟁상태의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는 법적인 장치라면,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경찰의 사법적 기능 강화와 비대화, 사회의 병영화, 갈등의 폭력적 진압은 적과의 일상적 대치상태에 있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방법이자 장치다.

헤라클리투스(Heraclitus)는 "전쟁은 모든 것의 아버지요 왕이다. 그것은 어떤 부류는 신(gods)이고 다른 부류는 사람들(men)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어떤 측은 주인으로 만들고 다른 측은 노예로 만든다"라고 말한 바 있고,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가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전쟁은 단지 외부의 적과의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는 특정 정치공동체 내의 모든 정치사회적 현상, 특히 정치적 지배질서를 좌우하는 최고의 외적 조건이자 내생적 과정 그 자체인 셈이다. 특히 서구가 주도한 근대화 과정에서 전쟁은 국가를 만들어 내고 동시에 민족(nation)과 시민(citizen)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과정에서 만들어진 국가, 민족, 시민은 현대 주권국가의 토대를 이루고, 전쟁 후의 정치권력과 사회관계는 전쟁의 흔적을 내장하고 있다. 시민의 창출은 곧 비시민 즉 적과 적 근처의 변경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적 혹은 변경인들에 대한 배배와 무한대의 폭력 행사는 바로 전쟁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1948년 이후 북한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 분단국가 한국은 기본적으로 병영국가(garrison state), 안보국가(National Security State), 방공국가(Anticommunist state)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한국은 6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나 한국을 모델로 하여 설정된 개념인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양상을 지니기 이전에 이미 안보국가였으며 발전국가는 곧 안보국가의 동원과 통제의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그리하여 북한과의 전쟁 수행, 안보를 위한 동원과 통제는 경제 성장을 위한 동원과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노조활동, 노동쟁의에 대한 억압과 폭력 행사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이 글에서는 휴전, 즉 내전의 잠정적 중단 상태가 남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타자 즉 스파이나 내부의 반대자나 저항세력까지 이 '타자'의 범주에 집어넣은 다음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고 한다.

## II. 국가폭력 및 폭력의 대상

폭력은 타인의 육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며, 결국 타인을 죽이거나 육체적 정신적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다. 폭력은 당사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이웃,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국가 혹은 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은 가장 극단적인 권력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당사자만 복종시키려 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회를 복종시키려는 의도를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폭력이라 하면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폭력의 개념은 좀 더 넓게 정의되어야 한다. 갈통(Galtung)은 폭력에는 직접적 (가시적) 폭력과 구조적 문화적 (비가시적) 폭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 문화적 폭력 아래에서 자행, 정당화, 동기부여되기도 하고 직접적 폭력이 후자를 강화하기도 한다. 직접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 즉 학살, 고문, 린치나 구타, 강제수용소나 감옥 유희, 거주이전 제한, 사법절차를 거친 사형, 극히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어 병이나 다른 요인으로 죽게 만드는 일 등이 포함된다. 구조적 문화적 폭력은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 연좌제 등을 통한 공식적 사회적 배제와 차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인한 취업기회 제한, 각종 낙인찍기 등이 있다. 이러한 폭력이 국가의 정책, 국가기관의 동원, 제도와 법, 이데올로기에 의해 저질러질 때 우리는 국가폭력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에게 가한 폭력, 즉 자해나 자살도 사실상 국가폭력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군대 내에서의 구타 등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물리적 폭력에 속하지만, 군대의 가혹한 명령체계, 조직문화, 가혹행위, 집단 따돌리기 등으로 인해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국가폭력에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로 만들어, 이들이 아무런 직업을 얻을 수도 없어서 경제적 빈궁과 소외로 고통 받게 만들고, 결국 자살로 몰아간다면 그것도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직접 폭력행사의 주체는 주로 군대와 경찰, 양 조직 내의 사찰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전쟁이나 전쟁이 중단된 시기에 주로 폭력을 지휘 명령한다. 여기에 민간 사찰기관 즉 중앙정보부(국정

원) 같은 조직이 포함된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은 물론 구조적 문화적 폭력은 다른 정부 기관에 의해 자행된다. 행정부, 사법부도 폭력의 대행자가 될 수 있다. 조작한 간첩,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거나 유죄판정을 하는 것은 총과 칼을 사용하지 않는 폭력이다. 잘못이 없는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찍거나 매도하여, 정치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공민권을 박탈하는 행정기관, 학교, 기업, 사회조직, 그러한 폭력을 부추기거나 정당화하고 폭력 피해자의 항변이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선전대가 되는 언론도 일종의 폭력 행사 기관이다.

국가폭력의 대상자는 우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으로 분류된 사람, 그리고 ‘적’에게 동조한 사람, ‘적’의 의심을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변경인들 즉 ‘시민’의 범주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한에서 국가폭력의 표적과 대상이 된 사람을 범주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적

---

간첩, 남한 내 이적행위자 ( 반체제 활동가)  
권력자의 중요한 정적 ( 조봉암, 김대중 등)  
민주화 운동가

## 비시민 혹은 준시민 (변경인들)

---

피학살자 유가족  
월북자 유가족  
이산가족  
재일교포 ( 조총련계)  
남북어부  
북파공작원

## 사회집단

---

폭력배, 부랑자  
노조활동가, 철거반대 활동가

국가가 이들에게 행사한 폭력이 모두가 전쟁, 남북한 분단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나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폭력과 분단에 의한 폭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단의 성격을 재정의하고, 분단에 의한 폭력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해 내고자 한다.

### Ⅲ. 지배체제로서 한반도 분단

#### 1. 지구적 냉전의 내재화로서 분단

냉전(Cold War)이라는 개념은 국제정치, 역사학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좌. 우 간의 국제적인 대립, 미. 소 간의 항구적인 전쟁준비 군비경쟁 상태, 핵개발을 통한 상호대립, 혹은 열전(熱戰)의 반대말로 공식화되어 있지만, 냉전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에 속한 각 나라의 국내 지배질서를 개념화하는 용어로서 사용될 수 있다. 냉전 하의 패권국가인 소련과 미국은 상대방과의 전쟁을 제도화 일상화한 반공국가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들 패권국가 아닌 냉전의 최전선 국가, 서유럽과 인접했던 동구 여러나라, 그리고 중국 북한과 맞대면한 대만, 남한에서도 냉전질서는 전 사회로 확산되었다. 즉 기든스(Giddens)가 말하는 냉전 하 지구정치 하에서 특정 국가가 처한 위치, 적과의 대치전선에서 위치 즉 지구정치 내에서의 국가의 위상과 위치, 특히 전선에의 근접성은 각 국가의 지배질서와 사회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제2차 대전 전후의 미국과 한국이 견지했던 반공주의는 바로 외부의 적인 사회주의 진영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 내부의 반정부세력이나 체제비판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여 이들과 전쟁을 벌였다.

동아시아에 냉전체제 수립이후 미군이 항구적으로 주둔하고, 전시와 평화 시기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전쟁 모델이 정치 사회 영역으로 침투하게 되면서 각 나라의 법, 정치, 규율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만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 있었다(Kuan-Hsing Chen, 2010). 냉전 체제 아래 자본주의 진영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그 하위 파트너인 일본과도 달리 대만과 한국은 만성적인 계엄(대만)과 일당독재, 두 차례의 학살(4.19와 5.18) 국가보안법, 반공법, 군사주의(한국)가 지속되었다.

자본주의 진영의 냉전, 반공주의는 친자본주의, 반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지칭하지만, 1945년 이전의 파시즘, 반유대주의의 계승자로서 ‘반혁명’을 내용으로 한다. 남한에서 ‘전쟁 모델에 입각한 지배’는 나치 하의 독일이나 같은 시기 일본의 파시즘에서 원래 나타났던 것들이다. 그러나 냉전은 과거 파시즘적 지배를 완화된 형태로 지속시키는 조건이 되었다. 물론 미.소 대결 전선의 변방에 있었던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여러나라도 국내 저항세력 진압을 명문으로 국가안보를 중요한 국가목표로 내세워 군부가 계속 집권하였다. 민주화 운동, 조직 노동도 군부의 최대의 표적이 되었다.

남북한의 분단은 바로 지구적 냉전이 국지적으로 연장, 반복, 강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국제정치의 압력에 의해 분단이 강요되었던 독일의 경우 냉전의 해소와 함께 분단이 자동적으로 극복되었으나, 냉전체제 수립 이전부터 내부의 갈등과 전쟁이 있었던 한국의 경우는 냉전의 해소가 분단의 해소로 직결되지 않았다.

## 2. 일상화, 제도화된 내전으로서 분단

냉전 이후 세계의 모든 분단국가가 서로 간에 적대관계에 있지는 않았다. 독일의 분단은 두 개의 국가, 더 나아가 두 개의 민족이라는 상호인식 위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북한의 경우 내전을 거친 다음에도 또 다시 휴전상태에 돌입하여 사실상의 전쟁이 지속된 상태였다. 휴전 상태에 놓인 남북한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영토는 ‘수복’되어야 할 빼앗긴 지역으로 간주되었으며, 상대방의 주민은 ‘귀순’되어야 할 존재였다. 적과 나는 일차적으로는 휴전선(DMZ)에 의해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지만, 전쟁 상태에서는 국가 내부에도 적이 있을 수 있었다.

즉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분단 상태에서 내부의 모든 주민을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간주할 수는 없었다. 우선 남북에 흩어진 가족, 친척은 정치적 분단을 넘나들면서 가족 유대를 지속할 개연성이 있고, 구성원 중에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보다는 다른 편의 국가에 대해 이념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친화력을 느낄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의견 타의견 상대방 체제를 경험해서 그것에 매력을 느꼈거나, 상대방 국가의 교육과 선전에 노출된 사람은 ‘충성’을 철회했을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간첩, 즉 스파이는 전쟁국가, 방공국가, 파시즘에서 전형적으로 부각되고 또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일제 말의 총독부의 전시동원 체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분단 하의 간첩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 월남 월북 등의 이유로 적국인 북한에 일부 가족 구성원을 둔 이산가족은 간첩으로 침투한 사람과 가장 손쉽게 접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연제나 의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북한을 ‘조국’으로 인정하고 자진 북한으로 간 사람이 있는 가족은 모두가 ‘적’과 내통할 위험이 있는 잠재적 적으로 간주된다.

즉 분단 하에서 가족과 국가가 모순적으로 교차한다. 전쟁 중의 분단 국가는 가족간 혈육의 정을 끊고서라도 국가에 충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가족 간의 정에 이끌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 이들은 위험한 존재다. 결국 분단 하에서 간첩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만들어진다. 가족간첩이 바로 분단 하 간첩의 특징이다.

## 3. 식민주의의 지속으로서 분단

식민주의는 특수한 정치적 지배관계다. 이 지배관계는 전근대적 신분적 억압과 차별, 그리고 폭력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식민주의의 정치체제는 피식민지 주민의 시민권 보장, 정치참여 등 민주적 원칙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 식민주의 모국 지배자와 피식민지 주민 간의 관계를 전근대적 지배/비지배의 관계에 놓이게 만든다. 식민주의는 법 보다는 폭력을 우선시 하는 지배체제다. 일제의 식민주의는 헌병경찰제도에서 집약된 것처럼 그 자체로 폭력성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특히 중일전쟁 전시체제 하의 일본 식민주의는 방공, 반공주의 지배질서를 내부화하였다. 이것은 온 주민의 동원, 사상적 순혈성과 단일성 강요, 강제적인 전쟁동원과 노동동원, 반대세력에 대한 보복적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식민주의 통제의 법적인 장치는 치안유지법(1927)과 국방보안법(1941)으로 집약된다. 그리

고 이 법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통제로서 예비검속, 사상범 보호관찰제, 보도구금제, 대화숙, 사상보국연맹 등의 조직작업이 진행되었다. 즉 일제 식민지는 법에 의거하지 않고 정치범을 구금하거나 통제하고, 유사시 이들을 처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해방 후 이러한 식민주의 법제는 폐지되었으나, 1946년 대구 10.1 사건 직후 좌우대립의 격화로 다시 부활하였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일제시기의 예비검속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사상보국연맹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국민보도연맹이 일제시기 보다 더욱 광범위한 단위로 조직되었으며, 사상적 단일성에 대한 폭력적인 강요는 한국전쟁으로 완벽하게 부활하였다. 출옥한 사상범을 영구적으로 구금, 사찰할 수 있는 보호관찰제도는 이후 박정희의 유신체제 하에서 부활되었다.

일제시기 식민주의의 주요 기둥이던 법과 제도가 남한에서 부활된 것은 남한이 일제 말의 총독부 체제처럼 방공국가의 성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방공, 방첩’ 등의 일제 말의 전시 구호는 곧 남한의 국민동원과 통제를 위한 공식 구호가 되었다.

그래서 사상적 단일성을 요구하는 일제 식민지체제처럼 분단 지배질서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일사분란한 충성을 요구하였고, 그것을 거역하면 적으로 취급되었다. 법의 이름을 빈 폭력과 법을 무시한 폭력이 만성적으로 자행되었다.

#### IV. 분단구조 하의 국가폭력의 양상

##### 1. 직접 폭력

###### 1) ‘간첩 만들기’, 간첩 구속, 처벌, 살해

분단은 월북자 월남자 가족 즉 이산가족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휴전, 냉전, 군사대결체제로서의 분단은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변화시킨다. 즉 가족 유대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가족 유대를 국가의 이데올로기 고 재단을 하게 된다. 여기서 북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은 일단 의심과 사찰의 대상이 되고, 북에 올라간 가족이 자의의 월북일 경우, 남의 남은 가족도 같은 부류로 취급된다. 이산가족의 법적인 정의는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으로 중립적인 존재이지만, 휴전 냉전체제 하에서 이산가족은 ‘납치된 자’로서 국한되고, 오직 ‘납치된 자’만이 국가의 관심과 보호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남은 가족들까지도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납치된 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월북자, 한국전쟁기 의용군 입대자, 미송환 포로 등의 가족들은 공식적으로 법적인 사망자나 ‘행불자’로 간주하였다.<sup>1)</sup>

1960년대 이후 간첩사건의 상당부분은 바로 이산가족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전쟁 전후 월북을 했거나 의용군 입대 등으로 북에 거주하던 가족 중 한 사람이 간첩으로 월남하여 가족을 만

1) 김귀옥, “남북 이산가족의 현실과 통일의 미래”, [분단과 전쟁의 결과- 한국과 독일의 비교], 2007.10.19-20, 역사문제연구소. 포츠담 현대사연구소.

난 일이 빌미가 되어 가족 여러 명이 간첩으로 체포되거나 불고지죄로 체포된 일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남북 어부 중에서 남으로 되돌아와서 간첩으로 체포된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문을 당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존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분단은 재일교포들을 이중, 3중의 이산가족으로 만들었다. 재일동포 중 일본에서 월북을 한 경력이 있거나, 가족 중 일부가 일본에서 북으로 간 경우, 이들은 남한에 방문해도 감시의 대상이 된다. 재일조선인은 일제 식민지가 만들어냈고 이들을 귀환하지 못하게 하고 시민권을 박탈한 주체는 일본이지만, 이들을 국가의 이중적 변경인으로 만든 것은 분단이였다. 즉 재일동포들은 남북한의 분단과 적대에 의해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변경인이 되었으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잠재적 간첩’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한일국교정상화가 된 1966년 이후 재일 조선인 학생들이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모국수학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1968년에 서울대에서 재외국민연구소가 문을 열어 매년 1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정원 외 입학할 허용받게 되었다.

국방부 과거사위의 조사에 의하면 70-80년대 간첩사건은 966건(보안사 수사가 한 사건은 234건) 그 중 재일동포 일본관련 간첩사건은 319건이고 그 중 80년대 발생한 사건은 285건이다.<sup>2)</sup> 일본은 공산당, 사회당 등이 합법화되어 있고 공산주의 문헌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곳. 각자의 소속과 상관없이 형제 부모 친척 친구사이에 왕래가 있다. 70년대는 한국독재정권을 비위하고 북한에 동정적인 분위기도 있었으며, “지각있는 고등학생으로 마르크스주의 책을 안 읽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sup>3)</sup>이었다고 할 정도로 남한에 비해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가족 내에서도 조총련과 민간이 섞여 있었다. 일부 재일동포가 북송을 하게 되면서 북을 갔다 온 사람도 많았다. 재일동포의 98%가 남한 출신이지만, 그 반수는 총련계에 속했다.<sup>4)</sup> 그런데 결국 부모 형제 친지를 만나는 것이 국가보안법, 반공법 상의 회합 통신죄가 되고 주고 받은 여비가 금품수수죄 대화한 내용이나 전달한 일간신문이 간첩활동이 된다. 공안당국은 평소에 공부에 열중치 않고 테모를 선동하고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한다.

진보당 조봉암 사형, 민족일보 조용수 사형 역시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법적 근거나 절차, 간첩 사실을 입증할 증거 제시 등이 모두 부실한 상태에서 집행된 사실상은 국가 살해였다고 볼 수 있다.

## 2) ‘이적’ 행위자, 혹은 내부의 적에 대한 고문, 살해, 유폐

반체제 활동가들에 대한 테러, 고문, 실종사망 사건 등은 흔히 과시즘과 군사독재 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북한을 지지, 동조한 사실이 있거나 실제로 유학 중 북한에 갔다 온 경력이 있거나, 더 넓게는 남한 자체를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사람

2)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의혹사건 조사보고서,

3)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들... 모국 사랑한 죄 밖에 없어- 재일동포 간첩사건 김정사씨 인터뷰”, [한겨레], 2011.6.13

4) 전명혁, “197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국가보안법 사건 연구-11.22 사건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 21호, 2011.12

모두가 그 표적이 된다.

60년대 이후 각종 간첩사건,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 유럽거점 간첩사건( 동베를린 사건) 70년대의 ‘인혁당’ 사건, 70년대 이후 남북어부 ‘간첩사건’, 기타 각종 조작된 간첩사건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인혁당 관련자), 고문을 받던 중 사망( 최종길 교수), 70년대 이후 92년까지 발생한 80건이 넘는 각종 의문사 사건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들 ‘이적행위자’들은 대체로 단순 반정부인사, 통일운동 인사, 일제 시기나 해방 후 과거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활동 경력이 있던 사람, 유럽에 유학하거나 활동하던 사람들이 주요 대상인데 이들은 분단 하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정치적 ‘변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즉 잠재적으로 국가의 사찰과 의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었는데, 정치적 의도 하에 간첩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 3) 전향 공작, 장기간 감옥 유폐

1973년 전후 사상범이 수용되었던 감옥은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지 않았다. 일종의 ‘빨치산 잔당 소탕 작전’이 감옥에서 재기되었는데 그것이 살인적인 전향공작이었다. 군사정권 하의 감옥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이지만, 70년대 사상범 수감 감옥은 그 자체가 무한대의 폭력이 마주잡이로 행사될 수 있는 법 외의 공간이었다. 감옥에 들어와 수십년의 형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한 행복을 요구받으면서 매일 구타와 폭력을 당했다. 깡패들이 곤봉, 수정, 로프 등을 갖고서 방에 들어와 이들을 마구 잡이로 때렸다. 훌쩍벗겨 놓고 몽둥이로 때거나, 대꼬챙이로 손가락 끝을 쭈시거나, 창문 열어놓고 팬티만 입히고 꿇어앉아 있는 ‘동태고문’을 비롯한 온갖 고문이 가해졌다.<sup>5)</sup>

이들은 확신범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기 어려운 존재들이었다. 박정권은 이들의 행복을 받기 위해서 이미 감옥에 갇혀 있을뿐더러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러한 잔인한 폭력을 가했다. 즉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배척되고 사회적으로 잊혀진 존재이며, 공간적으로 격리된 곳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는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들에게 무한대의 폭력이 가해진 것이다. 20세기 한반도에서 그리고 이 시기 전 세계 통틀어서도 노골적 학살을 제외하고는 권력의 잔혹성이 이 보다 더 심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 굴복시킬 수 없는 이들의 존재적 특징과 정치, 사회, 물리적 격리가 이들에 대해 무한대의 폭력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출옥한 이후에도 사회안전법의 족쇄에 걸려 또다시 20년 이상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1990년 2월 11일 출옥한 남아공화국의 만델라는 감옥에서 27년 동안 유폐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김선명씨는 51년 유엔군에 포로로 잡힌 후 무려 4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세계 최장기 수였다. 만델라 보다 무려 16년 동안 더 긴 기간 감옥에 있었다. 40년 이상 감옥에서 산 장기수들도 7명이 넘는다. 분단에 의한 국가폭력의 상징적 사건이 바로 장기수의 존재, 장기수에 대

5) 김진환, “빨치산 또 하나의 전쟁”,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161

한 살인적 전향공작이었다.

## 2. 구조적 폭력

### 1) 연좌제

본인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도 책임의 조건도 없이 죄를 입는 것(좌)이 연좌제다.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 연대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전통사회에서 특별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자인 정범과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은 형사상의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緣좌제와 인민을 인오로 묶어 인오 내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의무를 지게 하여 의무를 위반한 때에 인오에게 형을 가하는 연좌제가 있는데,<sup>6)</sup> 공식적으로는 갑오개혁에 폐되었으나 일제 식민지 하에서 사실상 부활하였고, 해방후에 그대로 지속되었다.

주로 월북자, 한국전쟁 전후 좌익 활동가의 가족, 한국전쟁기 피살자의 가족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 피학살자의 가족들은 가장 대표적인 연좌제 피해자들이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80년대까지, 실질적으로는 90년대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국가로부터 각종 구조적 폭력에 시달려왔다. 이들의 피해 양상은 다음과 같다.

국민보도연맹사건 유가족의 연좌제피해 사례

연좌제 피해유형	301(명)	100(%)
공무원 임용시험	38	13
사관학교 등 각종 입학시험	35	12
국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직또는 승진	20	7
군경찰에서 승진등에 불이익 처분	24	8
국내외 여행 및 출입국좌절	43	14
일상생활에서 감시	50	17
각종 신원조회	91	30

(진실화해위원회 내부 조사자료)

이러한 구조적 문화적 폭력은 이들을 자살로 몰아가기도 했고, 정신적 고통, 극심한 가난, 병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 2)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 혹은 자살

한국전쟁 발발 직후 총동원의 성격을 갖는 징집은 사실상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징집이야 분명히 식민지 권력이 강제한 ‘총알받이’ 모집이었지만,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의 징집은 분명히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의 ‘시민권 부여’의 측면을 갖고 있었다.

6) 윤재수, 연좌와 연좌제, 석당논총, 제3집, 1983, pp89-105

그전까지 머슴이나 종이었던 농민들이 국민국가의 군인이 되어 비로소 신분해방을 맞본 것도 사실이였다. 그러나 당시의 농민들에게 일제 식민지 시기의 징용, 징병은 폭력적이었고,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의 징집이나 입대가 자발성에 기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전선이 교착되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징집이나 노무동원은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실종, 불구, 사망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로부터 어떤 위로나 보상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전쟁 시기부터 군대는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국가가 법에 의거하여 청년들을 징집한 다음, 중공군의 남침으로 인해 급히 수십만명의 군인을 수용시설, 식량과 피복, 의료시설을 마련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남쪽으로 이동시키다가 이들 상당수를 사망케 한 국민방위군 사건부터 드러났듯이 한국의 군인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군대서 맞아 죽어도 어디 항의할 데도 없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sup>7)</sup> 적어도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한국의 군대는 인권의 사각지대였다.

대략 1950년 이후 2005년까지 약 6 만여명의 군 입대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였으며 그 중 1만 2천여명의 군인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이승만 정권기는 1년에서 1,500명에서 2,500명 정도, 박정권 시기는 평균 1,3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죽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평균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죽었다. 군 피해자들. 군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장병은 연간 1천여명이다. 2001년 1천 57명이었다. 2002년 915명이었다.<sup>9)</sup> 가족에서는 집은 이끌어 가야 할 아들들 6만명이 전투상황도 아닌 시기에 군에 가서 목숨을 잃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살자 중 정말 자살한 것인지, 타살을 자살로 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군은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한 타살의혹이 현저해도 외부의 접근은 차단한 채 자살로 종결처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백히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자살하게 된 이유가 군 복무와 연관성이 깊다고 할 때, 그것은 구조적 폭력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국 군내 내의 구타, 열차려, 언어 폭력은 군인을 비인간화시키는 대표적인 관행이다.

실제 군내 자살자는 동년배 자살자의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 폭력에 의한 자살이라고 봐야 한다.<sup>10)</sup>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군인의 자살은 ‘안보 재해’로 봐야한다는 시각까지 등장하였다. 징병제의 강제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입대한 군인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실제로 이들은 거의 소모품 취급당하며, 결국 구타, 인격모독 등 부당한 대우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게 된다.<sup>11)</sup> 식민지적 폭력이 가장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조직이 군대다. 만약 한국에서 남북한 대치상황이 완화되어 대량의 군대 유지가 불필요해졌다면, 그리고 군대가 더욱 민주적이고 인간적이었다면 이러한 사고사나 자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가 훨씬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환경을

7) 박정석, “상이군인과 유가족의 전쟁 경험”, 표인주 외, 175 쪽

8) 김호철, “군 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본 자살처리자 문제현황” 대통령소속군의문사위원회, [군 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2006.11.28

9) 연합뉴스, 2003.9.18

10) 박종덕,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현황과 과제”, [과거사 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07.11.28

11) 2011년 육군 훈련소에서 목숨을 끊은 정모 훈련병은 중이염을 호소하며 외진을 요청하였으나 진료소 밖으로 쫓겨나고 소대장으로부터 귀 아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하지 마라는 욕설을 들은 뒤 자살을 했다. 연합뉴스, 2011.5.30

만들어낸 책임이 있고, 자살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재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이유로 강제징집이 이루어진 것은 전두환 정권 초기였다. 주로 학생운동 관련자들이었다. 1982년 9월부터 84년 11월 폐지시까지 보안사령부에서 교육대상자로 분류, 관리한 인원은 429명이었으며 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265명이라고 발표했으나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결과 실제 강제징집대상자는 1,152명이었고, 녹화사업을 실시한 사람은 정상입대자 등을 포함하여 1,192명이었다.<sup>12)</sup>

### 3) 북과공작원에 대한 폭력과 살해

북과공작원으로 알려진 육군첩보부대(HID) 요원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넘나 들었던 사람들이다. 한국정부는 이를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 그 존재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보사가 발표한 북과공작원 사망, 실종자 수는 7,726명이다. 이들은 대부분은 북한에서 체포되어 살해되었거나 남북을 오가다가 사망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살아 돌아온 사람도 있고, 실미도 사건처럼 훈련도중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기 못해 탈출했다가 전원 사살당한 경우도 있다. 서해 도서에서의 훈련이 너무나 가혹해 절벽을 만나면 다이빙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국가는 이들 사망자, 생존자 가족들에게 특별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는 군대면제, 전과기록 말소, 생계비 지급까지 약속했으나 돌아온 후 국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군기과자로 몰려 군복부까지 한 공작원도 있다.<sup>13)</sup> 애초부터 법적 근거없이 인간 병기로서 북과공작원을 양성해서 월북시켰기 때문에 국가는 철저히 이들을 이용하고 책임져주지 않았다. 이들은 소모품에 불과했다. 두 세 번 써먹고 가치가 없으면 버렸다고 한다. 심지어는 침투수송 중에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90 퍼센트는 북과 후 북에서 실종되었거나 사망했고, 돌아온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고 살아남은 사람도 부상이나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사실상 국가는 이들 전원을 소모품으로 사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심문규라는 북과공작원은 북한에서 역으로 포섭되었으나 남으로 돌아온 이후 곧바로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위장 자수하였고 그를 심문한 이후 사형시켰다. 당시 같은 시기에 북과된 사람들 중에서 남한에 내려와서 자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수사기관에 이들을 넘기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보입수, 간첩검거 등으로 활용한 다음 다시 북과를 시켰는데 이를 거절하는 경우 이들이 위장자수했다고 혐의를 씌운 다음 사형시키는 일이 4건이나 되었다.<sup>14)</sup> 즉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습득한 정보를 빼낸후 처리하였다(죽였다)고 한다.<sup>15)</sup> 사회에 나가면 국가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고, 북으로 보내면 다시 귀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북에서 사망했는데도 이중간첩이라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가족들을 계속 찾아오는 사례도 있었

12)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2007,139

13) 이규정,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31쪽

14) 진실화해위원회, “특수입무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2008 하반기 조사보고서, 04, 57쪽

15) 진실화해위원회, 앞의 글, 59쪽

다.16)

## 2. 사찰과 감시

1946년 경부터 일제시기의 경찰 조직이 부활되어 좌익인사에 대한 사찰이 시작되었고, 공식적으로는 1950년 한국 전쟁기에 주민 사찰, 감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실종자, 피학살자 가족, 월북자 가족, 재일교포, 월남자 등 국가의 변경인들이 그 대상이었다. 사찰과 감시는 경찰 사찰과(계), 군 방첩대(CIC)가 주로 담당하였고, 군사정권 수립 후에는 경찰, 군, 민간(중앙정부)의 세 조직이 각각 별도로 움직였다. 이들 조직은 도청과 감청, 사건 조작, 폭력과 고문, 협박, 부인 등 통상의 범죄조직이 저지라는 일들을 모두 저질렀다. 이들 기관의 활동은 모두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사찰활동은 계속되었다. 1990년 2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사찰카드를 만들어 민간인까지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1994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도 민간인 사찰카드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후 김영삼 정부는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보기관들도 사찰카드를 폐지하고 더 이상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경찰이 안기부의 지적으로 각계인사와 사회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인물자료와 단체자료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경찰전산망을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를 기무사, 안기부, 청와대 등에 설치해 주고 각종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정보기관은 법원의 영장없이 국정원의 자체 승인하에 감청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정원은 2003년 한해동안 무려 7,281건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회가 모두 대공사찰을 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활동은 분단체제 유지의 구조적 조건에서 일어났다.

## 3. 문화적 폭력

검찰과 언론, 정치권의 합작에 의해 주로 진행된다. 언론이 주로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친북 좌파 담론, 빨갱이 시비가 대표적이다. 87년 이후에는 특히 언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언론이 크게 보도하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검찰이 수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미리 단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보안법 등으로 기소를 하면 나중에 설사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런 시비에 걸린 사람들은 공민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직장을 잡지도 못하게 된다.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정신적 불구자가 되기도 한다.

(이하 문화적 폭력의 내용은 미완성)

---

16) 영천 정선득 구술녹취록, 영천지역조사팀 2009.2.12, 210쪽

## V. 결론

폭력은 권력행사의 한 방법이고, 국가폭력 행사의 강도와 빈도는 권력관계를 현상화한다. 폭력의 행사와 그것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상처는 대중의 저항 가능성, 대중들의 정치 참여나 사회참여를 제한하고, 시민사회에서 비판적 대안적 담론의 등장가능성은 물론 정치적 스펙트럼의 확대를 제한한다. 그래서 폭력은 폭력행사 시점의 권력관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오랫동안의 권력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폭력은 기성 지배질서의 유지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분단 아래에서의 국가폭력은 분단체제의 한 결과이자 현상이지만, 동시에 분단을 유지 강화시키는 도구이기도 하다.

과시즘 아래의 독일, 일본, 이탈리아, 남미나 스페인의 군사독재 하에서 국가 테러는 공공연히 발생했다. 모든 분단국가에서 이러한 국가 테러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단이 내전적인 방공국가의 성격을 지녔던 대만이나 남한에서는 이러한 공공연한 국가 테러가 자행되었다. 대만은 만성적 계엄이 남한은 국가보안법, 반공법이 이러한 국가테러를 정당화한 법제적 장치로 존재하였으며, 이들 국가가 냉전의 전선에 위치함으로써 반공주의는 이러한 국가 테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민족 분단은 가족분단을 야기하였다. 정치적 경계로서 분단은 가족의 강제적 이산을 수반하였고, 이산된 가족은 국가의 사찰, 감시의 표적이 되었다. 이산된 가족, 정치적 경계를 넘나들었던 경력을 가진 사람들, 그 경계가 생기기 이전에 민족해방,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 경계가 생기기 이전인 식민지 시기부터 일본에 거주했던 사람들(재일교포와 그 자손들)은 모두가 분단체제 변방에 선 경계인들이고, 이 경계인들은 종종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먹이감(간첩조작)의 희생양이 되었다.

결국 분단의 극복, 즉 통일은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분단 하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국가나 사회에 복귀시키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남북한 주민의 통일은 우선 남한 내에서 ‘적’, ‘2등 시민’으로 취급당했던 사람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일을 포함한다. 이것은 남한의 시민사회 일반을 활성화시키는 일과 같은 궤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이 식민주의의 연장이라면, 분단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대면하는 일은 곧 식민주의의 청산 문제와 같은 궤도에 있기도 하다. 갈통이 말한 적극적 평화는 남북통일에서 한번에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전 혹은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남한 사회 내의 폭력기구의 제거, 폭력을 정당화했던 법의 제거를 반드시 전체로 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2007.
-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의혹사건 조사보고서.
-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들... 모국 사랑한 죄 밖에 없어- 재일동포 간첩사건 김정사씨 인터뷰”, [한겨레], 2011.6.13.
- 김귀옥, “남북 이산가족의 현실과 통일의 미래”, [분단과 전쟁의 결과- 한국과 독일의 비교], 2007.10.19-20, 역사문제연구소. 포츠담 현대사연구소.
- 김호철, “군 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본 자살처리자 문제현황” 대통령소속군의문사위원회, [군 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2006.11.28.
- 김진환, “빨치산 또 하나의 전쟁”,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1.
- 박정석, “상이군인과 유가족의 전쟁 경험”, 표인주 외.
- 박종덕,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현황과 과제”, [과거사 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07.11.28.
- 이규정,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영천 정선특 구술녹취록, 영천지역조사팀 2009.2.12.
- 윤재수, 연좌와 연좌제, 석당논총, 제3집, 1983.
- 전명혁, “197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국가보안법 사건 연구-11.22 사건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 21호, 2011.12
- 진실화해위원회, “특수임무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2008 하반기 조사보고서, 04.

# 국가폭력과 분단, 그리고 민중의 집단적 한 한국문학에 나타난 전쟁 기억의 양상

유임하(한국체육대학교)

## I. 서론: 분단의 비평화적 구조와 ‘분단 시대의 문학’

이범선의 「오발탄」은 해방촌 월남민 가족을 통해 50년대 한국사회가 겪은 전쟁의 여파를 인상적으로 포착한 문제작의 하나이다. 작품에서 전쟁과 분단은 철호네 가족의 안락한 삶과 미래를 파괴한 재앙과도 현실이다. 작품에서 “가자 가자!” 하며 실성해버린 노모의 목소리는 고향과 과거로의 회귀가 차단된 분단의 상황에서는 돌아갈 수 없는 비극의 현실을 증폭시키는 주조음에 해당한다. 전쟁 전만 해도 분단이 과도적인 상황으로 여겨졌으나, 전쟁과 함께 고향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해졌다는 현실에 대한 절망 끝에 노모는 실성한다. 노모의 실성은 일상의 전면적 파탄과 소망하는 현실이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면서 생겨난 좌절의 다른 모습이다. 꿈 많던 성악가에서 난산 끝에 죽고마는 철호의 아내, 대학생에서 양공주로 전락하고만 여동생 명숙, 제대 후 권총강도가 되어버린 동생 영호의 전락 속에서 양심적인 삶을 살아온 소시민인 철호의 감각은 방향을 잃고 만다. 그는 자신의 삶이 “신의 오발탄”처럼 방향을 상실한 모습인데, 이는 택시 기사의 보조가 뱉어내는 발언으로 확정된다.

이범선의 「오발탄」처럼, 소설 장르의 서사 안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생성된 집단적 한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게 해방 이후 한국문학의 실상이다. 이를 두고 한 문학사가는 해방 이후의 문학을 ‘분단시대의 문학’이라 명명한 바 있다.<sup>1)</sup> ‘분단 시대의 문학’에서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테마로는 분단 해소를 위한 실천, 분단과 전쟁에 대한 문학적 맥락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한국문학은 분단과 전쟁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거나 발화할 수 없었다. 냉전시대에는 반공주의의 실정력 때문이 체험의 많은 부분이 의도적인 침묵 상태에 있거나 망각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분단 문제를 심도 있게 천착해온 여성작가의 한 사람인 박완서는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그때 오빠는 총상을 당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 아무런 백도 의지할 사람도 없이 그 상황을 겪을 때 힘이 되었던 것은, ‘내가 이것을

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언젠가는 글로 쓰리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나만 겪은 것 같은 일들, 남들은 다 남으로 갈 때 나는 북으로 가고, 남들 피난 갈 때 아무도 안 남은 무인도 같은 서울에서 텅 빈 도시를 지키면서 겪은 온갖 일들, 온갖 인간들, 운명의 장난 같은 요행과 불운, 그중에도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내 눈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밑에서 버리지처럼 기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껏 비굴해지고 아부해야 하는 상황,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어야 하는 순간에도 나에게 그 수모를 견디게 하고, 그래도 마음까지 밀바닥 버리지가 안 되고 최소한의 자존심이나마 지키게 한 것은, ‘그래 내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언젠가는 글로 쓰리라. 내가 지금 네 앞에서 별별 떨고 비굴하게 아부하고, 내가 원하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를 내 소설 속에서 벌거벗겨 진짜 악인으로 그려내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sup>2)</sup>

회고는 간략하지만, 분단문제와 관련된 체험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분단문제를 다루어 온 작가의 소설세계가 내장한 치열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십 대 초반 여성에게 밀어닥친 전쟁이라는 재앙은 총상 입은 오빠를 대신해서 가장을 소임을 떠맡게 만들었다. 그녀의 소임은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안위와 생존이 걸린 일이었다. 오빠는 사회적 선택에 실패하면서 남북체제의 폭력 속에 상처 입고 서서히 죽어간다. 치료해줄 수 없는 작가의 가족 또한 절망하며 자책한다. 인공 치하 서울에서 이들 가족의 고통이 이러하다면, 인민군과 좌익 인사들의 협박, 어제의 이웃들에게서 겪은 밀고와 감시 같은 몰인정한 사태... 등등은 전쟁 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회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벌레와 같은 생존’이란 표현이다.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야수성과 폭력을 감내해 가며 다지는 ‘최소한의 자존심’은 소설 속에 등장시켜 복수하겠다는 일념이다. 이때 소설은 허구의 세계이다. 하지만 그 세계는 인간의 존엄을 조롱하며 자신을 모멸의 밀바닥까지 전락시킨, 그래서 벌레와도 같다고 자조하게 만든 세계의 악을 고발하는 일이 가능한 상상의 공간이다. 이 세계야말로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인간다움을 지탱하도록 해주는 문학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할 만하다.

이 글은 ‘분단의 비평화적 구조에 대한 한국문학의 응전’을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단 해소를 위한 상생과 평화’라는 인문학적 성찰을 염두에 두면, 분단 문제를 놓고 성찰해온 한국문학의 궤적은 구조화된 비평화적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작가라는 사회적 개인들의 서사시적 모험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작가들은 비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끊임없이 폭력을 재생산하는 역사적 계기인 분단의 구조화된 비평화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인간다움과 그에 합당한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인간학적 소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임무는 인간다운 세상을 상상한다는 점에서 필경 정치와 관련을 맺는다. 이 글에서는 전쟁과 분단의 비평화적 구조가 만들어낸 국가폭력과 그로 인한 민중의 집단적 한을 문학에서는 어떻게 재현해 왔는지, 전쟁과 분단을 다룬 소설들을 사례로 삼아 살펴보기로 한다.

2) 박완서, 『박완서-문학의 뿌리를 말한다』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p.37.

## II. 냉전 시대와 전쟁 기억의 문학적 양상

전쟁이 한창이던 무렵, 한 시인은 전쟁의 상처를 이렇게 노래했다.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기력이같이  
서리 묻은 선달의 기력이같이  
하늘의 어름짱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평생을 울고 가려했더니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리어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밭들레나 쭉니풀 같은것들  
또 한번 고개숙여 보라함인가

황토언덕  
꽃 상여  
떼 과부의 무리들  
여기 서서 또 한번 더 바라보라 함인가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풀리는 한강 가에서」<sup>3)</sup>

시 속의 세상에는 온통 ‘슬픔’과 ‘서러움’으로 가득하다. 폐허에서 돌아나는 ‘밭들레(민들레)’나 ‘쭉니풀’이 그러하고, 황토 언덕 위로 지나가는 상여와 뒤따르는 과부들의 구슬픈 곡성(哭聲)도 그러하다. 시의 화자는 눈앞에 펼쳐진 전쟁으로 생채기난 풍경을 바라보며, 과부 여성의 심정으로 전란 속 사회 성원들의 슬픔을 대신 읊조린다. “서리 묻은 선달의 기러기”는 도저한 슬픔을 한평생 지고 가야 하는, 곧 전란 속에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유족들과 그들

3) 서정주, 『서정주시선』(정음사, 1955), 『미당 시전집·1』(민음사, 1994), 115-116쪽. 전쟁기에 창작된 서정주의 시편들은, 「무등을 보며」가 그러하듯이, 폐허가 되어버린 전후현실 속에 가난을 감내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자는 어조가 두드러진다.

의 트라우마를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화자는 폐허가 되어버린 삶의 터전에 쏟아져 내리는 햇빛과 유장한 강물을 지켜보며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라고 반문한다. 그의 반문은 엘리엇의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외쳤던 상황과 흡사하다. 엘리엇의 사월 정경처럼 폐허가 되어버린 터전에 무심하게 찾아든 봄이라는 자연 섭리를 향한 투정이기 때문이다. 그 투정은 ‘슬픔은 미처 가지지 않아 겨울처럼 황량한데, 왜 생명력으로 가득한 봄이 찾아왔는가’라는 원망의 다른 표현이다.

전후시의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6.25전쟁에 대한 당대 한국시의 특징적인 양상은 전쟁의 본질보다는 폐허가 되어버린 현실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에 경사되는 경향이 강했다. 50년대 소설 또한 전쟁의 비극적 여파에 대한 시적 대상화 그 이상으로 진전시키지 못한다. 주된 이유의 하나는 지속되는 전쟁의 긴박한 현실에서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일상으로부터, 넘쳐나는 비극의 일화들을 담아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 모습은 전시동원체제가 장악한 냉전 반공주의의 이념, 공산주의자와 좌익 불순분자에 대한 원망(resentment)과 적대감과는 크게 대조적이다.<sup>4)</sup>

근대 리얼리즘의 토대를 마련했던 『삼대』의 작가 염상섭은, 전쟁 직후 연재한 장편 『취우(驟雨)』에서 전쟁을 한바탕 쏟아지는 소나기에 비유했다. 그는 작품에서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진 서울을 배경으로 삼아, 약혼자를 둔 채 월남한 북한군 장교의 전처와 사랑에 빠지는 한 남자의 은신 행각을 그려냈다.<sup>5)</sup> 그 결과 작품은 긴박한 전쟁의 현실보다도 전쟁 속 일상과 심리묘사가 더 압도적이다. 전쟁보다 전쟁의 현실을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보인, 작가 특유의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 김동리는 전후 대표작(「밀다윈시대」·「귀환장정」·「홍남철수」·「실존무」 등)에서 후방사회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황량한 내면, 전쟁의 비극적 단면으로 가족 이산을 담아냈다.<sup>6)</sup> 황순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편 「메리 크리스마스」 「곡예사」에서, 그는 부산 피난지에서의 곤고한 일상과 강박해진 세태에 절망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이처럼, 기성세대 작가들은 종군 시절에 가담했던 전시문학의 동원정책에서 벗어나 1953년 무렵부터 창작을 재개하면서 곤고한 피난 생활과 풍문으로 떠도는 실향과 이산의 드라마틱한 일화들을 담아내는 경향이 농후했다.<sup>7)</sup>

50년대를 대표하는 장편의 하나인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1956)도 다소 특별하다. 이 작품은 북한의 토지개혁 외중에 벌어지는 국가폭력과 인간의 탐욕을 조명하며 설화적 공동체의 붕괴를 체감하는 전후 문제작이었다. 작품에서 공들여 포착한 작중현실은 해방 직후 북한사회를 공산당원들의 계급적 증오와 폭력적인 배제, 인간의 욕망과 광기로 가득한 풍경으로 재구성했다.

- 
- 4) 반공주의에 입각한 증오와 배제의 타자 정치학의 사례들은 종군작가단이 활동하는 시기(1950~1955)에 간행된 잡지나 수기집인 『고난의 90일』, 『적화삼삭구인집』 등에서 잘 확인된다. 『전선문학』이나 『전시문학독본』에 수록된 수필이나 논설·시·소설·평론 등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독려하며 남침을 주도한 북한 체제와 동조자들에 대한 비판과 국가 수호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전후 소설은 이와 대조적으로 전쟁으로 상처 난 삶의 일상적 국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데올로기적 증오감 표출은 많은 사례에서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냉전 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기제와의 거리두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5) 유임하,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공포-반공 텍스트의 기원과 유통, 1950년대 소설의 왜곡”, 『현대소설연구』 25집(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pp.68-69.
- 6) 정중현, “전후 김동리 소설의 변모양상”,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전후문학연구』(이회문화사, 2002).
- 7) 유임하, 『기억의 심연』(이회문화사, 2002), p.95.

청년 지식인 지주계층을 서술자로 내세운 이 작품은, 토지개혁의 사회적 대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행에 옮기는 절차를 생략한 폭력적인 급진성, 시대적 광기를 수난자의 위치에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수난자의 심리적 현실을 잘 묘사했다. 작품에서는 북한의 한가로운 농촌을 살의 가득한 카인의 무리가 자행한 폭력의 주범을 공산당원과 그에 부화뇌동한 이웃들이라 지목했고 전통 지주들은 희생자 아벨로 그려냈다. 작품에서 카인과 아벨이라는 인물 구성은 해방직후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의 이미저리였지만 궁극적으로는 6.25전쟁을 환유한 것이었다.

50년대의 작가들은 냉전 반공주의에 입각하여, 『카인의 후예』 처럼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전쟁의 폭력과 그들이 자행한 폭력성을 병치시켰다. 이러한 태도는 무엇보다도 전쟁을 일으킨 반민족적 세력이 공산주의자들이었고 이들이야말로 평화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는 냉전 반공주의적 체험에 근거해 있었다. 한편, 1955년을 전후로 해서 등장한 전후세대 작가들은 전쟁이 인간을 사물화한 폭력이라는 것, 전쟁이 야기한 극한적 비극의 본질은, 에릭 칼러(Erich Kalher)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제반 판단기준의 소실’(the fading away of any human criterion)<sup>8)</sup>을 경험한 데 있는지 모른다. 이 반문명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은 전후사회의 상처를 증언하는 것을 문학적 과제로 삼았다.<sup>9)</sup> 오상원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전장의 극한체험, 범람하는 죽음과 신체의 절단, 삶의 터전 상실, 피난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생존 등을 묘사했다.<sup>10)</sup> 선우휘는 「불꽃」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이념적 폭력성을 비판했고, 장용학의 「요한시집」은 거제포로수용소에서 이데올로그들의 비인간적인 맹목을 고발했다. 하지만 이같은 차이조차 기성세대의 감각과 청년의 세대감각으로 나눈 편의적인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50년대 전후문학은 기본적으로 ‘전쟁체험의 기록과 증언’이었고, “전쟁으로 말미암은 모든 비인간적 요인에 대항한, 인간성의 옹호”<sup>11)</sup>라는 반전의식을 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0년대에는 남정현의 ‘『분지』 필화 사건’(1965) 외에도 크고 작은 필화가 있었다.<sup>12)</sup> 이범선의 「오발탄」(1959)을 영화화한 동명의 영화(감독 유현목),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던 박계주의 『여수』, 구상의 첫 희곡 「수치」(『자유문학』, 1963·2), 『사상계』에 수록했다가 훗날 조총련계 잡지에 실린 탓에 심문을 당했던 유주현의 『임진강』 필화도 있었다. 이범선 원작의 영화 『오발탄』은 소설로는 문제가 없었다. 작품은 발표 당시에 호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오발탄」은 60년대에 영화로 제작되면서 너무 어두운 현실을 그렸다는 점, 제트기가 지붕 위로 날 때 미친 할머니가 “(북녘의 고향으로) 가자!”라고 외치는 장면 때문에 상영이 금지되었다. 구상의 시 「수치」 역시 어두운 현실을 그렸기 때문에 검열에 걸렸다. 작가와 연출가가 높은 휴머니즘을 담은 반공작품이라고 해도 반공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

8) Langer, Lawrence L., *The Holocaust and the Literary Imagination*(Virginia: Yale University Press, 1975), p.74.

9) 전후세대 문학의 의의에 관해서는 김상선, 『신세대작가론』(일신사, 1984); 천이두, 『종합에의 의지』(일지사, 1974); 김현, “테러리즘의 문학-50년대 문학소고”, 『사회와 윤리』 김현문학전집 2권(문학과지성사, 199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0) 유입하, “전쟁체험과 시대의 문학적 증언”, 『동서문학』(2003 가을호), pp.309-311.

11) 천이두, 『종합에의 의지』(일지사, 1974), pp.226-234.

12) 이철범, 『필화사건』,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 20년』(정음사, 1972), p.122.

이다. 박계주의 신문 연재소설 『여수』는 르포 형식의 불란서 여행을 소재로 한 작품이었는데, 내용에서 신탁통치 문제와 중립국가 발언이 문제가 되어 연재가 중단되었다. 이처럼, 냉전반공주의의 실정력과 검열은 작가들에게 금기의 가이드라인을 각인시키며 전쟁의 공식 기억 바깥으로 이탈하는 사유나 불온 상상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남정현의 「분지」 필화사건(1965)은 분단현실에서 정치적 자유와 예술가의 절대 자유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재단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였다. 이 사건은 분단과 준전시상태에 놓인 한반도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들었고 반공을 국시로 삼는 검열체제의 공포를 절감하게 만들었다. 제도적 검열체제는 헌법에 보장된 ‘창작의 자유’조차 정치적 상황에 연루되면 반공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부지불식간에 확인시켜 주었다. 이 필화사건은 작가들에게 반공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임을 각인시켜 놓았다. 창작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당대 일간지에서 실시한 문인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sup>13)</sup> 의도했든 않았던 간에 북한의 역선전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분단현실의 확인은 작가들에게 민감한 사안에 대한 회피, 우회, 침묵, 의도적인 망각을 작동시키는 자기검열을 창작과정에 개입시키도록 만들었다.<sup>14)</sup> 그에 따라 전쟁 기억은 크게 제약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발화되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망각하는 왜곡을 겪는다. 이 착잡한 정치적 상황에서 작가는 “그 현실의 표면이 아닌, 그 내부를 깊이 의식하는 정신을 소유하도록 애써야” 했고, “정치적 현실을 부정하면서 긍정하는, 높은 정신의 차원을 창조”<sup>15)</sup>하는 것만 강조되었다.

60년대 중반 이후 전쟁은 증언의 수준에서 벗어나 성찰의 대상으로 삼고 자연스레 분단문제로 이행하는 흐름 하나가 등장한다. 그 물꼬를 튼 것은 최인훈의 『광장』이었다. 『광장』 이후, 전쟁기억은 분단 현실과 관련지어 인식하려는 흐름으로 전환된다. 이 흐름을 주도한 이들은 1940년대를 전후로 해서 태어난 소위 ‘성장체험세대’의 작가들이었다.<sup>16)</sup> 이들은 50년대와 중첩된 자신들의 성장기에서, ‘자명하나 그 전모를 알 수 없었던’ 기억의 파편을 불러내어 제한적 이나마 전쟁 기억을 구성하고자 했고, 분단소설의 성과 대부분은 이들에 의해 축적되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분단소설의 성과를 제출한 작가의 한 사람인 김원일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기로 한다. 김원일의 분단소설은 「어둠의 혼」(1973) 이래, 널리 차용된 ‘어린 서술자의 시점’을 통해 공식 기억에서는 침묵된 존재였던 좌익 아버지들의 삶을 대상화했다. 자전적인 분단소설에서, 해방 이후 아버지의 오랜 부재와 가난은 어린 서술자의 성장기에 등장하는 파편적인 기억의 한 대목이다. 작가는 ‘성장체험의 부분성’을 역사화하며 전쟁과 분단의 참화를 입은 가족의 비극을 더듬어간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는 전쟁의 기억, 좀더 넓게는 분단으 역사적 현실을 전경화한다. 그가 선보인 유소년 서술자 시점은 냉전반공주의의 검열체제와는 무관하게 이

13) 유임하, “마음의 검열관, 반공주의와 작가의 자기검열”, 『상허학보』 15호(상허학회, 2005), pp.135-136.

14) 위의 글, p.139.

15) 이철범, 앞의 글, p.125.

16) 그 주역들로는 6.25전쟁의 기간을 유소년기로 보낸 작가들이다. 이들은 40년대를 전후로 태어나 유소년기에 전쟁을 경험한 작가들로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집요하게 추구해 나간다. 유재용(1936), 홍성원(1937), 이청준(1939), 한승원(1939), 김주영(1939), 김용성(1940), 전상국(1940), 문순태(1941), 이문구(1941), 현기영(1941), 김원일(1942), 이동하(1942), 윤홍길(1942), 황석영(1943), 조정래(1943), 윤정모(1946), 김성동(1947), 오정희(1947), 이문열(1948) 등이다.

데올로기적 환멸과 인식론적 거리를 유지하며 국가기관의 고문과 감시를 받으며 고초를 겪었던 좌익가족의 서러운 기억들을 풀어낼 수 있었다. 어린 서술자는 검열장치의 감시와 억압적인 분위기를 우회하는 허구적 장치였고 냉전시대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우회하는 미적 장치였다. 어린 서술자의 눈을 통해 전쟁의 최종적인 의미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대한 폭력과 허위, 엄청난 희생을 강요한 폭력의 소용돌이로 집약된다. 성장기의 기억에서 불러내어 이야기된 전쟁은 가족의 죽음과 비극을 강요한 세계 악, 집단폭력과 시대의 광기로 판정된다.<sup>17)</sup>

한편, ‘성장체험세대’ 작가들은 성장기의 기억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반공 성전’이라는 전쟁의 공식 기억을 균열 내는 전쟁 기억을 자신들의 소설에 담아나갔다. 70년대와 80년대 중반에 걸쳐 이들 세대에 속한 작가들이 산출한 분단소설에서, 전쟁 기억은 좌익가족 2세대의 심성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들에게 전쟁은 “처음 고향땅을 떠나는 원족의 설렘”을 낳는 피난(오정희의 「유년의 뜰」, 윤홍길의 「기억 속의 들꽃」 등), 혼혼한 가위눌림이나 성장기를 칠후 같은 어둠과 가난으로 몰아넣은 폭력과 원죄(김원일의 「어둠의 혼」, 윤홍길의 「장마」), ‘영웅과 승자 없는 잊혀진 전쟁’(홍성원의 장편 『남과 북』), 수많은 아버지들이 가해자이자 희생자가 되었던 광기와 이데올로기적 폭력(김원일의 『노을』, 윤홍길의 『낯』)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전쟁 기억은 피난과 이주, 국가주의자들의 폭력과 사상검증, 동족학살의 광기, 가족의 죽음과 고초들로 뒤엉킨 참람한 시대현실의 증언적 재현이었다. 작가들은 빛바랜 성장기로부터 이들은 ‘왜 어른들은 싸우는가?’라는 세상을 향해 의문을 품고 어머니의 드난살이를 지켜보며 ‘빨갱이 새끼’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놀림 속에서 성장하고 마침내 작가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성장체험세대에 의한 아버지와 전쟁의 재기억’과 ‘역사 복원을 위한 전쟁기억의 다시쓰기(rewriting memory)’는 황석영의 「한씨연대기」(1972), 김원일의 「어둠의 혼」(1973), 이청준의 「소문의 벽」(1973), 현기영의 「순이삼촌」(1978)과 같이, 이미 70년대 초반, 엄혹한 유신체제 아래서 감행되었다는 것은 다시한번 주목해볼 대목이다. 전쟁 기억의 다시쓰기는 유신체제의 질곡 속에서 부상하는 주변계층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과 맞물려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적 관심 방향은 역사적 기억을 소재로 저항적 주체의 역사를 맥락화하는 역사소설의 흐름과 맞물려, 사회운동과 동일시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sup>18)</sup> 특히, 이들 세대의 작가들은 역사라는 공적 기억에서 누락된 수많은 개인의 기억들을 귀환시키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 나갔다. 「순이삼촌」처럼, 6.25전쟁을 전후로 해서 ‘공비(共匪)’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한 민간인 가족의 상처 난 기억은 이들의 소설에서 주요 품목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기보다 국가폭력으로 죽어간 비국민 또는 2등 국민이었고, 역사에서 망각된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분단소설에 담긴 전쟁기억을 통해서 아버지와 가족의 고초는 제한적으로나마 침묵의 상태에서 벗어나 역사의 한 권에 재배치되었다.

17) 한 배에서 낳은 두 마리의 싸움닭이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 투계를 지켜보는 마음사람들이 한 배에서 나온 닭임을 알고 나서 모두 환멸해서 자리를 뜬다. 투계 장면은 작가가 1950년 한 해를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시간대를 부조한 작가의 6.25전쟁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담은 이미지에 해당한다. 김원일, 『불의 제전』 7권(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pp.268-320.

18) 70년대 대표적인 역사소설인 황석영의 『장길산』이나 김주영의 『객주』는 지배자의 역사와 구별되는 민중의 역사와 저항적 집단주체의 건강성을 보여주려고 했다. 시간대는 비록 조선조이지만 근대국가의 공식 역사에서 누락된 민중사의 저항성과 변혁의지를 담아내려는 전략은 분단사 속에 담긴 전쟁기억의 다시쓰기와 통한다.

한국 문학사에서 80년대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흥미한 사회과학의 시대적 여건에 힘입어 일국사적 전쟁 기억의 지형을 경합하는 상황으로 바꾼 변혁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민주화와 사회운동의 분위기 속에 반공주의적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역사의 주도권이 급격히 퇴조하는데,<sup>19)</sup> 그 동력은 민족과 민족주의, 민중과 반외세의 사상적 경향을 기반으로 삼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운동이 제공했다. 민중서관과 계급주의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면서 전쟁 기억의 양상도 한층 다채로워진다. 거창양민학살이 분단소설 속의 전쟁기억으로 귀환했고(김원일의 『겨울골짜기』), 가장(家長)의 좌익 가담과 월북으로 풍비박산 난 집안의 아들딸이 자라나 입사(入社)하는 과정이 재현되었고(이문열의 『변경』), 침묵해온 빨치산의 기억이 분단소설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이병주의 『지리산』,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태의 『남부군』 등).

특히, 『태백산맥』은 반공주의의 강력한 실정력을 전복, 해체하는 데 일조했다. 작품은 냉전 체제 안에서 구축된 해방 전후사, 6.25전쟁에 대한 전통주의적 공공 기억을 ‘아래로부터의 시선’으로 재구성하며 억압당한 기억들을 귀환시켰다. 좌익가족과 빨치산, 북한 체제를 선택한 지식인, 월남하여 빨치산 투쟁에 가담했던 인물들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개인들의 기억이 주를 이룬다. 인물 구성과 배치가 ‘좌편향적이고 반미적’이라는 비판도 있으나,<sup>20)</sup>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성취는 별로 퇴색되지 않는다. 작품에서 전쟁기억은 보성·별교를 중심으로 한 작가의 자전적 요소와 현장답사를 통해서 수집한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의 침묵된 기억과 증언, 역사자료에 근거해 있다. 거기에서 사회구성체논쟁이나 ‘해방전후사의 인식’ 같은 성과에 힘입어, 민중민족주의 이념과 분단내인론을 기반으로 재현된 분단과 전쟁의 기억은 역사학의 축적이 미흡했던 해방 전후사와 전쟁 기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남북과 좌우를 망라하는 한편, 좌편향적인 이데올로기 주체들로부터 하층민들에 이르는 계급에 속한 다양한 개인들의 기억이 역사의 주변부에서 소설 텍스트로 재배치되면서 놀라운 사회적 반향을 획득한다.<sup>21)</sup> 무엇보다도 {태백산맥}의 공과는 반공주의와 냉전적인 공적 기억의 퇴조와 함께 다양한 전쟁기억이 서로 경합하는 국면으로 전환시킨 데 있었다. ‘기억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태백산맥』은, 해방 직후 숨가쁘게 전개된 국내외 정세의 변동을 민중적 시각에서 담아냈다는 점에서 80년대 분단문학의 정점을 형성했다. 작가는 해방 이후 현대사에 대한 해석 지평을 확장하며 전쟁에 대한 반공주의적 공공기억에 맞서서 침묵된 기억의 귀환을 시도했다. 거기에서 이 전쟁기억은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이 보여준 광주 민간인 학살의 폭력성에 대한 인간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자각에서 재구성되었다는 점을 첨언할 만하다.<sup>22)</sup>

19) 이들 특징은 정치학계에서 6.25전쟁 연구가 80년대 수정주의 수입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지적과 통한다. 이완범, “한국전쟁 연구 50년과 과제”, 『경제와사회』 46집 여름호(산업사회학회, 2000), p.27.

20) 김병익, 『열림과 일곱』(문학과지성사, 1991), pp.21-22., pp.179-180.

21) 2012년 4월 현재 『태백산맥』은 200쇄를 돌파하였고 판매부수가 1000만 부를 돌파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매일경제』, 2012. 4. 13.

22) 한국사회에서 기억을 둘러싼 싸움은 80년대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정치적 변화와 세계 냉전체제의 해체와 직접 관련된다. 1979년 서울의 봄 직후인 1980년 5월에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은 당대 지식인들에게 “분노와 비탄과 절망, 그리고 침묵으로 점철되었던 (...) 원죄의식”(김현, “보이는 심연과 안보이는 역사전망”, 『전체에 대한 통찰』(나남출판, 1990), p.416)을 낳았고 80년대 내내 지속되었던 군사독재의 정치적 탄압에 저항하게 만들었으며, 국가폭력의 기원을 탐색하도록 만들었다.

### III. 탈냉전과 전쟁기억의 지형 변화

90년대 이후 기억의 양상은 부재하는 현실, 아련한 과거로서 개인의 몽상 속에 깃들면서 후 일담이라는 상품처럼 향유되고 소비되기도 하지만, 황석영의 『손님』(창비, 2001), 조은의 『침묵으로 지은 집』(문학동네, 2003), 임철우의 『백년여관』(한겨레신문사, 2004)과 김원일의 『푸른흔』(이룸, 2005) 등은 기억의 소비와 향유에 맞서는 소설의 각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sup>23)</sup>

황석영의 『손님』의 경우, 신천 학살사건을 소재로 취하고 있는데, 국가의 공적 기억에서 배제되어온 역사의 망령들을 불러내어 학살의 진상과 광기 가득한 시대의 폭력성과 대면하도록 만든다. 망령들의 대화는 고통도 광기를 걸러내고 사태의 진상을 현재화하는 고통스러운 축제를 이룬다. 또한 이들의 대화는 특정한 기억만을 재구성하여 왜곡시킨 박물관 속 국가의 공공기억을 박제화하는 한편, 잠복해 있는 침묵된 기억을 불러내어 동족학살의 진상을 재기억하게 만든다. 망령들의 목소리는 침묵된 기억 속에 유보되었던 가해와 피해의 고통스러운 원죄를 성찰하는 관문이 되는 셈이다. 어떤 적의도 애증도 사라져버린 고향들이 펼치는 대화의 난장은 살해하는 자와 죽어간 자의 기억을 대면시키며 침묵된 기억들을 활성화한다.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해방 직후부터 전쟁 기간 내내 자행된 좌우세력들의 광기에 찬 학살의 참람한 진상을 현재화하며, 종교와 계급을 사이에 놓고 벌이는 좌우세력 간의 양보없는 대결과 잔혹한 응징을 덧없게 만들어버리고, 죽음 앞에서 서로 반목하며 증오했던 신념들을 무화시켜 버린다.

조은의 『침묵으로 지은 집』은, 박완서 소설이 가진 이야기꾼의 능란한 구술성과는 질감부터가 다른데, 자기성찰적이며 자기반영적이다. 이 자기반영적 진술은 여성의 삶에서 침묵하는 기억을 불러낸 사례이다. 이 작품은 여성 사회학자가 자신의 분야를 가로질러 소설을 썼다는 예외성 때문이 아니라, 구술사 형식을 빌려 여성들의 발언된 바 없는 침묵된, ‘봉인된 기억’을 담아낸다. 냉전의 시대를 거처온 여성들의 침묵은 가족의 안위를 위해 선택한 일종의 묵비권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구술생애사의 기억 여행이라는 방식을 취한다.<sup>24)</sup>

50년 다섯 살 때부터 2000년 쉰다섯에 이르는 시간대를 넘나들면서, 침묵 속에 놓인 기억의 파편들은 하나하나 쉰다섯 살인 서술자의 추론에 힘입어 주체할 수 없는 기억의 용출을 경험하게 만들고 느슨한 이야기들의 결가지를 기억이라는 나무줄기로 접합시키며 ‘침묵으로 된 집’을 축조한다. 기억의 이야기 행로는 불규칙적이고 대단히 자의적이지만, 과거-현재를 넘나들면서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 지점은 이 땅의 여성들이 겪은 전쟁의 상처에 대한 침묵된 기억이라는 대목이다. 아버지의 부재, 친척의 월북, 가족 성원의 죽음, 재가(再嫁) 등등이 그 품목을 이루지만, 이들은 일상에서는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된 것들이다. 이 침묵된 기

23)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사례들도 많다. 현기영의 『지상에 순가락 하나』(실천문학사, 1999), 임철우의 『봄날』, 홍성원의 개정판 『남과 북』, 김원일의 『불의 제전』 완결과 『겨울골짜기』 개정판, 김연수의 『밤은 노래한다』 등이 그러하다.

24) ‘구술생애사(ethnography)’란 이름없는 개개인들로 일구어가는 비균질적이고 거대한 문화적 기억을 담아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요체는 공공기억이 가진 매끈한 논리와 플롯과 그물망과는 달리 성근 기억의 틈새에 존재하는 거대한 여백을 채우며 실재했던 집단심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기억서사로서 『침묵으로 지은 집』이 보여주는 침묵된 기억으로 된 이야기의 성관은 구술사가 지향하는 집단심성의 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들은 현대사의 가파른 행보 속에 침묵해온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인 여성들이 완강한 사회적 거부장성 때문에 억압당해온 것들이다. 기억여행을 통해서 이 침묵된 기억은 해방된다. 침묵된 기억의 해방은 궁극적으로 하위주체인 여성의 기억을 역사의 장에 덧붙이며 풍요롭게 만든다.

김원일의 『푸른 혼』(이룸, 2005)은 사범살인이라는 봉인된 기억의 다시 쓰기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혁당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여덟 명의 일대기를 기술한 이 작품은 망령들을 불러와 그들의 생애를 역사화한다. 발화되지 못한 개인들의 생애 구술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지평은 해방이후의 분단 현실에서 좌우익으로 나뉜 채 자행되었던 온갖 죽음과 도저한 절망의 현실이며,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자행된 정치적 탄압과 통제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다. 기억은 ‘1인칭으로 된 최초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결정적이고 생생한 체험을 담지만, 역사적 사실로 자리잡으려면 생략되고 절편된 개인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역사적 원혼의 삶을 재구성하는 일은 작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sup>25)</sup>

『푸른 혼』이 재현하는 기억의 범위는 다양하게 구사되는 서사문법처럼, 식민지 시기와 근현대사의 다양한 층위와 접점을 만들면서 개인의 생애사에 걸쳐 있다. 작품의 기억 다시쓰기는 식민지배의 고통과 해방 이후 배태된 분단의 구조화, 반쪽짜리 국가로 출발한 신생국가의 폭력에 희생된 개인들이 애초 품었던 소망의 진정성에 주목한다. 그 진정성은 국민국가의 정교한 규율체계의 폭력적인 작동과 불화하며 기억의 중심을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집단의 차원으로 이행하도록 만든다.

임철우의 『백년여관』은 학살의 기억을 잊으려는 사회현실에 관한 윤리 문제를 제기한 경우이다. 글쓰기는 기억에 대한 애도,<sup>26)</sup> 시대에 각인된 정신적 외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과거를 재구성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이다.<sup>27)</sup> 작품에서 학살의 역사는 멀리 일제 식민지로부터 제주4.3 사태, 6.25전쟁을 전후로 한 동족학살, 가깝게는 5.18광주항쟁으로 100년에 걸쳐 있다. 작품은 『손님』처럼 몽환적인 곳의 제의를 빌리지만 화해를 겸한 천도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학살의 기억에 대한 산자들의 윤리를 제기한다.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백년여관의 가족들은 “살아 있으나 죽은 존재”이며, 그곳의 죽은자들은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역사의 망각이 죽은 자나 다름없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남긴 말에 그대로 담겨 있다. 기억을 폐기하지 않고 망각과 맞서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기억하기야말로 “망각하는 자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p.336)기 때문이다.

고난스러운 100년이라는 시간대와 낡고 허술한 ‘여관’은 역사의 시간과 삶과 죽음이 거처가는 지상이라는 임시 거처, 전쟁과 학살의 상처로 앓고 있는 존재들을 묶어가는 현세리는, 역사

25) 송상진의 낮은 팔공산을 중심으로 전개된 좌우익의 대결, 전쟁의 상흔 속에 삶을 회상하고(「팔공산」), 죽음마저 함께 하는 이수병과 김용원의 깊은 우정은 서정성 가득한 자전소설로 재구성된다(「두 동무」). 민주투사의 열정과 고뇌를 담은 여의남의 삶은 평전으로(「여의남평전」), 서도원의 삶은 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개인의 소망을 재현한다(「청맹과니」). 또한, 처형의 순간 사형수들의 고통과 절망을 넘어 죽음 이후 살아남은 혼들이 함께 담소하는 판타지의 도입은 압제의 고통에서 풀려난 망자들의 환관 축제로 형상화된다(「투명한 푸른 얼굴」). 하재완의 생애는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애뜻함을 담아 사범살인의 범죄성을 고발하는 방식을 취한다(「임을 위한 진혼곡」).

26) 하랄트 하인리히, 백설자 역, 『망각의 강 레테』(문학동네, 2004), p.307.

27) 호미 K.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소명출판, 2002), p.139.

적 시간과 장소성을 결합시킨 상상적 이미지의 공간이다. ‘백년여관’에는 모두가 상처받은 그리하여 산자이되 죽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기거한다. 광주항쟁 때의 죄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작가인 서술자와 K, 순옥과 은희, 자신을 제외하고는 집안식구 모두를 잃어버린 강복수,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린 재미교포 사내 요안, 월남전 때 팔 하나를 잃고 돌아온 알콜중독자 문태, 조천택 등이다. 작품은 일대기에 걸맞는 회상을 거쳐 현대사의 참담한 비극들을 토로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한 자들을 보여준다. “망각이 유일한 구원”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이 살아남은 자들의 내면이다. “망각할 수 없는 한, 그 지옥에서의 시간들은 결코 과거가 아니었”(p.17)던 것이다. 죄의식으로 변민하는 서술자인 작가의 고해성사,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온 요안의 간절함, 망각할 수 없는 기억의 저주에 속박당한 강복수의 끈고한 삶은 학살의 기억을 가진 생존자들의 각양각색이다. 작품은 기억과 망각은 단절된 게 아니며, 기억의 시효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기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자본주의의 향락과 소비에 포획당한 자들의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서술한다. “난 세상을, 이 놀라운 망각과 배반을 용서할 수 없”고 혼자 살아남으려 했다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p.305)다는 말은 바로 작품에서 요청하는 ‘기억의 윤리’이다.

#### IV. 결어: 비평화적 분단구조의 극복과 침묵된 전쟁 기억의 활성화

“역사가 그 기초를 두면서 다시 길러내기도 하는 기억은, 현재와 미래에 복무하기 위해 과거를 구해내”는 데 의의가 있고, 그리하여 “집단적 기억이 인간의 예측이 아닌 해방에 복무할 수 있도록 행동”<sup>28)</sup>하려면, 기억 서사의 소설적 생산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장기 지속되는 분단의 현실에서 전쟁과 학살의 기억은 시효 만료된 것이거나 망각되어야 할 기억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가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떠올려볼 만하다.

작가는 “‘사건’을 체험하였고, 그 ‘사건’의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의 폭력을 지금도 계속하여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들”<sup>29)</sup>을 대신해서 말하는 존재이다. 체험이라는 기억은 신체에 새겨졌으나 표상불가능함을 제기한다. 언어로 재현된다고 해도 거기에는 늘 사건 외부에 존재하는 잉여 때문에 사건의 내부를 관통하지 못한 채 끝없이 미끄러지는 운명이 자리잡고 있다. 언어는 그 운명의 불가능성을 넘어서지 못한다. 하지만 작가는 이 표상불가능한 체험의 운명성을 넘어서 대신 증언하려 한다. 작가에게 기억은 망각의 정치와 맞서고 현재와 미래에 복무하며 정치적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는 프로젝트이자 질료이다. 기억은 작가를 통해 망각의 강을 건너야 하는 운명을 딛고 불멸성을 획득한다. 이것이야말로 집단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늘 역사와 기억을 다시 쓰는, 문학의 영원한 도정이다.

전쟁과 학살의 기억에 대한 문학적 글쓰기는 ‘기억이냐 망각이냐’의 갈림길에서 직면한 끝없는 선택에 가깝다. 이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글로 쓸 것인지, 아니면 해방적인 망각을 택하여 거리낌 없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글쓰기를 통해 전쟁과 학살을 기억

28) 르 고프, 『역사와 기억』, p.99, 아리프 딜릭, 앞의 책, p.100 재인용.

29)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p.149.

한다는 것은 ‘애도’와 고통스러운 성찰을 동반하는 현재화이자 재구성의 작업이다. 냉전 시대의 전쟁기억은 권력에 전유되면서, 공식적 기억인 역사에 의해 절편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에 속한 수많은 개인들의 기억들을 배제하거나 억압하고, 또한 불온시함으로써 통제해 왔다. 그 결과 개인들의 무수한 기억들이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망각된 상태에 있었다.

80년대 이후 수많은 개인들의 전쟁 기억이 귀환하면서 역사의 공식 기억과 경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권위주의적이고 냉전 반공주의적인 역사적 기억을 벗어나 수많은 잉여의 기억들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기억의 편차를 존중하며 기억의 다양성 속에 이질적인 기억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것, 이것은 분단과 전쟁의 비평화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대주체 국가의 전승담을 주축으로 마련된 공적 기억인 역사와 경합했던 대항기억의 비평화적 구조를 넘어서는 일이 침묵해온 무수한 기억들이 공존하는 상황이야말로 평화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위적인 국가주의나 이데올로기의 폭력이 자행되었던 냉전 시대의 기억을 넘어서, 그 자리에 개인의 수많은 기억을 채우는 기억의 역사화야말로 증오와 갈등을 넘어서 차이를 존중하는 가능성의 세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탈냉전시대에 진입한 지금, 비로소 기억이 변성할 조건 속에 전쟁과 분단에 관한 기억 다시쓰기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느낌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 참고문헌

-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서울: 소명출판. 2003.
- 고은 외 21명 공저. 『문학과 역사와 인간』, 서울: 한길사. 1991.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 김경학 외 공저. 『전쟁과 기억』. 서울: 한울. 2005.
- 김귀옥. “아래로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허물기”. 『경제와사회』 43호. 한국산업사회학회 가을호. 1999.
- 김동춘.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2000.
- 김병익. “6.25와 한국소설의 관점”.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동아일보사. 1989.
- 김병익. 『열림과 일곱』.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1.
- 김상선. 『신세대작가론』. 서울: 일신사. 1964.
- 김성례.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30-2.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 김성수. “구술사 방법론과 현대문학 연구의 새 지평”, 『한국근대문학연구』 10집, 한국근대문학학회. 2004.
- 김원일. 『불의 제전』 7권.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 김원일. “지구 마지막 이념 분단국의 작가”. 김우창·피에르 부르디외 외. 『경계를 넘어 글쓰기 -2000년 서울 국제문학포럼 논문집』. 서울: 민음사. 2001.

- 김윤식. “6.25전쟁문학”. 『현대사』 창간호. 서울: 서울언론문화클럽. 1980
- 김현. “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 『전체에 대한 통찰』. 서울: 나남출판. 1990.
- 김현. “테러리즘의 문학-50년대 문학소고”. 『사회와우리』. 김현문학전집 2권.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1.
- 김현. 『사회와 우리』. 김현문학전집 2권.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1.
-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출판. 2002.
- 박명림. “평화와 인간의 세기를 향해-단일 표제로서의 민족적 기억을 넘어”. 『당대비평』 신년호. 2005
- 서정주. 『미당 시전집·1』. 서울: 민음사. 1994; 서정주. 『서정주시선』. 서울: 정음사. 1955.
- 오제도 외. 『적화삼삭구인집』. 서울: 국제보도연맹. 1951.
- 유임하. 『분단 현실과 서사적 상상력』. 서울: 대학사. 1998.
- 유임하. “아버지 찾기와 성장체험의 역사화”. 『실천문학』 여름호. 서울: 실천문학사. 2001.
- 유임하. 『기억의 심연』. 서울: 이회문화사. 2002.
- 유임하. “타자화된 기억의 상상적 복원”. 『동서문학』 여름호; 2005. 『전쟁의 기억, 역사와 문학』 하권.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2.
- 유임하. “전후소설의 재발견”. 『상허학보』 9집. 상허학회. 2002.
- 유임하. “80년대 분단문학, 역사의 진실 해명과 반공주의의 극복”. 『작가연구』 15호. 깊은샘. 2003.
- 유임하. “전쟁체험과 시대의 문학적 증언”. 『동서문학』 가을호. 2003.
- 유임하.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공포-반공 텍스트의 기원과 유통, 1950년대 소설의 왜곡”. 『현대소설연구』 25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 유임하. “마음의 검열관, 반공주의와 작가의 자기검열”. 『상허학보』 15호. 상허학회. 2005.
- 윤택림. “여성생애사 연구방법론”. 『여성연구』 3집. 목포: 목포대 여성문제연구소. 1995
- 이문구. “‘관촌수필’과 나의 문학적 역정”. 박경리 외. 『나의 문학이야기』. 파주: 문학동네. 2001.
- 이완범. “한국전쟁 연구 50년과 과제”. 『경제와사회』 46집 여름호. 산업사회학회. 2000.
- 이철범. “필화사건”.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 20년』. 서울: 정음사. 1972.
- 정종현. “전후 김동리 소설의 변모양상”.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전후문학연구』. 서울: 이회문화사. 2002.
- 조연현. “한국전쟁과 한국문학-체험의 기록과 경험의 형상화”. 『전선문학』 5집. 1953
- 천이두. 『종합에의 의지』. 서울: 일지사. 1974.
- 표인주 외 공저. 『전쟁과 사람들』. 서울: 한울. 2003.
- 홍성원. 『남과 북』 7권. 서울: 문학사상사. 1997.
- 『매일경제』, 2012년 4월 13일자.
- Mari, Oka[岡眞理], 김병구 역, 『기억 서사』. 서울: 소명출판. 2003.

- Assmann, Aleida. 변학수·백설자·채연숙 공역. 『기억의 공간』. 대구: 경북대출판부. 2003.
- Bhabha, Homi K..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서울: 소명출판. 2002.
- Dirlik, Arif. 황동연 역. 2005.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과주: 창비. 2005.
- Langer, Lawrence L. *The Holocaust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Virginia: Yale University Press. 1977.
- Weinrich, Harald. 백설자 역. 『망각의 강 레테』. 과주: 문학동네. 2004.

#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의 사회관계자본의 변형\*

정은미(IPUS HK 평화인문학연구원)

## I. 문제제기

우리에게 탈북자라는 호칭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탈북자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관점들이 충돌하기도 하였다.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2012년 4월 현재 2만3천여명을 넘는다. 이렇듯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정책적 관심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 관심도 다양하게 영역에서 늘어나고 있다. 학술적 관심의 대상도 탈북자의 성, 연령, 직업, 거주지역, 탈북 경로, 탈북 동기, 탈북연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월남자 가족’ 출신 배경을 가진 탈북자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으로 분류되지만 남한에도 ‘월남 가족’이 살고 있는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남북한의 적대적 분단체제에 의해 한쪽은 철저하게 사회정치적으로 배제의 대상으로, 다른 한쪽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체제의 포섭 대상으로 살아왔다. 이 두 집단은 각자가 처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편을 타자화하거나 존재를 부인해야만 했다.

그런데 탈냉전 이후 이 둘 간의 관계가 미묘하게 뒤섞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북한의 ‘월남자 가족’ 일부는 남한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남한의 ‘월남 가족’ 일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거나 탈출을 돕기도 한다. 연구자는 ‘월남자 가족’ 출신의 탈북자들을 심층면접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월남자 가족’이라는 배경이 북한에서, 탈북 과정, 그리고 남한에서 그들의 사회관계자본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점을 포착하게 되었다. 부르디외(P. Bourdieu)가 설명하는 사회관계자본은 문화자본과 학력자본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인맥’이지만, 이 연구에서 ‘월남자 가족’ 출신의 탈북자의 사회관계자본은 ‘월남자 가족’이라는 출신 성분을 매개로 제한되지만, 특정한 기회공간에서는 남한사회에 적응하거나 통합되는 것을 돕는 주요 자원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탈북 과정과 탈북 후 그가 활용하거나 새롭게 획득하는 사회관계자본은 남한사회에 이미 살고 있던 ‘월남자 가족’ 성원이 갖고 있는 사회관계자본을 활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부르디외가 사회관계자본을 “한 사람이 소유한 사회자본의 총량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범위와 그 연결망에 연결된 각 사람의 경제, 문화, 상징자본의 총량”<sup>1)</sup>이라고 설명했던 것과 맥락이 닿을 수 있다.

\* 이 연구는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과제번호: NRF-2010-361-A00017). 이 글은 진행 중인 미완의 연구이기 때문에 인용을 삼갈 것을 밝혀둠.

1) 삐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 (서울: 새물결, 2006), p.14.

김상준이 적절하게 설명하였듯이, 부르디외의 문화적 자본 개념은 주로 부모와 그 부모의 관계망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이 자식 세대로 전승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면, 사회적 자본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연결망과 집단소속이 해당 당사자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하고 있다.<sup>2)</sup>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이라는 출신 배경은 북한에서 부모(혹은 조부모)에서 자식 세대로 전승되면서 학력자본을 비롯하여 사회관계자본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맞아 사회통제가 느슨해지는 특정한 기회공간이 형성되었을 때 ‘월남자 가족’이라는 출신 배경은 탈북을 돕고 남한에서의 정착과 통합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으로 기능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다른 배경을 가진 탈북자들과 차별화된 사회관계자본의 변형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그들의 삶을 철저히 왜곡시키고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시켰다면, 그들은 남한에서 새롭게 부여된 ‘탈북자’라는 또 다른 낙인이 그들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시키고 있는 점에서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가 경험하는 분단체제에 의한 비평화의 구조는 복잡적이라 할 수 있다.

## II. 연구대상과 분석자료

### 1. 연구대상과 사례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월남자 가족’ 출신의 탈북자이다. 여기서 ‘월남자 가족’이란 가족의 일부 성원이 한국전쟁 전후로 북한지역을 떠나 남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당국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북한 주민이며,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란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을 둔 북한주민이 탈냉전 이후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온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월남자 가족 따라서 이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기존에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월남민’ 또는 ‘월남가족’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과 전혀 다르다. ‘월남민’ 또는 ‘월남가족’은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북한지역을 떠나 줄곧 남한지역에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 또는 가족성원의 일부를 지칭한다.

이 연구는 ‘월남자 가족’ 출신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6명을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사례들은 모두 <표1>에서 보이듯이 가족성원 일부, 특히 직계가족 성원의 일부가 한국전쟁 중에 월남한 경우로 주로 월남자의 3세대 또는 2세대의 가족에 해당된다. 사례 B씨와 사례 F씨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친가쪽과 외가쪽 모두 월남자 가족을 두고 있다. 사례들은 모두 2005년 이후 북한을 탈출했으며, 사례 C씨를 제외하고는 탈북 한 후 1년 이내에 남한으로 들어왔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례들은 여성 3명, 남성 3명이고,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에 분포하고 있다.

6명의 사례들 중 4명은 북한에서 거주지역은 함경북도에 해당하고, 나머지 2명은 각각 강원

2) 김상준, “부르디외, 콜판, 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제38집 6호(2004), p.69.

도와 평안북도에 해당된다. 함경북도에 거주했던 사례의 비중이 많은 것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모집단에서 함경북도 출신자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도 기인하지만, 북한의 당국이 ‘월남자 가족’ 출신들을 함경북도로 강제이주시켰던 정부정책에서도 기인한다. 사례 D씨의 경우 월남자인 할아버지의 고향은 평안남도 강서면인데 할아버지가 월남함으로써 그의 가족들은 모두 함경북도로 강제이주되었다. 사례 E씨의 경우 역시 할아버지의 고향은 전북 전주이지만 큰할아버지가 전쟁시기 북한군에서 탈영하여 월남함으로써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함경북도로 강제이주되었다. 사례 F씨의 경우는 친가족과 외가족이 모두 월남자 가족 출신인데 친가족 고향은 원래 함경북도이지만 외가족은 황해도였지만 월남자 가족이 있어 함경북도로 모두 추방되었다.

<표1> 구술자 현황

사례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탈북 연도	입국 연도	가족 내 월남자	월남 시기	면접 날짜
A씨	여	50대	가정주부 (장사)	강원도 천내군	2010	2011	시아버지 시숙부	한국전쟁	2012.2.10
B씨	여	30대	창고보위대	함북 명천군	2006	2007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한국전쟁	2012.2.14
C씨	남	40대	무역일	평북 신의주	2005	2008	할아버지	한국전쟁	2012.2.16
D씨	여	40대	선반공장사	함북 청진	2006	2006	할아버지	한국전쟁	2012.4.19
E씨	남	20대	군인	함북 회령	2011	2011	큰할아버지	한국전쟁	2012.4.21
F씨	남	30대	브로커	함북 청진	2005	2006	큰아버지 외할아버지	한국전쟁	2012.5.2

## 2.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주요 사용하고 있는 분석자료는 ‘월남자 가족’ 출신의 탈북자가 구술하는 생애 이야기(life story)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생애이야기는 생애사(life history)와 구분되지만, 종종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생애이야기는 개인들의 삶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기억을 시계열적인 연속성을 보존하면서 서술한 말 혹은 기록을 말한다. 생애이야기와 생애사는 때로 구분 없이 쓰이기도 하지만 생애이야기는 한 개인의 생애주기보다는 사건 중심의 삶의 이야기에 더 중점을 둔다(Atkinson, 1998). 대체로 생애이야기가 생애경험에 관한 진술 중 과거와 현재의 연관이 드러나는 것 일반을 지칭한다면, 생애사는 개인의 생애 경험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sup>1)</sup>

개인들의 생애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기억의 재현, 또는 삶의 기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유

1) 생애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또한 생애이야기와 생애사 둘의 용례 구분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J. Amos Hatch and Richard Wisniewski, *Life History and Narrative*(London: The Falmer Press, 1995), pp.113~116.을 참조할 것.

기적으로 통합되고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삶의 경험이 생애이야기를 통해 재현되는 측면에 주로 주목해 왔다면, 최근에는 생애이야기가 화자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제한하고 이끌어가는 성격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이재인, 2005: 80-81). 이러한 인식은 생애이야기 자료의 성격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고 있는데, 즉 개인들의 생애이야기는 사회적 삶의 환경을 탐색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내적 의미의 세계나 삶의 방향성을 읽어낼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Nouri & Helterline, 1998: 37-39).

신분과 숙명적 계층질서로부터 해방된 근대사회의 개인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타인에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사회적 실천과정에서 체험의 연관성을 생성하고, 경험하게 된다.<sup>2)</sup> 그러나 북한주민의 경우 탈북자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해방된 근대사회의 개인으로서의 경험이 가능해진다.

생애사연구는 개별 경험의 구체성 속에서 사회를 문제 삼는다. 생애사연구는 구체적인 사실 속에서 드러나는 일반성을 이해하고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애사를 매개로 드러나는 경험의 특별한 유형들은 그 자체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특정 조건에서 포착되는 생활세계의 '구체적 일반성'을 재현하고 있다.<sup>3)</sup> '월남자 가족' 출신의 탈북한 북한주민의 생애사를 통해 남북한 사회에서 분단으로 인해 기인한 구조적 폭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형시켰는가를 보여준다.

구술 생애사가 갖는 특성 중 중요한 점은 기억을 매개로 이야기된 내용이 현재를 출발점으로 하여 재구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달리 말해 구술사가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체험한 '객관적인' 과거 사실을 단순 모사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이 이루어지는 당시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내용과 주제를 선택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이다.<sup>4)</sup> '월남자 가족' 출신의 탈북자는 북한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매우 좌절적이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이 지금 편안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남한에서 살고 있으면서 과거를 재현하기 때문에 구술자의 표정이나 태도는 담담하고 침착하다. 하지만 현재 남한에서 그가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반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눈물을 지으며 구술한다.

### Ⅲ. 기존연구 검토

#### 1. 월남가족 연구

이 연구에서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월남자 가족' 출신의 탈북자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하지만 '월남가족'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김귀옥은 이산가족이라는 포괄적인 범주 안에서 월남자, 월

2)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2005년), p.131.

3) 위의 글, pp. 132~133.

4) 위의 글, p.134.

북자, 남북자 등의 생애사와 그들의 삶을 질곡하거나 변형시키는 전쟁과 분단체제의 구조적 폭력,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분단 구조간의 상호작용을 포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sup>5)</sup> 그에게 월남민 또는 월남가족은 주로 “고향에서 뿌리가 뽑힌, 경계를 넘어선 전쟁 피난민”<sup>6)</sup>이거나 1950년대 냉전이테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에 자유의자가 거의 박탈된 상태에서 남(南)을 선택한 사람들로 “남아 있는 가족이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떠나간 가족을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을 사회적 관계에서부터 배제시키고” “그 땅에서 항상 불안정한 존재, 낙인찍힌 존재, 경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sup>7)</sup>.

김귀옥이 전쟁과 분단체제라는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월남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산의 유형을 다루고 있다면, 조은은 월남가족과 월북 가족의 생애사 비교를 통해 분단체제의 국민국가 안에서 형성된 독특한 그들의 가족주의, 전쟁과 분단의 일상화와 기억, 그리고 그들의 계급재생산 구조 등에 주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sup>8)</sup> 그에게 월남가족 또는 월북가족은 단순히 한국전쟁 전 후시기에 월남한 또는 월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빨갱이가 되기도 하고 빨갱이여서 가족이 피해를 입기도” 하며 “가족이 살기 위해 가족과 헤어져 월남하는가 하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북쪽으로 가기도 한다.”<sup>9)</sup> 또한 그들의 자식 세대들의 기억행위 역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위상에서 전쟁과 분단의 ‘기억만들기’를 하고 있으며, 이념과 혈육의 경계에서 유동적인 정체성을 담지하고 있다.<sup>10)</sup> 또한 조은은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월남가족과 월북가족의 3대에 걸친 계급이동 궤적을 분석하여 계급재생산의 경로와 기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월남가족의 경우 문화자본이 증식되고 학력자본이 경제자본이나 사회자본으로 전환되거나 반대로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으로 쉽게 전환되는 반면에, 월북가족의 경우는 ‘연좌제’에 의해 자본간의 전환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두 가족의 계급재생산의 숨겨진 경로를 밝혀냈다.<sup>11)</sup>

지금까지 살펴본 남한사회의 월남민 또는 월남가족 연구가 이 글에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

5) ‘월남민’ 또는 ‘월남가족’에 관한 김귀옥의 주요 연구들로는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밀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2000);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이산가족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서울: 역사비평사, 2004); “왜 월남 실향민은 반공수구세력이 되었을까?”, 『인물과 사상』 제30권(2004); “이산가족의 섬: 지역사회의 월남/월북가족의 사회적 관계와 트라우마”, 『구술독취자료집』 (서울: 한성대 전쟁과평화연구소, 2008); “글로벌 시대 한국 이산가족의 정체성과 새로운 가능성”, 『사회와 역사』 제81집(2008); “냉전시대의 경계에 선 사람들-월남자·월북자·남북자”, 『황해문화』 통권 제67호(2010 여름) 등 다수가 있다.

6) 김귀옥, “냉전시대의 경계에 선 사람들-월남자·월북자·남북자”, 『황해문화』 통권 제67호(2010 여름), p.48.

7) 김귀옥, “글로벌 시대 한국 이산가족의 정체성과 새로운 가능성”, 『사회와 역사』 제81집(2008), p.133.

8) 월남가족과 월북가족을 비교분석한 조은의 주요 연구들로는 “분단사회의 ‘국민 되기’와 가족: 월남가족과 월북가족의 구술 생애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71호(2006); “전쟁과 분단의 일상화와 기억의 정치: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 자녀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77집(2008); “부르디외를 비리려도 될까요?: ‘월남가족’과 ‘월북가족’의 계급재생산에서 문화자본 읽기”, 『문화와 사회』 통권 11권(2011 가을) 등이 있다.

9) 조은, “분단사회의 ‘국민 되기’와 가족: 월남가족과 월북가족의 구술 생애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71호(2006), p. 98.

10) 조은, “전쟁과 분단의 일상화와 기억의 정치: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 자녀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77집(2008), pp.223~224.

11) 조은, “부르디외를 비리려도 될까요?: ‘월남가족’과 ‘월북가족’의 계급재생산에서 문화자본 읽기”, 『문화와 사회』 통권 11권(2011 가을), pp.97~98.

는 북한의 월남자 가족 또는 월남자 가족 출신의 탈북자 연구와는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월남민 또는 월남가족이 남한사회에서 전쟁과 분단체제에 기인한 구조적 폭력에 의해 그들의 삶과 정체성이 굴절되고 왜곡되었던 것처럼, 북한의 월남자 가족 또한 북한사회라는 반대편 지역에서 동일한 원리로 배제와 차별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공통성을 지닌다. 따라서 남한의 월남가족 연구들은 북한의 월남자 가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된다. 남한에서 월북가족들이 국가의 배신자 또는 빨갱이라는 낙인 하에 ‘연좌제’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북한의 월남자 가족 역시 조국과 민족의 배신자라는 낙인으로 추방과 강제이주, 사회로부터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월남자 가족은 북한에서 살아가기 위해 떠나간 가족을 기억 속에서 강제로 삭제하거나 사망 처리해야 했다. 반대로 남한에서 월남가족은 반공 또는 반북 이데올로기 전사로 남한의 지배체제에 순응 또는 포섭되어 살아갔다면,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은 남한의 월남가족 때문에 북한의 지배체제로부터 배척 또는 배제의 대상으로 살아가야 했다는 점에서 분단체제가 야기하고 있는 비평화의 구조는 복잡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최종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월남자 가족 출신의 탈북자는 동시대에 북한과 남한이라는 두 사회에서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독특한 이중의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기존 월남가족 연구와 차별화된다.

## 2. 북한의 ‘월남자 가족’ 연구

북한의 헌법에서는 “국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2009년 개정, 제65조)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 북한이 2000년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B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국제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종이나 피부색, 성, 언어, 신앙, 정견이나 다른 주장,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 재산, 출생 또는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2)</sup>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철저하게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출신성분 구분 작업은 1958년 12월~1960년 12월에 실시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그리고 1980년 4월~1980년 10월에 걸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 1981년 1월~4월에 걸친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1983년 11월~1984년 3월에 걸친 주민증 갱신사업, 1989년 10월~1990년 12월 주민재등록사업 등이 실시된 바 있다.<sup>13)</sup>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월남자 가족’은 1970년 당시 주민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된 3계층에서 적대계층에 속하며, 성분 분류에서는 복잡군중에 속한다. 복잡군중(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직업, 교육, 주거, 의료혜택, 결혼, 군입대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강제이주를 통해 격리되고 평양이나 주요 도시, 국경지역에 거주할 수 없으며, 항시 동태를 감시당하고 집중적인

12)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4』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114.

13) 김국신 외, 『북한인권백서 2011』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169~170.

교양학습의 대상이 된다. 또한 대학 진학, 군대 입대, 입당 등에 제약을 받으며, 당기관이나 공안기관 등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심지어 성분에 따라 범죄형량까지 달라진다.<sup>14)</sup>

북한의 ‘월남자 가족’에 대한 연구나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에서는 북한 전체인구의 25~30%를 차지하는 방대한 집단인 이산가족들을 ‘월남자’로 분류하여 복잡계층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월남자’를 매우 광범위하게 범주화하고 있다.<sup>15)</sup>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1』에는 월남자 가족에 대한 차별 사례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시할아버지가 월남하여 시아버지도 입당하지 못하고 남편도 입당하지 못하고 군대도 가지 못하였다는 사례, 큰아버지가 월남하여 출신성분이 나빠 처녀시절 입당하려고 노력했으나 입당하지 못하고 시집가는데도 애를 많이 먹었다는 사례, 고모가 월남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입당과 대학진학, 결혼에서 차별을 당하였다는 사례 등 월남자 가족이라는 이력은 대체로 정치사회적 참여와 진출에 제약을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북한의 월남자 가족에 대한 정보는 대체로 그들의 인권적 차별과 침해라는 차원에서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정보는 월남자 가족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제약당하고 억압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이 연구는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이 살았던 생애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월남자 가족이라는 낙인과 차별의 사회적 구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행위적 선택을 했으며,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또한 탈북 과정에서 그리고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한에 있는 월남자 가족과의 관계 형성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주목하고자 한다.

#### IV. ‘월남자 가족’출신 탈북자의 삶의 변주곡: 사회관계자본의 변동을 중심으로

##### 1. ‘월남자 가족’출신으로 북한에서 살아가기: 배제와 차별의 낙인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에 참가한 ‘월남자 가족’ 출신의 탈북자들은 모두 직계가족 중 일부가 전쟁 시기에 월남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례 B씨의 경우에는 친가족과 외가족 모두 ‘월남자 가족’ 출신이었다.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 출신성분을 가진 주민들 중 직계가족 내에 월남자가 있는 경우에 더 심하게 정책적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 ‘월남자 가족’ 출신자들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차별은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 나타난다.

먼저 부모 세대에서 받는 차별을 살펴보자. 우선, ‘월남자 가족’ 출신자들은 거주 지역에 제한을 받는다. 사례 A씨와 C씨를 제외한 네 개의 사례는 함경북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D씨와 E씨의 부모 세대들은 고향이 함경북도가 아니었지만 월남자 가족이 발생한 후 모두 함경북도로

14)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4』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126~127.

15) 김국신 외, 『북한인권백서 2011』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174.

강제 이주되었고, F씨의 경우는 외가쪽 가족들이 월남자 가족이 발생하면서 함경북도로 추방되었다.

둘째, ‘월남자 가족’ 출신자들은 직업에서 제약과 차별을 받는다. <표3>에서 보이듯, 사례 A씨의 남편은 전쟁 전에 함흥 약대를 졸업했으나 남편의 아버지가 월남하면서 평생을 탄광노동자로 살았다. 사례 B씨의 아버지는 전쟁 전에 사리원 약대를 졸업했으나 역시 탄광노동자로 살았다. 그나마 B씨의 아버지는 정년 말년에는 대학교 전공을 살려 약품관리소에서 일하였다. 사례 C씨의 어머니는 전쟁 전에 탁아소에서 일을 했으나 남편이 월남하면서 기계공장 노동자로 살았다. C씨의 아버지 역시 같은 기계공장 노동자로 일을 하였다. 사례 D씨의 경우 할아버지가 전쟁 전에 정미소를 운영해서 부유했지만 할아버지가 월남한 후 D씨의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로 살았다. E씨의 할아버지, 큰할아버지는 모두 전북 전주 출신으로 의사 출신이었고, E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모두 의대를 나왔다. 할아버지는 큰 병원의 과장으로 계셨다가 큰 할아버지의 월남 경력 때문에 간염요양소의 부소장으로 좌천되었고, 아버지는 구역 병원 외과 과장까지 밖에 승진하지 못했으며, 어머니 역시 항구 검역소 위생원으로 일한다. 사례 F씨의 경우 할아버지가 지주 출신이었는데 큰아버지가 월남하면서 아버지는 식료품 공장 노동자로 살았다.

셋째, ‘월남자 가족’ 출신자들은 군 입대와 입당에서 제외된다. 북한에서 군 미필자와 비당원이라는 것은 곧 사회정치적 생명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군복무 경험이 없으면 입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직장이나 조직에서의 승진, 사회보장 혜택 등에서 배제의 대상이 된다. <표3>에 나타나듯, 부모 세대에서 군복무를 했거나 입당을 한 사례는 단 한 사례도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월남자 가족’ 출신의 부모세대들은 직업, 입대, 입당 등 사회정치적 영역에서 철저하게 차별과 배제를 받았으며, 이것은 곧 그들이 형성할 수 있는 사회관계자본도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출신 배경이 세대를 이어 전승되어 신분 세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른 점은 일부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월남자 가족’ 출신성분의 삶을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출신성분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노력은 자녀가 남자인 경우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출발은 군 입대에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남자의 경우 사회정치적 생명이 군 입대에서 시작되며 군입대는 자녀가 유익한 사회관계자본을 축적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군입대를 하면 입당과 대학 진학의 기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군 복무를 하고 입당을 하고 대학을 나모면 정치 간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높아진다. 이러한 북한에서 출신성분 바꿔치기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회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했다. 기본적인 조건은 인맥과 경제력인데 이 둘만으로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심층면접에 참가한 사례들 중 출신성분 바꿔치기에 성공한 사례가 2건((A씨와 E씨의 사례)이 있는데 이 두 사례 모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사회통제가 느슨해졌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사례 A씨의 아들 경우는 원래 출신성분으로 인해 군입대 자격이 없다. 그러나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많은 인명 손실이 발생하여 군대에서도 초모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자녀들도 군입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마침 교환

수로 일하고 있던 딸이 군행정위원장에게 청탁하여 행정위원장이 A씨 남편의 문서를 지배인으로 고쳐줘 아들은 해안경비대로 군복무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A씨 아들은 군복무 활동을 잘 해 이후 군관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할 수 있었다.

사례 E씨의 경우는 부모가 모두 함흥 의과대학을 나온 인테리 출신이다. 아버지는 구역 병원 과장이고, 어머니는 항구 검역소 위생원이었다. 누나 역시 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하여 동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어머니의 직업은 돈을 모으는데 유리하였다. 선박이 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위생원의 건강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선원들은 검역 통과를 수월하게 넘기기 위해 위생원인 어머니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렇게 돈을 모은 어머니는 아들을 군 입대시키기 위해 2002년에 문서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도당 문서국 기무요원이나 기무처 사람 들이 문서를 다루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15만원의 돈을 뇌물로 주어 문서 변경에 성공했다. 당시는 국가로부터 한달 급여로 부모님이 몇십원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15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액수였다. E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텔레비전 한 대 가격이 5만원 정도였고, 자전거 한 대 값이 8천원에서 만원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아들을 군입대시키기 위한 부모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2년 당시만 해도 군대 내 영양실조 현상이 심각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저마다 자식들이 열악한 부대에 배치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인맥과 돈을 동원해 복무 환경이 좋은 부대로 배치시키려고 했다. 당시 부모들은 경무 사령부(한국의 헌병부대), 국경 경비사령부, 인민보안성 산하 군부대(예비물자 지키는 곳) 순으로 자식을 보내고자 하였다. 그래서 E씨의 부모도 도 군사동원부 작전부(군 편성권 및 배치권을 가짐)에 십만원의 돈을 넣어야 했다. 이로써 E씨는 국경경비대로 복무할 수 있었다.

부모의 인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경우라고 해서 자녀 세대에서 모두 군입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례 B씨의 남동생 경우에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군 입대를 하였는데 대부분 건설공사관에 동원되어 영양실조로 죽기 전에 탈영하였다가 ‘생활제대자’(군사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탈영한 대상)라는 낙인만 받고 도시 내 공사장으로 배치받았다.

사례 C씨의 경우는 아버지가 열성 노동자로 산 덕분에 군 입대를 하였고, 군복무 생활을 잘 해 입당까지 했다. 또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군부대에서는 군관학교를 보내 별을 달아주려고 노력했으나 신원조회에서 월남자 가족이라는 것이 밝혀져 군관학교 입학이 좌절되었다. 또 부대한 간부는 사회 대학이라도 진학시켜주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학 진학 역시 월남자 가족 출신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문건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열심히 산 덕분에 자신이 군 입대를 할 수 있었고, 자신이 군대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입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보다 열심히 노력하면 출신성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대 후 C씨는 잠시 고향의 한 기업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1996년부터 당 소속의 무역회사에 취직해 중국을 오가며 무역사업 일을 하게 되었다.

‘월남자 가족’ 출신 배경은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성도 군 입대와 대학교 진학에서 제외된다. 사례 B씨의 경우는 학교 성적이 우수했다. 꿈도 약사나 의사가 되고 싶어 약대나 의대에 진학하려고 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월남자 가족’ 출신임을 처음 알게 되었고 약대나 의대 진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대신 석탄전문학교를 가라고 권유했지만 학교 졸업 당시 지방서에 1, 2지방에 군대로, 3지방을 의대로 썼다. 그는 부모가 하지 못한

입당을 자신이라고 하고 싶어 군대에 가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월남자 가족이라고 하여 군 입당도 보류되고 말았다.

‘월남자 가족’의 자녀 세대들은 자신이 ‘월남자 가족’ 출신이라는 사실을 대체로 인민학교 소년단 입당을 계기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소년단 입당은 김정일 생일인 2.16, 김일성 생일인 4.15에 차례대로 하고 가장 마지막 입당은 6.6절(국제아동절)에 한다. 사례 E씨와 F씨는 모두 6.6절에 소년단에 입당을 하였다. 학급의 5% 정도의 학생들이 2.16에 입당하고, 그 다음 나머지 90%의 학생들이 4.15에 입당하고, 나머지 남은 5% 정도의 학생들이 6.6절에 소년단에 입당한다. 끝에 입당하는 학생들은 창피하고 위축되며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 이미 유년기 시기부터 그들은 출신성분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소년단에 입당하면 학생들은 별(계급장)을 달아주는데 입당한 날짜 순서대로 별의 수가 결정된다. 하지만 마지막 6.6절에 입당한 학생들에게는 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F씨의 경우 강원도에서 전학 온 군관 장교 자녀 중 정신지체아가 있었는데 그 학생도 별을 달아 주면서 자신에게는 별을 달아 주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어린 시절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그 사건을 계기로 F씨는 학교생활을 등지고 매일 구역 도서관에 가서 세계명작동화(북한에서는 세계명작만화라고 부름)를 닦치는대로 읽었다고 한다.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이자 위안이었다. 또한 그는 소년단 사건 이전에 꿈이 비행사였는데 이후 꿈이란게 없어졌다고 한다.

<표2> 구술자의 월남자 가족의 이력 및 관계지속성

사례	가족 내 월남자	월남자의 고향	북한에서의 직업	남한에서의 직업	생존 여부	관계 지속성
A씨	시아버지, 시숙부	강원도	시부-동원 부장 시숙부-모름	시부-정미소 시숙부-국회의원	시부-사망 시숙부-생존	지속
B씨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함북 청진	모름	교육계	사망	지속
C씨	할아버지	경북 성주	공장 노동자	모름	모름	-
D씨	할아버지	평남 강서	정미소 운영	모름	모름	-
E씨	큰할아버지	전북 전주	의사	모름	모름	-
F씨	큰아버지	함북 청진	사로청 청년동맹 위원장	기술자	생존	지속

<표3> 구술자 및 가족의 북한에서의 이력

사례	가족 관계	학력	직업	군복무	입당여부	탈북여부	생존여부
A씨	본인	중학교	가정주부	X	X	O	O
	남편	대학교	탄광 노동자	X	X	O	X
	딸	고등	교환수	X	X	O	O

		중학교					
	아들	군관학교	군인	0 (해안경비대)	X	O	O
B씨	본인	전문학교	창고보위대	X	X	O	O
	아버지	대학교	탄광노동자, 약초관리소	X	X	X	X
	어머니	인민학교	가정주부	X	X	O	O
	남동생	고등 중학교	군복무	O	X	O	X
C씨	본인	고등 중학교	무역일군	O	O	O	O
	아버지	중학교	공장 노동자	X	X	X	X
	아내	고등 중학교	가정주부	X	X	X	X
	딸	고등 중학교	공장 노동자	X	X	X	O
D씨	본인	고등 중학교	선반공	X	X	O	O
	아버지	고등학교	연합기업소 노동자	X	X	X	X
	어머니	중학교	노동자	X	X	X	X
	오빠	고등 중학교	노동자	X	X	X	O
	남편	고등 중학교	축구선수	X	X	X	X
	아들	-	-	-	-	O	O
E씨	본인	고등중학 교	군인	O	X	O	O
	아버지	대학교	의사	X	X	X	O
	어머니	대학교	검역소 위생원	X	X	X	O
	누나	전문학교	의사	X	X	X	O
F씨	본인	고등 중학교	브로커	X	X	O	O
	아버지	중학교	공장 노동자	X	X	X	X
	어머지	중학교	공장 노동자	X	X	X	X
	큰누나	고등 중학교	공장 노동자 →주부	X	X	O	O
	작은누나	고등 중학교	공장 노동자 →주부	X	X	O	O
	형	전문학교	철도정비사	X	X	O	O

## 2. 북한 탈출의 사회관계자본으로서 ‘월남자 가족’

## 1) '월남자 가족'이 북한 탈출 기회의 사회관계자본으로 작용한 사례들

심층면접한 6명의 사례들 중 3명은 가족성원의 일부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월남자 가족'으로부터 북한을 탈출할 수 있는 첫 기회를 제공받아 '월남자 가족'이 북한을 탈출하는데 결정적인 사회관계자본으로 작용하였다. <표4>에서 보이듯, 사례 A씨는 남편이 먼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월남자 가족'의 도움으로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오게되었고, 이후 본인과 자녀들이 남편의 도움으로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온 경우이다. 사례 B씨는 어머니가 먼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월남자 가족'의 도움으로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왔고, 이후 B씨 본인도 어머니의 도움으로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올 수 있었다. 사례 F씨의 경우는 가족성원 다수가 동시에 '월남자의 가족'의 도움으로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온 후, 나머지 한명 남은 가족성원을 남한으로 데리고 왔다.

A, B, F씨의 사례처럼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표2>에서 보이듯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월남자 가족'이 생존하여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역시 북한에서 사회적·경제적 처지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남한에 있는 '월남자 가족'과의 관계 회복 시도에 응할 수 있었다. 각 사례 및 그의 가족들이 탈북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A씨 사례>

2006년 2월 경, A씨의 남편은 중국에서 누군가 오라고 도움을 주겠다고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그 이후 소식이 없었다. 같은 해 9월 남편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 딸을 국경 부근에서 만나게 되었고 딸은 아버지를 데려오겠다고 중국에 갔으나 딸 역시 이후 소식이 끊겼다. 곧 이어 남편과 딸은 행방불명자(이하 행불자)로 처리되었고, 당시 인민반장이었던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되고, 아들은 군관학교 졸업후 군대 배치를 받았지만 2년 뒤에 강제로 제대되었다.

A씨는 남편과 딸이 중국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생계가 막막해지자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에 어떤 여자가 두부를 사러 왔다며 집에 들어왔는데, 두부 한모를 싸 줬는데 그 여자는 두부 다섯모의 값을 주며 잔돈을 가지고 장마당의 여관 옆으로 나오라고 말하며 사라졌다. 약속된 장소에 가보니 그 여인은 A씨에게 남편이 쓴 편지와 돈을 건넸다. 남편으로부터 연락은 그 이후 몇 번 더 계속되었다. 마침내 2010년 10월 경 A씨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아들과 함께 탈북했다.

A씨는 남한에 들어온 후 남편의 탈북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시숙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북한에 있을 때 시아버지만 월남한 줄 알았지 시숙부도 월남한 줄 몰랐다가 남한에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남한에 내려 온 후 40세에 돌아가셨고 재혼을 했지만 슬하에 자녀가 없었다. 하지만 시숙부는 남한에서 정치인과 교육재단 설립자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며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있었다.

### <B씨 사례>

B씨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친가족과 외가족 모두가 월남자 가족이다. B씨는 북한에

살 때 평소에 월남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외할아버지 쪽에서 중국의 인편을 통해 어머니에게 자주 돈을 보내왔다. 외할아버지는 언론을 통해 북한에서 기근으로 많은 북한주민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사람을 보내 B씨의 어머니를 찾았다. 처음에는 고향인 함북 청진으로 사람을 보냈다가 어머니가 시집온 함북 명천으로 찾아와 소식이 닿게 되었다. B씨는 외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이 없었으면 자기 가족들도 고난의 행군 때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처음 외할아버지의 소식을 인편을 통해 전해 들었을 때에 B씨의 어머니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당황해 하셨지만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머니의 과거 가족 인적사항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서 믿게 되었으며, 받은 돈으로 식량을 사먹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두 세 차례 큰 단위의 돈이 보내져 왔고, B씨 쪽도 돈을 잘 받았다는 확인을 위해 가족사진을 보냈다. 그러던 중 2002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소식이 와서 어머니가 중국으로 가셨다. 그런데 중국으로 가지마자 어머니는 비행기로 남한에 가셨다고 한다. 어머니가 중국으로 가신 후 일주일 후에 B씨는 어머니를 중국으로 넘겨 보낸 사람이 와서 어머니가 남한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의 남한행으로 아버지는 쓰러져 누우시고 B씨는 8개월 동안 보위부와 안전부에 불러다니며 취조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어머니가 남한에 간 것을 알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가 중국에서 납치당한 것 같으며 오히려 보위부 간부에게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연극을 해야만 했다. 그때만해도 B씨는 어머니가 무사히 남한에 가길 원하는 것보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더 컸다고 한다. 어머니가 탈북하고 난 4년 후인 2006년에 갑자기 어머니가 북을 다시 들 어오려고 한다는 소식이 왔다. 소식을 전한 사람은 한국에 정착 못하고 북에 넘어가려고 중국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행불’로 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B씨는 어머니를 데려오기만 하면 가족 모두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 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다. B씨는 중국에 가서야 어머니가 한국에 있으며, 어머니가 B씨를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B씨는 북에 남동생이 있고 해서 다시 북에 돌아가려고 했으나 그를 북한에서 데리고 나 온 사람이 북한으로 가는 경비를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남한행을 택했고 마침내 2007년에 남한에 들어와 어머니와 상봉을 하게 되었다.

B씨 역시 남한에 정착한 후 북한에 남아있는 남동생을 데려오기 위해 여러 차례 브로커를 보냈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1년 만에 남동생을 찾아 중국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중국에서 공안기관에 걸려 체포되었다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고 한다. B씨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남동생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차라리 북한에 돈을 보내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면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 <F씨 사례>

F씨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질병으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다. 이 시기 큰 누나가 사기결혼을 당함으로써 집안 재산이 모두 사라져 각자 먹고 살아가기 위해 남은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큰 누나와 작은 누나는 중국 농촌으로 시집가서 살게 되었고, 형은 철도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F씨 본인은 작은 누나의

권유로 북한 여성을 중국으로 시집보내는 브로커 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그러던 중 함경북도 연사군에 살고 있는 큰 이모 댁으로 큰 누나가 편지를 남기고 갔다. 편지는 중국에 있는 큰 누나가 남한의 KBS에 이산가족을 찾아달라는 편지를 보내서 그 방송을 보고 남한에 있는 큰 아버지가 큰 누나와 연락이 닿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으며, 편지에는 큰 아버지의 사진도 함께 동봉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때 가족들이 모두 남한행을 결심했던 것은 아니다. 브로커 생활을 하고 있었던 F씨는 공안기관에 걸려 노동단련대에 수용되었는데 그곳에서 탈출하게 되면서 큰 누나가 있는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탈영으로 인해 형에게 반드시 피해가 가기 때문에 형도 큰 누나 집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큰 이모 댁에 편지를 남기고 갔으며, 이 계기로 형도 북한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까지 만해도 F씨는 중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다. 그러던 중 2006년에 남한에 있는 큰 아버지로부터 큰 누나에게 다시 연락이 오면서 중국에 살고 있던 F씨의 가족들은 2007년에 동시에 남한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2008년 중국에 살고 있는 작은 누나도 남한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두 누나가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은 함께 입국하지 못했다.

## (2) ‘월남자 가족’이 북한 탈출 기회의 사회관계자본으로 작용하지 않은 사례들

C씨와 E씨, 그리고 <D씨>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세 명의 사례들과 달리 탈북과정과 남한 입국 과정에서 남한에 있는 ‘월남자 가족’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북한에 살고 있을 때 남한에 살고 있는 ‘월남자 가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이들은 월남자의 생존여부조차도 알지 못하였으며,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월남자와의 어떤 연계도 없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세 사례들은 각자 전혀 다른 동기와 경위로 북한을 나와 남한에 들어오게 되었다.

C씨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사업 때문에 중국에 자주 나와 있었고, 그러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자진하여 남한행을 택하였다. E씨의 경우는 국경경비대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어 탈북경로나 방법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개인의 정치적 의지로 남한행을 택하였다. D씨의 경우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생계를 위해 중국 농촌에 취직하여 살다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세 사례들은 위에서 살펴본 A, B, F씨의 사례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후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성원을 남한에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것과 달리 각각 다른 경로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다른 선택의 경로를 보이는 데는 위의 A, B, F씨의 사례와 달리 이 세 사례들의 경우는 남한에서 본인의 처지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성원들이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C씨의 경우는 북한에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인 딸(이미 20세가 넘은 성인임)에게 돈을 보내는 방법을 택했다. C씨는 남한에 와서 열 살 어린 탈북자 여성(무용수 출신)과 결혼하여 1세의 아들을 두고 있다. D씨는 북한에서 시어머니가 혼자서 기르고 있는 아들만을 남한에 데리고 왔다. D씨는 남한에 와서 탈북 청년(연하남)과 재혼하여 살고 있으며, D씨의 시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작업반장을 하고 있는 큰 아들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 E씨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남한에 데리고 올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E씨의 경우는 현재 자신의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고, 아버지, 어머니, 누나는 모두 북한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어 나름대로 북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E씨는 혹시라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었다.

### 3. 남한사회 내 포섭을 위한 사회관계자본으로서 '월남자 가족'

탈북과정에서 남한의 '월남자 가족'의 도움을 받았는가 아니면 받지 못했는가의 여부는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월남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 탈북하게 된 A, B, F씨의 사례의 경우는 남한사회에 비교적 빠르게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세 사례들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는 남한의 '월남자 가족'의 사회관계자본이 활용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A씨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숙부가 부유한 정치인, 교육인 출신으로 A씨의 딸은 시숙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취직되었으며, 또 의사인 남한출신 남성과 결혼하였다. A씨의 아들 경우는 현재 캐나다로 영어유학을 보냈으며 돌아온 후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A씨 본인도 시숙부의 도움으로 부산에서 따로 아파트를 가지고 살고 있다.

B씨 경우는 남한에 있는 '월남자 가족'이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모두가 있지만 탈북은 외할아버지 쪽의 도움을 받았다. B씨가 남한에 왔을 때 외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의 딸들이 살아있어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 딸들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아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명의 딸은 교수로 재직 중이고 다른 한명의 딸은 미국 이민자이다. 남한에 들어온 초기에는 20대 미혼이었던 B씨는 교수인 이모로부터 남한출신 남성을 소개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함북 무산 출신의 탈북자 남성과 결혼을 하였다. 그의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몇 개월 전에 아들을 출산하였다. B씨는 아들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하였다.

F씨의 경우는 탈북을 도와준 남한의 '월남자 가족'이 큰아버지가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중형 빌라에서 사는 중산층에 속한다. 큰아버지의 아들도 중장비를 운전하는 직업으로 풍족한 생활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큰아버지가 6.25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인데다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을 받았으며 국가유공자 후손으로 보훈 혜택을 받고 있다. B씨의 큰 누나와 작은 누나는 모두 남한에 와서 탈북자 남성과 재혼을 하였다. 특히, 큰 누나의 남편 역시 월남자 가족 출신인데, 남편의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부유하게 산다. B씨의 형은 남한에서 만나 결혼한 형수(탈북자 출신)의 권유로 현재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 B씨는 현재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이다. 그가 시나리오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 출신 배경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던 사춘기 시절 위안거리 삼아 매일 구역 도서관에서 가서 세계명작집을 탐독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세 사례들과 달리 C, D, E씨 사례들은 남한의 '월남자 가족'이 살고 있지만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C, D, E씨 세 사례들은 남한에 들어와서 남한에 있는 '월남자 가족'과 관계 형성에 대해서도 다르게 대응하였다. C씨의 경우는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중친회에 전화도 해보고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수소문도 해봤지만 할아버지의 이름만 알 뿐 생년월일을 알지 못해 결국 찾는데 실패했다. D씨의 경우도 하나원에 나온 6개월 후부터 사

돈의 팔촌 친척이라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헛수고였다. 과주 지역에 월남한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산다는 얘기를 듣고 과주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 할아버지의 소식을 탐문했지만 실패했다. C, D씨 경우 모두 남한에서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친척이 있으면 심리적 위안이 될 것 같아 찾고자 애썼다. 하지만 D씨의 경우는 친척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보여준 데 반해, C씨의 경우는 친척 찾기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친척을 찾아 봤자 다른 세계에 살다 왔으니깐... 주변에 다른 탈북자들 중에서 가족 만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만나 봤자 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정도 없고 문화도 틀려서 섞이지 못하겠더라 하고...외면당하고 말더라.”며 덧붙였다.

하지만 E씨의 경우는 남한에 있는 혈육을 찾고자 하는 의욕을 아직 갖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장본인이 남한에 있는 ‘월남자 가족’ 때문이라는 원망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여전히 신변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특히 그는 남한에 자유가 있고 정치적 구속이 없어서 좋지만 군 복무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탈북자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겪었던 신분으로 인한 좌절을 남한에서도 또 겪는데 크게 실망하였다.

<표4> 구술자 및 가족의 남한에서의 이력과 탈북 경로

사례	가족 관계	직업	혼인상태	탈북 경로
A씨	본인	무직	사별	탈북한 가족의 도움
	남편	-	사망	월남자 가족의 도움
	딸	대학교 교직원	혼인 (배우자-남한출신)	탈북한 가족의 도움
	아들	캐나다 어학연수	미혼	탈북한 가족의 도움
B씨	본인	주부	혼인 (배우자-북한출신)	탈북한 가족의 도움
	어머니	무직	사별	월남자 가족의 도움
C씨	본인	비정규직	재혼 (배우자-북한출신)	중국에서 무역사업하다가 자력으로 탈북
D씨	본인	주부	재혼 (배우자-북한출신)	중국 농촌에서 취업활동하다가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탈북
	아들	학생	미혼	탈북한 가족의 도움
E씨	본인	무직	미혼	국경경비대로 복역 중 자력으로 탈북
F씨	본인	시나리오 작가	미혼	월남자 가족의 도움
	큰누나	주부	재혼 (배우자-북한출신)	월남자 가족의 도움
	작은누나	주부	재혼 (배우자-북한출신)	탈북한 가족의 도움
	형	신학교 재학	혼인 (배우자-북한출신)	월남자 가족의 도움

## V. 결론

남한에서 월남가족은 반공 또는 반북 이데올로기 전사로 남한의 지배체제에 순응 또는 포섭되어 살아갔다면,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은 남한의 월남가족 때문에 북한의 지배체제로부터 배척 또는 배제의 대상으로 살아가야 했다는 점에서 분단체제가 야기하고 있는 비평화의 구조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6명의 ‘월남자 가족’ 출신의 탈북자 6명을 심층면접하여 그들이 구술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 출신 배경은 모든 사회정치적 생명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들은 거주지역, 직업, 교육, 군 입대, 입당, 승진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이들은 북한에서 사회관계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회를 차단당한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월남자 가족’들에게는 부모 세대와 달리 자식 세대들은 자신의 출신 배경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공간이 열렸다. 소위 ‘광복정치’라는 미명하에 모자라는 군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그동안 군 입대를 제한하던 ‘월남자 가족’ 출신 남성에게도 군 입대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대개는 가장 열악한 환경의 군부대에 배치된다. 부모의 인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출신성분 문서를 바꿔치기함으로써 자식 세대에게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획득할 수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또한 일부 ‘월남자 가족’ 출신 북한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은 남한에 사는 ‘월남자 가족’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준 기회 공간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이 연구가 주목한 점이다. 일부 남한에 살고 있는 ‘월남자 가족’은 적극적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찾고 경제적으로 돕고 마침내는 남한으로의 탈출까지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끈이 되었다. 남한사회에 정착 후에도 이들이 남한사회에 빠르게 포섭되는데 남한의 ‘월남자 가족’은 중요한 사회관계자본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들은 남한에 사는 ‘월남자 가족’과의 연계 없이 탈북에 성공하였다. 또한 그들 중 일부는 남한에 있는 ‘월남자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물론 남한사회에서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에게는 북한에서 월남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더 이상 배제와 차별의 기제로 작동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탈북자’라는 새로운 낙인이 배제와 차별의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또 다른 차원의 분단체제가 야기하고 있는 구조적 폭력에 의한 이중의 질곡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살아가야 하는 가족성원 일부에게는 ‘월남자 가족’이라는 낙인 위에 ‘월경자 가족’이라는 이중의 낙인이 보태져 과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은 살아가기 위해 떠나간 가족을 ‘행방불명’ 또는 ‘사망’ 처리해야 하고, 떠나온 가족은 남아있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남한에서 자신의 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감추어야 한다. 이처럼 분단체제는 탈냉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을 재생산하고 끊임없이 남과 북, 또는 이념과 혈육의 경계선에 불안정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다.

모든 북한의 ‘월남자 가족’ 출신 주민들이 탈북을 하는 것은 아니며 남한행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심층면접에 참가한 사례들은 극히 소수만이 남한에 살고 있는 ‘월남자 가족’의 도움으로 남한으로의 이주를 성공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설령 남한에 살고 있는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들이 모두 남한에 살고 있는 ‘월남자 가족’과 관계를 활발하게 지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관계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들은 지극히 소수의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분석과 해석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이 연구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으며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례들이 쏟아낸 엄청난 양의 구술자료에 대한 분석작업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 연구가 향후 수행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있다.

## 참고문헌

- 김국신 외, 『북한인권백서 2011』,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김귀옥, “글로벌 시대 한국 이산가족의 정체성과 새로운 가능성”, 『사회와 역사』 제81집, 2009.
- \_\_\_\_\_, “냉전시대의 경계에 선 사람들—월남자·월북자·납북자”, 『황해문화』, 통권 제67호, 2010 여름호.
- 김종균, “구술을 통해 본 분단 트라우마의 실체”, 『통일인문학논총』 제51집, 2011.
-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4』,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재인, “서사유형과 내면세계: 기혼여성들의 생애이야기에 대한 서사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2005.
-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2005.
- 조은, “분단사회의 ‘국민 되기’와 가족: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의 구술 생애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 제71호, 2006.
- \_\_\_\_\_, “전쟁과 분단의 일상화와 기억의 정치: ‘월남’가족과 ‘월북’가족 자녀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77집, 2008.
- \_\_\_\_\_, “부르디외를 빌려도 될까요?: ‘월남가족’과 ‘월북가족’의 계급재생산에서 문화자본 읽기”, 『문화와사회』, 통권11호, 2011 가을/겨울호.
- Arkinson, Robert, "The Life Story Interview",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Vol.44, 1998.
- Hatch, J. Amos and Wisniewski, Richard. *Life History and Narrative*, London: The Falmer Press, 1995.
- Nouri, Marilyn and Helterline, Marilyn. "Narrative Accrual and the Life Course", *Research on Aging* 20(1), 1998.

<토론문>

##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 일상화된 내전과 냉전, 식민주의 지속으로서 분단의 폭력성 —

정태현(고려대학교)

김교수님의 훌륭한 정리에 대해 토론자도 동의함. 과거를 통해 현실에 효용있는 애기의 발전을 위해, 발표문에서 김교수께서 맛만 보여주고 남긴 ‘문화적 폭력’에 대한 추가의 말을 하고자 함. 토론자 생각에 이 부분은 소절로서 구분하기보다 장으로 구분해서(후일 단독 논문이나 단행본으로 나아가면 더더욱 바람직) 설명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고 현재적 의미도 심각하다고 봄.

\* 분단 이후 국가폭력의 변화 양상 : 문화적 폭력의 내면화, 트라우마의 정치사회학 심리학적 본격적 진단과 탐구가 절실한 시점

--> 문화적 폭력의 내면화란, 분단이 불러 온 구조적 폭력에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이것이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깊게 내면화되어 관성화되어 실제 현실에서는 훨씬 심각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의미.

-실제로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은 경제성장과 민주화, 탈냉전 조류에 따라 현상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과거와 달리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여부와 그에 따른 법 적용이 판결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변화.

-문화적 폭력의 경우는 검찰, 언론, 정치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직접적, 구조적 폭력이 한국민의 정신세계에 내면화된 결과, 오히려 점점 증가하거나,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는 정도가 커지는 추세로 보임.

-한국의 경제성장, 북한의 경제위기에 따른 체제경쟁 승리의식이 한국 사회 전반의 분위기. 이에 따라 분단체제하에서 북에 대한 공포, 혐오감이 ‘무시’ 의식으로 변화함. 탈북자들이 남쪽 사회에 정착하면서 ‘탈북자’가 아니라 ‘조선족’이라고 가장해야만 오히려 덜 차별받는 현실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지난한 과정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분단체제 청산의 문제를, 이미 해결되었고 시간이 가면 흡수통일될 것이라는 의식에 도취되어 있는 이명박 정부 인사들 역시 문화적 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자? 수구에 휩쓸려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는 한국 보수의 이념적 실천적 취약함 역시 분단의 문화적 폭력이 전사회적으로 개인마다 내면화된 결과 나타난 한

국사회의 특징을 반영. 반북론에 의지한 채, 또는 그에 휩쓸린 채, 스스로에게서 찾고 과시할 정체성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 흡수통일을 하려고 해도 그에 따른 정책이 따라야 하는데, 반북론과 근거가 뚜렷하지 못한 북한붕괴론에 기댄 채, 미국이나 일본의 극우적 목소리에 동조.

-북핵문제를 두고 역지사지해서 비춰보면서 한국의 안보문제를 진정성있게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과연 학계에 얼마나 되는지 의문. 보수의 포스를 유지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세현명한 정치학자는 너무나 극소수. 정치하듯이 정치'학'을 하는 정치학자들이 북핵문제 의제를 전담하는 폐해의 산물이기도.

-즉 분단체제의 국가폭력은 일반 민주주의 진전과 함께 직접적 구조적 폭력은 줄어들었지만 국민 전반의 정신세계에 분단 폭력성이 본인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깊게 내면화되어, 분단체제 청산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정치구조나 억압구조의 물리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개개인의 심리-마음까지 구속한 문화적 폭력의 내면화, 일상화.

-적대적 분단의 심리구조를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불러 온 문화적 폭력이 개개인의 심성에 내면화되면서 뿌리박은 트라우마는 정치적 권리의 표현도 사실상 구속함. 87년 이후 25년동안의 선거에서 전혀 변하지 않은 '지역감정'도 그 근거에는 문화적 폭력-트라우마가 존재. 辭典的 의미에서 가장 보수에 충실했던 디제이=빨갱이 관념이 디제이 사후에도 지속적인 영향력.

-오랜 기간 동안(이제는 이렇게 표현해야 할 정도로 짧지 않은 기간이다) 진보정치 세력의 제도권 진출 장벽도 그 산물임. 부자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너무나도 철저하게 계급투표나 계급정치를 하는데 반해, 노동자 농민 청년 등은 결과적으로 이를 외면하는 상황도 사실은 실제의 삶을 구속하는 트라우마의 결과. 일방적으로만 진행되는 계급투표 계급정치.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얼마 전에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서 극좌부터 극우정당까지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현주소는 심각한 수준임.

-사실 민주화운동진영 내의 이른바 NL-PD간의 여전한 대립도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내면화에 따른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이제는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민주화와 분단체제 청산, 평화 구축과 노동 복지가 상호 뿔 수 없는 과제로서 둘 중 어느 하나를 이루지 않으면 나머지도 이를 수 없는 성격임에도 한 편의 과제를 중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운동의 대의에 헌신하고자 하는 가장 선진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수구세력일수록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운동세력들이 20년 넘게 대립해오고 있는 현실을 해석하고 해소해야 하는 시점임. 학계는 이 점에 대해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

-분단현실과 직접적 구조적 국가폭력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민족문제를 의제 밖으로 밀어내고 의도적으로 북한과 거리를 둬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장이 꽤 넓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반북에도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지만 어버이연합 수준의 적대

적 반복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반복론에 기대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거꾸로 바꾼 과거 ‘민주화인사’들이 이런 경우에 속할 것.

-그 때문에 일부세력은 오히려 민족문제, 북한문제를 과잉 방어하고 그럴수록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도 트라우마의 산물 아닐까? 최근 통합진보당 문제도 내부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권력투쟁이 근거에 있기 때문에 격심하게 나타나는 것이지만(사실은 이 점이 더 본질적일 것이다), 그러한 대립의 역사적 연원도 분단체제하에 이미 깊게 내면화된 문화적 폭력의 트라우마 때문에 쌍방간에 이미 정치적으로 합리적으로 풀 수 없을만큼 굳어지고 악화된 왜곡현상 중의 하나가 아닐까? ‘당권파’ 논리에 동조하지 않는 토론자에게도, 극우언론을 필두로 한 전언론의 ‘당권파’ 때리기 현상의 이면에 이에 휩쓸려가고 있는 전사회적 문화적 폭력-트라우마가 보인다.

<토론문> 별도 인쇄물로 제공

국가폭력과 분단, 그리고 민중의 집단적 한  
한국문학에 나타난 전쟁 기억의 양상

고인환(경희대학교)

<토론문> 별도 인쇄물로 제공

## ‘월남자 가족’ 출신 탈북자의 사회관계자본의 변형

김귀옥(한성대학교)

## 세션 3 » 한국사회의 비평화적 소통구조

• 사회 임홍배(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 한국사회 갈등의 특징과 해결 방향

정주진(단국대학교)

### 다문화시대 통일교육의 복합적 지형과 과제

조정아(통일연구원)

### 대치동, 타워팰리스 그리고 흰색 자전거:

드라마 「아내의 자격」과 (한국에서)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 엿보기

황영주(부산외국어대학교)

### • 토론

박재근(사회통합위원회)

박영자(이화여자대학교)

김엘리(성공회대학교)



# 한국사회 갈등의 특징과 해결 방향

정주진(단국대학교)

## I. 갈등 증가의 원인 탐색

### 1. 공공갈등의 증가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전, 후의 시기다. 이때 한국사회는 온갖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 시기에 전국을 뒤흔든 갈등은 동강댐 건설 갈등,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이념 갈등, 고양시 러브호텔 건설 갈등, 의약분업 갈등,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건설 갈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갈등 등이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다. 매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각종 갈등은 갈등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위에서 언급한 대형 사회갈등의 특징은 모두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이라는 것이다. 갈등해결 연구 영역에서는 이런 종류의 갈등을 ‘공공갈등(public conflict)’이라 부른다. 공공갈등은 주로 공공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생한다.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강행되면 강력한 저항이 뒤따르게 되고 갈등은 대립을 넘어 폭발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공공갈등이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했고 한국사회의 갈등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공갈등의 제일 큰 특징은 민주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는 것이다.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시민이 공공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제대로 형성되고 전개되지 못한다. 반면 민주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시민 사이에 상호 소통의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의 질과 수준에 따라 공공갈등이 발생한다. 공공갈등이 형성되고 제대로 전개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다.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 결정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은 시민을 배제시킨 정책 결정을 비판하고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을 억압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sup>1)</sup> 이런 최소한의 조건에 기초해 공공기관과 시민의 관계가 성숙하면, 즉 양측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협력(collaboration)에 기초한 비교적 수평적 관계가 될 경우 공공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러나 관계가 수직적이어서 공공기관이 여전히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따를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저하게 높아진다.

1) 정주진,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서울: 아르케, 2010), pp. 55-63.

공공기관과 시민의 관계, 그리고 공공갈등 발생의 상관관계는 양측이 자신과 상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공공기관이 스스로를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시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시민들을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한다면 공공기관에게 있어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실행은 당연한 것이 된다. 시민이 스스로를 공공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 권리를 가진 주체로, 공공기관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로 여긴다면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실행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자신과 상대에 대한 이런 규정 차이가 공공정책을 둘러싼 공공기관과 시민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서는 이런 규정의 간극이 크지 않다. 공공기관은 자신이 정책 결정의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동시에 시민에게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 시민은 자신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관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공 서비스 제공자로서 인정한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공공갈등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과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자신과 상대 역할 규정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시민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점을 일부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신의 일방적인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시민은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갈등의 증가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회 현상이다. 그렇다면 공공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 또한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 공공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 참여를 통한 해결 구조와 기제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공공갈등의 증가와 함께 한국사회의 갈등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 2. 사회의 변화

한국사회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조차 따라잡기 벅거울 정도로 빠른 변화를 보여 왔다. 특별히 지난 20여 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뤄졌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을 지나 선진 산업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문화적으로는 전통적 생활 방식이 거의 사라지고 핵가족 중심의 사회가 되었으며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됐다.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사회 변화와 함께 새로운 갈등도 등장했다. 일부는 그동안 잠재해 있던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불협화음이 갈등으로 폭발된 경우고 또 다른 일부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들이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돼 가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위에서 언급한 공공갈등의 등장과 증가다. 갈등은 관계된 당사자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서로에게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때 형성된다. 과거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시절 나타난 정부와 시민들의 대립은 갈등이라기 보다 주로 정부의 억압과 그에 대한 시민의 저항에 가까웠다. 힘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사회 문제는 잠재 상태로 머물거나 잠시 수면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시민 사이의 극심한 힘의 불균형 때문에 사회 문제가 갈등으로까지 전개되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시민 사이 극심한 힘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시민 의식이 성장하면서 갈등이 형성 및 전개되고 그것을 통해 사회 문제가 비판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공공갈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 변화와 함께 등장한 또 다른 갈등은 이념 갈등의 확산이다. 과거 군사 정권 또는 보수 정권이 집권한 상황에서는 극심한 힘의 불균형으로 이념 갈등이 형성되기 힘들었다. 그러나 1997년 정권 교체와 그 후 진행된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이념 갈등이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별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이른바 ‘남남갈등’은 정권의 교체로 다른 이념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서 극심한 힘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었다.

경제적 변화로 한국은 소위 선진 산업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회원이 되었다. 짧은 기간에 이뤄진 경제 성장은 많은 면에서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 성장과 함께 부의 축적, 재산권 보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새로운 갈등이 나타났다. 소각장, 쓰레기 처리장, 공동 주택 소음, 복지시설 기피 등을 둘러싼 소소한 갈등은 물론 빈부격차 심화와 상대적 빈곤 등 고도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계층 사이의 갈등도 주요 사회 갈등의 하나가 되었다.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문화적 변화도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갈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 과거의 전통적 생활 방식이 점차 사라지고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한다고 여겨지는 ‘한국문화’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졌다. 집단주의 문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던 한국문화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된 하위문화(sub-culture)들을 포함하게 되었고 그런 하위문화의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더 많아졌다. 이른바 한국문화 안에도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상황이 빈번해진 것이다. 과거에 한국인의 특징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개인주의 문화적 특징도 산업화와 함께 한층 더 강화됐고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집단주의 문화보다 개인주의 문화의 특징을 더 드러내는 경우도 생겼다. 이런 문화적 변화와 혼재, 그리고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과 이해의 부족도 갈등의 발생과 증가에 기여했다.

### 3. 해결 기제의 부재

갈등은 인간 사회 어느 곳이나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인간은 불가피하게 갈등을 겪는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회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세상에는 많은 갈등 해결 방식이 있었다. 그런 방식들은 대부분 특정 민족 또는 종교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고안돼 후손들에게 전해진 전통적인 방식들이다. 전통적 갈등해결 방식은 개인의 선택과 참

역적 과정을 중요시하는 현재의 시각으로 본다면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조화와 구성원들 사이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기제였다. 고도의 산업사회가 되기 전 한국사회에도 공동체마다 그런 사회적 기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갈등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곧 갈등이 축적되고 있다는 의미다. 갈등이 축적되는 것은 물론 해결되는 갈등보다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많기 때문이다. 다른 사회와 특별히 다를 것 없는 한국사회에 유난히 갈등이 많아 보이는 것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많기 때문이다.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제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기제는 공적 영역에서든 사적 영역에서든 제대로 작동해 사람들의 문제를 푸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제를 말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사회에는 아직 그런 기제가 없다.

참여정부는 갈등에 관심이 많았다. 각종 사회 갈등이 폭발하던 시기에 출범했기 때문에 갈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할 기제를 만들고자 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2003년부터 갈등해결을 제도화시킨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한 후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 후 2007년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규정에 머물뿐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제의 계발에 기여하지 못했다. 참여정부는 또한 2004년 한탄강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갈등해결 기제 중 하나인 ‘조정(mediation)’을 통해 해결해보려 했으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실패했다.

현 정부도 갈등의 예방과 해결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부는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방안을 찾았다. 참여정부처럼 현 정부 역시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사회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해 오고 있다. 2011년 말 사회통합위원회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참고한 것으로 국책사업 실행과 관련한 갈등을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2)</sup> 그러나 사회적 경험, 전문 지식, 인적 자원, 정부의 의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아 실질적인 사회적 기제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낙관하기 힘들다. 다른 한편으로 갈등에 대응하는 공공기관들과 실무자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가 설치된다 할지라도 사회갈등의 해결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7월까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업의 계획 및 실행과 관련해 예상되는 갈등을 미리 분석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갈등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서울시 이외에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미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갈등을 조정 또는 심의할 조직을 만들고 있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사회적 기제, 특별히 제도화된 기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기제는 이른바 ‘갈등해결’이라는 연구를 통해 체계화된 실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갈등에

2) 『서울신문』, 2011년 9월 23일.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해 대화(dialogue)와 협력(collaboration)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sup>3)</sup> 그러나 무엇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합의가 부족하다. 또한 왜 다른 나라에서 그런 기제가 작동하는지를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비슷한 기제가 한국사회에서 작동하기 위해 어떻게 창의적인 수정과 적용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제도화된 기제가 한국사회에 도입돼 실제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그 이전에 어떤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부족하다.

## II. 갈등 전개의 특징

### 1. 갈등의 방치와 파괴적인 전개

한국사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갈등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갈등이 제대로 다뤄지기 위해서는 세 단계에서 대응과 개입이 필요하다. 첫 단계는 문제가 생기고 그와 관계된 이해 관계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 때는 예방을 위한 대응과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단계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립이 발생하고 갈등이 형성되는 시점으로 이 때에는 조기 해결을 위한 대응과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단계는 갈등 당사자들이 확정되고, 갈등 현안이 분명해지고, 갈등이 폭발하는 시점으로 이 때에는 갈등 형성에 기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갈등이 폭발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에 새롭게 발생한 문제들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대응과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는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과 개입이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특정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이 갈등으로 진화한 후에는 파괴적인 전개 과정을 거친다.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개인 갈등의 경우에는 갈등 현안과는 별도로 관계 유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보통 간접적이고 비공격적인 방식으로 갈등에 대응한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갈등의 경우는 갈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대응이 개인 갈등에 대한 것과는 다르다. 사회 갈등의 현안들은 대부분 개인은 물론 그들이 속한 집단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안녕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당사자들은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모든 자원을 투자하고 때로 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을 어기는 위험까지 무릅쓴다. 사회 갈등 당사자들의 이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국 갈등의 파괴적 전개와 장기적인 교착상태다. 한국사회가 겪은 대부분의 사회 갈등이 이런 수순을 밟았고 그런 사회적 경험에 근거해 예방과 조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갈등의 경우 전개 방식을 예상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갈등의 방치와 파괴적 전개가 가져오는 결과는 갈등 당사자들에게는 치명적이고 사회 전체에

3)정주진,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pp. 121-137.

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갈등의 파괴적 전개와 장기화로 인한 물질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다. 또한 사회갈등이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 및 필요와 관계되었다는 점에서 집단적 피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중 가장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계의 단절과 공동체의 파괴다. 갈등이 방치되는 동안 당사자들은 스스로 대립 국면을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킨다. 상호 비방, 욕설, 왜곡, 그리고 물리적 충돌 등 갈등이 파괴적으로 전개되면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인지한다. 특별히 한 공동체 안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찬.반을 두고 구성원들이 대립할 때 그 공동체는 결국 파괴되고 만다. 한탄강 댐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 제주 해군기지 갈등 등 우리가 겪은 굵직한 사회 갈등이 모두 이런 수순을 밟았다.

갈등이 모든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기제의 개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아직 그런 기제를 마련하지 못했고 여전히 갈등이 방치되고 파괴적으로 전개되는 상투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갈등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10여 년은 갈등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학습 기간이었던 셈이다. 학습의 결과 한국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는 점에 동의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둘째는 새로운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는 다른 입장과 이익을 둘러싼 개인 및 집단 사이의 갈등을 야기했다. 세계관과 가치의 차이는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재산 보호, 삶의 질 향상, 부의 축적 등 행복과 번영의 기준 차이,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는 안정되지 않은 정치적 환경이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과도기를 겪고 있으며 때문에 사회갈등을 민주적인 참여 방식에 따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공공기관과 정치권의 이해가 지극히 미미하다. 갈등 자체에 대한 관심과 심각성의 인식, 그리고 효율적인 해결 기제 마련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의 수준도 정권에 따라 기복이 심하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건설적 전개를 독려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영역을 거론할 것 없이 한국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이런 문화적 토대의 부재 또는 허약함이 갈등의 방치와 파괴적 전개에 기여하고 있다.

갈등은 이유 없이 발생하지도 않고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 조건의 영향으로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복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갈등이 종식된 것으로 오해하고 방치하면 할수록 후에 더 복잡하고 추한 모습으로 재등장한다. 특별히 갈등 당사자 개인 및 집단의 운명과 번영, 존재 이유, 미래 세대의 행복 등이 관련된 문제라면 당사자들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관철시킬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갈등이 재형성될 수 있다.

## 2. 입장 강화와 정치화

갈등은 갈등 현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position)과 갈등을 감수하고 얻으려는 이익(interest)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갈등에 처한 개인 및 집단이 갈등 현안을 심각하게 인식하면 할수록 당사자들의 입장은 강화되고 그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며 시간이 갈수록 대립은 심화되고 극적인 방식으로 표출된다. 사람들 사이의 입장과 이익의 차이는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차이를 다루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입장과 이익 차이에 대한 갈등 당사자들의 대립 수준을 낮추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갈등도 일상생활의 문제처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해결’이라는 연구와 실천 영역이 주목하는 점도 이것이다.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입장은 대체적으로 갈등 당사자의 세계관, 도덕관, 정체성 등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갈등 당사자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려 하고 때로 최악에 상황에 직면했을 때조차 타협하려 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입장의 포기 또는 타협을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자기 거부로 이해하고 입장의 포기나 타협을 강요받는다면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한다. 이런 입장은 갈등 당사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런 입장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한국사회의 갈등에서는 특별히 입장 강화가 두드러진다.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첫째는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상대의 세계관, 도덕관,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런 태도는 서로에게 도전과 공격이 된다. 둘째는 주로 입장에만 초점을 맞춰 갈등을 전개시키기 때문이다. 입장은 변하기 힘든 것이고 변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합의된 후에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입장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결국 해결책에 대한 논의와 합의로 이동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갈등이 대립을 지나 해결 과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입장의 상호 인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현안에 대한 논의와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sup>4)</sup> 그러나 한국사회의 갈등은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입장 강화를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당사자들의 불가능한 목표 설정 때문에 대립과 정체를 반복하게 된다.

입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정치화되거나 당사자들이 갈등을 정치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갈등의 정치화되는 이유는 한국사회가 이념 단절이 심하고 여전히 사회 문제를 이념 단절의 틀 안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사회갈등이 시민단체와 공공기관과의 대립으로 전개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은 갈등 당사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갈등에 대응하게 되고 결국 갈등은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대립으로 방향이 바뀐다.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적 성향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하게 정치화된다. 갈등의 정치화가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사회 갈등은 시민들의 정치 행위라는 성격을 띠고 있

4) Jayne Seminare Docherty, *Learning lessons from Waco: When the parties bring their gods to the negotiation table*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1), pp. 53-58.

기 때문에 갈등이 어느 정도 정치화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사회 갈등의 경우에는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갈등의 정치화와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갈등이 특정 당사자들에 의해 정치화되고 정치적 대립으로 전개되면 중요한 갈등 현안의 왜곡 및 소외, 다른 당사자들의 참여와 필요 외면, 대화 기회의 상실, 갈등의 조기 대응 및 해결 기회 상실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른다.

### 3. 당사자 필요의 외면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비용을 요하는 갈등으로까지 전개시키는 이유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다. 이것은 필요로 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한 것을 얻기 전에는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갈등연구에서 말하는 '필요(need)'는 갈등에 따라 안전, 인정, 자존감, 삶의 질 등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땅, 일자리, 수입원 등 생존을 위한 수단인 경우도 있다. 갈등에 따라 당사자들의 필요는 다르지만 그것은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갈등에서는 갈등에 처한 당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요'가 간과되거나 언급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갈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사자들이 입장 강화에 몰두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갈등의 모든 단계에서 소외되는 당사자가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사자 필요의 외면은 갈등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난다. 한국사회 갈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경우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필요는 소외된다. 사실 공공갈등의 발생하고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다. 필요 또는 그것의 중요성을 당사자들에게 묻지 않고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측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갈등의 근본원인이 된다. 공공갈등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회갈등이 특정 개인 및 집단의 일방적인 결정과 집행 때문에 발생한다.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당사자의 필요는 외면당하거나 다뤄야 할 현안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위에서 언급한 시민단체와 공공갈등의 대립이 가장 두드러진 예라고 할 수 있다. 두 영향력이 큰 당사자 집단의 대립이 격화되면 다른 당사자들은 두 당사자들의 그늘에 가려지게 되고 결국 그들의 필요도 갈등 전개 과정에서 소외된다.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도 입장과 이익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근본적인 필요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은 봉합 수준에서 종식되고 당사자들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항하게 된다.

당사자 필요의 외면은 갈등의 왜곡된 전개를 가져오고 갈등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필요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갈등을 야기한 근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갈등은 해결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종식된다.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의 투자를 감수하면서도 갈등을 전개했음에도 문제가 원상태로 복귀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당사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갈등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같은 문제에 근거한 갈등의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 4. 소통의 단절과 대화의 부재

갈등은 충돌하는 목표를 가진 당사자들이 대립하면서 발생한다. 갈등 당사자들은 다른 당사자가 자신의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립하고 충돌의 강도가 심해지면 상호 적대감이 형성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소통의 단절이다. 당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와의 접촉이 아닌 단절을 택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며,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의 지지를 얻는데 주력한다. 이런 선택은 적대감을 강화시키고 소통 단절의 고착화에 기여하며 결국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부재로 이어진다.

대립과 적대감이 고조되는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소통을 중단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소통의 복원과 대화의 시도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갈등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립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소통 복원과 대화의 시도는 제삼자의 도움이 있을 때 더욱 용이해진다.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와 갈등의 해결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제가 갖춰진 사회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삼자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삼자가 당사자들에게 제안을 하는 방법을 통해 당사자들 사이의 직접적, 간접적 소통이 복원되고 대화가 시작된다.

한국사회 갈등의 경우 소통이 비교적 조기에 신속하게 단절되고 쉽게 복원되지 않으며 대화가 시도조차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갈등 당사자들이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갈등 당사자들은 상충하는 목표 때문에 대립하지만 상대의 협조가 없이는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갈등해결 연구가 실천과 관련해 가장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이지만 갈등 당사자들은 통상 자신들의 '상호의존성'을 부인한다. 명분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의 특성도 소통의 단절과 대화의 부재에 기여한다. 당사자들은 명분 없는 소통의 복원과 대화의 시도는 자신의 입장을 타협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때문에 역시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상대의 입장 수정, 양보, 대화 제의 등을 기대한다.

소통의 복원과 대화의 시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전문 인력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의 부재다.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감정적, 심리적, 신체적 한계에 이른 당사자들이 스스로 소통하고 대화를 모색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제삼자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고 실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회 자원이 형성된 사회들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는 아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소통의 복원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전문적 지식과 조언을 통해 입장을 타협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회 자원이 형성돼 있지 않다.

### Ⅲ. 해결의 모색

#### 1. 부정적 이해의 극복

사람들이 갈등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외면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예측불가능성이라

는 특징 때문이다. 갈등은 동일한 문제와 관련해 다른 인식, 감정적 대응, 문화적 배경, 삶의 경험 등을 가진 사람들이 대립하면서 형성되고 전개되며 어떤 한 당사자가 갈등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예측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때로 부인하려고 한다. 이에 더해 한국문화에서 갈등은 관계의 단절과 부조화를 의미하며 갈등 당사자는 관계와 조화를 깬 사람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갈등 당사자는 관계와 조화를 깬 사람으로 비난받지 않기 위해 갈등을 외면하고 부인하려 한다. 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갈등에 대응하려 한다.<sup>5)</sup> 갈등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이해는 한국문화처럼 집단주의 문화의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sup>6)</sup>

사회 갈등의 경우에는 개인 갈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위와 같은 특징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형성되고 전개된다. 사회 갈등은 대부분 집단의 입장, 이익, 필요와 관련돼 있으며 갈등 당사자들은 집단의 번영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 기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갈등에 대응하고 갈등을 전개시킨다. 동시에 사회 갈등의 대부분이 공공정책과 관련돼 있으므로 시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때로 공격적인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sup>7)</sup> 갈등을 인정하고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당사자들의 태도와는 달리 사회 갈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갈등 외면과 부인이 두드러진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갈등을 부인한다. 공공기관이 갈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대응을 사회 통합을 깨거나 공익을 외면하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정당성을 벗어난 행동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갈등 자체를 부인하거나 당사자들의 필요를 외면하는 공공기관의 위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당사자들의 공격적인 대응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갈등에 대한 감성적 대응, 문화적 영향, 그리고 사회 갈등을 제대로 해결해본 경험이 없는 집단적 경험 때문에 갈등에 대한 한국사회 전체의 이해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갈등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갈등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갈등은 개인 및 집단의 관계, 사회 환경과 구조, 결정 및 실행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개인 및 집단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갈등은 건설적으로 전개될 경우 관계, 구조, 결정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해 갈등이 파괴적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관계, 구조, 결정 방식이 유지되거나 최악의 경우 예전보다 후퇴하게 된다. 갈등의 건설적 또는 파괴적 전개는 당사자들이 어떤 대응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당사자들의 선택은 사회 환경과 구조가 당

5) 정주진,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pp. 35-63.

6) David W. Augsburger, *Conflict mediation across cultures: pathways and pattern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2), pp. 28-35.

Stella Ting-Toomey, "Toward a theory of conflict and culture," in William B. Gudykunst, Leah P. Stewart and Stella Ting-Toomey ed., *Communication, culture, and organizational Process* (New York: McGraw-Hill, 1985), pp. 71-86.

Diane LeResche, "Comparison of the American mediation process with a Korean-American harmony restoration process," *Mediation Quarterly* 9-4 (Summer 1992), pp. 323-339.

7) Jujin Chung, "A Transformative approach to public dispute resolution: a study of the US model and the South Korean cas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adford, 2008), pp. 244-251.

사자들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이해는 갈등의 건설적 전개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없고 그와는 반대로 부정적 전개에 대한 경험이 많을 때 강화된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개인 및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이해는 감성적, 문화적 영향에 덧붙여 갈등의 파괴적 전개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이해의 극복은 한국사회 갈등의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 갈등이 인간 사회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한국사회에서 특별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갈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갈등을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이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개인 및 집단의 역량이 키워져야 한다. 갈등 당사자 필요에 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조직, 특히 공공기관의 태도가 변하고, 소통 방식이 개선되며, 적극적 대응 역량이 개발되어야 한다. 개인 및 다양한 사회 집단 및 조직의 태도와 대응 역량의 변화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대화 및 협력에 의한 해결 경험의 축적, 해결을 지원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형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 2. 당사자 중심의 갈등 해결

갈등해결 연구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사자에 의한 갈등의 해결이다. 갈등해결 연구가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갈등이 당사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들이 갈등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사자들의 합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갈등이 종식될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불만족으로 갈등이 재발하거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좁은 의미에서 접근하면 ‘당사자(party)’는 갈등 현안의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갈등을 형성하고 전개시키며 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집단을 말한다. 반면 넓은 의미의 접근을 취하면 당사자는 갈등을 야기한 현안,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갈등의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 및 집단을 말한다. 때로 갈등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고 갈등의 영향을 즉각 받지 않으며 다만 간접적으로 갈등 현안에 관여하거나 갈등의 영향을 받는 개인 및 집단을 ‘이해관계자’ ‘관련당사자’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들은 당장은 갈등에 관여하지 않지만 갈등의 전개 방향과 새로운 현안의 포함 여부에 따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집단이다. 그러므로 굳이 분류하자면 ‘직접 당사자’와 ‘간접 당사자’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특정 범위 안에서 갈등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모두 당사자에 속한다. 갈등해결 연구는 이들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며 특별히 해결 과정을 계획하고 진행할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서 언급한 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당사자 중심의 갈등해결은 그러므로 이들 모두를 포함시킨 과정을 말한다.

당사자 중심의 갈등해결 원칙은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당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한국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주목해야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사회 갈등을 바

람직한 방향으로 전개시키고 해결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갈등은 흔히 상대적으로 힘이 큰 당사자 집단 사이의 대립으로 진화되고 정치화되며 미디어와 여론의 해석에 기대게 됨으로써 다른 당사자들의 관심과 필요가 소외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힘이 적은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큰 당사자들과 외부 영향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프레임(frame) 안에서 자신들의 입장, 이익, 필요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고 결국 힘 있는 당사자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프레임 안으로 진입하는 선택을 한다. 결국 일부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점점 주변으로 밀리고, 때로 갈등을 야기한 근본 문제까지 주변으로 밀리게 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한 갈등의 해결은 점점 요원해지게 된다. 당사자 중심의 갈등해결 원칙은 이런 왜곡된 갈등 전개를 예방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평등한 힘의 관계 안에서 힘 있는 당사자들의 프레임 안에 귀속되지 않고 자신의 프레임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입장, 이익, 필요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당사자 중심의 원칙은 힘에 의한 의제의 독점과 타협, 그리고 해결책 모색이 아닌 토론과 합의에 의한 문제의 진단과 점진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특정 당사자가 아닌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 이익, 필요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반영하는 해결 과정은 공정성, 투명성, 공평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지면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고 속단하기 쉽다. 그러나 비교적 동등한 힘을 가진 가장 영향력이 큰 소수의 당사자 집단들이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둘러싸고 대립할 경우 문제가 특정 단계에서 정체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가 더 많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집단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경우 영향력 큰 당사자들 사이의 대립과 정체상태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더 커진다. 나아가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힘과 영향력이 큰 당사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과정을 만들 가능성도 커진다. 무엇보다 갈등해결 과정이 반드시 담보해야 하는 공정성, 투명성, 공평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당사자 중심의 원칙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갈등해결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비효율성과 시민이 배제된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많은 갈등해결 연구와 실천이 당사자가 배제된 정책 결정과 실행에 대한 비판과 개선 모색이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갈등해결이 실행되고 있는 사회들에서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갈등해결 원칙이 환영받는 이유 또한 공공기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시민 배제에 실망한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도전은 물론 시민 권리의 회복 수단으로 갈등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들이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에 합의하는 갈등해결 과정이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당사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은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같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집단 중심의 정책 토론과 합의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필요가 반영된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시민들의 필요에 응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고 시민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공정책의 질 또한 향상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sup>8)</sup>

8) Thomas C. Beierle and Jerry Cayford, *Democracy in practice: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s* (Washington, D. C.: Resources for the Future, 2002).  
Frank E. Dukes, *Resolving public conflict: transforming community and governa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 3. 사회 환경의 변화

한국사회 갈등이 증가하고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적인 사회 환경이 갈등의 발생과 전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증가하고 축적될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사회는 물론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삶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은 그러므로 한국사회가 불가피하게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이며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없이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사자들에게 ‘대화’와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한다. 갈등에 직면한 당사자들은 이성적으로 ‘대화’와 ‘양보’의 미덕을 이해하지만 감정적 대립 때문에 스스로 대화를 시작하기 힘들고 상대의 대응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적 양보를 고려할 수가 없다. 또한 명분이 없이 입장과 감정의 대립으로 단절된 소통의 회복을 시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소통 복원, 대화 개시, 협력적 작업 등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제삼자가 필요하다. 제삼자의 존재는 당사자들에게 소통 복원을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당사자들을 접촉해 해결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대립의 중단과 갈등의 방향 전환에 기여한다. 또한 전문가로서 갈등의 분석, 당사자 및 현안 파악, 가능한 대화 및 협력 작업의 계획, 협상 및 합의 과정의 실행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적 제삼자의 존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돕는 사회 자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갈등에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는 사회의 경우 전문적 제삼자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해왔다.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은 개인, 비영리단체, 대학부설기관 등이 전문적 제삼자로서 갈등 당사자들의 필요에 답하고, 해결을 위한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공공기관과 시민 역량 향상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회에도 소수지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개인과 단체가 있지만 새로운 방식의 갈등 해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실천의 부족으로 충분히 사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화가 아닌 대립에 의한 문제 접근에 익숙한 사회와 갈등 당사자들의 태도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고려 또는 시도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차원에서 전문적 제삼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 자원 형성을 지원하고 동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도화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부 공공기관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새로운 방식을 통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와 ‘당사자 합의’라는 갈등해결의 원칙 때문에 제도화는 새로운 접근과 전문적 제삼자의 활용을 권고하는 역할을 할뿐 활용 자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화는 문제 해결 방식의 선택을 넓혀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갈등에 대응하는 공공기관, 시민단체, 시민

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당사자들의 대화와 협력에 기초한 '갈등해결'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으려면 모든 당사자 참여와 대화 과정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과정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어야 한다. 공감대의 형성과 이해의 확산은 공공기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갈등해결 방식으로의 변화가 선택이 아니라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공공기관의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시민단체의 감시 및 대시민 서비스 역할의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방식의 활용과 갈등의 건설적 대응 및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정주진,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서울: 아르케, 2010)
- David W. Augsburg, *Conflict mediation across cultures: pathways and pattern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2).
- Diane LeResche, "Comparison of the American mediation process with a Korean-American harmony restoration process," *Mediation Quarterly* 9-4 (Summer 1992).
- Frank E. Dukes, *Resolving public conflict: transforming community and governa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 Jayne Seminare Docherty, *Learning lessons from Waco: When the parties bring their gods to the negotiation table*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1).
- Jujin Chung, "A Transformative approach to public dispute resolution: a study of the US model and the South Korean cas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adford, 2008).
- Stella Ting-Toomey, "Toward a theory of conflict and culture," in William B. Gudykunst, Leah P. Stewart and Stella Ting-Toomey ed., *Communication, culture, and organizational Process* (New York: McGraw-Hill, 1985).
- Thomas C. Beierle and Jerry Cayford, *Democracy in practice: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s* (Washington, D. C.: Resources for the Future, 2002).
- 『서울신문』, 2011년 9월 23일.

# 다문화시대 통일교육의 복합적 지형과 과제

조정아(통일연구원)

## I. 서론

최근 수년간 통일교육의 위기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학교통일교육이 크게 위축되었다. 통일교육 관련 정부 예산은 증가하였고 통일부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학교통일교육용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침체는 일차적으로 남북관계 경색과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화, 안보교육의 강조와 같은 환경적 요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변화를 보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통일교육협의회, 2011). 남북한의 대립적 상황과 한반도의 긴장이 청소년층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면서 통일교육에 대한 열의와 교육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통일과 이항대립적 관계로서 안보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이 침체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통일교육이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청소년 세대의 변화 양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통일정책 홍보에서 몇 걸음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철학의 빈곤(노수미·정창우, 2011: 192)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빠르게 세계화 되고 있고, 그것을 능가하는 속도로 세계화 담론이 우리의 생활세계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섞여 같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족과 국가의 경계는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과연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어느 만큼이나 반영하고 있는가? 시대적 변화와 한반도 통일의 장기적 비전을 연결시켜내면서 청소년들이 통일의 문제를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상황으로 자각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여전히 통일에 관한 지식을 주입하고 통일을 계몽하고 있는가? 교육의 방향성과 내용 면에서 과거의 반공교육, 안보교육이나 민족통합에 중점을 둔 통일교육이 이루어졌던 시기의 통일교육의 차별성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sup>1)</sup>

1) 통일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1950년대의 정부수립 및 과도기로,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반공교육과 승공통일교육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대북 안보를 강화하는 1987년까지의 군부통치기로,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이념교육적 색채를 강화하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과 안보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1988년부터의 민주주의 이행기의 통일교육은 1992년까지의 통일 및 안보교육 시기와, 문민정부 시기의 민족통합적 통일교육 모색기, 국민의 정부 이후의 통일교육의 대안적 인식 확대와 다양화의 시기로 세분할 수 있다.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과거의 반공교육, 안보교육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 양상 중 하나인 다문화사회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인 다문화교육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통일교육 담론과 교육과정 상에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연계, 접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간 통일교육의 당위론적 기초로 제시되어 왔던 단일민족주의 담론의 변화에 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의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 II.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다문화교육의 전개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결혼이주여성 출신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자스민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판이 SNS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말의 하나인 ‘다문화사회’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다문화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쟁점이 존재한다. 혹자는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구성의 다양화라는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 다문화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국 사회는 아직 다문화사회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본다(정창호, 2011: 75). 결혼이주여성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날선 반응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주소가 이 두 지점 사이에 불안하게 위치해있음을 보여준다. 즉, 각 하위 문화집단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복수의 문화공동체가 공존하고, 공존관계의 제도화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구조적으로 잠재해있는 사회라는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박명규, 2009: 9).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 사회의 특성에 관한 논란과는 별도로 인종적, 문화적 구성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교육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결혼이주자 수,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의 객관적인 지표들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12월 현재 등록외국인 수는 982,461 명,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는 135,020 명이며,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주자는 144,214 명에 달한다(<http://www.moj.go.kr>).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주자의 자녀들이 학교에 취학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4월 초중등학교 취학자인 다문화가정 자녀는 8천명 정도였으나, 2008년 4월에는 이들의 숫자는 1만 8천명을 훨씬 넘어섰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 현재 다문화 가정 재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34,338 명,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2,058명으로 모두 36,396명이며, 전년도 대비 각각 21.4%와 3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sup>2)</sup>

다양화하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속에서 통일교육도 체제우위적 접근에서 평화공존적 접근으로 방향성이 변화하였다. ‘뉴 패러다임 통일교육’이라고 일컫는 이 시기 통일교육은 통일을 제도적, 정치적 통일로 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사람의 통합과 의식의 통합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통일을 화해와 협력을 가속화하는 사건의 누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을 견지하였다.(조정아, 2007)

2) 이주가정 자녀들의 재학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이경희, 2011: 121).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교육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2007년부터 매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정부차원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하는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일부 교과목의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2009년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의 교육 목표의 하나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중 하나로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교육 목표 수준에서 다문화교육의 관점이 반영되었다. 또한 사회,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도덕과에서는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요소로 초등학교 3~4학년 과정에 “다문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삶”이, 중학교 과정에 “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항목이 추가되었다. 사회과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습 내용으로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영역에서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와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를 갖는다.”가 제시되었다.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교육적 대응 이외에도 일반 사회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다. 황정미는 한국에서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교육 내용에 있어서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차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다루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이 교육의 대상자는 주로 내국인이다. 둘째, 교육 대상자가 이주민,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일 경우는 모두 다문화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셋째,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이다.(황정미, 2010: 103)

정희태는 다문화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방향성과 주요 내용, 교육대상을 기준으로 소수자 적응교육, 소수자 정체성교육, 소수자 공동체교육,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교육으로 구분한다. 소수자 적응교육은 가장 지배적인 교육 유형으로 주류사회로의 동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다문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습능력과 한국문화정체성 함양, 한글능력향상과 한국문화이해의 심화 등이 그 주요한 교육을 구성한다. 둘째, 소수자 정체성 교육은 소수자의 정체성 함양에 초점을 두고서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에 자부

구분	총인원	정규학교 재학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제결혼가정 자녀 (18세 이하)	97,882명 (2009, 복지부)	20,632명 (83%)	2,987명 (12%)	1,126명 (5%)	24,745명(2009년) ((100%))
외국인노동자가정 자 녀 (7-20세)	27,844명 (2008, 법무부)	834명 (66%)	307명 (24%)	129명 (10%)	1,270명(2009년) ((100%))
북한이탈주민 자녀 (9-24세)	2,775명 (2009, 통일부)	773명 (545%)	300명 (21.2%)	344명 (24.3%)	1,417명(2010년) (82.8%)

심을 가지도록 만드는데 주력하는 교육이다. 셋째, 소수자 공동체 교육은 먼저 소수자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정서적 지원망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소수 집단 간 갈등 발생 시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집단 간 상호이해의 지평을 확대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교육이다. 넷째,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교육으로서 다수가 행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시키는데 중점을 둔 교육이다.(정희태, 2010; 284)

이와 같이 다양한 범주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틀어 우리의 다문화교육은 아직 다중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정도로 ‘다문화적’이지 않으며, 교육과정은 자문화중심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소수자집단의 언어나 문화, 관습을 반영하는 정도가 미약하고, 방향성 면에서 ‘격리’, ‘흡수’, ‘동화’, ‘공존’ 등의 일관된 방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비판적 평가가 압도적이다.(박명규, 2009; 박철희, 2007; 오성배, 2010)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다문화교육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화교육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이경희: 126). 또한 양계민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을 차이 검증한 결과 다문화 사회의 긍정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 변인에서 경험이 없는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문화교육의 효과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다문화교육에 비판 중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방향성과 ‘다문화’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내용의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의 지향성과 내용 면에서는 각기 다른 방향과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문화교육이 분절화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3)</sup>

넓은 의미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민족, 인종 뿐 만 아니라 계층, 성별, 지역 등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과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편견이나 갈등문제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상호 소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하는 모든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전경숙 외 2007). 그러나 다문화를 보는 관점과 교육적 지향점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내용과 교육 목적이 강조된다.

뱅크스(J. A Banks)는 다문화교육의 접근법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기여적 접근으로, 다양한 다양한 문화집단의 영웅이나 기념일, 문화 공예품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둘째, 부가적 접근으로, 교육과정의 구조적 변화 없이 다문화 관련 내용, 개념, 주제, 관점 등을 일부 추가하는 것이다. 셋째, 전환적 접근은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목적, 구조, 관점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 집단의 관점에서 개념, 쟁점, 사건, 주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넷째, 사회적 활동 접근은 전환적 접근의 모든 요소

3) 예를 들어 황정미는 한국 다문화교육의 가장 큰 특징을 분절성이라고 본다. 다문화교육의 대상 측면에서 이주민에 대한 교육과 내국인에 대한 교육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주민 내부에서도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라는 특정 대상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측면에서는 정부 각 부처별로 기존 정책이나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민의 양성과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통합의 비전으로 수렴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개념이 부재함을 보여준다고 본다.(황정미, 2010: 117)

를 포함하면서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중시한다.

나장함은 영미권의 주요 다문화교육 학자들의 접근법을 동화를 위한 교육, 융합을 위한 교육, 다원성 증진을 위한 교육, 비주류 집단 권력 신장을 위한 교육, 사회변혁과 정의를 위한 교육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화를 위한 교육’ 접근법은 주류문화로의 동화를 표면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반면, ‘융합을 위한 교육’ 접근법은 그 동안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경시되어왔던 타문화소수집단의 지식-을 교육과정에 일부 포함하여 보다 조화로운 사회와 문화를 창출하고자 한다. ‘다원성 증진을 위한 교육’ 접근법은 다문화소수집단의 상이성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학교 내에서 다양성과 평등의 증진을 의도하고 있으나 사회적 불평등 기제를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비주류 집단 권력 신장을 위한 교육’ 접근은 전통적인 주류집단 중심의 교육과정을 거부하고 억압되어 왔던 특성 다문화소수집단 상이성을 강조하나, 한 집단 내 정체성의 다양성, 정체성들 간의 복잡성과 교차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의 정체성을 한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특권화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단일문화주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변혁과 정의를 위한 교육’ 접근법은 인종의 사회적·역사적 구성, 계층, 성별, 국가 등과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상이함을 사회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학생들이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와 같은 접근은 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이 자신들의 견해가 왜, 어떻게 주류집단의 관점으로부터 영향 받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통하여 사회정의 실천을 도모하는 것까지 확장한다.(나장함, 2010, pp.103-113)

이와 같은 유형 구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학교교육과정의 다문화교육은 벅크스의 유형 구분에서 부가적 접근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교육은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문제보다는 주류문화와 가치관의 습득에 초점을 두는 동화를 위한 교육이나, 조금 더 나아가 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초점을 두는 융합을 위한 교육, 다원성 증진을 위한 교육이 혼재해 있다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관련된 쟁점은 다문화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통합을 기하는가 하는 문제와 소수집단에 대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관여할 것이기라는 두 가지 문제로 압축된다.

### III.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의 수용

통일이 남북한의 하나의 정치체제와 단일한 제도로 수렴시키는 과정일 뿐 아니라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과 의식의 통합을 포괄하는 과정이며, 그러한 사회통합, 사람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촉매가 통일교육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사회적 통합체로 결속시키는 다문화교육의 과제는 곧 통일교육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통일 이후 남북한의 주민들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두 집단의 권력 균형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처방은 크게 보아 다문화교육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은 그 방향성과 내용 면에서 넓은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현재까지의 통일논의의 바탕이 되어온 것은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믿음이다. 비록 오랜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이질성이 심화되었지만, 그러한 이질성의 이면에는 혈연적,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이 자리하고 있기에, 통일이라는 정치적 과정 속에서 분단으로 인해 심화되었던 이질성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통일에 관한 이와 같은 관점은 혈통적, 문화적 구성이 점점 다원화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 변화와 상충한다. 다문화사회의 변화와 교육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강조할수록 ‘단일민족’인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통일 논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실제로 최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의 요소가 반영되면서 통일교육 관련 요소와 다문화교육 요소가 병치되거나<sup>4)</sup> 통일교육 관련 요소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의 핵심 내용인 다원성과 다양성이 학교급별 교육과정 총론 목표에 비중 있게 반영되고 주요 교육 내용으로 첨가된 반면, 통일교육 내용 요소는 7차 교육과정에 비해 오히려 감소되었다. 또한 범교과 학습 영역에 다문화교육이 추가되어 기존 7차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였던 통일교육에 비해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교육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전재영, 2011: 42). 일각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집단을 배제하는 ‘단일민족’과 같은 명시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북한동포’ 등과 같이 단일민족주의를 함축하고 있는 용어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국현: 179).

이에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다문화교육 논리와 통일교육의 논리를 결합시키고 다문화교육과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재설정할 것을 주장하는 연구들에서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련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다.

첫째, 기존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활용되어왔던 부분 중에서 다문화교육과의 중첩성을 강조함으로써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상호이해교육, 반편견교육, 문화이해지 수업방법 등이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에 공통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에 해당한다.(전재영, 2011; 김국현, 2011) 그간 북한이해교육이나 탈북청소년 이해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이해지 등 다문화교육에서 널리 활용되는 교육방법론과 관점이 부분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쟁점화되고 정책적 주목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왔던 다문화집단인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에 주로 이와 같은 교육방법이 적용되어 왔다. 이는 시각에 따라 통일교육의 일부로도 다문화교육의 일부로도 볼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북한주민들이나 탈북청소년과의 상호이해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으며, 통일교육의 관점이자 방법론으로 다문화교육의 관점과 방법론이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남북한의 이질성으로 인해 향후 통일 과정에서 사회의 다문화적 성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통일교육은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강조하기보다는 남북한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과 조화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변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

4) 일례로, 2009년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내용 영역의 하나로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는 문제(예: 문화 이질화,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들을 이해하고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를 갖는다.”가 제시되어 있다.

다. 이와 같은 관점은 한국 사회의 혈연적, 문화적 구성이 다양화되고 다문화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의 영향도 고려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통일의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특성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착목한다. 즉 이러한 관점은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적 동질성 회복이라는 측면보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갖는 두 집단의 만남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통일의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을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통일 과정의 다문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판단력과 해결 능력을 높이는 다문화역량의 배양이 통일교육의 핵심 주제와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김국현은 통일교육의 내용 요소로서 통일한국의 다문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도덕적 사고와 판단력을 높이기 위한 주제와 쟁점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통일한국의 생활세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문화 갈등 상황을 현재 남한의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다문화 상황 및 갈등, 통일 이후 제기될 다문화사회문제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 태도는 다문화교육의 실행 여부에 따라 차별적일 양상을 띠기 때문 다문화사회에서 진행될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을 합리적으로 인식, 분석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실천능력과 습관을 길러주는 반편견교육을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김국현, 2011: 175-180).

같은 맥락에서 정희태는 통일교육에서 남북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한이 각기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남북한 문화는 각각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서로 다른 문화집단이 공존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학습하고, 차별주의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본다. (정희태, 2010; 294-295)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장기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이질적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공존하는데 필요한 다문화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중요한 목표이자 내용으로 등장한다. 추병완은 다문화 지식(자신의 문화와는 상이한 문화들에 대한 이해), 다문화 기능(자신과는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상호작용에 관여하는데 사용되는 기능), 다문화 인식(인간의 태도·신념·가치가정이 자신과는 문화적으로 상이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문화역량의 배양을 학교통일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내용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개별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심을 길러줌과 동시에 각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특징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문화, 문화적 다양성, 반편견, 정체성, 평등, 협력, 정의 등과 같은 다문화교육의 핵심 가치와 개념들을 통일교육의 조직 개념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추병완, 2009: 335)

이와 같은 관점은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공통영역과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주요 내용을 재편해야함을 주장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간 통일교육에서 논란이 되었던 북한이해교육의 방향성 문제

도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그간 통일교육에서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다. 한편에서는 적 또는 위협대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관점이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통일교육에 안보 관련 교육내용이 결여되어 있음을 비판하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대척점에 서서 북한이해교육이 우리의 사회체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보면, 남한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문화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은 그 나름의 전통, 경험, 역사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이해하고,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강조된다(추병완, 2009: 38).

셋째, 현재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가 아니며,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혈연적, 문화적 하위집단 역시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통일의 주체이자 통일 한국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통일담론과 통일교육이 정초하고 있는 민족주의와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담론을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가 광범위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 IV. 단일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재검토와 통일교육과정의 변화

그간 통일교육에서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어왔던 것은 남과 북이 혈연과 언어와 문화를 같이하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이었다. 통일은 오랜 세월동안 하나의 민족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우리의 역사적 정통성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혈연, 언어, 문화를 갖는 사회구성원이 증가하고 이들과 그 후속세대들 역시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되는 사회적 현실은 단일민족주의에 기초했던 통일담론과 통일교육이 다문화사회라는 시대적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민족주의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살펴보자. 탈민족주의 담론에서는 민족을 역사적 실체를 가진 보편적 범주로 보기보다는 서구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출현한 ‘상상의 산물’이자 ‘창조된 문화적 구성물’로 이해한다. 그 대표적인 학자인 앤더슨(B. Anderson)에 의하면 18~19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나타났던 기술, 언어학,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이 민족적 정체성을 고안하는 데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민족이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조상의 역사에 대한 공통된 신화, 언어, 종교, 관습, 음식, 의복, 건축 등과 같은 공유된 문화적 특질, 영토에 기반하고 있는 연대감과 같은 원초적 특질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민족은 종족집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운명체로 형성된다.(박경환, 2006: 6-7)

우리의 지배적인 민족주의 의식은 단일민족의 혈통, 동일한 언어와 문화 등 객관적 공통성에 입각해 있다. 그런데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탈민족주의 담론에 의하면 한국인이 고대부터 혈연,

지역, 언어 공동체로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했다는 것은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단일민족의식은 식민지 상황에서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혈통과 계보를 강조하면서 구성된 것이다(이경희, 2011: 114).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 사회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이 근대국가의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민족주의 개념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의 경우 역사와 문화, 혈연적 기반들이 근대 이전 시기에 오래 지속되면서 큰 단절 없이 근대로 이어졌고, 전근대 시대에 기원한 문화적·혈연적 유대가 근대 민족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언어를 기초로 하여 오랜 기간 존속해온 농경문화, 가족중심의 생활관습, 같은 완조체제 하에서의 피지배경험 등이 공통의 요소가 되었고, 여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려던 집합적 열망이 더해지면서,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 경험이 중첩되어 한국인의 민족의식이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박명규, 2009:16) 민족이 근대적 구성물이라고 해도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실종되는 것이 아니며, ‘족의 신화’에 대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해서 종족적 민족관념을 단순한 허구로 볼 수 없다고 본다(이병수, 2011: 40-41).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상이한 관점은 통일교육에서 민족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창조된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민족 개념에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신화적 상상물인 단일민족의식으로부터 통일의 당위성을 도출해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더군다나 이미 우리 사회가 단일한 혈통과 단일한 문화라는 민족공동체의 객관적 공통성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과 통일교육의 암묵적 전제였던 한민족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제 식민지기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민족주의는 집단 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기능하지만, 집단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배타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과정상에서 한편으로는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강조되어 온 민족주의적 시각이 다문화주의 관점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간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 민족주의는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 국가를 형성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분단 민족주의’로서 다루어져 왔다.<sup>5)</sup> ‘분단 민족주의’의 메시지에 따르면, 민족주의가 다문화시대에 폐쇄성과 배타성의 근거로 작용할지라도 한국은 민족주의로부터 멤버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통일국가, 근대국가를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양영자, 2007, 35-36).

기존의 민족주의 담론과 통일의 당위론적 근거로 단일민족의식과 폐쇄적 민족주의를 제시하는 관점에 대한 비판은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분단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통

5) 박명규에 의하면 분단 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자기모순을 지닌 이데올로기로서 남북한은 물론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가능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활용한 민족주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단 민족주의’는 남북한의 절대성과 정당성의 기반이자 남북한 통일의 동인과 매개로서 기존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이 점에서 교육적 의미망에서 분단 민족주의는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강조점이 있다. (양영자, 2007, 35)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적 정서가 아직 강하게 남아있고, 이러한 정서가 분단 극복의 사회심리적 동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민족공동체의식이 해방 후 60년간 남북한의 통일 논의의 논리적, 정서적 기반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일의 동력으로서 민족주의를 인정하되 민족주의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여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개념으로 재개념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폐쇄적 민족주의 개념과 대비되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상을 반영하는 보다 포괄적인 민족주의 개념은 한마디로 ‘열린 민족주의’로 명명된다. 열린 민족주의는 혈연적 요소보다 문화적, 사회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며, 이질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민족개념을 강조한다.(오기성, 2003; 추병완, 2009)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성찰적 민족주의’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민족주의의 긍정적 역할과 성취를 인정하되 경계와 구분을 완화하여, 민족성을 중심에 두면서도 민족주의를 지배하는 규율이 민족의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향해 가는 민족주의를 의미한다. 양영자는 한국의 분단과 다문화상황에서는 양극단의 정교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민족주의’와 ‘국가적 다문화주의’<sup>6)</sup>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다고 제시한다.(양영자, 2007, 36-42)

통일교육에서 혈연에 기초한 민족주의 개념을 대신할 대안으로 안승태는 생태주의적 민족주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주의적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남북한의 개발민족주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는 대결지향적이고 분단지향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보고,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민족 전체, 나아가 지구시민 전체의 관점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평화적인 생태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안승태, 2011: 456-457) 폐쇄적 민족주의에 대한 대안들은 자민족이기주의나 혈연중심주의, 배타성을 지양하면서 우리 사회 안팎의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고 인류보편의 가치와 공존하는 민족주의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민족구성이나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이전의 민족주의 개념을 대체할만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수준에까지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단 이후 혈연, 문화적으로는 동질성이 있지만 정치사회적으로는 적대적인 정체성을 형성해온 남북한의 주민,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자 등 한국 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문화집단, 이주자 집단 속에서도 혈연적 동질성이라는 점에서 여타 집단과 구분되는 북한이탈주민과 동포 출신 이주자,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정체성을 대안적 민족주의의 틀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아우를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실제 통일교육 현장에서 이와 같이 변화된 민족주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나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향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통일교육에 있어 적어도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기존의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적 고민들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시각이 기존의 통일담론을 완전히 대체하는 근본적 원리로 제시되기보다는 기존의 민족주의적 시각과 민족공동체론에 입각한 통일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다문화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문제의식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6) 양영자는 세계주의와 국가적 다문화주의를 구분하고 있다. 세계주의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강조하는 반면, 다문화주의의 강조점은 국가 경계 내에 있다. 그는 남한의 다문화 담론은 국가 경계 내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다문화주의’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것의 핵심은 ‘가까운 이방인’과의 연대에 있다고 본다.(양영자, 2007: 40)

예를 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과도기적인 세계화가 진전된 오늘날 민족 정체성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배타적인 자민족중심주의를 넘어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지니도록 교육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도덕과에서는 민족통합과 관련된 윤리적 과제로 “국제화 및 세계화의 시대흐름 속에서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인가, 바람직한 통일 방향이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토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쇄적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와 동시에 여전히 통일 노력의 하나로 ‘민족 통합을 위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으며,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공동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고,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갖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 것을 통일교육과 관련된 주요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에 있어서도 “민족의 동질성 확대와 이질성 극복”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한편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내용에서 민족주의보다는 다문화적 정체성이 강조되는 추세가 강화되었다. 2009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의 당위성으로서의 민족공동체에 대한 언급은 삭제되었다. 대신 분단의 과정과 남북분단으로 겪는 어려움, 남북한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 상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변화된 시각과 민족공동체를 통일의 당위성의 근거로 삼는 관점 간의 혼란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2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의 세 가지 목표 중의 하나로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기르는 것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미래지향적 통일관이란 “오랜 분단으로 훼손된 민족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새로운 민족공동체로 발전해가는 창조적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통일교육의 주안점의 하나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고, 이는 통일은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다.”고 부연한다. 분야별 지도방향으로, 중학교 도덕교과에서는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게”하는 것을 한 항목으로 설정하고, “남북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도덕과의 통일교육 지도방향에 있어서도 통일은 “민족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위치지워진다. 이와 동시에 통일교육에 있어 세계화, 다문화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민족중심주의의 한계를 인식”시키고 “자유, 민주, 평등, 인권, 복지 등 인류보편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바탕 위에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구성원(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들을 수용“해야 함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을 민족공동체 형성과 등치시키고 이를 통일의 당위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사회로 새로 유입된 집단들을 통일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민족공동체 형성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자민족중심주의나 폐쇄적 민족주의로 경도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정도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 V. 결론

이상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통일교육에 복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과, 특히 그간 통일교육의 당위론적 기초로 제시되어 왔던 단일민족주의 담론의 재고 및 이에 따른 교육과정 수정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통일교육에 다문화교육의 맥락을 수용하여 장기적인 통일의 비전을 개발하고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를 염두에 둔 보다 정교한 통일 담론 개발이 필요하다. 단일민족국가의 개념 너머에 있는 복합국가, 지금까지의 근대적 민족국가와는 다른 형태의 국가형성이라는 정치적 상상력 혹은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인식 지평의 확장, 경제적 이윤과 효율성의 추구에 머물지 않는 소통과 치유, 통합의 새로운 사회적 질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이병수, 2011: 46-50).

둘째,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한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주의와 단일민족주의가 내용 요소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교육 과정 원리 차원에서 통일교육과정의 기본 원리로서 다문화주의와 민족정체성의 추구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도덕과, 사회과 교육과정과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침서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이를 조정하여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시행됨에 있어서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통일교육지침서에서 통일교육의 첫 번째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미래지향적 통일관의 정립’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통일교육지침서에 의하면 ‘미래지향적 통일’이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의식이 결합된 구조를 이루는 정치공동체로서의 통일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의대로라면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다문화주의의 가치와 ‘열린 민족주의’와 같은 논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없다.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통일은 전통적인 혈연적 민족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삶의 공간으로 삼는 다양한 부류의 구성원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과 신뢰를 가져다주는 것으로서의 미래지향적 공동체성”(박명규, 2009: 28)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 실천 현장에서 시대적 변화와 통일교육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 세대의 민족관과 통일관을 반영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그간 통일교육 논의는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대응해왔지만, 정작 주요 교육 대상인 청소년 세대의 변화 양상이나 관심사에는 무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정체성 형성의 방식, 의사소통의 방식, 사고방식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민족과 국적 개념 또한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 이를 고려하여 민족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호소하는 것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자신의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공동체에 대한 참여가 자신에게 즐거운 삶의 과정이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접근을 개발해야 한다.(박보영: 2010, 71-74)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문화시대라는 시대적 전환기에 우리 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박찬석. 『통일교육』. 서울: 인간사랑, 2003.
- 양계만정진경.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 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오기성. 『통일교육지침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부, 2003.
- 전경숙 외. 『다문화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2007.
- 통일교육원. 『2012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 통일교육원, 2012.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1.
- 교육과학기술부. “도덕과 교육과정.” 2011.
- 교육인적자원부. “도덕과 교육과정.” 2007.
- 김국현. “다문화 도덕과 교육과정과 통일교육.” 『도덕윤리과교육연구』 Vol.- No. 32. 2011.
- 김이선황정마이진영.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 ):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Vol.- No.-. 2007.
- 김정수. “해외 평화교육 사례와 통일교육에의 적용전망.” 『여성과평화』 Vol.- No.2. 2002.
- 나장함. “다문화 교육 관련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분석: 이론과 교육과정 변형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Vol.49 No.4. 2010.
- 노수미·정창우. “도덕과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제32호. 2011.
- 박경환. “디아스포라라는 거울, 민족이라는 담론, 그리고 초국적주의의 부상.” 『문화 역사 지리』 Vol.18 No.3. 2006.
- 박경환. “소수자와 소수자 공간: 비판 다문화주의의 공간교육을 위한 제언.” 『한국지리환경교육 학회지』 Vol.16 No.4. 2008.
- 박명규. “다문화주의와 남북관계: 이론적 쟁점과 현실.” 『국제이해교육연구』 제4권 제2호. 2009.
- 박명규. “한국전쟁과 민족주의.” 『아시아문화』 Vol.-No.16. 2000.
- 박철희. 다문화 교육 관점에 기초한 초등 사회·도덕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17(1). 2007.
- 박보영. “청소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 전환의 필요성: 학습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자기주도학습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15 No.2. 2010.
- 안승태. “한국 통일교육에 대한 생태주의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동아인문학』 Vol.19 No.-. 2011.
- 양영자. “분단-다문화시대 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Vol.25 No.3. 2007.
- 오성배. “다문화 교육 정책의 과제와 방향 검색.” 『교육사상연구』 Vol.24 No.2. 2010.
- 이경희.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Vol.21 No.1. 2011.
-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통일에 대한

- 인문학적 패러다임』. 서울: 선인, 2011.
- 전재영.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가능성.” 『초등도덕교육』 Vol.37 No.-. 2011.
- 정기용. “세계화 시대, 민족주의의 역설.” 『세계지역연구논총』 Vol.22 No.1. 2004.
- 정유성. “다양성의 시대, 다채로운 교육: 비판적 다문화 교육담론을 찾아서.” 『사회과학연구』 Vol.19 No.2. 2011.
- 정창호. “독일의 상호문화교육과 타자의 문제.”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16 No.1. 2011.
- 정희태. “중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적 접근.” 『통일전략』 Vol.10 No.1. 2010.
- 조상식.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의 한계.” 『교육철학』 Vol.44 No.-. 2009.
-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16권 2호. 2007.
- 최치원.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Bildung 개념이 통일교육에 대해 갖는 함의: Sensus Communis 그리고 인간 형성의 문제.” 『국제학술대회』 Vol.2011 No.1. 2011.
- 추병완. “학교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타당성.” 『도덕윤리과교육』 Vol.- No.29. 2009.
- 통일교육협의회. “2010 청소년 통일의식조사.” 2011.
- 홍원표. “한국적 다문화 교육의 발전 방안 탐색: 미국 논의의 수용을 넘어서.” 『교육원리연구』 Vol.13 No.2. 2008.
- 황갑진. “다문화교육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2010.
- 황정미.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한국의 다문화교육 아젠다에 대한 고찰.” 『담론201』 Vol.13 No.2. 2010.

-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출판사, 2007.
- Banks, James A..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1999. 모경환 역.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8.
- Banks, James A. & Cherry A. McGee Banks (ed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New York : John Wiley, 2007
- Stephen, M. & Christine E. Sleeter (eds). *Critical Multiculturalism: Theory and Praxis*. New York & London: Routhledge, 2010.

# 대치동, 타워팰리스 그리고 흰색 자전거:

드라마 「아내의 자격」 과 (한국에서)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 엿보기

황영주(부산외국어대학교)

## I. 드라마“아내의 자격”보기 또는 읽기?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다. “아줌마 불륜이야기는 왜 보누?...” 아내를 쫓아낸 것은 「아내의 자격」이라는 이른바 종편채널 드라마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는 않겠지만- 채널을 돌릴 때 특정 번호부터는 건너뛰곤 했지만, 이 드라마 앞에서는 예외였다. 이 드라마는 내가 이 연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절묘하게 담고 있었다. 나는 이 연구에서 한국에서 엿볼 수 있는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아내의 자격」은 내가 꿈꾸고자 하는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의 모색을 형식적으로·내용적으로 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드라마는 드라마에 불과하다는 통념을 해배(解配)하면서 한국에서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 논의로 연결하고자 한다.



(드라마 「아내의 자격」 한장면 )

### 1. 「아내의 자격」 : 두 개의 이야기

**#이야기 1 불륜 또는 사랑** 「아내의 자격」은 (내) 아내의 판단과 같이 (순진한) 아줌마의 불륜이야기가 주된 플롯이다. 드라마는 일산에서 평범하게 살던 아줌마(서래/김희애 역)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가고, 그곳에서 만난 치과의사(테오/이성재 역)와 새로운 삶

을 연다는 골격을 갖는다. 물론 이 드라마에서 불륜은 예쁜 사랑으로 포장된다. “‘아격’은 서울 대치동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공간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한 커플의 이야기다.”<sup>1)</sup> 실상 드라마는 불륜이지만, 불륜이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불륜을 소재로 했지만 이들이 나누는 진실된 사랑은 40대-50년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sup>2)</sup> 심지어 JTBC와 이데올로기적으로 부합될 수 없는 잡지에서조차도 「아내의 자격」에 따뜻한 시선을 둔다. 물론 서래를 위해서이다. “윤서래가 요즘 주부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난 불만이야 21세기 첨단 사회에서 웬 〈인형의 집〉의 로라냐고....난 남편된 사람으로서 찜찜하면서도 당신을 지지한다네. 제발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찾아가기를.”<sup>3)</sup> 드라마를 보는 이들은 불륜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외치고 있다. 「아내의 자격」은 불륜의 이야기이자 사랑의 이야기이다.

**#이야기 2. 갑과 을, 계급 「아내의 자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지 않고 갑과 을을 이야기 한다. 실제로 서래의 남편(상진/장현성역)의 욕망은 갑 또는 지배계급의 진입 또는 유지이다. 상진은 아내에게 이렇게 외친다. “이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갑과 을, 난 우리 아들이 갑이면 좋겠거든!” 드라마는 계급을 이야기한다. 보수적인 신문의 중간(조‘중’동)을 차지하는 회사에서 만든 드라마가 -물론 외주를 주었지만- 이렇게 갑과 을, 그리고 계급을 그리는 것 또한 아이러니이다. 사실상 서래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간 것은(그리고 결과적으로 태오를 만난 것은) 자신의 자녀를 갑과 을에서 갑을, 지배와 피지배에서 지배에 들게 하려는 과감한 선택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특히, 잘나가고 돈 잘버는 사교육계의 ‘여왕’을 아내로 두는 태오는 이른바 자신이 유지하려는 순수과 어쩔 수 없이 부여된 갑 또는 지배계급의 지위에 방황하다 결국 바람(?)으로 인생의 탈출구를 연다. 이때 태오의 아내로부터의 도피(또는 서래와의 바람)는 본인이 꿈꾸던 순수한 대학생 때의 열정으로의 회귀(回歸)를 뜻한다. 특히 태오는 서래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회민주주의이상을 강조하기도 한다. 반면, 서래의 교양있는 척하는 시댁은 갖지 못한 자에게 군림하면서도, 더 가진 자들에게는 비굴하게 군다. 이들의 고고한 척 이면에는 돈과 연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온갖 불순함으로 가득 차 있다. 드라마 막바지에서의 시댁의 몰락은, 극적 효과를 노린 것 이외에도, 이른바 부르조아의 속물 근성에 대한 과감한 풍자를 보여준다. 방송국 모기업에서조차도 “‘아내의 자격(JTBC)’은 중년 여성 서래(김희애)의 불륜을 통해 대한민국 상류층의 허위의식을 까발리는 드라마다”<sup>4)</sup>라고 공공연하게 발설한다. 요컨대, 불륜의 이면에 이 드라마는 갑과 을, 그리고 계급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 2. 내가 생각한 또 다른 읽기

**#장면 3. 국제정치학과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 하지만 「아내의 자격」은 나한테는 또 다른 읽기로 다가왔다. 내가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내의

1) “‘아격’ 최종회 시청률 동시간대 지상파 근접,” 『중앙일보』 2012년 4월 21일자.

2) 위의 글.

3) “어서 인형의 집에서 나오길,” 『한겨레21』 2012년 4월 6일자.

4) “JTBC ‘아내의 자격’ 이태란,” 『중앙일보』 2012년 4월6일자.

자격」은 드라마가 아니라, 내 연구의 일부가 되어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 같았다. 말하자면 「아내의 자격」은 내 연구의 은유(metaphor)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적어도 세가지점에서 그렇다. 첫째, “대치동의 숨막히는 사고육월에 치여 늘 멀미를 하던 서래에게 태오는 백마 대신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왕자님”이라고 한다면, 국가 안보위주의 젠더화된 국제정치학에 부대끼던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 평화학은 (백마를 탄 왕자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마음을 열 대상이었을 것이다. 둘째, “흙에서 뒹굴고, 새이름, 벌레이름 부르면서 아이랑 살았다”<sup>5)</sup>는 서래가 애당초 자신의 시력과 대치동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불륜(또는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고, 혼자 서려고 한 것처럼,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전통적 국제정치학(the conven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의 영역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담보한 해방을 모색하였다. 셋째, 대치동과 타워팰리스로 상징된 특권화된 공간에서 벗어나(혹은 추방되어) 서래는 낮에는 복디자이너로, 밤에는 식당 종업원으로, 동생의 반찬가게에서 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오와의 행복한 동행을 꿈꾼다. 위압적인 고급아파트가 아닌 나지막한 연립주택에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서래)은 평화학(태오)과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해방(또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염원을 꿈꾼다. 위압적이거나, 지배적이거나, 특권화된 학문이 아니라 인간이 갖는 모든 억압의 사슬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의 한 중요한 영역이라 할 것이다. 특히 페미니즘(국제정치학)이 부자독식의 현재 사회에서 고통받는 다수의 인간해방을 위한 여러 담론을 제공한다는 점<sup>6)</sup>은 「아내의 자격」에서 볼 수 있는 지배계층의 위선을 까발리며 인간다운 삶을 찬양하는 서사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내의 자격」은 이 연구의 적절한 은유가 될 수 있다.

### 3. 이 글의 목적과 구성

이 연구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평화학의 결합으로서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에 대한 모색과 그것의 한국적 적용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주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 일반적인 내용을 개괄하고자 한다. 즉, 이 장에서는 기존 국제정치학에 대한 페미니즘 진영에서의 비판을 고찰하고, 아울러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갖는 주요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평화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개괄하고자 한다. 즉, 이 장에서는 평화학의 주요 가정과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IV장에서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평화학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면서, 두 개의 영역이 어떻게 결합되고, 또한 어떻게 결합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주로 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발생되고 있는 특권화된 안보담론의 재생산 구조를 페미니즘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는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을 모색한 후에 그것을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 적용시켜 분석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라 하겠다.

5) “저 미쳤어요” 순구한 아줌마 불륜에 중년 열광, 『중앙일보』 2012년 3월 23일자.

6) Mohammed Nuruzzaman, “Paradigms in Conflict: the Contested Claims of Human Security, Critical Theory and Feminism.” *Cooperation and Conflict* 41(3)(2006), p. 285.

## II. 깨닫기 그리고 이혼하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홀로서기

애당초 서래가 대치동으로 이사 간 것은 아들의 국제중 보내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곧 그곳이 지금까지 살아온 공간과 전혀 다른 곳임을 알게 된다. 물론 온갖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대치동식으로 성공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질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시덕과 잘 지내려고 하였다. 하지만 곧 그곳이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물론 결정적인 계기는 태오와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고 한다.

이와 같은 드라마의 서사는 국제정치학에 대한 페미니즘 진영의 홀로서기와 비슷하게 읽혀질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전통 국제정치학의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된다.<sup>7)</sup> 특히, 웨버에 따르면,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국제정치학의 전통적인 기본적 개념과 가설인 이원론(dualism), 국가(the modern state), 과학적 모델(scientific model) 및 권력과 안보(power and security)에 대하여 적극적인 비판을 제기한다.<sup>8)</sup>

국제정치학에 있어 이분법적 인식론은 젠더의 이분법적 형성과 유사하다는 것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의 설명이다. 국제정치학은 국내/국외, 질서/무질서, 전쟁/평화, 안보/불안정 등의 이분법(the dichotomy)에 기초한다. 특히 국제정치학의 핵심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 안보에 대한 담론은 국내적 질서/국제적 무질서를 기반으로 한다.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이분법이 이른바 젠더 구성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여성성에 대한 폄하 또한 이러한 이원적 대립구조에 기초한다. 즉, 세상의 모든 물상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젠더화된 이원적 대립구조(the gendered binary opposition)이라는 인식론이 존재....”<sup>9)</sup> 그리고 이원적 대립구조는 여성에 대한 억압을 만들어내고 존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남성과 남성성의 구조는 남성을 특권화시키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다.”<sup>11)</sup> 국제정치학의 이원론은 젠더의 구성과 유사하며, 이에 따라서 여성

7) 이는 세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국제정치학에서의 “남성적 기준들의 정도와 영향을 폭로(exposing the extent and effects of masculinity bias)”라는 작업을 주도한다. 예를 든다면 전쟁에서의 폭력과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남성과 남성성과 상호관련성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기존 국제정치학의 구조에 여성과 여성을 경험을 끼워 넣는(adding women and their experiences to existing framework)”시도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같은 곳에서 왜 여성의 비율이 높은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며, 또는 여성의 군입대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경우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국제정치학 이론을 재구성(reconstructing theory)하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든다면 페미니즘 관점에서 국제정치학의 중심 개념인 안보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정치학의 중심개념인 권력을 새롭게 정의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페미니즘과 국제정치학의 관계 맺기는 사실상 국제정치학에 대한 페미니즘 진영에서의 다양한 형태 비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황영주,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 만들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와 그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7집1호 (2007), p. 80.

8) 황영주,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보는 안보와 평화의 문제,” 『국제문제논총』 제15집(2004), pp. 348-351; 또한 황영주,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 만들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와 그 과제,” pp. 76-80을 참조하라.

9) 황영주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만들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와 그 과제,” p. 79.

10) “이와 같은 이원적 대립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공적/사적, 객관/주관, 주체/타자, 이성/감성, 자율성/관계성 및 문화/자연으로 구별하는 경향이 강한데, 전자는 남성성과 후자는 여성성과 관련되는 수가 많다.” 위의 논문, p. 79.

11) Cynthia Webe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10), p. 88.

에 대한 성적 차별성을 만들어내거나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의 중심에는 국가가 존재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제정치(학)의 출발은 이른바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서 유래된다. 국가는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중심개념(the key concept)으로 작동한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정치학계의 국가에 대한 접근이 남성과 남성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국제정치에서 국가행위로 간주되는 인간성의 모델은 -이는 주로 원자적이며, 자조적이며, 획득을 위주로, 또한 경쟁적인데- 특정한 인간종의 부분집합, 이른바 엘리트 남성과 특정 역사적 맥락, 이른바 근대 유럽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sup>12)</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는 남성성을 구현하거나 또는 남성 그자체가 되는 것이다.”<sup>13)</sup> 더 나아가서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주권 개념의 형성은 주체(self)/타자(the other)의 구획 짓기와 유사한데, 이는 정치적 독립성/타국 또는 타국의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살펴본 젠더구성과 유사한, 남성적 주체(the masculine self)와 여성적 타자(the feminine other)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sup>14)</sup>

최근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설명방법론은 이른바 과학성(the scientific orientation)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세상의 기계론적 법칙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과학은 겉으로 보기에 무성적이지만,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과학이 남녀의 차별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과학을 통해서 구축되는 지식은 겉으로 보기에 객관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이미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sup>15)</sup>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과학적 이론 중에 하나인 합리적 선택론은 실제로 “남성”의 자기 이익 추구를 추상화한 것에 불과하다. “무정부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도구적 경쟁행위에 관련된 합리적 선택 이론가들의 설명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의 행위자이며 이는 남성과 관련된 자기이익추구행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피터슨(Peterson)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과학은 특권화된 남성 정체성의 반영이라고 폭로한다. “...실증주의적 설명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주체적이며 이성적인 자아(sovvereign rational subject)“는 일종의 허구인데 이는 주로 엘리트 남성의 남성성에 기초하였기 때문....”<sup>17)</sup>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국제정치의 과학화는 남성적 인식론의 부분적 반영에 불과한 것이다.

국제정치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권력과 안보라 할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 권력은 핵심적 가치에 해당되며, 국가 안보는 권력의 확장을 통해서 달성된다. 국제정치를 세력 또는 힘

---

12) V. Spike Peterson, “Feminist Theories Within, Invisible to and Beyond IR,”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10(2)(2004), p. 37.

13) Webe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 88.

14) V. Spike Peterson, “Subjectivity, Security and Sovereignty: making Connections,” presented paper in Annual meeting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s(1996), p. 5.

15) “17세기 초기에 들면서 과학적 논증은 분명히 남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고, (이들 남성적인 것과는 다르게)배제되어 있는 것들을 여성적인 것으로 분류하면서, 남성적인 면들을 우위에 있는 것으로 찬양하였다. 지식을 갖는 자(knower)로서의 남성은 과학과 이성으로 일체화되는 반면에, 여성은 감정과 비이성적인 것으로 관련되었다.” J. Anne Tickner, “Searching for the Princess?: Feminist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1(Fall)(1999), p. 46.

16) Tickner, “Searching for the Princess?,” p. 46.

17) V. Spike Peterson, “Transgressing Boundaries: Theories of Knowledge,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21(2)(1992), p. 197.

의 추구(struggle for power)로 설명하는 점이 국제정치학의 담론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 안보는 또 다른 국제정치(학)의 핵심적 가치로 작동된다. 한편으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진영에서 보기에 국제정치학 자체를 권력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제정치학의 남성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말하자면 권력현상은 남성 정체성의 반영물이 된다. “흔히 남성다운은 폭력 및 무력의 사용, 국제정치영역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행동양태로 또한 국가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거나 지지를 받아온 것...”<sup>18)</sup>이다. 다른 한편으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즉, 국가안보가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불안정(insecurity), 특히 여성과 관련한 젠더 불안정은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 개념에 벗어나는 새로운 종류의 안보의 모색을 강조한다.<sup>19)</sup>

기존의 국제정치학에서 벗어나서 홀로서기를 하려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자들은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에 기반하여 왜 여성이 세계정치 속에 비가시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모든 사회에서 남성보다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들은 또한 어떻게 젠더가 세계정치를 구성하며 또 어떻게 젠더가 세계정치에 의해 형성되는지와 같은 큰 질문들도 연구한다....특히 페미니스트들은 안보를 더욱 넓은 범위에서 정의하여 국가안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경제적 안녕이라는 측면까지 포함하였다.<sup>20)</sup>

### Ⅲ. 흰색자전거의 태오라는 존재: 평화학 다시 보기

“대치동의 숨막히는 사교육열에 치여 늘 멀미를 하던 서래에게 태오는 백마 대신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왕자님이었다. 흰칠한 키에 클래식한 수트를 입고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이 ‘훈남’에게 서래는 끝내 마음을 주고 만다. 서래는 “이 사람은 나를 여자로 느끼게 해줬어”라고 했다.”<sup>21)</sup> 실상 태오는 (아내의) 성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태오는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서래에 있어 자전거는 태오가 태오로서 존재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 있어 평화학은 어쩌면 서래에 있어 태오와 같은 존재일지 모른다. 특히,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은 평화학의 영감(insight)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8) J. Ann. Tickner, 『여성과 국제정치』, 황영주의 옮김, (부산: 부산외대 출판부, 2001), p. 22.  
 19) 이와 관련해서는 황영주,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지구는 내가 지킨다의 페미니즘적 재정의,” 『국제정치논총』 제43집1호(2003)를 주로 참조하라. 또한 티커너는 “...평화달성, 경제정의, 생태학적 지탱은 지배-종속의 사회적 관계를 극복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진정한 안보는 전쟁소멸과 불평등한 젠더를 포함하는 불공정한 사회관계의 제거를 함께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Tickner, 『여성과 국제정치』, p. 166.  
 20) J. 앤 티커너 “젠더와 세계정치,”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세계정치론』, 하영선외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05), p. 327.  
 21) “자전거타고 등장한 훈남 왕자에 아줌마들 열광,” 『중앙일보』 2012년 3월 23일자.

서 평화학의 기본적 윤곽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학은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필요없는 국내적-국제적인 사회구조의 창출과, 사회적 불공정을 제거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국내적-국제적 질서형성을 구상하고 모색...”<sup>22)</sup>하는 목적을 지닌다. 특히, 평화학은 “평화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연구를 지향하지만, 주어진 현상에 대하여 항상 옳고 그름의 판단을 추구하는 점에서 다분히 규범적이고 가치지향적 성격”<sup>23)</sup>을 가진다.

평화학은 크게 역사성, 비판성 및 인간성이라는 배경을 갖는다. 먼저 **역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평화학은 당면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하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초기 평화학의 기원이 주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고, 나아가서 1950년대와 60년대에 평화학이 “무엇보다 먼저 핵전쟁의 방지, 동서긴장완화, 분쟁해결이라는 문제에 그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sup>24)</sup>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확인된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평화학은 이른바 남북문제에 천착하면서 “구조적 폭력”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평화학은 탈냉전의 조류에 부합하여 공동안보,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개념에 형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비판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평화학은 불가치적이라기 보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그것의 극복에 헌신하였다. 애당초 전쟁이 만연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평화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는, 결국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된다고 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실제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또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도 반전=평화의 사상과 행동은, 그 당시의 국내적-국제적 지배체제에의 고발과 비판으로서 존재해 왔다.”<sup>25)</sup> **인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인간성의 실현”이 궁극적인 평화학의 목적임을 말해준다. “구조적 폭력”의 제거라는 적극적 평화(the positive peace)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극복하는 기본적인 인간성의 회복으로 귀결된다.

평화학의 인식론은 규범적이면서 동시에 정책지향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평가다. 한편으로 평화학은 평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상관없이-를 지향하는 **규범적(normative)** 성격을 지닌다. 단순히 있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가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려는 규범적 처방을 보여준다. “평화학은 가치중립적(value-free)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치 중립적 입장 자체가 교묘하게 다른 가치들을 은유하고 있다고 본다”<sup>26)</sup>를 지적할 수 있다. 적극적 평화이든 소극적 평화이든 폭력의 제거와 전쟁의 방지는 결국 규범성에 기초한다. 다른 한편으로 평화학은 규범적이지만, 동시에 **정책지향적(pragmatic)** 성격을 띠는데,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학자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기술(description)과 설명(explanations)의 역할로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 평화학은 정부 또는 사회운동진영에 대해 평화의 조건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권고한다는 점에서 보다 정책지향적 성격을 지닌다.”<sup>27)</sup>

22) 홍민식,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제평화』 창간호(2004), p. 6.

23) 위의 논문, p. 6.

24) 일본평화학회 편집위원회, 『평화학: 이론과 과제』, 이경희역, (서울: 문우사, 1987), p. 15.

25) 위의 책, p. 17.

26) 김명섭,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하영선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p. 128.

27) 위의 책, pp. 128-129. 동일한 맥락에서, “평화연구는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필요 없는 국내적-국제적인 사회구조의 창출과, 사회적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국내적-국제적 질서형성을 구상하고 모색한다는 정책지향적 성향을 갖는다.” 홍민식,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p. 6.

평화학의 주요 분석수준은 크게 개인적, 공동체, 국제적, 전지구적 등으로 구별가능하다.<sup>28)</sup> **개인적 수준(the individual level)**의 분석은 크게 평화성취를 위한 개인의 영향력에 대한 탐구와 평화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을 본다는 점으로 나뉘어진다. 전자의 경우, 개인이 갖는 성격과 신념체계 등은 전쟁 및 분쟁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후자의 경우, 개인의 안녕 및 안정 등이 평화연구의 주요 주제와 목표가 되기도 한다.<sup>29)</sup> **공동체 수준(the community level)**의 분석은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공간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해당 그룹에 정체성을 인정하고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수준에서는 국민국가영역의 안보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국가내부의 갈등 해소 등을 포함하는 평화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sup>30)</sup> **국제적 수준(the international level)**은 국제정치에서의 안보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 다루는 영역은 우선 보기에 전쟁방지 및 분쟁해결과 관련되는 시도가 우선이지만, 국가간의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이 갖는 잠재적인 불안정 위협에도 많은 관심을 유도한다. 나아가서 “평화연구는 개인과 단체의 안녕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sup>31)</sup>하고 있다. **전지구적 수준(the global level)**의 분석은 직접적으로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의 개념에서 유래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동안보 자체는 인간을 위한 안보는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영토적 경계와 관계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환경안보 등의 개념이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sup>32)</sup>

#### IV. 타워팰러스가 아닌 곳에서 함께 또 따로 살기:

#####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평화학의 만남

서래와 태오는 각자 이혼한 후에 친구처럼 1년 가까이 지낸다. 그리고는 함께 살기에 동의한다. 그런데 함께 살 곳은 타워팰리스도, 대치동의 고층아파트도 아닌 허름한 연립주택이었다. 이 연립주택은 “포르말린”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이었다. 이 연립주택은 돈을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살기 위한 곳이었다. 말하자면, 이 연립주택은 서래와 태오가 함께 사랑을 나눌 공간이자 동시에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갈 집 자체였다. 이곳에서는 서래와 태오가, 서로 함께 살지만, 부부라는 명목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기를 다짐한다. 한 공간에서 함께 살지만, 또 따로 살기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구성된다.

페미니즘(국제정치학)과 평화학은 어떻게 조우하는가? 위계화된 국제정치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두 학문이, 각자가 갖는 영역의 자율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결합한다는 면에서 서래와 태오의 실험적 동거와 유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장에서는 첫 번째, 페미니즘과 평화학의 초기 만남을 여성과 평화의 상호연관성이라는 본질주의적 접근으로 보고자 한다.

28) Ho-Won Jeong, *Peace and Conflict Studies* (Ashgate: Burlington, 2000), pp. 48-49.

29) Ibid., p. 48.

30) Ibid., p. 48.

31) Ibid., pp. 48-49.

32) Ibid., p. 49.

두 번째,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시도하는, 평화학의 관점을 반영해주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있어 안보와 평화담론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자 한다. 세 번째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평화학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1. 여성과 평화의 상호연관성과 그에 대한 비판

여성과 평화를 관련시키는 시도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sup>33)</sup> 일부 페미니즘 평화 연구가들은 여성은 근본적으로 남성들보다 평화로운 존재이며, 아울러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고, 공적인 활동 기회가 적기 때문에 평화와 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테슬러와 그의 동료에 따르면, 여성과 평화와 관련되는 측면이 여성의 특수한 경험에 비롯된다는 주장을 한다.<sup>34)</sup> 여성이 갖는 경험에 비추어 **돌봄의 제공자(care-giving)**, **도덕적 어머니(moral motherhood)**, **모성애적 사고(maternal thinking)**에 주목하는 것이다. 사회에서의 남성과 상이한 특수한 경험은 여성으로 하여금 평화와 특별한 관계를 맺거나 등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관성에 대하여 페미니즘 국제정치학들은 많은 비판을 가한다.<sup>35)</sup> 즉, 이와 같이 여성과 평화를 등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젠더의 이분법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또한 가부장제적 질서를 타파하려는 여성의 능동적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진다.<sup>36)</sup> **한편으로** 여성과 평화를 등치시키는 입장은, 평화를 전쟁의 부재(the absence of war)로 보는 입장을 반복·재생산하면서 평화를 소극적이며 비활동적인 것으로, 전쟁을 적극적이며 활동적으로 보는 이원적 대립구조를 재생산한다. “여성이 평화적 부문에만 그 활동영역을 국한시킨다면, 기존의 젠더화된 이분법적 사회구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를 가

33) 버저서의 연구에 따르면 페미니즘 시각에서 여성과 평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경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첫째, 남성은 전쟁과 관련되고, 여성은 평화와 관련되어 여성이 평화구성에 도덕적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 둘째, 남성의 폭력에 대한 독점이 폭력 그 자체보다 더욱 문제가 된다는 입장, 마지막으로 여성이 평화와 관련된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에서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반군사주의 접근 등이다. Mary K. Burguières, “Feminist Approaches to Peace: another Step for Peace Studies,” *Millennium* 19(1)(1990) pp. 1-18; 또한 워런과 캐디는 페미니즘과 평화의 연관성을 6가지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다. 즉, 이들에 따르면 연관성은 페미니즘과 평화는 개념적, 경험적, 역사적, 정치적, 상징 및 언어적, 심리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Karen J. Warren and Duane L. Cady, “Feminism and Peace; Seeing Connections,” *Hypatia* 9(2)(1994), pp. 4-17. 또한 황영주,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만들기,” p. 82도 함께 참조하라.

34) Mark Tesser, Jodi Nachtwey and Audra Grant, “Further Tests of the Women and Peace Hypothesis: Evidence from Cross-National Survey Research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1999). p. 520.

35) 티커너의 경우에는 “여성들과 평화를 서로 관련시키는 것은 여성이 무력을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수동적으로 부과된 것(imposed)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Tickner, 『여성들과 국제정치』, p. 86. 실버스터 또한 국제관계에서 가부장제 타파가 세계질서에 숨어 있는 젠더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면, 페미니즘 평화연구로서는 세계질서를 변경시키거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Christine Sylvester,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the Construction of a New order of Peace,” 한국국제정치학회·유네스코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2000), p. 3. 또한 그녀는 여성들을 일원적이며 수동적 타자로 여기게 됨에 따라 가부장제 저항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다양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Christine Sylvester, “Riding the Hyphens of Feminism, Peace and Place in Four-(or more) Part Cacophony,” *Alternatives* 18(1993), p. 110.

36) 황영주,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만들기,” pp. 82-83.

지게 된다.”<sup>37)</sup> **다른 한편으로** 여성과 평화를 등치시키는 입장은 여성의 주체적 힘갖추기 (empowerment)를 부정한다. 말하자면, 여성과 평화의 관련성 강조는 현존하는 국제관계학과 평화학의 영역에서 젠더관계의 변형없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된다.

## 2.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은<sup>38)</sup> 이른바 평화학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sup>39)</sup>와 안보학의 비판안보이론(the critical security studies)<sup>40)</sup>에 지적인 빛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구별가능 하다. 한편으로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은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대안적 안보 개념을 정교화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은 비판안보이론의 논의에 힘입어, 안보개념을 깊게, 폭넓게, 확장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41)</sup>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은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대안적 안보 개념을 정교화시키는 작업을 한다.<sup>42)</sup>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여성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포괄적 안보 및 전지구적 안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예를 들어 티커너(Tickner)는 “...평화달성, 경제정의, 생태학적 지탱은 지배 종속의 사회적 관계를 극복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진정한 안보는 전쟁소멸과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포함하는 불공정한 사회관계의 제거를 함께 필요로 한다”<sup>43)</sup>고 주장한다. **국가안보에 대한 대안**의 경우 주로 여성의 이해와 전지구적 공동이익을 주장한다. 국가의 안보가 확보되더라도 개인의 안보 특히 여성의 안보는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 성폭력 및 인

37) 위의 논문, p. 83.

38) 이 논문에서 “페미니즘안보 또는 평화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페미니즘 안보론과 평화학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언어로 사용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즉, 페미니즘 안보론과 평화학은 엄격한 구별없이 교차적(interchangeably)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안보학과 평화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평화학과 안보학의 수렴과 공생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평화학과 안보학이 다루고 있는 연구주제들은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다.” 김명섭,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p. 142.

39) 적극적 평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평화를 단지 전쟁의 부재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충족,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가치를 구현하고 보전되는 (것이) 진정한 발전으로 보는 적극적 평화론(positive peace)은....정당한 국제사회질서를 평화의 필수조건으로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가로막는 폭력, 특히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 존재하는 상황을 평화부재(peacelessness)라 규정한다.” 박주식, “탈현실주의 평화학,”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1996), p. 1.

40) 비판안보이론으로부터 페미니즘은 다음과 같은 지적인 빛을 졌다는 평가다. 즉, 비판이론가들은 안보를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첫째, 안보는 국가와 행위자들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정체성들이 타국과 타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동시에 어떤 갈등을 만들어 내는가에 대하여 주목을 해야 한다. 둘째, 안보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국내적 정체성의 구성으로 작동되며, 이에 따라서 서구의 이원적 대립구조라는 인식론과 형이상학에서 출발한다. 셋째, 특히 안보연구 자체가 보다 해방적인(emancipatory)메시지를 담고 있어야만 한다. 안보는 결국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및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개인 및 집단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J. Ann Tickner, “Feminist Responses to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Peace Review* 16(1)(2004), pp. 46-47.

41) 황영주,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 만들기,” pp. 85-87.

42) 황영주,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pp. 59-63.

43) 황영주외 (2001), p. 166.

신매매 등은 국가안보와는 상관없는 개인의 불안정(insecurity)의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sup>44)</sup> 이에 따라서 국가가 안보 제공자라는 기존의 생각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인식은 전지구적 안보 형성에 있어 더욱 더 중요하다. “현 지구촌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독립적인 정치적 이해보다는 전지구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 화해 및 조정이 국제정치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45)</sup> **경제안보에 대한 대안** 역시 여성적 가치에서 출발된다. 자기이해를 극대화시키는 경제적 합리성의 출발은 여성성의 배제에서 비롯된다.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기에 경제는 지금과 같은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영역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사회 및 경제개발에서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경제적 전략, “상품과 부를 위한 생산보다는 생명의 생산에 연관된 모델을 우선시하는 사고를 구축하는 것...”<sup>46)</sup>이 중요한 것이다. **생태적 안보에 대한 대안**은 인간/자연의 관계가 남성/여성의 문제로 환치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여성들이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태도를 개선해야만 한다.<sup>47)</sup>

또한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은 기존의 안보 개념에서 탈피하여 안보를 보다 깊게, 폭넓게, 확장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sup>48)</sup> **안보개념을 깊게 하는 것(deepening gendering security)**은 안보를 기존의 국가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위수준, 이른바 인간에 중심(people-centered)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페미니즘은 안보의 논의를 위에서 아래로 보기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보는 관점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이 때 안보의 수혜자는 국가 또는 국제체제가 아니라, 인간 또는 여성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중심적 안보는 여성이 경험하는 많은 폭력에 대한 해결 없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안보개념을 폭넓게 하는 것(broadening gendering security)**은 안보가 국가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전지구적 영역의 안정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안보에 대한 원칙을 개별국가보다는 전체 지구를 위한 포괄성(inclusivity)와 전체성(holism)을 감안해야 한다는 태도이다. 즉, 국민국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를 하나의 안보 단위로 간주한다. 안보의 수혜자는 결국 전지구가 되는 것이다. **안보개념을 확장하기(extending gendering security)**는 다양한 안보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즉, “많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안보를 다면적(multi-dimensional)으로 또한 다수준(multi-level)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데 이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및 환경에 대한 폭력 등 모든 폭력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함께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sup>49)</sup> 즉, 이 주장에 따르면 모든 폭력은 연관되어 있으며, 폭력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폭력 종식의 밑바탕으로 작동한다.

44) 황영주,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p. 59.

45) 위의 논문, p. 59.

46) 위의 논문, p. 61.

47) 위의 논문, p. 62.

48) 존스에 따르면 비판안보이론은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벗어나서 안보를 깊게하고, 폭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정리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Richard Wyn Jones, *Security, Strategy and Critical Theory* (London: Lynne Rienner, 1999), pp. 102-117을 참조하라.

49) J. Ann Tickner, “you Just Don’t Understand: Troubled Engagements between Feminists and IR Theoris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4)(1997), p. 624.

### 3. 페미니즘과 평화학, 함께 또 따로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은 기존의 안보 또는 평화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누루자만(Nuruzzaman)의 연구에 따르면 페미니즘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 그리고 비판안보연구(critical security studies)와의 결정적 차이점은 페미니즘이 남녀불평등 내지는 젠더의 불평등(gender inequality)에 대한 관심이며, 동시에 현재의 안보논의에 여성의 경험과 이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위성 강조이다. “안보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젠더불평등이며, 다른 하나는 안보분석에 있어 여성의 경험을 포함시키자는 요구이다.”<sup>50)</sup> 무엇보다도 남녀불평등 젠더불평등은 안보분석에 있어 원천(源泉)으로 작동한다. “페미니즘 학자들은 젠더불평등이 여성불안정(the insecurity of women)의 원천적 이유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서 이들은 현실주의경향의 안보정책 형성 및 군비증강정책을 포함한 국가실체에 대하여 끊임없는 비판을 가한다.”<sup>51)</sup>

페미니즘 입장에서 본다면 평화학은 많은 점에서 자신과 유사성을 지닌다. 두 이론은 인식론과 존재론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평화학과 페미니즘 안보전문가의 분명하고도 명백한 인식론과 존재론적 유사성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화라는 수단을 통한 사회정의 고양에 근본을 두는 적극적 평화라는 주장을 함께 강화시켰다.”<sup>52)</sup> 더군다나 두 이론은 이른바 학문의 방법론에서조차 비슷하다. “두 이론은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시각을 가짐으로써, 정치학, 사회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및 심리학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배경을 가진 학자와 활동가들(의 연구를)을 포함하고 있다.”<sup>53)</sup>

이와 반대로, 페미니즘과 평화학의 결정적 차이는 학문적 대상의 다름에서 비롯된다. **한편으로 볼 때**, 평화학의 관심은 전쟁의 원인분석, 평화의 조건 그리고 나아가서는 평화의 효과적 확보에 놓여있다. 말하자면 평화학은 평화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원초적 관심을 표명한다. 반면에, 페미니즘은 주로 권력의 젠더화된 기원 및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젠더화된 불안정성에 대하여 관심을 둔다.<sup>54)</sup> **다른 한편으로 볼 때**, 평화학은 이른바 젠더를 감안하지 않거나 혹은 젠더에 중립적(gender-neutral)이다. “페미니즘 학자들은 평화연구가 젠더중립적이라는 걸모습을 지닌다고 비판하는데, (평화학의 입장에서 보면) 젠더 문제는 평화학의 이론적 가설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55)</sup> 아마도 이와 같은 평화학의 젠더에 대한 무지는 실제로 평화학이 (젠더를 감안하지 않고 있는) 국제정치학의 하위 학문이라는 성격에서 유래될 가능성이 높다.<sup>56)</sup>

50) Nuruzzaman, “Paradigms in Conflict,” p. 296.

51) Ibid., p. 299.

52) Heidei Hudson, “Feminist Analysis at the Intersection of Critical Security Studies and Peace Studies,” presented paper in Annual Meeting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s(2008), p. 4.

53) Ibid., p. 5.

54) Ibid., pp. 5-6.

55) Ibid., p. 5.

56) 실제로 한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평화학이 제기하는 중요한 기본적 가정과 이론 등에 젠더라는 개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키포티니의 연구에서는 갈통의 직접적, 구조적 및 문화적 폭력에 대한 분석에서 젠더의 배제에 대하여 비판을 가한다. 즉, 갈통의 폭력에 대

## V. 폭력적이거나, 천박하거나:

### 한반도를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으로 다시 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롭지 못한 (국제)정치적 구조를 페미니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읽었던 「아내의 자격」은 한반도의 비평화구조와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한반도를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으로 다시 보기위해서 「아내의 자격」을, 메타포로, 먼저 읽은 다음, 이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로 연결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에서의 안보담론 재생산구조로 연결하여 다시 분석하려고 한다.

#### 1. 갑과 을, 이원적 대립구조, 그리고 상호적대적 정체성

서래의 남편, 상진은 세상을 갑과 을로만 분류하고 자신의 아들이 갑에 속하길 기대하면서 대치동으로의 이사를 감행한다. 상진에게 세상은 갑과 을로 형상화된다. 갑은 모든 것을 가지는 반면에, 을은 갑에 의해서 좌우된다. 페미니즘 또는 페미니즘 안보 및 평화학의 주된 관심사는 갑과 을의 관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젠더화된 이원론적 대립(the gendered binary opposition)의 재생산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대립구조는 세상을 결국 공적/사적, 객관/주관, 주체/타자, 이성/감성, 자율성/관계성 및 문화/자연으로 이원화시키는 경향을 의미한다...”<sup>57)</sup> 전자의 후자의 대한 위계적 재생산은 다시 남성성과 여성성과 관련되어 여성에 대한 억압을 고정되고 변화되지 않은 특성을 만들어내게 된다. 상진이 갑이 되고 싶은 것은 갑은 군림하고 을은 종속되기 때문이다. 젠더구성에 있어 이원적 대립구조는 한반도 안보담론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적대적 정체성** 지속적 재구성과 동일한 맥락이기도 하다. 블레이크(Bleik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한) 안보딜레마의 핵심은 원천적으로 정체성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은 분단된 한반도의 다른 쪽의 정치제도를 상당히 위협적이고, 무엇보다도 악(惡)한 존재로 그려내고 있다.”<sup>58)</sup> 김엘리가 적절히 지적한 바, 나/너, 우리/타자라는 이원적 대립구조는 타자로서의 적은 우리의 부정어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sup>59)</sup>과 연결되어 (한반도에서) 군사주의는 재생산된다. 상대방과 함께 공존하기 보다는 갑으로 군림하려는 상진의 욕망은 젠더의 구성과 한반도에 있어 상호적대적 정체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

한 이론은 젠더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고, 폭력의 발생 및 재생산 과정에서 젠더 구성의 이원적·이원적 대립구조의 역할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폭력의 구성과 확대에서 젠더화된 언어의 사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고, 폭력 생산이 젠더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Catia C. Confortini, “Galtung, Violence, and Gender: The Case for Peace Studies/Feminism Alliance,” *Peace and Change* 31(3)(2006), pp. 333-358.

57) 황영주,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보는 안보와 평화의 문제,” p. 350.

58) Roland Bleiker, 『한반도 안보 다시보기: 화해의 문화를 위해서』, 황영주 옮김, (부산: 부산외대 출판부, 2009), p. 80.

59) 김엘리, “군사주의, 여성, 탈군사화를 위해서,”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서울국제회의 발표논문 (2002), p. 10.

## 2. 보딩스쿨, 남근숭배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미국의 위상

극중에서 대치동 아줌마들의 자식에 대한 욕심은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난다. 우선은 국제중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중은 다른 목표를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 아이들의 또 다른 목표는 미국의 일류 보딩스쿨(boarding school)로 진학하여,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완성되어야 이른바 갑이 될 수 있다.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큰 곳 또는 자기 보다 힘센자(미국)에 대한 열광은 페미니즘 이론의 이른바 남근숭배(phallicism)와 연결되기도 한다. 실제로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타워팰리스는 다음과 같은 해석까지 낳고 있다. “.... 철골구조 타워형으로 66층이나 치솟아 올라 주변 아파트들을 눌러버릴 기세로 서 있는 타워 팰리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성적 가치가 얼마나 강고한가를 새삼 확인하게 됐다. 첫눈에 불끈 솟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그것은 생김새부터가 권위적이고 오만하며 끝모르는 지배욕의 구현처럼 보인다.”<sup>60)</sup>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남근의 부재는 결국 여성(성)의 결핍을 의미한다. 큰 것에 대한 숭배 또는 강대국에 대한 열망은 한반도 안보담론에서 **현실주의적인 미국의 위상** 인정과 직접 맞닿아 있다. 한 비판 안보 학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할 때, 탈냉전시대에 예상할 수 있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는 세력균형 또는 단극시대의 패권국가인 미국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과 균형을 이룰 만한 국가의 등장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위협적, 일방적 정책의 지속일 수 있다.”<sup>61)</sup>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현실주의적·군사적 입장은 타국의 불안정(insecurity)를 증가시킨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관련한 광범위한 현실주의적 시도가 더욱 그러하다.”<sup>62)</sup>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미니즘에서는 국제정치학의 담론에 숨어 있는 남성적 이미지에 대하여 강조한다. 여성성의 폄하에 의해서 구성되는 지배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는 안보담론에서의 현실주의와 깊이 교감하고 있다.

## 3. 경쟁, 남성적 정체성, 그리고 군비경쟁

극중, 대치동의 또 다른 코드는 이른바 경쟁이다. 친한 친구라도 점수의 세계에서는 친구일 수 없다. 학교나 학원 동료는 오로지 경쟁의 대상에 불과하다. 초일류를 향한 돌진에서는 연대나 박애는 쓰레기통에나 적합하다. 심지어 송고해야 할 봉사과 연민조차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만다. 자연 상태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페미니즘의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과 직접 연결된다. 실제로 페미니즘 학자들은 경쟁에 대한 담론이 이른바 일부 남성의 경험의 이상화된 영역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정치는 “권력으로 향한 경쟁관계”라는 주장은 남성적 정의(definition)에 불과하다. 이런 남성적 관점에서 정치는 오직 남성의 것이며 실제로 정치는 주로 남성성을 기초로 하는 질서, 힘, 조정, 야심, 경쟁, 남성본위적인 것이다.<sup>63)</sup> 그러나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는 경쟁 과 지배보다는 오히려 연대와

60) “타워팰리스, 그들만의 궁전,” 『한겨레21』 2002년 11월7일자.

61)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2007), p. 150.

62) Bleiker, “한반도안보다시보기,” p. 53.

63) 황영주, “심청전 읽기로 본 한국에서의 근대국가와 여성,”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4호(2000),

돌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sup>64)</sup> 실상 경쟁의 코드는 대치동 학원가 성적경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안보에 있어 결정적인 구성원리로 작동한다. 남북한은 항상 상대방의 군사적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자신의 군비경쟁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이미 북한의 군사능력을 압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양적 열세를 강조하면서 국방예산을 끊임없이 증가시킨다. “...남한은, 미국의 핵무기나 다른 무기의 유지 또는 직접적인 보급 가능성 없이도, 이미 북한에 대하여 명백한 전략적 우위를 지키고 있다.”<sup>65)</sup> 특히 “경제적 우위성 때문에 3.5%라는 서울의 군사비 지출은 북한 비용의 거의 두배 이상에 달한다.”<sup>66)</sup> 그럼에도 막대한 예산을 군비경쟁에 쏟아 붓는다. 북한 또한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한 번에 만회하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매진한다. 이른바 군비경쟁은 한반도에서 안보딜레마<sup>67)</sup>를 지속시키고 있다.

#### 4. 이혼한 서래, 성희롱 그리고 여성을 위한 안보는 없다

태오가 서래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은, 서래가 일하는 식당에서 손님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서래는 식당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하던 방송국의 간부로부터도 동화책의 홍보 댓가로 “주말에 골프치고 함께 즐기자는” 직접적인 유혹을 받기도 한다. 서래의 남편인 상진은 노골적인 성희롱 때문에 직장의 문을 나서야만 했다. 많은 페미니즘 학자들은 한국에서의 가부장제 군사문화가 여성을 성적대상물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sup>68)</sup> 성희롱 및 성폭력을 조장하는 가부장제적 군사문화는 결국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안보, 국가안보와 동전의 양면 마냥 한 쌍으로 움직이는 경제발전주의 및 유교전통의 가족주의의 복합적 산물이기도 하다.<sup>69)</sup> 페미니즘 진영에 있어서 국가안보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국가안보는 일종의 지배적 남성성을 기초로 하여 평화라는 개념을 여성화시키며 평가절하 시킨다. “사실상 적대적 정체성의 구성은 국가에 의해서 강화되며, 이때 국가는 유일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안보행위자로 파악된다. 이러한 국가중심적(state-centrism)사고는 불안정의 정치를 강화시킨다.”<sup>70)</sup> 현실에서 국가중심의 안보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안보는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여성

p. 80.

64) 황영주, “정치학에서 페미니즘 접근방법,” 한국정치학회편, 『정치학이해의 길잡이: 정치이론과 방법론』 (서울: 법문사, 2008), p. 252.

65) Bleiker, “한반도안보다시보기,” p. 168.

66) 위의 책, pp. 170-171.

67) 안보딜레마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한 국가의 안보추구가 빈번히 다른 국가의 안보적 불안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군사적 준비는 인접 국가들에 의해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결과적으로 국가들이 자신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전보다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는 역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텀턴, 브라이언 C. 슈미트, “현실주의,”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세계정치론』, 하영선외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05), p. 124.

68) 예를 들어, 오미영, “군사주의 폭력과 젠더화된 위계질서,” 『여성연구논집』 제13집(2002), pp. 91-112.

69) 김엘리, “군사주의, 여성, 탈군사화를 위해서,” pp. 10-16.

70) 황영주 옮김, “한반도안보 다시보기,” pp. 40-41.

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 성폭력 및 인신매매 등은 국가안보와는 상관없는 젠더 불안정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sup>71)</sup>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중심 안보**가 때로는 다양한 육체적, 경제적, 법적 및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함으로써 **개인안보의 대척점**에 서 있다는 평가까지 받는다.<sup>72)</sup>

## VI. 이혼한 여자의 힘 갖추기!: 한국에서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

「아내의 자격」이 많은 이의 공감을 자아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해당 방송국을 소유한 신문에 따르면 “지상파 제외 전 채널에서 당일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특히 “19일 최종회의 분당 최고 시청률은 6.01%까지 올라갔다.”<sup>73)</sup> 기록적(?)인 시청률에 대한 여러 해석을 반복해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아내의 자격」이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실제로 드라마에서 그려내고 있는 갑과 을, 경제적 상승에의 욕망, 그것을 위한 치열한 경쟁, 상위계층의 허위의식 폭로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양가감정(ambivalence)을 갖게 만든다. 하지만, 위압적이지 않고, 지배적이지 않고, 특권화 되지 않은, 서래와 태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더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겉으로 보기에, 마치 「아내의 자격」 마냥, 현실에서 동떨어진 서래의 모습과 비슷하다. 무질서하고 투쟁적인 외부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려는 국가의 존재는 국제정치학에서 핵심적 주체성(subjectivity)으로 작동한다. 그러한 주체성은 권력에 대한 염원과 함께 한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근원은 힘의 추구로 추상화된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정치학은 엄격한 과학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 반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국제정치학의 인식론, 국가, 과학적 경향 및 권력과 안보에 관련된 담론이 이미 젠더화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젠더화된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여성의 경험이 반영된 새로운 국제정치학의 모습을 희망한다. 인형의 집으로 부터 혼자서려는 서래의 모습과 비슷한 것일까?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은 한층 더 서래의 힘 갖추기와 흡사한 모양새를 가진다. 비록 태오의 사랑과 같이 평화학과 비판안보이론의 도움은 얻었지만, 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은, 위압적이지 않고, 지배적이지 않고, 특권화 되지 않은, 국가를 벗어나서 개인과 여성을 생각하고, 전 지구적 안정을 생각하며, 아울러 모든 폭력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특히, 국가라는 체제의 안보보다는 소외되었던 여성의 이해와 전 지구적 공동이익에 주목하고, 자기이해를 극대화하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인정하면서 생활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 경제의 핵심 가치임을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위계적·착취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를 관통하는 불안정의 구조는 항상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71) 황영주외, “여성과 국제정치,” p. 59.

72) Andris Zimelis, “Human Rights, the Sex Industry and Foreign Troops: Feminist Analysis of Nationalism in Japan, south Korean the Philippines,” *Cooperation and Conflict* 44(1)(2009), pp. 51-71.

73) “‘아내’최종회 시청률 동시간대 지상파 근접,” 『중앙일보』 2012년 4월21일자.

있었다.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드라마,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구조 및 한반도에서 행하는 안보담론의 재생산 구조는 놀라울 만큼이나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드라마에서의 서사는 곧 여성을 둘러싼 젠더화된 구조와 연관되고, 이는 다시 한반도의 안보담론에서 우위를 점하는 위압적이고, 지배적이고, 특권화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갑과 을은 젠더의 구성으로, 젠더의 구성은 다시 상호 적대적 정체성으로 연결된다. 미국의 보딩스쿨에 대한 열망은 이른바 남근숭배와 연결되고 이는 다시 안보에서 미국에의 의존으로 환연된다. 학원과 학교에서 경쟁은 남성적 정체성으로 특징화되고, 군비경쟁으로도 표상화 된다. 이혼녀 서래를 성희롱하는 사회는 여성을 위한 안보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아내를 거실에서 추방한 불륜의 드라마는, 불륜의 드라마가 아니었다. 오히려 각박한 현실(reality)을 표상하면서도 불륜이면서도 사랑인 사랑이면서도 불륜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는 이른바 전복(subversive)의 코드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드라마에서 대치동과 흰색 자전거는 어울리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 드라마는 갑과 을 또는 계급관의 현실을 표상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의 상류층의 허위의식을 폭로하고, 나아가서는 지배계급의 자기 분열성을 서래와 태오를 통해서 보여주려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에서 「아내의 자격」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평화학의 만남, 한국에서 페미니즘 안보 및 평화학 구성(과 그 적용)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전복성은 배가(倍加)된다.

## 참고문헌

-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2007.
- 김명섭.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하영선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 김엘리. “군사주의, 여성, 탈군사화를 위해서,”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서울국제회의 발표논문, 2002.
- 박주식. “탈현실주의 평화학,”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1996.
- 오미영. “군사주의 폭력과 젠더화된 위계질서,” 『여성연구논집』 13, 2002
- 홍민식.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제평화』 창간호, 2004.
- 황영주.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만들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와 그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7집1호, 2007.
- 황영주.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보는 안보와 평화의 문제,” 『국제문제논총』 제15집, 2004.
- 황영주.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지구는 내가 지킨다의 페미니즘적 재정의,” 『국제정치논총』 제43집1호, 2003.
- 황영주. “심청전 읽기로 본 한국에서의 근대국가와 여성,”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4호, 2000.
- 황영주. “정치학에서 페미니즘 접근방법,” 한국정치학회편, 『정치학이해의 길잡이: 정치이론과 방법론』, 서울: 법문사, 2008.

- 일본평화학회 편집위원회. 『평화학: 이론과 과제』, 이경희역, 서울: 문우사, 1987.
- J. Ann. Tickner. 『여성과 국제정치』, 황영주의 옮김, 부산: 부산외대 출판부, 2001.
- J. 앤 티크너. “젠더와 세계정치,”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세계정치론』, 하영선의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05.
- Roland Bleiker. 『한반도 안보 다시보기: 화해의 문화를 위해서』, 황영주 옮김, 부산: 부산외대출판부, 2009
- 팀던, 브라이언 C. 슈미트. “현실주의,”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세계정치론』, 하영선의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05.
- Burguières, Mary K.. "Feminist Approaches to Peace: Another Step for Peace Studie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9(1), 1990.
- Confortini, C. Catia. "Galtung, Violence, and Gender: The Case for Peace Studies/Feminism Alliance," *Peace and Change* 31(3), 2006.
- Hudson, Heidei. "Feminist Analysis at the Intersection of Critical Security Studies and Peace Studies," presented paper in Annual Meeting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s, 2008.
- Jeong, Ho-Won. *Peace and Conflict Studies* (Ashgate: Burlington, 2000)
- Jones, Richard Wyn. *Security, Strategy and Critical Theory*, London: Lynne Rienner, 1999
- Nuruzzaman, Mohammed. "Paradigms in Conflict: the Contested Claims of Human Security, Critical Theory and Feminism," *Cooperation and Conflict* 41(3), 2006.
- Peterson, V. Spike. "Feminist Theories Within, Invisible to, and Beyond IR."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10(2), 2004.
- Peterson, V. Spike. "Subjectivity, Security and Sovereignty: Making Connections," Presented paper in Annual Meeting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1996.
- Peterson V. Spike. "Transgressing Boundaries: Theories of Knowledge,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21(2), 1992.
- Sylvester, Christine.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the Construction of a New order of Peace," 한국국제정치학회·유네스코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 Sylvester, Christine. "Riding the Hyphens of Feminism, Peace and Place in Four-(Or More) Part Cacophony," *Alternatives* 18, 1993.
- Tessle, Mark, Jodi Nachtwey and Audra Grant. "Further Tests of the Women and Peace Hypothesis: Evidence from Cross-National Survey Research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3), 1999.
- Tickners, J. Ann. "Gendering a Discipline: Some Feminist Methodological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Relations," *Signs: Journal of Women in*

- Culture and Society* 30(4), 2005.
- Tickners, J. Ann. "Feminist Responses to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Peace Review* 16(1), 2004.
- Tickners, J. Ann. *Gendering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 Tickners, J. Ann. "Searching for the Princess?: Feminist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1(Fall), 1999.
- Tickners, J. Ann. "You Just Don't Understand: Troubled Engagements between Feminists and IR Theoris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1(4), 1997.
- Waren, Karen J. and Duane L. Cady. "Feminism and Peace; Seeing Connections," *Hypatia* 9(2), 1994.
- Weber, Cynthia.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10.
- Zimelis, Andris. "Human Rights, the Sex Industry and Foreign Troops: Feminist Analysis of Nationalism in Japan, South Korean the Philippines," *Cooperation and Conflict* 44(1), 2009.

『중앙일보』 2012년 3월 23일자, 4월 6일자, 4월21일자

『한겨레21』 2112년 4월 6일자. 2002년 11월7일자

## <토론문>

# 한국사회 갈등의 특징과 해결 방향

박재근(사회통합위원회)

한 대학연구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을 전후로 현재까지 우리사회에서 공공갈등이 한 해 평균 약 37건 발생했다.<sup>1)</sup> 그리고 갈등 해결의 지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사회가 OECD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각하고, 연간 갈등 비용이 300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박준 외, 2009).<sup>2)</sup>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이 우리사회에서 시급한 과제임에 분명해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 왔다.<sup>3)</sup> 몇몇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등해결교육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공공갈등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갈등해결의 실천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 중심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접촉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업무 가중을 우려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갈등 조정이 국회의 고유 업무라며 행정부에서 나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갈등을 유발해온 정부가 갈등해결 제도를 마련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갈등해결제도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정당성 획득의 수단일 뿐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이러한 반응을 종합할 때 우리사회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확산되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본 토론문에서는 갈등해결제도에 대한 수용성 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발표자료의 범위 내에서 정리가 필요한 몇 가지 논의거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들 내용의 일부는 공공갈등해결제도의 공론화 과정에서 실제로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 1)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한국의 공공분쟁해결 연구 중 세부과제인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를 참고한 것임. 갈등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① 연 인원 500명 이상의 참여자가 집단적으로 행동한 사안; ②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최소한 100명 이상의 참여자가 집단적으로 행동을 조직한 경우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안; ③ 쟁점을 둘러싸고 둘 이상의 행위 주체 간 상호작용이 7일 이상 지속된 사안임.
- 2) 통계자료 및 분석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공공갈등의 심각성까지 낮출 수는 없다.
- 3) 국회에서도 권택기 의원과 임두성 의원이 각각 관련 법률의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첫째, 갈등해결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규제와 자율 간 균형의 문제이다. 갈등의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과 일반대중을 갈등해결과정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킬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할지, 그리고 합의된 결과를 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할지 아니면 합의결과의 채택여부를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규제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지나친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그토록 자율성이 중요하다면 굳이 제도라는 형식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율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제도를 강제할 경우 자발적 참여라는 갈등해결의 핵심원칙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김동영, 2011).

구체적으로, 규제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합의결과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합의결과는 일종의 참고자료밖에 될 수 없고, 공공기관과 대중 간의 구조적 힘의 불균형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즉,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긴 채 표면화된 갈등을 해소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자율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갈등해결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성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동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의 활용을 강제한다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쉽고, 합의된 결과를 강제할 경우에는 대표성의 문제와 제도 악용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리고 갈등해결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제도 활용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본 제도의 도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해당사자들이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 결과를 지지한다면 갈등해결제도와 사회자본 형성이 상호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공공기관과 일반 대중 간 문제 인식 수준의 차이이다. 갈등의 해결 방식은 갈등의 원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가령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치나 욕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대화를 통해 상대가 그러한 가치를 갖게 된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공통된 욕구를 모색함으로써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갈등에서는 이해관계, 가치, 욕구 등이 갈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결방안 모색이 쉽지 않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입장과 실익은 합리적 선택 패러다임에서 작동하고, 가치는 비합리적 선택 패러다임, 그리고 욕구는 생물발생적 패러다임에서 작동함을 알 수 있다(Warfield, 1993).

Positions	political & strategic	Rational Choice Paradigm
Interests	desires & wants	
Values	learned & socialized	Non Rational Choice Paradigm
Needs	basic & human	Bio-genetic Paradigm

공공갈등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의 한 축을 이루는 공공기관은 주어진 규정에 입각해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대중은 이해관계 못지않게 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이 자신들의 가치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이 자신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지와 같은 감성적 측면들을 중요하게 여긴다(김정수, 2011). 이러한 상황을 위 그림에 적용해보면, 공공기관은 합리적 선택 패러다임 하에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반면, 대중은 주로 비합리적 선택 패러다임과 생물발생적 패러다임 하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을 갖는다(Warfield, 1993). 따라서 가치나 욕구가 침해됨으로 인해 비이성적 행위를 불사하는 대중의 모습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공공기관이 국민들의 감정을 잘 살피고 보듬어야만 갈등을 원만히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갈등해결 기제로서 실익을 위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협상이나 조정방식을 비판하고, 공공갈등해결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따라서 공공갈등해결제도가 공공기관과 일반 대중 간 이러한 문제 인식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갈등해결 제도가 발달된 서구사회와 한국사회 간 문화적 차이의 문제이다. 문화가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갈등해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가령 Burton은 인간의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때 욕구는 인간의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갈등해결에서 문화 변인은 무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Burton, 1990). 그리고 Zartman 역시 협상과 같은 갈등해결방식은 이미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문화적 요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갈등해결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욕구 역시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Avruch, 1998). 그리고 제도는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형성·운영되기 때문에(Murakami & Meyer, 2010; Furtado, Marcen & Sevilla-Sanz, 2010),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거나 다른 문화권의 제도를 도입할 때 그 사회의 가치나 맥락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Buck & Shahrim, 2005; Kostova, 1999; 민경국, 2002).

문화에 관한 논의는 갈등조정을 위한 제3자의 역할과도 연계된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는 보편적 문화와 고유한 문화로 구분된다. 한국사회의 보편적 문화가 보이는 특징은 - 고맥락

문화, 집단주의 문화, 위계 문화, 위험 회피 문화, 남성적 문화 - 서구의 문화와는 대체로 상반되고, 체면, 명분, 정, 눈치와 같은 고유한 문화적 특징도 보인다.

발표자의 의견대로 현재 우리사회는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공공갈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집단주의 문화가 주를 이룬다. 즉, 내집단끼리는 강한 결속력을 지니지만 외집단과는 강한 경쟁적 관계를 갖고, 집단의 목표를 위해 개인의 목표를 희생하곤 한다.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적 체면이 중시되는데, 이로 인해 위계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입장 중심의 협상이 이루어지기 쉽다(Kim & Yang, 2009). 그리고 사람들은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회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극단적 경쟁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토의가 필요한 공적 이슈에 대해 건설적 논쟁을 이어가려는 성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부 학자들은 이처럼 집단주의와 위계주의 성향이 강하고 사회적 체면이 중시되는 우리문화에서는 제3자의 개입을 통해 갈등 당사자 간 상호 체면을 유지하는 가운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모습은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소통을 돕는 조정자(mediator)라기보다는 갈등당사자들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나 권위를 가진 중재자(arbitrator)에 가깝다. 이러한 점들만을 고려하더라도 갈등해결의 맥락에서 우리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구교준. “아담 스미스와 지식경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서 동정적인 정부로”. 『정부학연구』, 15(2). 2009.
- 김강민. “신뢰가 갈등의 민주주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3). 2011.
- 김동영. “뉴거버넌스와 갈등관리제도: 규제와 자율사이의 균형을 찾아서”. 『한국행정학회 소식지』, 통권 135호. 2011.
- 김영옥·양정은. “체면, 소통 그리고 갈등해소: 체면-소통 모델과 소통의 가능성 모색”, 『한국사회의 소통위기: 진단과 전망』, 2009.
- 김정수. “감정의 재발견: 화성男 금성女 은유를 활용한 정부-국민간 정책갈등에 대한 시론적 재해석”. 『한국정책학회』, 20(1), 2011.
- 민경국. “문화, 비공식제도 그리고 제도의 경쟁”. 『제도연구』, 4. 2002.
- 박준·김용가·이동원·김선빈.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2009.
- 장용석·정장훈·조문석.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재조명”. 『조사연구』, 10(2), 2009.
- Avruch, K. *Culture and Conflict Resolution*. USIP Press. 1998.

- Buck, T. & Shahrim, A. The Transl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Changes across National Cultures: The Case of German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6(1). 2005.
- Furtado, D., Marcen, M. & Sevilla-Sanz, A. *Does Culture Affect Divorce Decisions? : Evidence from European Immigrants in the US*. Depart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Series, University of Oxford. 2010.
- Kim, Y. & Yang, J. The Impact of Cultural Variables and Third-Party Mediation on Conflict Resolu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9(4). 2011.
- Kostova, T. Transnational Transfer of Strategic Organizational Practices: A Contextual Perspectiv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2). 1999.
- Murakami, Y. & Meyer, H. Culture, Institutions, and Disability Policy in Japan: The Translation of Culture into Policy. *Comparative Sociology*. 9. 2010.
- Warfield, W. Public-Policy Conflict Resolution: The Nexus Between Culture and Process," in *Conflict Resolution Theory and Practice*, edited by Sandole, D. & Hugo, M.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토론문>

## 다문화시대 통일교육의 복합적 지형과 과제

박영자(이화여자대학교)

I. 본 논문은 지구화와 인구이동으로 인한 문화적 충돌이라는 세계적 보편성과 분단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한, 다문화 교육과 통일교육을 연계시키려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자의 성실함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다. 폐쇄적 단일민족주의를 넘어서려는 다양한 논의가 학교 통일교육 정책마련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하는 글이다.

특히 선진자유주의 국가의 다문화 정책 및 교육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한 통일교육을 소재로, 시대적 변화와 주체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수렴 교육 시각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학자적 동의를 표한다.

II. 한편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민을 나누었으면 한다.

첫째, 다문화 교육의 긍정성을 통일교육에 수렴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남북한 모두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법제도 및 분단구조와 70여년의 소통 부족/단절의 역사를 볼 때, 다문화 교육의 핵심키워드인 ‘차이의 인정’은, 오히려 통일교육의 도덕적 추상성과 당위성만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둘째, 지구화와 함께 열린 민족주의, 성찰적 민족주의, 생태주의적 민족주의 등 새로운 미래공동체의 구심력을 위한, 다양한 민족/민족주의 논의들이 제기되었음에도, 구체적 정책마련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인정의 정치’를 기조로 하여 다양성, 문화, 정체성, 의식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다문화 정책과 교육은, 소수자 집단의 직업 및 경제문제의 정책적 부차화와 성별위계 문제의 방치 등으로, 자칫 일상생활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구조적 문제나 보편적 사회합의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문제를 부차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sup>1)</sup>

넷째,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주의 교육은 동일개념인가 아닌가? 어떻게 다른가?

다섯째, 저자가 핵심적으로 제기한, 교육부의 통일교육 방향과 통일부의 통일교육 방향(통일교육지침서)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III.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위한 통일 교육: 상호문화주의 시각

1) 생존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 환경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의 문화·의식·심리 중심 접근은, 소수집단에 가장 중요한 노동과 직업의 문제를 부차화할 수 있다. 더불어 다문화주의가 이주집단의 문화적 차이인정으로 보편화될 경우, 그 집단 내부의 성별위계 및 권력위계 지속문제 등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안을 찾기 어렵다.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관계는 개별 인간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 집단 내부에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단일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넘어선 사회통합 정책 및 교육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한반도 전체의 시각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춘 미래 통일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한반도 통일과 사회통합에의 가치 및 정책방향으로 상호문화주의를 중시한다. 그 이유는 상호문화주의가 단일문화와 다문화, 동화 정책과 인정정책을 수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며, 특히 갈등이 구조적으로 양분되어 있는 분단 한반도와 같은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현실적 필요와 총체적 국가정책 아젠다 설정에 유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마지막으로 상호문화주의 교육방향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문화시대 단일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선 통일과 사회통합 정책방향 연구과정에서 발표된 필자의 연구성과 중 상호문화주의 교육방안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sup>3)</sup>

상호문화주의 시각에 기초할 때, 교육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3가지 키워드는 언어, 관계, 장소이다. 교육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독일과 캐나다 상호문화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발전해 있는 인권교육, 다양성교육, 인종차별철폐교육 교육이 만남의 교육학 → 갈등의 교육학 → 반차별의 교육학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교과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문화주의 교육의 기본원칙은 첫째, 각 문화의 내적 논리를 이해할 것, 즉, 우선 내부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상대주의를 지향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즉 보편과 특수성의 이중성을 주목하며, 외부 및 내부를 향한 태도와 정보 교류를 동시에 보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셋째, 문화를 고정적인 구조인 것처럼 다루지 않아야 한다. 즉, 문화는 정체성과 유사하게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것임을 가르친다.<sup>4)</sup>

넷째, 타자에 대한 인식 방법으로 타자공포증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우리는 흔히 타자의 다른 점을 과장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데, 다른 점을 부정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그 차이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경멸하는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독일의 상호문화주의 학자인 카밀레리(C. Camilleri)는 ‘타자공포증(heterophobia)’, 즉 심리적으로 다른 것을 거부하려는 태도로 나아가며, 특히 집단적인 차원에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심해지며 인종차별주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다섯째, 논쟁과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말 것, 즉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 또는 집단들 사이에 쟁점 사안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2)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은 상호문화주의 이론, 역사, 그리고 캐나다와 독일의 정책경험에 기초한, 박영자,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상호문화주의’ 시각과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2. 4)를 참조하기 바란다.

3) 박영자, “단일·다문화를 넘어선 탈북민 사회통합 정책 방향: 상호문화주의 가치와 교육방안을 중심으로”, 5절 통일·사회통합을 관통하는 상호문화주의 교육 방향 중 일부, 2011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가을학술회의 자료집, 2011년 10월.

4) Camilleri, C., "Prinzipien einer interkulturellen Paedagogik," Nicklas, H. et al.(eds), Interkulturell denken und Theoretische Grundlagen und gesellschaftliche Praxis (Frankfurt/M.: Campus, 2006), pp. 49-54.

도록 교육하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교육원칙은 다양성 시대 시민교육의 목표 및 과제와 연계된다. 다양성의 증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여러 수준에서 기관/조직 및 시민/국민들에게 의사소통과 조정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첫째, 주변화·차별·권력관계(다수집단/소수집단, 여성/남성)분석, 둘째,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 셋째, 다른 것과 타자에 대한 인식 검토, 넷째, 평등과 다양성 사이의 연결고리 모색, 다섯째, 다양성과 관련한 교육내용의 재고조절개정 및 이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여섯째, 교육적 배제현상을 분석하고 그 퇴치를 위한 노력, 일곱째, 지방국가·지역국제 사회 수준에서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여덟째, 국민을 다양하고 포용적 공동체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목표와 과제는 대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라는 세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세 차원은 현장 학습과정에서 서로 교차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 세 차원을 다음과 같이 분화시켜 기술할 수 있다.<sup>6)</sup>

<표 1> 상호문화주의 교육의 목표와 과제

차 원	주요 목표와 과제
지식 차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습주체들이 살았으며,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를 역사적 관점과 현대의 관점에서 학습한다.</li> <li>2. 서로 다른 집단의 이야기와 기억에 대해 공부한다.</li> <li>3.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민족, 종교, 성, 언어)의 기원과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해한다.</li> <li>4. 타자에 대한 인식/윤리/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한다.</li> <li>5. 다양성이 가져오는 이득과 여러 문화들이 만나며 문화적 감수성이 더욱 풍부해지고 새로운 문화 창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한다.</li> </ol>
기능/방법론 교육 차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 다른 사람들과 소통·협상·협력할 수 있게 한다.</li> <li>2.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성찰·중재·해결할 수 있게 한다.</li> <li>3. 다양성을 조정 및 관리할 수 있게 한다.</li> <li>4. 창발을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li> </ol>
가치와 태도 성숙 차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고 성찰한다.</li> <li>2. 서로 다른 가치와 그 기원에 대해 배운다.</li> <li>3. 공감능력을 기른다.</li> <li>4. 특수한 전통으로부터 발생한 특수한 가치의 한계를 깨닫는다.</li> <li>5. 민주적 공존 원리와 인권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를 체득한다.</li> <li>6. 사고와 생활의 다른 양태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갖춘다.</li> <li>7. 다양성의 긍정성을 인정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li> </ol>

현재 국내외 적으로 타자/다양한 문화와의 차이를 인정/존중 하는 가운데 통합을 추구하는 ‘다양성 속에 통일모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교육프로그램은 앞서 설명한 독일 상호문화주의 교육의 교훈 중 ‘만남의 교육학’을 비판하며 형성된 ‘갈등

5) Camilleri, C., "Prinzipien einer interkulturellen Paedagogik," Nicklas, H. et al.(eds), Interkulturell denken und Theoretische Grundlagen und gesellschaftliche Praxis (Frankfurt/M.: Campus, 2006), pp. 49-54.

6) Georgi, V., "Citizenship and Diversity," Georgi, V. (ed), The Making of Citizens in Europe: New Perspectives on Citizenship Education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8), pp. 83-84을 필자의 논리에 맞게 수정 및 재구성.

의 교육학’, 그리고 갈등의 교육학을 비판하며 형성된 ‘반차별의 교육학’의 한국적 적용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서 서술할 정창호의 독일 상호문화 교육의 역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7)</sup>

독일의 초창기 ‘고전적’ 상호문화교육은 인권교육, 평화교육, 공동체교육 흡수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문화교육은 편견의 감소, 공감능력, 연대성, 민족주의적 사고의 탈피, 갈등대처능력 등 평화교육의 목표를 수용하였고, 동시에 학생들의 문화적, 인종적 출신배경에 주목하면서도 그것을 결핍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다. 초창기 상호문화교육의 대표적 입장 중 하나는 ‘만남의 교육학’이었다. 만남의 교육학은 문화들 간의 접촉(예를 들면 공동의 축제)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편견의 (거의 자동적인) 감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실천적 이론적 입장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만남의 교육학은 내국인과 이주민들이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상대방의 문화를 알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이주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여러 문화가 어울리는 축제, 국제적인 음식 체험 등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하려 하였다.<sup>8)</sup>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사회에 주류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이기도 한 만남의 교육학은 직접적인 문화적 교류가 자동적으로 상호문화적인 이해와 상호관계의 풍부화에 기여하리라고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된다. 이에 반해 만남에 수반되는 문화적 갈등에 주목하는 ‘갈등의 교육학’은 ‘만남의 교육학’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갈등의 교육학은 일상적 만남 자체 보다는 외국인 적대, 차별과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대항, 인종중심주의나 편견의 제거, 기회균등과 해방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중요시하였다.<sup>9)</sup>

이 문제의식은 ‘반차별의 교육학’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반차별의 교육학은 “문화적 귀속성이 교육과 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다문화주의의 기본적 가정을 의문시하면서 문화적·인종적 차이들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구성된 허구에 불과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반차별 교육학은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허구적인 문화적 범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차별의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 따라서 “반차별 교육학은 교육 기관들을 교육관계자를 통해서 또는 시민사회적 차원에도 세심하게 관찰하여 조직적인 차별을 예방하고 또 차별이 일어나고 있을 경우 이것을 사회문제화하기”를 요구한다.

독일 반차별 교육학자들이 보기에 기존 상호문화교육은 앞서 살펴보았던 독일 외국인 교육학에 대해 제기되었던 ‘정치문제의 교육 문제화’라는 비판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였다. 다문화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내국인들을 교육적으로 도와준다는 명분아래, 사람들의 관심을 정작 필요한 주류사회의 정치적 변화로부터 돌려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

7) 정창호, “독일의 상호문화교육과 타자의 문제,”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 16, No. 1, 한독교육학회, 2011. pp. 82-83.

8) 정영근(2009)은 학교에서의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교과 외 프로그램’으로서 이러한 ‘만남의 교육학’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만남의 교육학은 현재 한국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 하는 항목이다.

9)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교육이 정체성 형성이나 문화적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평등과 정의를 억압하는 관계를 해소하고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시도한다. 이 경우 상호문화교육은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거나 소수자를 격려하며 편견을 줄여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응하는 적극적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정영근, 2009: 166).

회 비판적 태도는 ‘상호문화교육’이 타자들을 단지 문화적 인종적 차이의 차원에서만 고찰하는 태도를 자기 반성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더 포괄적인 이론적 토대를 찾아 나서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문화교육은 타자 문제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상호문화교육은 반차별 교육학의 요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이한 집단 간의 상호 문화적 차원을 고려할 뿐 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통합’할 수 있는 개혁적 상호문화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국민교육, 시민교육, 도덕교육, 사회교육과 관련된 개개 시민과 교육주체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와 신념은 무엇인가? 등 자기 자신의 성찰로부터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 및 내용을 참조하고, 상호문화주의 교육의 핵심인 문화간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 기술, 방법론, 프로그램 관련한 인류학, 문화학, 언어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의 풍부한 프로그램 및 교육방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현재 의사소통 기술과 방법론은 지구화의 전개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면 단일·다문화주의를 넘어선 탈북이주민 상호문화주의 교육방안이 풍부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상호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인 의사소통 방법에서도 그 핵심은 개인적 태도를 구성하는 자기공개, 자기인식, 자기 개념/세계관(Self-Disclosure, Self-Awareness, Self-Concept)이라는 ‘자기/나로부터 출발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으로 사회적 완화(Social Relaxation)라는 점이다. 즉 이 4대 요소는 상호문화주의 의사소통 교육의 기초인 것이다.<sup>10)</sup>

---

10) Gudykunst, William B (ed.), Cross-Cultur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003, Thousand Oaks: Sage.

<토론문>

## 대치동, 타워팰리스 그리고 흰색 자전거:

드라마 「아내의 자격」 과 (한국에서)페미니즘 안보 또는 평화학 엿보기

김엘리(성공회대학교)

“대치동, 타워팰리스 그리고 흰색 자전거”는 경쟁사회에서 힘(사회의 위계화를 가져오는 권력) 우위의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를 비판하고, 페미니즘의 인식론을 통하여 권력과 안보, 평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드라마 <아내의 자격>은 권력을 욕망하는 한 가정의 허세와 이중성을 세밀하게 드러냄으로써, 참으로 실속없는 권력을 행사하는 한 남성/성의 위치를 보여준다. 여성에게 한 없이 의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여성을 폄하하고 통제하며, 여성들에게 아저씨가 아닌 오빠가 되고 싶은 남성. 성희롱 가해자로 회사에서 쫓겨나면서도,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음모론을 내세우며, 정치계로 나간다고 큰 소리 치는 남성. 이 남성에게 정신 차리라고 머리 한 대 치는 여성(서래)의 행보를 따라 저자는 현실주의의 국제정치학이 내포하는 남성중심성, 권력지향성, 국가중심성을 비판하고, 페미니즘 인식론을 도입하여 새로운 안보론의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가 드라마를 메타포로 가져와서 국제정치학의 안보론을 논하는 이 기술 방법 자체도 국제정치학 내에서는 획기적인 시도일 것이다. 비록 이 글에서는 재현물인 드라마를 사용하였지만,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국제관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외교, 이주, 초국적 경제활동의 문제를 일상생활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개인적인 것이 국제적이다!), 미시적 영역과 거시적 영역을 동시에 분석하는 인식론과 방법론을 사용한다(Enloe, Sylvester 등). 저자 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분명, 저자가 시도하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국제현실을 덜 편협하게, 그래서 풍부하게 혹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접근방법이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먼저, 질문을 던지자면.

저자가 서술하고 있는 페미니즘적 안보론, 혹은 페미니즘적 국제정치학은 대안적 안보개념을 구성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안보론을 둘러싼 여성학자들의 논의를 다소 단순하게 전개한 것으로써, “여성의 이해”에 관한 분석이 좀 더 면밀하게 짚어져야할 것이다. 여성이라고 해서 하나의 집단적 범주로 국한할 수 없는,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이해를 가진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국제정치학에서 전쟁과 안보가 강한 남성중심성의 성격을 띠면서, 안보의 주체가 남성으로 상정되어왔다는 점에서는 여성학자 대부분이 비판하는 논의의 출발점이지만, 안보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그 대안적 방식은 달리 전개되고 있다.

남녀평등을 더 강조하는 여성학자들은 국가와 안보 자체를 비판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여성들이 군사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안보론이 갖고

있는 남성성은 주로 비판의 주제가 되나, 군사안보 자체에 관한 논의는 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반면, 군사영역 밖에서 탈군사화를 주장해왔던 여성주의자들은 군사안보를 비판하고 안보개념을 비군사적 요소로 확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곧 평화이다’ 라든지, ‘군사력 확대가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현실주의자들의 평화론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밝힌다.

저자는 탈군사화라는 입장에서 페미니즘 안보론을 제안했던 여성주의자들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화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페미니즘 안보론이 곧 평화학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세밀한 설명 장치가 필요하다. 페미니즘 안보론은 다양하고, 페미니즘 안보론 자체가 군사안보를 적극적으로 논하기에는 또 다른 설명력이 필요하므로, 오히려 이 다른 설명력을 위해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평화학과 만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저자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다. 비폭력, 소통, 공존을 통해서 어떻게 안전(감)을 가질 것인가하는 문제가 평화라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평화학의 만남의 필요성과 이것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메타포 서술 이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평화학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을 임파워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서래(페미니즘 국제정치학)가 필연적으로 태오(평화학)를 꼭 만나야 임파워가 되는 건지 좀 더 서술하였다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평화학, 이 세 가지가 갖는 관계성이 좀 더 명료해졌으리라 생각된다.

덧붙여, 저자는 기존의 국제정치학이 페미니즘을 만남으로써 “다르게” 세계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발표문에서 잘 보여주는데, 이것이 계급과 젠더, 인종, 국가들의 위계화를 비판하고 상호 소통할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평화적 정의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화적 정의는 남녀평등만을 초점에 두지 않고 남녀평등의 문제를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전통적으로 국가가 남성중심성을 띤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의 성격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합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유동적인 국가 성격을 가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사회 현상적 차원에서 짚는다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비소통 구조는 무엇일까? 이는 젠더 불평등 구조이다. 저자는 국가와 안보가 작동하는 원리로서 젠더에 주목하고 이의 남성중심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필자는 좀 더 밀고 나가서 변화하고 있는 여성들의 행위와 가치관에 함께 호응하지 못하여 비소통 구조를 재생산하는 남성중심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안보주체자로서(국가) 그리고 가장으로서(가정) 여성을 지켜준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자 역할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고용의 불안정과 노동의 유연화 정책은 평생 경제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남성/성은 약화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여성의 안전(security)은 국가도 남성도 보장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으로 맡겨지고, 국가가 아닌, 보험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시대에, 자기 능력을 계발하여 개인의 능력에 매달리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또다른 유연한 노동력이 될 뿐 아니라, 여성들 자신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 20-30대 여성들의 96%가 평생 직장을 소원하고,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며,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규범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노동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중적인 성의식에서 비롯되는 여성과 남녀의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불확실한 시대에 (탈젠더화된)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들이 생긴다.

또한, 남북한이 함께 살아야할 미래의 사회를 상상하면, 성과 사랑,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이 갈등을 겪으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될 여지가 많다. 아시아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남성들의 가부장성과 남성중심성에 낮설어하며 비판하는 사례에서도 보듯이 말이다. 남한여성과 남한남성, 탈북한 이주여성과 이주남성, 이 네 집단의 남녀평등의식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정진경), 가장 높은 평등의식을 보여주는 집단이 남한여성이고 다음이 탈북한 이주여성 그리고 남한남성과 탈북한 이주남성이 뒤를 잇는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여전히 이념처럼 고집되고 있는 남성중심성은 변화하는 흐름과 좌충우돌하며 역차별 논쟁, 군가산점제 논란, 성폭력 역고소 등의 문제로 발현된다.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진화하는 여성들의 의식과 다르게 그 흐름과 충돌하거나 흐름을 지연시키는 남성중심성에 관한 분석과 성찰이 요하는 지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저자가 지적한 남성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야할 주제이다.

# 참 고 자 료

21세기 새로운 평화학의 정립: 한반도적 맥락과 이론적 과제  
박명규 (IPUS 원장, 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장)

HK평화인문학연구단 아젠다



# 21세기 새로운 평화학의 정립: 한반도적 맥락과 이론적 과제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I. 서론

이 글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평화인문학연구단이 추구하는 '21세기 평화학의 정립'을 위해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쟁점들을 점검하고자 작성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평화학이라는 새로운 융합적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다음 세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로, 평화학(peace studies)을 학문적으로 정립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틀과 주요개념에 대하여 요한 갈통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갈통은 현대 평화학의 이론형성과 체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학자이면서 지금도 활발하게 평화학의 보급과 교육, 운동에 전념하고 있어서 출발의 준거점으로 삼을 만하다.

둘째로, 갈통의 평화학이 유럽, 그것도 스칸디나비아적 맥락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검토하고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학의 수용과 발전에 고려해야 할 측면을 점검한다. 나아가 한반도적 맥락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평화학의 정립가능성을 살펴본다.

셋째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인문학연구단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 및 방법론, 개념화의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해 보려 한다.

## II. 평화학의 이론적 구성: 갈통을 중심으로

평화학(peace studies)은 아직도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학문분과는 아니다. 하지만 그 함의와 영향력은 작다고 할 수 없는데, 특히 유엔을 비롯하여 평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단체, 운동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평화학의 학문적 체계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요한 갈통을 중심으로 그 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갈통의 논의 가운데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논의들을 일단 병렬적으로 정리한다<sup>1)</sup>.

1) 이하 논의는 주로 요한 갈통, [형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이재봉 외 역, 들녘, 2000 에 근거함.

1. **평화학의 정의:** 갈등은 평화학을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또는 해치는) 조건 및 과정에 대한 탐구로 파악했다. 이때 평화는 단순히 전쟁부재의 상태가 아니라 좀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폭력이나 갈등의 부재 내지 완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평화는 정태적으로는 ‘폭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를 의미하고 동태적으로는 ‘갈등을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인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갈등은 후자의 관점에서 평화학을 동태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평화학의 성격:** 갈등은 평화학을 질병의 치료와 건강유지를 위한 의학에 비유했다. 즉 진단-예측-처방의 구도를 지닌 지식체계인바, 진단은 폭력(갈등)의 상태확인, 예측은 폭력(갈등)의 과정과 증가 또는 감소가능성, 처방은 폭력(갈등)의 감소나 창조적 변형을 위한 개입을 의미한다. 당연히 평화학은 데이터의 경험적 확인이나 이론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폭력의 감소와 창조적 변형이라는 가치지향성을 지닌 학문으로 간주했다.

2-1: 갈등이 어떤 상황을 분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적 활동은 구별된다고 보았고, 평화학은 기본적으로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평화학은 그 자체가 데이터의 분석에 기초한 이론의 형태를 띠지만 가치실현을 위한 담론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2-2: 갈등은 평화학의 처방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상대방이나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는 폭력이나 갈등을 억제하고 막는 소극적 평화유지 (peace keeping), 폭력과 갈등을 유발하는 태도나 인식틀을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적극적 평화조성 (peace making), 그리고 구조적으로 폭력이나 갈등을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평화구축 (peace building)이 그것이다.

3. 갈등은 폭력(갈등)이 일어나는 공간(장)을 크게 여섯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폭력의 다양한 유형과 평화학의 다차원적 성격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가 말하는 여섯 공간은 다음과 같다. 자연(Nature), 사람(Person), 사회(Society), 세계(World), 문화(Culture), 시간(Time). 다시 각 공간 내부에 부분공간을 분류하기도 했는데 예컨대 자연 내에서 우주권, 대기권, 생물권을 구분하고 사람 내부에 신체, 마음, 정신을 구분하며 사회 내부에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공간을 나누는 것이다.

4. 갈등은 폭력의 유형으로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들었다. 직접적 폭력은 행위자들 간에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구조적 폭력이란 당사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또는 의도하지 않은 폭력의 작용을 뜻한다. 또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모든 형태의 지적, 문화적 활동을 의미한다.

5. 구조적 폭력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갈등의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갈등에 의하

면 갈등은 양면성을 지니는데 파괴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창조적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평화학은 갈등을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비폭력적 기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5-1: 갈등은 태도/가정(A) - 행위(B) - 모순/내용(C)의 세 차원을 지닌 삼각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표출된 갈등행위만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가져오게 만든 특정한 인지구조와 모순적 상황 (딜레마) 가 배후에서 작동하는 구조인 것이다.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상태의 갈등도 있고 행위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갈등도 가능하다. 또 갈등상황에 참여하는 주체의 숫자나 성격도 다양할 수 있다.

5-2: 갈등을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건을 모색할 수 있다. 여기에는 폭력적 행위의 표출을 막는 peace keeping, 갈등상황을 조성하는 태도나 인식틀을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peace making, 갈등상황을 야기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peace building 의 차원이 있다.

6. 갈등은 현대사회의 발전론이 전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의 차원에서 재검토되고 성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문명의 확산을 추구하든, 욕구의 충족을 주목하든, 경제성장을 강조하든 현대의 발전론은 모두 생산과 분배, 경제활동과 욕망 등에 관한 독특한 인식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6-1: 이를 위해 각 발전론의 내부에 전제되어 있는 인식론적 구조, 외부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크게 청색학과, 적색학과, 녹색학과, 분홍색학과, 황색학과, 절충학과의 6 유형이 존재하는데 가장 힘을 지닌 서구의 패러다임은 청색, 적색, 황색학과 등에서 강조되는 '스미스주의'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주의, 사유재산, 시장자유, 차등보수, 경쟁만능, 화폐가치화, 가공처리, 팽창주의, 자연파괴 등의 속성을 지닌 패러다임이 지배한다고 본다.

6-2: 갈등은 서구(청색), 구소련(적색), 제3세계(녹색), 스칸디나비아(분홍색), 동아시아(황색) 으로 각 지역의 발전론을 설명한다. 동아시아를 청색+적색의 황색으로 표현한 것, 또 스칸디나비아의 발전론을 녹색으로 보지 않고 청색, 적색, 녹색의 연성적 종합으로 파악하는 것이 흥미롭다.

7. 갈등은 문화적 폭력의 근저에는 문명적 자원들이 있다고 본다. 그는 문명이 우주론의 형태로 집단적 잠재의식을 정형화하고 또 실재에 대한 사회문화적 부호체계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당연히 문명권 별로 상이한데 적어도 폭력(갈등)의 정당화 기능이라는 차원에서는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7-1: 갈등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종교, 이데올로기, 학술, 예술 등이다.

### Ⅲ. 한반도 내 평화학의 적실성

평화연구, 평화학의 세계적 분포 내지 확산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제외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갈통의 책에서나 최근 기미야 다다시의 논문, 또 김명섭 등의 글에서도 지적되었듯<sup>2)</sup>, 아시아의 평화학은 일본과 인도가 주도했고 최근에는 호주가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평화학회’가 설립, 활동했으나 실천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학계 내부에서조차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또 유네스코 등이 주도하는 평화운동, 평화교육 등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체계적인 지식체계로, 주도적 담론으로 위치지워진 것은 아니다.

물론 평화의 문제 자체가 한국사회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평화는 매우 절실한 과제이자 현실적 쟁점으로 존재했다. 크게 보면 1890년대, 1907-10년의 시기, 1920년대, 1950년대, 1990년대, 그리고 오늘을 지적할 수 있다. 각 시기별로 부각된 평화의 문제, 평화론의 논리적 기반은 달랐는데 1890년대에는 만국공법의 수용과 조선왕조의 주권보전과 관련하여, 1907-1910년에는 일본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동양평화론’의 함의를 둘러싸고, 1920년대에는 1차세계대전 종전과 파리평화회의의 결과 나타난 이상주의적 국제관계론과 3.1운동의 여파로 ‘평화’에 대한 본격적 관심과 논의가 일시 등장했다. 1950년대에는 냉전체제의 형성 속에서 동아시아의 좌파지식인 및 사회주의권의 운동 내지 담론으로 ‘평화’가 부상되고 그 반작용으로 한국사회에서 평화논의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1990년대 탈냉전의 진전, 한국의 북방정책,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의 진전과 함께 ‘평화’ 및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에 와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상황의 특수함이 맞물려 평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sup>3)</sup>. 북한의 핵개발,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자원고갈에 따른 내부 위협도의 증대, 지나친 경쟁사회로 인한 실존적 피폐함과 평화부재, 다문화화와 다인종화에 노출된 새로운 경험 등...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평화의 논의는 지식인이나 주류담론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평화를 주된 화두로 삼았던 지식인은 종교인이나 일부 이상주의적 정치인, 소규모 운동가들이었고 사회적 차원에서 강한 비중을 지니지는 못하였다. 강력한 냉전반공주의의 작동, 국가 중심 발전주의의 지배력, 부국강병론적 집합심성, 잘 살아보자는 물질주의적 성공주의의 내면화 등 여러 요인을 들 수 있을 터이다. 이런 평화담론의 미약함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 Ⅳ. 한반도발 새로운 평화학의 정립: 적실성과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적 맥락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

2) 갈통, 앞의 책 및 기미야 다다시, “일본의 평화학과 한국에의 함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제심포지움 발제문, 2011. 4; 김명섭,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풀빛, 2002.

3) 하영선 (한국평화학회) 편, [21세기 평화학], 풀빛, 2002.

하다는 것이 이 연구단의 문제의식이다. 왜 그런 문제의식이 필요하며 과연 이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 먼저 갈통의 평화학을 배출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특징을 조망하면서 21세기 현재의 맥락에서 동북아와 한반도를 주목할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다음으로 한반도 문제를 보편화시킬 조건들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 1. 갈통과 스칸디나비아 지역

현재도 평화학의 이론적 기반으로 언급되는 갈통의 이론은 스칸디나비아적 맥락을 배경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sup>4)</sup>. 1959년 노르웨이의 오슬로 평화연구소 (PRIO)가 사회연구원의 일부로 출범했다가 1966년 독립기관으로 발전했는데 갈통은 젊은 나이로 이 연구소의 설립과 이후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여기서 그의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개념이 발전했고 1964년 이래 *Journal of Peace Research* 가 발간되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1966년에 스웨덴에 15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된 것을 기념하여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군비와 군비축소, 평화에 대한 중요한 연구소로 활동하고 있다. 1971년 스웨덴 옘살라 대학교에 평화와 갈등연구학과가 설립되고 1972년에는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서 환경과 평화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 지역의 평화학 연구자들은 ‘공동안보’ 개념을 발전시켰고 1985년 설립된 코펜하겐 평화연구소는 ‘사회안보’ 개념을 적극 발전시켰다.

왜 평화학이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가? 김명섭은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첫째로 이들 국가들이 지닌 평화의 전통이 길고 깊다. 스웨덴이 그 전형적 사례라 할 것이다. 둘째, 노벨평화상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 셋째, 상대적으로 소국인 이들 지역 국가들이 취한 혼성전략이 한 요인이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어디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고 적절히 제3의 노선을 찾아가는 공간을 창출했던 국가들이었다. 이들은 비유럽적 전통, 특히 아시아의 문화에도 주목했는데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창립에 앞장섰던 미르달 (Alva Myrdal)이나 갈통은 인도의 평화사상을 적극 수용하는데 앞장섰다. 네 번째로는 이 지역의 연구자들이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특수성을 유럽전체 및 인류사의 보편적 맥락과 결합시키는 능력이 탁월했다. 개별국가나 지역적 차원에 함몰되지 않고 폭력과 평화를 유럽전체 및 세계전반과 연결시켜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량이 매우 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명섭이 지적한 요소들에 덧붙여 한가지를 첨언하자면 이들 나라가 역사적으로 전쟁과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었으면서 사회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지적으로 상당한 역량을 지닌 국가로서 대국주의와 소국주의의 중간을 적절히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오랜 전쟁사에서 이들은 깊은 상처와 피해를 입었고 노르웨이도 식민지 상황에서의 독립을 위해 싸운 역사가 있다. 대국을 지향하지도 않지만 힘없는 소국으로 처신하지도 않는 그들의 독특한 위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4) 이 부분은 김명섭, 앞의 글 및 Elis Boulding, "평화운동의 조직형태-평화문화의 모태," 위의 책 수록, 참조.

5) 이런 맥락에서 줄고, "소국주의와 대국주의를 넘어서," [21세기 한반도 발전전략] 창비, 2005 참조 가능.

## 2. 한반도 문제와 평화쟁점

한반도에서의 평화문제, 다시 말해 한국형 폭력과 갈등의 구조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는, 남북간 적대적 대립, 무력대치에서 오는 물리적 폭력,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억지의 과제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문제는 일차적으로 매우 고전적인 전쟁방지의 과제인 셈인데 실제로 현재의 한반도는 극심한 무력대치상황에 정치적 불신과 사회경제적 단절구조가 맞물려 물리적 충돌과 폭력의 증폭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평화문제, 즉 전쟁의 방지, 안보중심의 평화론, 현실주의적 관점이 강한 힘을 발휘할 조건이 존재한다.

둘째로, 한반도의 이 갈등구조는 기본적으로 분단질서에서 유래하는 구조적 속성을 갖는다.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새로운 국민국가형성과정에서 분열된 한반도의 남북은 전지구적 냉전체제와 결합되어 특유의 분단질서, 분단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재의 분단은 단순히 남북한 당사자의 적대성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분단의 구조를 극복하는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한 통일의 과제와 연결되는 것이고 다시 한미동맹의 미래 및 북미, 북일수교와 같은 복합적인 국제정치와 결합된다. 한반도 차원을 중심으로 남북한, 북미, 북일, 미중의 다층적 갈등구조가 겹쳐있는 상황인 셈이다.

셋째로, 북한의 핵개발이 초래한 핵무장의 위기가 있다. 핵의 군사적 이용은 전인류가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유럽의 평화론이 일차적으로 중시하는 과제가 비핵화라는 점에서 매우 국제적 문제이다. 북한은 스스로의 체제위기를 극복할 방책으로 이 카드를 집요하게 붙들고 있지만 이 문제는 21세기 전지구적인 갈등확산, 테러와 비정규전의 가능성, 실패국가의 도전 등 새로운 세계평화문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넷째로, 탈냉전의 시대를 맞은지 20년을 지나면서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적 적개심이 레토릭 차원을 넘어 정책과 집단정서의 차원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결과 다양한 형태의 원한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풀어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60년을 보내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민족관계'라는 포용적 성격이 있지만 각 주체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원한과 적개심이 존재하고 있다. 전쟁의 종식이라는 조약이나 규정의 문제 이전에 전쟁의 상처를 해소할 과정, 즉 진상규명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남북한 사이에 전쟁의 성격과 책임을 둘러싸고 여전히 정반대의 관점이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로, 한반도의 남북에는 서로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모두 적대적이고 갈등조장적인 문화와 논리들이 포용적이거나 관용적인 논리보다도 더 힘을 얻는 경향이 있다. 분단 60년간 지속되어온 이데올로기적 규정력의 관성 탓이 크지만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교육하고 사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도 큰 이유의 하나다. 남한의 경우 자본주의적 경쟁론이 큰 이유라면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적인 배타성과 자기중심주의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적 동질성을 선호하고 혼성적인 요소들을 거부하는 순수주의 내지 배타주의도 한 몫을 하고 있고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비난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문화정치도 여전히 존재한다.

여섯째, 한국사회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집단문화도 뺄 수 없다. 갈통은 한국을 황색전략

의 사례로 꼽았는데 시장논리와 국가논리가 함께 결합된 경우로 권위주의적이면서도 시장주의적인 원리가 힘을 행사하는 사회다. 이 바탕에는 20세기 이래 내면화했던 사회진화론적 의식, 약육강식의 경쟁론,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실존주의적 조급성 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집합적으로 추구해오면서 자연스레 내면화한 근대적 가치들 자체가 매우 강력한 경쟁논리,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며 모든 잘못을 개인책임으로 돌리면서도 국가의 강력한 동원력과 통제력을 희망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불균등한 발전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낙후된 지역과 계층의 소외와 어려움이 사회적 불안과 모순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일곱째, 한국사회는 급속하고도 압축적인 성장전략의 결과 문명적 위기, 재해와 위험, 환경재난의 위기를 안고 있다. 기후변화, 생태적 위기, 환경오염 등 근대문명의 문제를 매우 전형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런 생태위기는 북한의 경우 더욱 심해서 산림, 토지를 비롯한 모든 환경이 자생력과 복원력을 위협받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다. 더구나 한반도 허리를 관통하는 비무장지대의 무수한 무기, 지뢰, 그리고 불모의 모래땅으로 유지되고 있는 양측 경계지역 등은 생태적인 문제의 일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여덟째, 한국사회는 서구적 합리성과 전통적 문화가 잘 융합하기보다 불안정하게 혼재함으로써 종종 아노미와 문화적 모순을 드러내는 곳이다. 근대과학기술과 서구적 준거가 매우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서구적 근대성이 상당히 내면화되었으면서도 그것의 구체적 작동방식은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한국사회 특유의 아비투스<sup>1)</sup>가 작동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폭력과 갈등, 억압 등의 요소들이 당연시되고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홉째, 한국사회는 빠른 정보화와 도시화, 개방화로 인해 세계 어디보다도 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곳이다. 한국의 속도감은 단지 빠르다는 특징에 머물지 않고 21세기에 살아남고 발전하는 문화적 역량으로까지 이해된다. 당연히 이런 속도경쟁은 지나친 경쟁, 낙오자의 양산, 피로, 여유의 부재, 갈등의 증폭, 환경파괴 등을 가져오기 쉽고 최종적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창출하는데 부정적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한반도와 한국사회는 다양한 차원에서 평화가 위협되는 상황, 따라서 평화의 증진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노력이 매우 절실한 사회라 할 수 있다.

### 3. 한반도 문제의 보편화

이상 지적한 한반도의 평화관련 문제들은 한반도 특유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21세기 세계적 현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보편적 측면도 적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석적으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보편적 성격이 부각된다.

- 첫째, 탈냉전시대의 군사주의, 폭력, 그리고 평화의 문제
- 둘째, 국가주도형 발전주의와 갈등구조, 그리고 평화
- 셋째,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 통합성과 배타성, 정체성의 긴장과 관용
- 넷째, 환경위기, 위험사회와 생태적 평화
- 다섯째, 경쟁론, 자기책임론, 갈등의 일상화에서 오는 문화적 폭력성
- 여섯째, 개인의 좌절, 아노미, 인격의 와해로 인한 실존적 불안, 자살과 내적 평화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문제는 한반도 특수성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21세기적 보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갈통이 스칸디나비아의 경험을 보편적 맥락에서 탐색함으로써 평화학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한반도의 역사적 조건과 과제를 폭넓은 세계사적 시야와 문명론적 관심으로 다룰 수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평화학을 구성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V. 평화인문학연구단의 과제들

### 1. [21세기 녹색한반도를 위한 평화인문학] 2010 프로포잘의 내용

평화인문학 연구의 기본관점으로 우리가 제시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

- 1)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합: 학제적 인문학
- 2) 한반도와 전지구적 시각의 종합
- 3) 구조적 생활사탐구를 통한 미시-거시 연관

연구주제로서 제시했던 것은

- 1) 1단계로서 평화인문학의 문화생태적 구성
  - 개발안보/ 문화생태담론의 비교분석: 지배적 패러다임의 비판적 분석
  - 생태평화와 문화공동체: 종교 및 환경단체의 지향분석
  - 녹색평화의 생활세계: 사람의 평화, 일상생활에서의 녹색화
- 2) 2단계는 녹색발전의 패러다임과 평화/녹색의 제도화
- 3) 3단계는 새로운 융합지식으로서의 평화인문학 정립

연구방법론으로서 - 인문사상팀/ 사회체제팀/ 문화조사팀

= 대립담론들의 문헌분석 / 면접조사를 통한 생활사연구 / 제도와 구조분석 / 의식조사 / 전문가 시뮬레이션

### 2. 평화인문학 연구주제의 재구성

- 1) 1단계 과제; 폭력/갈등/평화와 관련한“문화생태”의 분석

(가) 1차년도 신청서 (2009)에서 활용했던 ‘복합구성’ (Configuration) 개념을 원용

- 제도적 조건/ 문화와 심성구조/ 아비투스( habitus)의 총체 = 역사적 구성물
- 갈통의 6 공간 개념의 활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 (자연/개인/사회/세계/시간/문화) - 국가 항목 추가

폭력/갈등/평화의 문화생태 = 현 시기 평화부재의 복합구성 (C1)

“분단국가형 발전주의/ 개인주의적 경쟁주의/ 기술주의적 물질주의”의 복합구성 = C1

(제도적 차원) (문화와 심성구조 차원) (아비투스 차원)

	군사주의/ 냉전적 분단	국가주도 발전주의	민족주의/ 문화동질성	기술주의/ 성장우선론	경쟁과 힘 승배 문화	아노미형 인격/불안
자연						
개인						
사회						
국가						
세계						
시간						
문화						

(나) 갈등의 갈등의 삼각형 분석 방법을 원용, 재구성

- 갈등의 삼 요소 (행위 - 태도/가정 - 모순/내용)
-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갈등, 폭력, 적대성은 물론이고
- 주관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모순의 구조, 태도/가정 속에 내재한 긴장과 갈등의 조건들
- 갈등을 배태하는 문화, 아비투스, 사고방식이나 태도에 대한 분석

## 2) 2 단계 과제

평화, 갈등해소를 향한 전환, 조정, 개입 = “평화형성의 복합구성”(C2)

“균열하는 C1 / 녹색발전론 / 남북교류 및 통합지향 / 공존과 관용의 문화구성” = C2

## 3) 3 단계 과제

새로운 지적 패러다임으로서의 “녹색평화”론 = 새로운 평화인문학의 정립 = C3 형성에 구성주의적으로 기여

## HK 평화인문학연구단 아젠다

본 연구 사업은 한국사회에 필요한 미래비전으로서의 평화(peace)를 종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학제적, 융합적 연구 프로젝트이다. '21세기 녹색한반도를 위한 평화인문학'을 주제로 하는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론적 문제의식까지 포괄하는 문명론적 평화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에 필요한 담론과 제도, 가치와 문화의 창출을 지향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사업이 지향하는 평화인문학은 20세기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에 바탕 하되 21세기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가치지향적 전망을 포괄하는 융합적 연구가 될 것이다. 전쟁방지나 분쟁해결에 주목했던 초기 평화학이 현실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주력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인간의 심성, 가치와 정서, 담론과 습관의 차원까지 포괄하는 인간 활동의 전 영역에서 평화를 탐구하는 평화인문학을 지향한다. 평화를 주로 전쟁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전통적 시각이 국가 간 관계에 주목한데 비해 이 사업이 지향하는 평화학은 평화를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위협과 연관시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자 하며, 국가 이외의 개인과 공동체, 문명과 담론질서까지를 연구의 대상에 포괄하고자 한다. 당연히 평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못지 않게 그것을 가능케 할 철학적 사유, 예술적 상상력, 종교적 가치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사업은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평화 연구의 흐름과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연결해 '21세기 한반도발 평화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평화는 기본적으로 지구보편적 가치이고 이미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지만 그 논의 속에 현재 한반도가 겪고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녹아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그러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 변형작업이 불가피하다. 한반도에 필요한 평화는 남북 분단의 구조와 이와 연관된 한반도 주민들의 삶의 조건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통해 강대국 중심이 아닌 중간규모 국가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평화론의 세계화를 추구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 대결구조, 평화체제 논의 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화, 가치, 생활양식, 담론, 습관과 사유의 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사업이 평화인문학은 현실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학적 함의와 중장기적인 가치형성, 문화 창조, 비전구축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함으로써 사회과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상상력의 창조적 결합을 이루고자 한다. 한반도 현실에서 평화론은 불가피하게 통일, 안보, 군축, 비핵화 등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과 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현실과학적 성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평화학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실천적 차원에서도 단기적인 대응론에 한정될 우려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학은 보다 장기적인 전망, 종합적 구상, 문명론적 실천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역사적 비전이며 이는 인간의 제조건을 고려하는 인문학적 상상력에 바탕을 두어야만 얻어지는 큰 그림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종교

간의 공존, 다른 정체성에 대한 관용, 생태적인 평화 형성, 성별 평화 등은 물론이고 기후변화나 광우병, 테러리즘과 정체성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문명적 대안형성도 연구의 내용에 포괄될 것이다. 이런 종합적 평화연구를 통해 테러리즘의 위협과 생태환경의 위기, 기술합리성의 부작용 등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한반도에 새로이 요청되는 21세기형 인문학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